

如 龍



1981

국 민 교 육 헌 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 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력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 받아, 명량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 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즐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慶

建軍 第 33 週年  
國軍의 날

祝





권두언(卷頭言) ..... 강용구(姜容求)(3)

사회정화운동(社會淨化運動)과 국민의식 개혁(國民意識 改革)  
..... 김충남(金忠男)(5)

**특집(特輯) / 생존(生存)과 번영(繁榮)**

레이건 행정부(行政府)의 군사력(軍事力) 증강방향(增強方向) ... 이선호(李善浩)(14)  
 세계경제(世界經濟)의 변화(變化)와 한국경제(韓國經濟) ... 이만기(李滿基)(26)  
 시민의식(市民意識)과 공공질서(公共秩序) ..... 지용우(池龍雨)(35)  
 북한(北韓)의 대외정책(對外政策) ..... 전득주(全得柱)(44)

마르크스주의(主義) 이론비판(理論批判) ..... 김영태(金永台)(55)  
 북한주체철학(北韓主体哲學)의 관학적 성격(官學的 性格)  
 ..... 신일철(申一澈)(116)  
 남북(南北) 연방제론(聯邦制論) 비판(批判) <III> ..... 편집실(編輯室)(103)

성공적(成功的)인 지휘관(指揮官)의 길 ..... 이기관(95)

항공(航空)·군사(軍事)·과학(科學)	
도전(挑戰)·증대(增大)하는 소련(蘇聯)의 위협(威脅) .....	최재구(71)
한국전(韓國戰)에서의 공중작전(空中作戰) .....	심경식(79)

공군만상(空軍漫像) ..... 정운섭(鄭雲燮)(77)  
 병자호란(丙子胡亂)과 김상헌(金尙憲) ..... 편집실(編輯室)(134)

**군가(軍歌)**

하늘의 행진곡 ..... (130)  
 솟아라 보라매 ..... (131)  
 멋쟁이 용사 ..... (132)  
 용사의 충정 ..... (133)

불고기 냄새 ..... 단편(短篇) ..... 안수길(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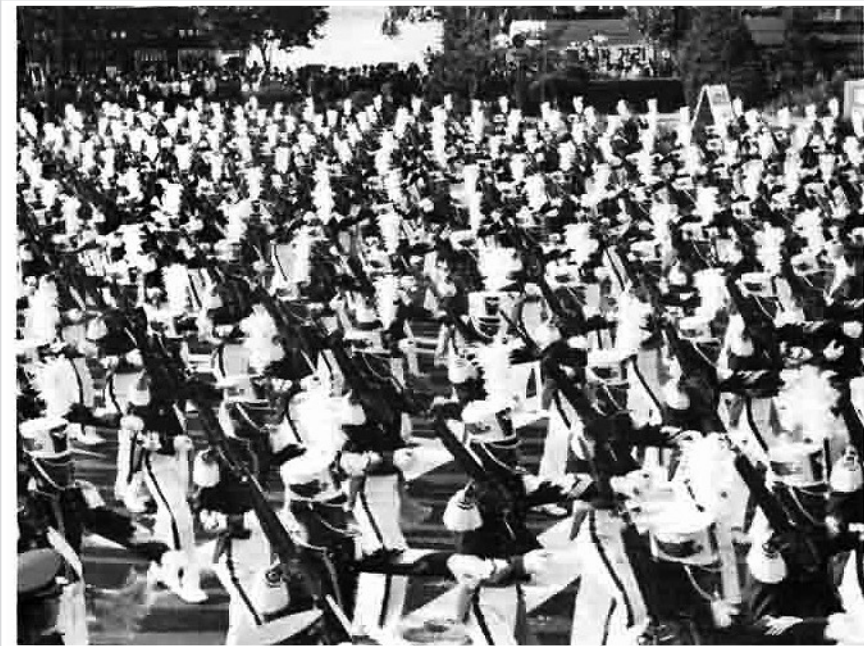




보무(步武)도 당당(堂堂)한 보라매의 위용(威容)



제 3회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 개최 <81. 9. 20>



# 공군

제 177 호

1981년 제 4 호



참모총장(參謀總長) 통솔방침(統率方針)

완벽(完璧)한 영공방위태세(領空防衛態勢) 확립(確立)

항시전장(恒時戰場)

정병강군(精兵強軍)

절용증강(節用增強)



## 성년공군(成年空軍)의 위용(威容)

정훈감(政訓監) 대령(大領)

강용구(姜容求)

마하(Mach)의 시대(時代)를 누비는 고속(高速)의 사나이, 푸른 제복(制服)의 공군(空軍)은 이제 성년(成年)으로서의 위용(威容)을 갖추었다. 성년공군(成年空軍)의 위용(威容)은 공군장병(空軍將兵) 각자의 내적성숙(內的成熟)이 전제(前提)로 되어야만 완벽(完璧)한 전비태세확립(戰備態勢確立)의 근간(根幹)이 되지 않겠는가? 강산(江山)도 10년(年)이면 변(變)한다는데, 건군(建軍) 33주년(週年)을 지내면서 창군(創軍) 당시(當時)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 술한 감회(感懷)에 젖지 않을 수 없다.

1949년(年) 육군(陸軍)에서 분리(分離)·독립(獨立)되어 정식(正式) 발족(發足)한 공군(空軍)은 경비행기(輕飛行機)(L-4L-5) 20대와 병력(兵力) 1,600명으로 출발(出發)했던 것이다.

그 후 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聲援)과 공군(空軍)의 연구(研究) 노력(努力)으로 1950년에는 건국기(建國機)(T-6)와 무스탕(F-51)을 도입했고, 55년에는 F-86 전폭기를 도입하여 제트화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65년에 자유(自由)의 투사(鬪士)(F-5)를 도입하여 아음속(亞音速)에서 초음속(超音速)으로의 발전(發展)을 보였고, 69년에는 하늘의 도깨비 팬텀전폭기(F-4)를 도입하여 미국·영국·이스라엘에 이어 네번째의 팬텀 보유국으로 부상하기에 이르렀고, F-16 최신예 전폭기도 그 도입을 눈앞에 두고있다. 한편, 군수산업의 발달로 우리 손으로 항공기를 제작할 날이 멀지 않았으며, 특히 하늘의 눈으로 통하는 방공(防空) 관제(管制)가 저공 침투까지도 완벽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물샐 틈없는 방공 태세를 갖추었으며 우수한 조종술, 뛰어난 정비 기술, 장병들의 필승의 신념과 실전(實戰)과 같은 전술전기연마(戰術戰技研磨)로 막강(莫強)한 전력(戰力)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時點)에서 우리는 공군(空軍)의 발전상(發展相)에만 감탄하고 있어서는 안되며, 더욱 더 현존(現存) 전력(戰力)을 극대화(極大化)하고 발전적(發展的) 연구(研究) 업무(業務)에 정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 가장 기본적인 과제(課題)는 정신전력(精神戰力) 강화(強化)이다. 장병 개개인이 확고부동(確固不動)한 가치관(價値觀)을 정립하여 투



제 28 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 <81. 10. 2>



# 사회정화운동(社會淨化運動)과 국민의식개혁(國民意識改革)

김 충 남(金忠男)

사회정화위원회위원장(社會淨化委研究室長)

정박(政博)·육사교수(陸士教授)

철(透徹)한 국가관(國家觀)을 확립(確立)하고, 호국적(護國的) 반공사상(反共思想)을 앙양(昂揚)하며 필승(必勝)의 군인정신(軍人精神)을 함양(涵養)해야 한다.

그리고 항공기(航空機)를 비롯한 고가(高價)의 장비(裝備)를 가장 경제적(經濟的)으로 운용(運用)해야 한다. 한 방울의 기름이나 하나의 부품도 결코 소홀히 다름이 없이 나의 물건이나 나의 신체를 아끼고 보살피듯이 최대(最大)의 관심과 애호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분야별(分野別)로 현존기량 및 숙련도를 더욱 높이기 위(爲)해 부단(不斷)한 연구(研究)·검토(檢討)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우리가 바라는 제(第)2의 도약(跳躍)을 통한 복지사회(福祉社會)의 건설(建設)은 바로 온 국민의 힘을 합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피원조국(被援助國)의 위치에서 탈피하여 원조국(援助國)으로 부상해 가고 있으며, 선진국(先進國) 대열(隊列)에 가담(加擔)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88년에 세계 Olympic을 서울에서 개최(開催)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 국민(國民)들의 피땀어린 노력(努力)의 결실(結實)이요, 신장된 국력(國力)의 표현인 것이다.

우리는 선진국민으로서의 긍지를 견지해 나가야 하는 바, 가장 먼저 요청(要請)되는 것이 신의(信義)의 확립(確立)이다. 공자(孔子)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철리(哲理)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의 단결은 신의(信義)를 바탕으로 할 때 굳건하며, 단결을 토대로 국력이 신장되고, 그 후에야 국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의(信義)란 진실하고 정직한 것을 말하며 모두가 진실한 마음과 행동을 보여준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려움이겠는가?

10월은 상달!

일년 중 으뜸이며, 국군의 달이기도 한 것이다. 천하 제1의 우리 강산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복지에로의 기운(氣運)이 가득한 수확의 계절이다.

성년공군은 영광(榮光)된 조국(祖國)의 내일을 위해 필승 보라매들은 오늘도 푸른 창공(蒼空)을 향(向)해 힘차게 활주로를 솟구치고 있다.

사회정화운동(社會淨化運動)은 부정적(否定的) 요소(要素)의 물리적(物理的) 척결(剔抉)보다는 긍정적(肯定的) 요소(要素)의 신장활동(伸張活動)이 바람직하며, 각 학교(學校), 직장, 사회(社會) 단체(團體)들이 자연스럽게 자율적 정화(淨化)를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새 시대(時代) 새 이념(理念)

새 시대(時代)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새 이념(理念)은 「정의사회(正義社會)의 구현(具現)」이다. 빛나는 역사(歷史)는 내외적(內外的) 시련(試鍊)에 대해 창조적인 적응을 통해서 이룩되는 것이며, 따라서 새 이념(理念)이란 당면한 민족적(民族的) 과제(課題)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 정신적(精神的) 지표(指標)이다. 개항(開港) 이래 100년(年)간에 걸친 역사적 경험들을 되돌아보고 나아가서 통일(統一)된 선진복지사회(先進福祉社會)의 건설이라는 민족적 소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윤리(倫理)와 규범(規範)과 합리성(合理性)이 지배하는 정의(正義)로운 사회기풍(社會氣風)을 이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또 선행(先行)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10·26사태(事態) 이후에 밀어 닦힌 일련의 국가적(國家的) 위기(危機)는 일제통치(日帝統治)의 잔재(殘滓)를 씻어 버리지도 못하고, 확고한 윤리적 기반도 없이 무분별하게 서구문물(西歐文物)을 도입하고 60년대 이래의 성장위주(成長爲主)의 근대화과정(近代化過程)에서 누적되어 온 숱한 문제점들이 동시에 노출된 것에 불과하다. 즉, 권력남용(權力濫用), 권모술수(權謀術數), 극한대립(極限對立)으로 특징지워졌던 지난날의 정치(政治), 사회적(社會的) 윤리(倫理)와 책임(責任)을 망각한 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이익추구(利益追求)에만 급급했던 경제(經濟), 그리고 공공윤리(公共倫理)와 질서의식(秩序意識)의 부재(不在) 속에서 팽배된 불신(不信)과 불만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정치(政治), 경제(經濟), 사회(社會) 등 모든면에서 「악

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지배적이었으며, 「정직한 사람은 못산다」든가 「법대로 살면 손해다」라는 그릇된 사고방식이 팽배하여, 요령있고 처세술이 좋은 사람이 정직·성실한 사람보다 인정받는 현상마저 없지 않다.

이러한 부패된 요인을 그대로 두고 온 국민의 바램인 민주복지국가(民主福祉國家)를 건설하기 어려운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비능률을 방지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할 수 없음은 물론 격변하는 내외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본다. 부정부패가 그대로 온존된 사회에서 국민이 사치와 낭비, 나태와 안일에 젖어 있고, 사회기강이 무너져 있을 때,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만다는 것은 최근 월남의 패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민족이 점증(漸增)하는 국제적 긴장 속에서 온갖 시련과 대결하면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적단합(國民的團合)과 건전한 국민정신(國民精神)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위기상황(危機狀況)에서 국운(國運)을 바로잡기 위하여 80년(年) 5월 발족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를 중심으로 그 동안 누적되어 온 정치(政治), 경제(經濟), 사회적(社會的)인 비리(非理)와 폐습을 제거하기 위한 미증유의 사회개혁(社會改革)을 단행하였다. 즉, 그동안 국가발전(國家發展)과 국민봉사(國民奉仕)라는 기본적 책무(義務)를 도외시한 채 부정부패(不正腐敗) 행위를 일삼던 사이비 정치인을 제거함으로써 정치풍토(政治風土) 쇄신(刷新)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정부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부정비위(不正非違) 공무원(公務員) 숙청을 단행하여 행정쇄신(行政刷新)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선량한 국민을 괴롭혀온 폭력, 공갈, 사기, 마약사범 등 각종 사회악(社會惡)을 제거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취하였고 정상적(正常的)인 교육이 무색할 정도로 과열되었던 과외 수업의 금지 조치 등 각종 사회개혁(社會改革) 조치를 단행하여 사회풍토쇄신(社會風土刷新)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개혁의지(改革意志)는 제(第)5공화국(共和國)의 출범과 함께 법규(法規)의 제정과 제도개혁(制度改革) 등 실천적 차원으로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누적 되어 온 정신적 부패와 사회풍토(社會風土)에서 오는 비리폐습(非理弊習)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개혁조치(改革措置)와 제도개선(制度改善)만으로는 쉽게 제거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며, 사회정화운동(社會淨化運動)은 바로 그러한 맥락(脈絡)에서 시작된 것이다.

### 사회정화운동(社會淨化運動)의 당위성(當爲性)

지금까지 사회정화(社會淨化)는 주로 부정적(否定的) 요소(要素)를 척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부조리(不條理)는 특권층(特權層)에 관련된 것이며 자신들과는 무관(無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조리 척결은 작년도의 위기상황(危機狀況) 속에서 국보위(國保衛)가 취한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였다. 사람들이 자신들과는 관계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비리폐습(非理弊習)도 깊이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과 의식구조(意識構造)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의식혁명(意識革命)이 없이는 정의사회(正義社會)가 이룩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전국방방곡곡,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는 사회정화운동(社會淨化運動)은 새 시대(時代) 새 역사건설(歷史建設)의 국민적(國民的) 지지(支持)와 참여(參與)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물질적(物質的), 환경적(環境的) 근대화(近代化)는 성공적으로 이룩되어 경제적으로는 농업중심(農業中心)의 사회(社會)에서 2, 3차 산업(產業)이 지배적인 산업사회(產業社會)로, 사회적으로는 혈연중심(血緣中心)의 촌락사회(村落社會)에서 도시사회(都市社會)로, 국제적으로는 대외 교류가 거의 없는 폐쇄사회(閉鎖社會)에서 세계와 긴밀한 교류(交流)를 하는 개방사회(開放社會)로 변모되었으나 우리의 의식구조(意識構造)와 사회제도(社會制度)는 전근대적(前近代的)인 면이 상당할 정도로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가치관(價値觀)과 행동양식의 근원을 좋지 못한 민족성(民族性)으로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나 이것은 민족성(民族性)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 100년간 일제통치(日帝統治), 남북(南北) 분단(分斷)과 전쟁(戰爭) 등으로 인한 한계상황(限界狀況) 속에서 물질적으로는 극단적인 궁핍상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극단적이고, 무질서한 생존경쟁(生存競爭)은 아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지 모른다. 다행히 60년대(年代) 이래 성공적인 근대화(近代化)를 이룩했지만 이것은 너무나 물질중심(物質中心)의 노력이었으므로 정신(精神) 및 문화제도적(文化制度的)인 면은 등한시되었고, 그것의 결과로 윤리(倫理)와 규범부재(規範不在)의 사회상(社會相)을 초래한 것이다.

우리가 민주제도(民主制度)를 도입한지 30년(年)이 지났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조건인 국민(國民) 하나하나가 국가사회문제(國家社會問題)에 관심(關心)을 가지고 책임(責任)있는 행동을 하는 「주인의식(主人意識)」을 제대로 갖춘 사람은 별로 없다. 그 결과로 선거시(選舉時)에도 지연(地緣) 혈연(血緣)과 물질적(物質的)인 것으로 대표자(代表者)를 선출하는 등 전근대적(前近代的)인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법(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병역의무(兵役義務)나 납세(納稅)를 가능하면 기피하려 한다. 따라서 이 땅에 민주주의(民主主義)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윤리(民主市民倫理)가 확립되는 것이 절실한 문제이다.

경제적(經濟的)으로는 그 동안에 경제의 기적을 이룩했다고 하지만 산업사회(產業社會)에서 요청되는 직업윤리(職業倫理), 생산자윤리(生產者倫理), 소비자윤리(消費者倫理), 서비스윤리(倫理) 등과 같은 경제윤리(經濟倫理)가 미약하다고 본다. 막스웨버가 서구(西歐)의 자본주의(資本主義) 발달(發達)의 근원을 기독교정신의 실천에서 찾듯이, 우리 역시 자신이 하는 일에는 귀천(貴賤)이 없으며, 신(神)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맡은 바를 다할 것이며 그 소득(所得) 역시 소중히 써야 한다는 의식을 내면화(內面化)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사회(資本主義社會)에서 돈의 중요성(重要性)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불량품 제조, 이권정탁(利權請託), 매점매석, 탈세, 퇴폐업소운영 등 부당(不當)한 방법(方法)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현대경제질서(現代經濟秩序)는 「신용(信用)있는 교환질서(交換秩序)」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량품제조나 과대포장, 허위 과대광고 등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처사이며, 이와같은 유통질서(流通秩序)의 문란은 사회적불신(社會的不信)을 싹틔게 하는



것이다.

사회적(社會的)으로는 현대적(現代的) 도시(都市)의 다량건설, 자동차, 텔레비전, 냉장고 등과 같은 문화생활(文化生活)기구의 증대로 우리의 생활환경(生活環境)은 현대적인 것으로 급속히 변모해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에 적합한 사회윤리(社會倫理)와 사회질서(社會秩序)는 존재하는가?

우리 조상들은 촌락단위(村落單位) 혈연중심사회(血緣中心社會)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간에는 깊은 인정(人情)을 쏟으나 도시화(都市化)된 사회에서 접촉하게 되는 수많은 낯선 사람들 간에 요구되는 인간관계규범(人間關係規範)은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의식구조(意識構造)에는 유교적(儒教的)이고 봉건적(封建的)인 것에서 오는 관존민비(官尊民卑), 권위주의(權威主義), 엘리트의식(意識), 특권의식(特權意識) 등 현대(現代) 민주산업사회(民主産業社會)에 부적합한 사고방식(思考方式)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사회(社會)나 조직체(組織體)에도 혈연(血緣), 지연(地緣) 또는 개인관계(個人關係)에 의한 인맥(人脈)이 지배(支配)하는 분위기이며 조직의 책임자가 바뀌면 간부가 대거 교체되고 취직, 승진, 보직 등 인사관리(人事管理)에 있어서 「맥」이나 「눈치」 또는 요령있는 사람이 유리한, 불공정(不公正)과 불평등(不平等)이 만연하고 있다. 좋은 인적 배경을 악용하여 쉽게 출세(出世)하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나 능력(能力)있고 성실(誠實)한 사람이 밀려나가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社會)에 대해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국민화합(國民和合)이란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정치(政治), 경제(經濟), 사회적(社會的)으로 몇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물질적(物質的)인 환경(環境)은 많이 근대화(近代化)되었고 90년대(年代)에 이르면 선진화(先進化)되었지만 비물질적(非物質的)인 측면, 즉 현대대중사회(現代大眾社會)에 맞는 공공윤리(公共倫理)나 질서의식(秩序意識)은 배양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렇게 볼 때 전근대적(前近代的)인 의식구조(意識構造)와 사회생활(社會生活)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90년대(年代)에 이르러서도 근대화(近代化)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근대적(前近代的)인 제문제(諸問題)를 바로 잡고 비물질적(非物質的)인 측면을 근대화(近代化)하려는 것이 사회정화(社會淨化)의 궁극적 목적인 것이다.

### 사회정화운동(社會淨化運動)의 이념(理念)과 추진수단(推進手段)

정의사회(正義社會)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존경과 대우를 받으며, 정당한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代價)를 받으며 서로 믿고 화합단결(和合團結)하여 발전(發展)할 수 있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정(不正), 불의(不義), 부실(不實) 그리고 각종 비리폐습(非理弊習)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법(法)과 규범(規範)의 질서(秩序) 속에서 공평(公平)한 경쟁(競爭)이 이루어져야 한다.

운동경기(運動競技)가 제대로 되려면 경기규칙(競技規則)이 합리적(合理的)이고, 심판자(審判者)가 공정(公正)하게 심판해야 하며, 또 평소에 충실히 실력(實力)을 연마한 선수(選手)들이

경기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실력대결(實力對決)을 해야 하는 것이다. 사회생활(社會生活)도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 간에 경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사회생활에 있어서 정치적(政治的), 경제적(經濟的), 사회적(社會的) 경기(競技)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우선 법령(法令)과 규범(規範)이 합리적으로 마련되고, 그것을 운용(運用)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심판자적(審判者的) 자세로 공평무사(公平無私)하게 처리하며, 그러한 여건 속에서 개인의 성실과 능력이 「사회생활경기(社會生活競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사회정화운동(社會淨化運動)은 정직(正直), 질서(秩序), 창조(創造)를 삼대이념(三大理念)으로 한다. 우선 정직(正直)은 신뢰(信賴)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하는 기본 가치이다. 정직은 서로가 믿고 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要素)이며 사회적(社會的) 윤리형성(倫理形成)의 일차적 요건이다. 사회에 정직의 윤리가 충만할 때 신뢰하는 사회풍토(社會風土)가 조성된다.

질서(秩序)란 조화(調和)로운 사회(社會)를 이룩하기 위한 핵심가치(核心價値)이다. 질서란 개인들의 정직만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생활의 복합적인 인간관계(人間關係)에 필수적인 법(法)과 규범의 준수로서 달성되는 것이다.

창조(創造)는 진보(進歩)하고 발전(發展)하는 사회의 기본이념이다. 어떤 사회든지 정직성(正直性)을 토대로 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질서(秩序)가 존중되어 조화(調和)를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창의성(創意性)과 합리성(合理性)이 존중되어 개인(個人)과 사회(社會)가 정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삼대이념(三大理念)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적(手段的) 이념으로 사대원칙(四大原則)을 제시한다. 그 첫째는 「도덕성(道德性)의 원칙(原則)」으로 이 운동은 인간(人間)을 중요시 하고 양심(良心)과 이상(理想)을 추구하는 가치있는 삶을 권장한다. 둘째로 극단적 개인주의(個人主義)와 이기주의(利己主義)를 탈피하고 자신의 언행(言行)이 「공해(公害)」가 안 되도록 하며 공익(公益)을 존중하면 자신에게 이익(利益)이 돌아온다는 「공익성(公益性)의 원칙(原則)」을 존중한다. 셋째로 사회 생활의 모든 면에서 원리원칙(原理原則) 앞에 예외가 없고 공평(公平)한 「공정성(公正性)의 원칙(原則)」을 지켜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만연된 비합리적(非合理的) 형식주의(形式主義)와 관료적(官僚的) 권위주의(權威主義)를 지양하고 개인(個人)의 창의성이 존중되고 조직(組織)이 합리적(合理的)으로 운영 되어 개인(個人), 집단(集團), 사회(社會) 전체(全體)가 향상발전(向上發展)될 수 있도록 합리성(合理性)의 원칙(原則)을 존중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정화(社會淨化)는 범위도 넓고 또 그처럼 광범한 분야에 걸친 사회개혁(社會改革)과 정신혁명(精神革命)을 이룩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업이다. 따라서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體系的)이고 종합적인 추진전략(推進戰略)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운동의 추진주체(推進主體)와 선정된 활동과제(活動課題)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次元)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첫째는, 물리적(物理的) 척결(剔抉)이다. 이는 외면적(外面的)으로 나타난 고질화된 위법

(違法)과 비리(非理), 폐습(弊習) 등 부정적(否定的) 요소(要素)의 제거를 말한다. 전통적 미풍양속(美風良俗)에서 볼 때 주위사람들의 비리폐습행위를 고발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한 경우, 가까운 사람들이 진지한 충고를 통해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안 될 때, 정화추진위원회(淨化推進委員會)가 권고하며 고질적인 불의(不義), 불법(不法)에 대해서는 사법기관(司法機關)이 법적(法的) 조치(措置)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비리폐습(非理弊習) 또는 사회윤리(社會倫理)의 결여는 그 사회의 문화풍토(文化風土)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제도(社會制度) 및 환경(環境)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政府)는 정치(政治)·경제(經濟)·사회(社會)의 주요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개혁(改革)과 개선(改善)을 도모하고 있거니와 가정, 학교, 직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地域社會)에서도 환경(環境) 및 제도개선(制度改善)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척결과 제도(制度)·환경(環境)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社會的)으로 기대되는 행동규범(行動規範)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의식개혁(意識改革)은 이룩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정화운동(社會淨化運動)은 남녀 노소 또는 각계각층의 정신개혁을 위한 교육혁신운동(教育革新運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정교육(家庭教育), 학교교육(學校教育) 그리고 사회교육(社會教育)이 유기적으로 연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정화운동(社會淨化運動)을 부정적(否定的) 요소(要素)의 제거를 위주로 한 운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으나 초기단계(初期段階)에서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물리적 척결을 위한 노력이 다소 지배적일 가능성이 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정적 요소의 제거 활동은 점차 적어지고 긍정적(肯定的) 요소(要素)의 신장활동(伸張活動)이 점차 증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사회(社會) 전반적(全般的)으로 또는 지역사회단위(地域社會單位)로 정화분위기(淨化雰圍氣)가 무르익게 되면 각 학교(學校), 직장(職場), 사회단체(社會團體)들도 자연스럽게 자율적(自律的) 정화(淨化)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정화운동(社會淨化運動)이 과거의 국민운동(國民運動)들과 다른 점은 과거의 운동들이 단기적(短期的) 과제(課題)를 중심으로 캠페인에 중점을 두었다면 정화운동(淨化運動)은 삼대정화수단(三大淨化手段)을 유기적으로 활용(活用)하고 중장기사업(中長期事業)에 중점을 두어 처음부터 합리적(合理的) 이론체계(理論體系)를 수립하고 지속적인 연구발전(研究發展)을 통해서 궁극적인 정신혁명(精神革命)을 성공시키려는데 있다.

### 참여(參與)와 실천(實踐)의 민주지도운동(民主指導運動)

과거에도 사회발전(社會發展)을 위한 국민운동(國民運動)이 있어 왔다. 가장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 새마을운동(運動)이라고 본다. 그러나 새마을운동(運動)은 60년대(年代)의 도시중심적(都市中心的)인 근대화(近代化) 과정에서 낙후된 농촌(農村)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환경개선과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사회정화운동(社會淨化運動)은 국가발전단계(國家發展段階)에서 근대화(近代化)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근대화(近代化)된 후에 오는 사

회병리(社會病理)를 극복하고 나아가서 「조국현대화(祖國現代化)」 또는 「조국선진화(祖國先進化)」를 위한 노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회정화(社會淨化)는 근대화(近代化)가 앞선 도시(都市)에서부터, 그리고 도시민(都市民)들 중에서도 보다 근대화(近代化)된 계층(階層)이며 지도적(指導的) 계층인 종교지도자(宗教指導者), 정치인(政治人), 공무원(公務員), 지식인, 언론 문화인 등이 앞장서야 할 운동인 것이다. 사실상 정신운동(精神運動)이란 지도적 계층이 이끌어가지 않고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사회정화운동(社會淨化運動)의 의의(意義)를 정리한다면 첫째로, 우리 사회(社會)의 부조리를 제거하여 사회적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국민화합(國民和合)을 도모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곧 복귀위협을 이겨내는 민족생존운동(民族生存運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둘째로, 우리의 경제(經濟)가 계속 발전하려면 기술과 실력을 갖춘 성실한 사람들이 산업사회(產業社會)를 이끌어감으로써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것은 또한 민족발전운동(民族發展運動)인 것이다. 셋째로, 우리의 의식구조(意識構造)에는 미신을 신봉하고 전근대적(前近代的)이며 비합리적(非合理的)인 면이 많은 바 이를 청산하고 근대산업사회(近代產業社會)에 적합한 것으로 전환하는 의식(意識)의 현대화운동(現代化運動)이다. 넷째로 우리의 사회제도(社會制度)와 구조(構造)는 봉건적(封建的)이고 전근대적(前近代的)인 농업사회(農業社會)에서 적합한 지연위주중심(地緣爲主中心)의, 또는 차별적이고 불합리(不合理)한 면들이 많은 바 이를 민주산업사회(民主產業社會)의 여건에 맞게 개혁(改革)하는 사회제도(社會制度)의 현대화운동(現代化運動)이다. 마지막으로 이 운동은 불평등(不平等)이나 특권(特權)을 배제하고 법규(法規) 앞에 모든 사람이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정화추진위원회(淨化推進委員會) 활동(活動)을 통해 민주적(民主的)인 훈련(訓練)을 하는 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인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 운동은 선진한국(先進韓國)이 되기 위한 한국적(韓國的) 르네상스운동(運動)인 것이다.

사회정화운동(社會淨化運動)이 민간주도(民間主導)로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정부주도(政府主導)의 운동으로 생각하고, 정부(政府)에서 활동과제(活動課題)와 방법(方法) 그리고 이를 위한 모든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운동을 정치(政治)와 관련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운동(運動)은 지난 해 사회개혁(社會改革)과 정신혁명(精神革命)의 필요성을 국민 다수가 요망하고 있을 때,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서 주장되었을 뿐이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적(國家的) 또는 민족적(民族的) 차원(次元)의 국민운동(國民運動)인 것이다.

우리는 지난날 정부주도(政府主導)에 의한 사회개혁운동(社會改革運動)의 종말을 잘 알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는 운동은 단기간(單期間)에 외형적인 효과는 있지만 그것은 형식화되고 획일화되어 정신혁명(精神革命)을 이룩하는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다. 정신개혁(精神改革)이란 개인(個人) 양심(良心)에서 출발되는 문제로 국가권력(國家權力)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며 또한 현대사회(現代社會)의 복잡성과 다양성 때문에 관료(官僚)들에 의한 획일적 운동은 그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은 것이다. 나아가서 그러한 접근방법(接近方法)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參與)할 동기(動機)를 부여 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政府)는 정치인(政治人)이나 공무원(公務員)을 중심으로 출선수범하며 사회(社會)의 정화분위기를 조성하고 민간운동(民間運動)을 적극 지원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사회정화운동(社會淨化運動)은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地域社會)에서 자발적 자율적으로 바르게 잘 살아보자는 운동인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社會)의 비리와 폐습은 공해 현상과 같아서 몇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社會) 각계각층(各階各層)의 동시적(同時的)이고 협동적(協同的)인 노력이 요망되는 것이다. 그러한 점(點)에서 사회정화운동(社會淨化運動)은 진정한 의미의 참여민주주의(參與民主主義)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왜곡된 사회풍토(社會風土)나 올바르지 못한 개인적(個人的) 가치관(價値觀)과 행동양식(行動樣式)은 역사적(歷史的), 사회적(社會的) 환경(環境)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었으므로 그것을 바로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켜가는데는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국민의식혁명(國民意識革命)과 사회제도개혁(社會制度改革)이라는 민족적 과업은 그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가 없이는 큰 결실을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지식인, 언론인, 종교지도자, 지역사회유지, 그리고 뜻있는 젊은이들이 이 운동의 참뜻을 인식하고 개척자적 헌신으로 이 운동을 이끌어 나가야 하며, 지역사회의 각급 학교, 종교집단,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사회정화운동(社會淨化運動)은 역사적 변혁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운동이 아니고 조국(祖國)의 선진화(先進化)와 영원한 번영을 위해 항구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합리적(合理的)인 운동이며 따라서 국민 모두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궁극적 목적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努力)을 통하여 이룩될 정의(正義)로운 사회(社會)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주위로부터 존경과 대우를 받으며, 정당한 노력에 대하여 합당한 보상(補償)을 받으며 따라서 서로 믿고 화합단결(和合團結)하여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주변으로부터 부정(不正), 불의(不義), 부실(不實) 그리고 폐습(弊習)을 추방함으로써 누구나 법규질서(法規秩序) 속에서 공평(公平)한 경쟁이 보장되고 각자의 자아실현(自我實現)과 행복추구(幸福追求)가 가능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정의사회(正義社會)는 모든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공정(公正)하게 보호받는 법치사회(法治社會)이며, 모든 국민(國民)이 스스로 법령(法令)을 지키는 준법사회(遵法社會)이다. 이러한 사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진 개방사회(開放社會)이며, 합리성(合理性)과 공익성(公益性)을 존중하는 민주사회(民主社會)이다.

우리는 20년(年) 이내(以內)에 2천년대(千年代)를 맞이하게 된다. 현대과학기술(現代科學技術)에 힘입어 사회변동(社會變動)의 속도는 가속화(加速化)되어 가고 있으며, 증대되는 자원난(資源難)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대내적(對內的)으로는 남북대결(南北對決)에서 우리가 주도권(主導權)을 잡고 평화통일(平和統一)의 길로 매진해야 할 역사적 요

청을 안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나 자신이 잘 되고 내 가족과 우리나라가 잘되기 위해서는 「우리」라는 공동의 광장이 마련되고, 우리들 서로 간의 약속인 법과 규범을 지키면서 각자의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명량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국민들의 오도된 윤리의식을 바로잡고 사회와 국가의 기강(紀綱)을 확립하며, 민족정기(民族正氣)를 회복하는 일은 나라의 흥망(興亡)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정의사회(正義社會) 구현(具現)은 쉽게 달성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과업을 시작한 단계에 불과하며 조국을 사회정의(社會正義)의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요청되는 것이다.

정부(政府)는 전두환대통령(全斗煥大統領)의 지도이념(指導理念)에 따라 정의사회(正義社會)를 기필코 이룩하겠다는 의지(意志)의 상징으로 80년(年) 10월말(月末)에 사회정화위원회(社會淨化委員會)를 설치하여 사회개혁(社會改革)과 국민의식혁명(國民意識革命)을 목표로 하는 사회정화운동(社會淨化運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가 이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사회정화운동(社會淨化運動)은 어디까지나 국민운동(國民運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운동의 주체(主體)가 되어 정화(淨化)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닌 「나와 내 주변의 문제」로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사회정화운동(社會淨化運動)은 조국선진화(祖國先進化)에 가장 크게 기여한 역사적 과업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명장명언(名將名言)

◎ 지휘관(指揮官)은 전투(戰鬪)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原動力)이 되어야 한다. 부대(部隊)들이 제일선(第一線)에 나타난 그 모습을 보고 확고부동(確固不動)한 지휘관(指揮官)의 통제하(統制下)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인식(認識)시켜야 한다.

- 롬멜 -

◎ 피를 흘릴 각오(覺悟)가 없이 승리를 얻고자 하는 자는, 피흘릴 것을 불사(不辭)하는 자에 의해서 반드시 정복(征服)되고 말 것이다.

- 클라우제비츠 -



# 『레이건』 행정부(行政府)의 군사력(軍事力) 증강방향(增強方向)

이 선 호(李善浩)

〈국방대학원(國防大學院) 교수(教授)〉

레이건 행정부(行政府)는 「힘의 미국(美國)」 정책(政策)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사(有史) 이래(以來) 최대규모(最大規模)의 국방비(國防費)를 의회(議會)에 요구(要求)할 것으로 알려졌다.

## 1. 문제(問題)의 제기(提起)

최근(最近) 「카터」 행정부(行政府) 당시(當時)의 파행적(跛行的) 군사정책(軍事政策)에 대한 비판(批判)의 소리가 고조(高潮)되고 있다. 특(特)히 우리는 금반(今般) 「레이건」 대통령(大統領)의 피격사건(被擊事件)이 준 충격(衝擊)과 더불어, 지난 4년간(年間) 「카터」의 주한미지상군(駐韓美地上軍) 철수정책(撤收政策)에 따른 시비(是非)로 말미암아 야기(惹起)된 갖가지 불안요인(不安要因)이 미국(美國)의 새로운 행정부(行政府)가 출범(出帆)함과 동시에 해소(解消)되고, 한미정상회담(韓美頂上會談)을 계기로 양국간(兩國間)의 관계(關係)가 크게 개선(改善)되고 철군문제(撤軍問題)가 백지화(白紙化)된 이때, 「레이건」 행정부(行政府)의 방위력증강계획(防衛力增強計劃)이 보도(報道)됨에 따라 현재(現在) 일고 있는 「카터」에 대한 미의회(美議會)와 군부(軍部)의 심(甚)한 비판(批判)의 소리를 긍정적(肯定的)으로 받아들일게 된다.

상원군사위원장(上院軍事委員長) 「타워」(John Tower) 의원(議員)은 지난 1월(月) 28일(日) 「와인 버그」(Caspar Weinberg) 국방장관(國防長官)과 「존스」(David C. Jones) 합참의장(合參議長)이 동참(同參)한 의회증언석상(議會證言席上)에서 1981년(年) 및 1982년(年)의 국방예산(國防豫算)을 320억(億) 「달러」 이상(以上) 증액(增額)할 것을 주장(主張)하면서 「카터」 행정부(行政府)의 국방비(國防費)는 절름발이에산(豫算)(Lame Duck Defense Budget) 편성

(編成)이었다고 그 불합리성(不合理性)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關聯)하여 「존스」 합참의장(合參議長)은 「카터」의 국방정책(國防政策)을 전략(戰略)·전력불용납(戰力不兼容)(Strategy-Force Mismatch)의 실패작(失敗作)이었다고 전제(前提)하면서, 미국(美國)의 현군사력(現軍事力)은 미국(美國)의 전략적(戰略的) 공약(公約)을 지키는데 급급하지만, 증대(增大)되어 가는 소련(蘇聯)의 군사력(軍事力)은 미국(美國)의 전략계획(戰略計劃)을 거부(拒否)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程度)로 양자간(兩者間)에는 큰 격차가 벌어졌으니, 국방비증액(國防費增額)만으로 이 엄청난 「갭」을 시정(是正)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강조(強調)하였다. 「레이건」은 「힘의 미국(美國)」 정책(政策)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내적(對內的)으로 경제문제(經濟問題)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련(蘇聯)의 위협(威脅)에 대처하기 위해 1982회계년도(會計年度) 국방비(國防費)를 평시(平時) 예산(豫算)으로서는 유사(有史) 이래(以來) 최대규모(最大規模)인 2,220억 「달러」를 의회(議會)에 요구(要求)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표(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1년(年)에 비(比)해 향후(向後) 5년간(年間) 연방 예산은 57%가 증액되는데 반(反)해 국방비(國防費)는 158%를 증액하려는 획기적인 방어력(防禦力) 증강노력(增強努力)인 것이다.

국방비(國防費) 증액(增額) 5개년계획(個年計劃)

	1981~82	1982~83	1983~84	1984~85	1985~86	기준연도(基準年度) 대비증가율(對比增加率)
국방비(國防費)	25% 2,220억 「달러」	56%	79%	103%	130%(3,675억 「달러」)	158%
연방예산(聯邦豫算)	13%	20%	26%	33%	46%	57%

(Time, March 16, 1981, p.32.)

이같은 막대(莫大)한 군사비증액(軍事費增額)은, 소련(蘇聯)과 그 배후세력(背後勢力)의 음모(陰謀)(Machination)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엘살바도르」에 이르기까지 격화(激化)되고 있는 가운데 전략핵전력(戰略核戰力)의 대소균형(對蘇均衡)이 악화일로(惡化一路)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제(第)3세계지역(世界地域)에 계속 긴장을 고조(高潮)시키고 있으며 자유진영산업화(自由陣營產業化) 제국(諸國)의 젖줄이 되고 있는 「페르샤」 만(灣)이 불원장래(不遠將來)에 미(美)·소대결장(蘇對決場)으로 화(化)할 가능성(可能性)이 농후(濃厚)해지고 있는 현시점(現時點)에서 볼 때, 미국(美國)의 의회(議會)와 여론이 당연(當然)한 것으로 받아들일지 모른다.

군사력(軍事力)의 증강(增強)은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미국(美國)의 증대(增大)되어가는 대소취약성(對蘇脆弱性)의 응급치유(Quick Fix)도 중요(重要)하지 않지만, 미국(美國)이 새로운 전략적(戰略的) 주도권(主導權)(New Strategic Initiative)을 확보(確保) 유지(維持)하기 위해서는 장기적(長期的)으로 일관성(一貫性)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美國)의 2대당면문제(大當面問題)는 첫째로 미국(美國)과 대항(對抗)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地域)에 더 많은 군사력(軍事力)을 배비(配備)하는 것이고, 둘째는 미소간(美蘇間)의 힘의 불균형(不均衡)이 존재(存在)하는 곳에 공백(空白)을 메우는 것일 것이다.

## 2. 현존(現存) 군사력(軍事力)과 군사전략(軍事戰略)의 부조화(不調化)

### 가. NATO와 WTO의 전력(戰力) 격차(隔差) 심화(深化)

NATO 는 1971년(年) 이전(以前)까지만 해도 WTO보다 군사비투자액(軍事費投資額)이 31%나 앞서 있었다. 그러나 이 액수(額數)는 미국(美國)이 월남전(越南戰)을 치루기 위(爲)한 전비(戰費)에 절대액이 투입(投入)됐기 때문에 소련(蘇聯)처럼 주요장비(主要裝備)의 생산설비(生産設備)에 집중(集中) 투자(投資)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1976년(年)을 기하여 NATO의 군사비(軍事費) 1,774억(億) 「달러」는 WTO의 1,772억(億) 「달러」와 거의 같은 선(線)으로 접근(接近)하게 되었고, 그 후(後) 역전(逆轉)된 것이다.

결국 지난 10년(年) 동안 소련(蘇聯)은 미국(美國)보다 2,200억(億) 「달러」나 신장비 생산(生産)에 더 투자(投資)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요장비(主要裝備)의 연간(年間) 생산량(生産量)

「유럽」 중부전선(中部戰線)의 NATO 및 WTO 주요장비비교(主要裝備比較)

年度 主要裝備	1970		1980	
	NATO	WTO	NATO	WTO
戰 車	5,745	13,550	6,200	18,000
裝 甲 車	1,300	14,400	14,400	18,000
野 砲	2,000	5,150	2,300	6,500
對戰車火器	3,300	3,400	5,000	7,400
防空武器	1,900	4,400	2,300	5,000
航 空 機	1,550	2,850	1,420	3,200

(Armed Forces Journal International March 1981, p. 43.)

이 미국(美國)보다 75%나 앞서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NATO와 WTO간(間)의 「유럽」 중부전선(中部戰線)에서의 주요장비(主要裝備)의 불균형(不均衡)은 다음과 같이 엄청난 격차(隔差)(Chasm)로 치닫게 되었다.

따라서 「레이건」 행정부(行政府)의 전항(前項)에서 제시(提示)한 바 있는 국방비증액계획(國防費增額計劃)이 의회(議會)에서 승인(承認)된다 해도 소련(蘇聯)과의 근원적(根源的)인 전력(戰力)의 격차(隔差)는 해소하기 어려울 것인 바, 단지 응급처치(應急處置)(Bond-aids)의 효과(效果)만 노리지 말고 대소균형(對蘇均衡)을 달성(達成)키 위해서는 NATO 동맹(同盟) 제국(諸國)이 현재(現在)의 GNP의 3%선(線)을 유지(維持)하고 있는 국방비(國防費)를 최소한(最小限) 5%선(線)으로 인상(引上)시킴으로써, NATO 가맹국(加盟國)들이 공동보조(共同步調)를 취하도록 촉구(促求)해야 할 것이다.

### 나. 전략(戰略)과 능력(能力)의 부조화(不調化)

미국(美國)은 월남전(越南戰)이 끝날 때까지는 이른바 2.5전쟁(戰爭)(Two-and-a-half-war) 전략(戰略)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유럽」과 태평양지역(太平洋地域)의 2개(個)의 주전쟁(主戰爭)에 대처(對處)함과 동시(同時) 1개(個)의 타지역(他地域) 소규모전쟁(小規模戰爭)에 대처하려는 전략(戰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美國)이 8년반(年半)에 걸친 월남전(越南戰) 기간(期間) 중(中) 지나친 전비부담(戰費負擔)과 국력소모(國力消耗) 뿐만 아니라 「유럽」과 태평양(太平洋)에 동시(同時)에 2개(個)의 주전쟁(主戰爭)을 치를 수 있는 능력(能力)이 없음을 인식(認識)한 나머지, 「맥나마라」 국방장관(國防長官)은 1960년대말(年代末)에 와서 동남아(東南亞)에서 미국(美國)이 주전쟁(主戰爭)을 담당(擔當)할 자원(資源)도 의지(意志)도 없음을 표명(表明)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래서 「닉슨·독트린」이 선포됨으로써 미국(美國)은 월남(越南)에서 철군(撤軍)을 단행(斷行)하게 되었고 「레이드」(Melvin Laird) 국방장관(國防長官)은 미국(美國)의 군사력(軍事力)이 군사전략(軍事戰略)과 조화(調和)를 잃고 있어 재편성(再編成)이 불가피(不可避)하므로 1.5전쟁(戰爭)(One-and-a-half-war) 전략(戰略)을 채용(採用)하게 된 것이다. 즉 1개(個)의 주전쟁(主戰爭)을 「유럽」 전구(戰區)에서 수행(遂行)하고, 1개(個)의 소규모전쟁(小規模戰爭)을 세계(世界) 도처(到處)의 우발사태지역에서 치룬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最近)에 와서 전(前) 국방장관(國防長官) 「브라운」(Harlord Brown)은 공식적(公式的)으로 발표(發表)하거나 예산상(豫算上) 반영(反映)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전략(戰略)으로 1+1/2+1/2 전쟁(戰爭)(One-and-a-half and one-half-war) 전략개념(戰略概念)을 제시(提示)한 바 있다. 이는 증대(增大)되어 가는 소련(蘇聯)의 위협(威脅)에 대처하기 위해 「유럽」에서 계속 주전쟁(主戰爭)을 치루고 중동(中東)과 태평양지역(太平洋地域)에서 다른 2개(個)의 소규모전쟁(小規模戰爭)을 치루려는 것으로, 결국 2개(個)의 주전쟁(主戰爭)을 치루는

셈이 된다(  $1+1/2+1/2=2$ 이므로). 이는 미국(美國)의 군사력(軍事力)의 대형화(大型化)가 불가피(不可避)한 현실적(現實的) 요청(要請)에 따라 전략(戰略)·전력(戰力) 부조화(不調和)를 시정(是正)하려는 노력(努力)의 표현(表現)으로서 1960년대(年代)의 2.5전쟁전략(戰爭戰略)에 접근(接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美國)의 군사력(軍事力)은 지나치게 신장배비(伸張配備)되어 있어, 만일 전시(前示)한  $1+1/2+1/2$ 전쟁전략(戰爭戰略)에 따라 현존세력(現存勢力)을 3개전선(個戰線)에 투입(投入) 사용(使用)한다면, 그 어느 한 전선(戰線)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약체(弱體)가 되고 말 것이니, 이와같은 전략(戰略)·전력(戰力) 불용남상상황(不容納狀況)에서 「레이건」 행정부(行政府)의 국방비(國防費) 대폭(大幅) 증액조치(增額措置)는 상당히 설득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카터」 행정부(行政府)에서 심각한 예산삭감으로 고역(苦役)을 치른 해군당국(海軍當局)은 의회(議會)의 증언(證言)을 통(通)해 다음과 같은 의미(意味) 있는 발언(發言)을 하였다.

「우리는 3개대양(個大洋)(태평양(太平洋), 대서양(大西洋) 및 인도양(印度洋))을 통제(統制)할 공약(公約)을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해상세력(海上勢力)은 1개반(個半) 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

1979년도의 일본방위백서(日本防衛白書)에 의(依)하면 미(美)·소(蘇) 태평양해상세력(太平洋海上勢力)을 다음 도표(圖表)와 같이 비교제시(比較提示)하고 있는데 미국(美國)의 양적(量的)인 열세(劣勢)가 뚜렷하다.

그런데 대서양지역(大西洋地域)의 해상세력(海上勢力)도 이와 비슷한 현상(現狀)으로 바뀌

미(美)·소(蘇)의 서태평양(西太平洋) 함정세력(艦艇勢力) 비교(比較)

	1965		1978		
	美	蘇	美	蘇	
總排水「톤」數 (單位 1萬톤)	85	65	50	125	
潛水艦	在來式	8	80	2	75
	核推進	2	13	4	40
大型 水上艦	35	35	25	48	
勢力比率(美·蘇)	1 : 28		1 : 4.9		

(News Week, March 16, 1981, p.30.)

어 가고 있다. 특히 「페르샤」 만(灣)의 최근사태(最近事態)로 말미암아 상황(狀況)은 더욱 악화(惡化)되어 NATO의 함정세력(艦艇勢力)은 소련(蘇聯)보다 23%가 열세(劣勢)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해상항공세력(海上航空勢力)과 대잠항공기(對潛航空機)의 세력(勢力)에 있어서도 NATO측(側)이 70% 이상(以上) 우세(優勢)한 것으로 판단(判斷)되었으나, 이제는 소련(蘇聯)의 「백파이어」 기(機)와 장거리대(長距離對) 대함순항유도탄(對艦巡航誘導彈)의 증가배치(增加配置) 뿐만 아니라 수상함정(水上艦艇)과 잠수함(潛水艦)의 상주배치(常駐配置)로 세력(勢力)이 역전(逆轉)될 상황(狀況)에 놓여 있다.

미해군참모총장(美海軍參謀總長) 「헤이우드」 (Haywood) 제독은 이와 관련(關聯)하여, 「해군(海軍)은 10년전(年前)에 비(比)하여 절반의 세력(勢力) 밖에 갖고 있지 않으나, 그 당시(當時)에 비(比)해 담당해역(擔當海域)은 2배(倍) 이상(以上)으로 늘어났다. 해군(海軍)에 관심(關心)을 가진 그 누구도 짐작하겠지만 현재(現在)로서는 대소전쟁(對蘇戰爭)은 말할 것도 없고 평시공약(平時公約)조차 이행(履行)하기 어려운 실태(實態)이다.」 고 주장(主張)했다. 이 정도(程度)로 미해상(美海上) 세력(勢力)이 열세(劣勢)한 것이 사실(事實)이라면, 「브라운」 장관(長官)이 제시(提示)한  $1+1/2+1/2$ 전쟁전략(戰爭戰略) 역시 전력(戰力)의 뒷받침이 없는 실현불가(實現不可)한 구두탄(口頭彈)에 불과(不過)한 것을 알 수 있다.

### 다. 긴급배치군(緊急配置軍)(RDF)의 허실(虛實)

「카터」 행정부(行政府)에서 「페르샤」 만(灣)의 비상사태(非常事態)에 대비(對備)하여 1980년(年) 중반에 창설(創設)한 20만명(萬名) 규모(規模)의 긴급배치군(緊急配置軍)(Rapid Deployment Force)은 미국(美國)의 5개(個) 통합군(統合軍)(Unified Command) 중(中)의 하나인 전비사령부(戰備司令部)(Readiness Command) 예하부대인데 미해병(美海兵) 제(第)2사단(師團), 미해병(美海兵) 제(第)3사단(師團), 미육군(美陸軍) 제(第)82공정사단(空挺師團) 및 미육군(美陸軍) 제(第)101공중기동사단(空中機動師團)을 중심(中心)으로 기동편성(機動編成)된 합동기동부대(合同機動部隊)(Joint Task Force)이나, 경장비(輕裝備)만 갖춘 전환배치군(轉換配置軍)(Swing Force)으로서 「페르샤」 만지역(灣地域)에 투입명령(投入命令)을 받게 되면 「오만」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미군(美軍)이 사용(使用)토록 허가(許可)된 기지(基地)까지 공수투입(空輸投入)된 다음 인도양(印度洋)의 영령(英領) 「디에고·갈사」 (Diego Garcia)에 중장비(重裝備)와 보급품(補給品)을 탑재(搭載)하고 사전(事前) 대기(待機)하고 있는 대형화물수송함(大型貨物輸送艦)과 합류(合流)·재편성(再編成)하여 작전지역(作戰地域)에 투입(投入)되도록 계획(計劃)되어 있다. 미국(美國)의 통합군(統合軍)은 전구사령부(戰區司令部)의 역할(役割)을 맡고 있으므로 긴급배치군(緊急配置軍)은 평시(平時)에는 전비사령부(戰備司令部)의 작전통제(作戰統制)를 받지만 작전지역(作戰地域)에 투입(投入)될 때까지는 태평양(太平洋)과 인도양상(印度洋上)에서의 작전행동(作戰行動)은 태평양사령부(太平洋司令部)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일단(一旦) 작전



지역(作戰地域)에 투입(投入)되면(「페르샤」만(灣))동지역(同地域)의 작전책임(作戰責任)을 맡고 있는 「유럽」 사령부(司令部)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급배치군(急配置軍)을 수송(輸送)하는 제(諸) 항공기(航空機)는 모두 미국(美國)의 3개(個) 특수군(特殊軍)(Specified Command) 중(中)의 하나인 전략공수사령부(戰略空輸司令部)(Militaryair Lift Command) 소속(所屬)이므로 긴급배치군(緊急配置軍)의 작전지휘(作戰指揮)는 복잡한 지휘권관계(指揮權關係)에 얽혀 있다.

Armed Forces Journal지(誌) 3월호(月號)에 의(依)하면 긴급배치군(緊急配置軍)의 통제(統制)와 협조(協調)를 전담하는 연락장교(連絡將校)도 준장(准將) 1명(名)이 합참(合參)에 고정배치(固定配置)되어 있을 정도(程度)로 작전절차(作戰節次)가 복잡하다고 한다. 그래서 「레이건」 행정부(行政府)에서는 이를 일컬어 「카터」·「브라운」 합작(合作)의 「바텐드」의 악몽(惡夢)(Bartender's Nightmare)이라고 꼬집고 있는 것이다. 사실(事實) 「바텐드」가 조리법(調理法)이 너무 복잡(複雜)하면 「커피」를 제대로 만들 수 없는 법(法)이다.

미해병대(美海兵隊)는 긴급배치군(緊急配置軍)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전(事前) 배치군(配置軍)(Preposition Force)으로서의 임무(任務)도 요구(要求)받고 있다. 현재(現在) 3개사단(個師團) 중(中) 제(第)2사단(師團)은 동해안(東海岸)(「노스 켈로니아」주(州))에, 제(第)1사단(師團)은 서해안(西海岸)(「캘리포니아」주(州))에 배치(配置)되어 있고, 제(第)3사단(師團)은 해외(海外)(「오기나와」)에 주둔하고 있는데, 특히 제(第)3사단(師團)은 주한미육(駐韓美陸第) 제(第)2사단(師團)의 증원부대(增援部隊)로서 뿐만 아니라 유사시(有事時)에는 NATO 전구(戰區)와 「페르샤」만(灣)으로 전환배치(轉換配置)된다는 것을 전제(前提)로 하고 있다. 주한미지상군(駐韓美地上軍)의 철수문제(撤收問題)가 당분간은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보나, 이제 미해병(美海兵) 제(第)3사단(師團)이 사전배치군(事前配置軍)의 역할(役割)을 수행(遂行)토록 하기 위한 인도양(印度洋)으로 이전(移轉)하는 문제(問題)가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現) 위치(位置)에서 「페르샤」만(灣)에 전환배치(轉換配置)하려면 7,000 「마일」 이상(以上)이나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디에고 갈사」보다도 「페르샤」만(灣)에 300~700 「마일」이나 더 가까운 곳에 있는 「말디브스」(Maldives)도(島)를 개발(開發)하여 여기에 제(第)3사단(師團)을 옮기게 되면 복잡한 긴급배치군(緊急配置軍)의 지휘권관계(指揮權關係)도 해소되고 「페르샤」만(灣)에 대한 안보공약(安保公約)을 확고(確固)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 섬은 한 때 영국(英國)이 비행기지(飛行基地)로 사용(使用)된 적이 있는데 현재국민소득(現在國民所得) 135 「달러」의 이 미개발(未開發) 섬나라는 소련(蘇聯)에게 기지(基地)를 대여해 줌으로써 경제적(經濟的)인 이익(利益)을 꾀하려는 속셈이 보이고 있으므로 미국(美國)으로서는 소련(蘇聯)에게 기선(機先)을 제압당(制壓當)하지 않게 서둘러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미국(美國)은 이곳으로 미해병제(美海兵第)3사단(師團)을 이전(移轉)시키는데는 최소(最小) 한도(限度) 20억(億) 「달러」 이상(以上)의 비용(費用)이 소요(所要)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우방(友邦)들에 대한 안보공약(安保公約)의 신뢰성(信賴性)에 역기능(逆機能)을

주게 되는 정치적(政治的) 고려(考慮)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일부(一部) 논자(論者)들은 미해병대(美海兵隊)의 역할(役割)을 일본(日本) 육상자위대(陸上自衛隊)가 유사시(有事時) 담당(擔當)하도록 하는 대안(代案)을 제시(提示)하고 있으나, 일본(日本)은 헌법(憲法)에 해외파병(海外派兵)이 금지(禁止)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간(韓日間)의 해묵은 민족감정(民族感情)이 이를 용납(容納)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와인버그」 국방장관(國防長官)은 이러한 당면문제(當面問題)들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62억(億) 「달러」를 투자(投資)하여 긴급배치군(緊急配置軍)을 위한 해상(海上) 및 공중수송수단확보(空中輸送手段確保)와 「페르샤」만인근(灣隣近)에 해외기지(海外基地)를 획득, 확장보강(擴張補強)할 계획(計劃)을 제시(提示)하고 있다.

이들 해외기지(海外基地)는 「오만」(Oman)의 「몸바사」(Mombasa), 영령(英領) 「디에고 갈사」도(島), 「소마리아」의 「바바라」(Barbra) 등에 건설(建設) 또는 확장(擴張)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디에고갈사」에 B-52폭격기(爆擊機)를 수용(收容)할 수 있는 활주로의 건설(建設)이 영국정부(英國政府)와 합의(合意)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라. 전략공수(戰略空輸)(Strategic air Lift) 및 지구력(持久力)(Staying Power) 문제(問題)

「닉슨, 독트린」 발표(發表) 이후(以後) 미국(美國)의 해외전개병력(海外展開兵力)이 대거(大舉) 본국(本國)으로 철수(撤收)하게 됨과 동시(同時) 미국(美國)은 유사시(有事時) 맹방(盟邦)에 대한 방위공약(防衛公約)을 지키기 위(爲)해서는 전략공수능력(戰略空輸能力)을 획기적으로 보강(補強)하여 적기(適期)에 전장(戰場)에 미국(美國)의 지원세력(支援勢力)이 투입(投入)될 수 있도록 대비(對備)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하여 「카터」 행정부(行政府)에서는 대형민용(大型民用) 「제트」 기(機)를 군용(軍用)으로 개조(改造)하여 급유(給油) 및 화물항공기(貨物航空機)(Tanker/Cargo Aircraft)로 사용(使用)코자 Kc-10(DC-10의 변형(變型)) 60대(臺)를 대당(臺當) 1,000만(萬) 「달러」로 발주(發注)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미 그 중에 12대를 1981회계년도(會計年度)에 도입(導入)하였는데, 지난해 연말(年末)에 특별한 이유(理由)없이 이 계획(計劃)을 갑자기 취소하고 신형(新型) 초대형수송기(超大型輸送機) C-X를 개발(開發)토록 계획(計劃)을 바꿔 110억 「달러」의 예산(豫算)을 책정(策定)하였다. Kc-10기(機)는 발주(發注) 후(後) 17개월(個月) 만에 도입(導入)이 가능(可能)하나 C-X기(機)는 7년(年) 후(後)에야 개발(開發)이 끝나는데, 당면(當面)한 중동사태(中東事態)가 언제 악화(惡化)될지 모르는 차제에 7년(年) 후(後)까지 전략공수능력보강(戰略空輸能力補強)에 투자를 부러서는 안 된다는 비판(批判)이 높다. 물론(勿論) C-X는 Kc-10이 탑재할 수 없는 중전차(重戰車)와 155 「밀리」포(砲)를 포함한 사단(師團)의 전장비(全裝備)를 탑재할 수 있는 이점(利點)은 있으나, Kc-10도 현재(現在)의 Kc-135에 비(比)한다면 월등(越等)한 능력(能力)을 갖고 있다. 1979년(年)에 미

국(美國)이 12대(臺)의 비무장(非武装) F-15기(機)와 205명(名)의 병력(兵力) 그리고 115「톤」의 장비(裝備)를 「사우디 아라비아」로 2일에 걸쳐 이동(移動)시킨 바 있는데, 그 당시(當時) C-141 수송기(輸送機)3대(臺), C-5수송기(輸送機) 2대 그리고 16대(臺)의 Kc-135 급유기(給油機)가 동원(動員)됐고, 「스페인」에 중간기지(中間基地)(Staging Base)를 필요(必要)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程度)의 전략공수이동(戰略空輸移動)은 6대의 Kc-10으로 하루만에 해외기지(海外基地)가 없어도 충분(充分)히 가능(可能)하고, C-141이나 C-5 등 수송기(輸送機)의 지원(支援)없이도 60만(萬)「갈론」의 항공유(航空油)를 절약(節約)하면서 수행(遂行)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전략공수수단(戰略空輸手段)이 갖춰질 때, 공정사단(空挺師團)의 경우 수명(受命) 후(後) 48시간내(8時間內) 1개대대(個大隊)(약(約) 800명(名))가, 72시간내(時間內)에 1개여단(個旅團)(약(約) 3,000명(名))이 「페르샤」만(灣)에 투입(投入)될 수 있으며, 지중해상(地中海上)에 떠있는 해병대대상륙단(海兵大隊上陸團)(BLT 약(約) 1,500명(名))은 2~3일(日)내(內)에 해상투입(海上投入)이 가능(可能)하고, 「오끼나와」의 미해병제(美海兵第)3사단(師團)은 3주내(週內)에 해상이동(海上移動)하여 현지(現地)에 도착(到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들 긴급배치군(緊急配置軍)이 초기(初期)에 「페르샤」만(灣)에 투입상륙(投入上陸)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지구력(持久力)이 지극히 의심스럽다. 공정사단(空挺師團)이나 공중기동사단(空中機動師團) 공(共)히 경장비(輕裝備)로 무장(武装)되어 있으므로 전차(戰車)와 중야포(重野砲)로 장비(裝備)된 기계화(機械化)된 소련지상군(蘇聯地上軍)과 비(比)하면 화력(火力)이나 병력면(兵力面)에서 10:1로 열세(劣勢)한 입장(立場)이다. 단지 이들은 대소(對蘇) 지연전(遲延戰)을 수행(遂行)할 수 있을 정도(程度)이다. 미해병사단(美海兵師團) 역시 2차대전(次大戰) 이후(以後) 계속하여 태평양전구(太平洋戰區)에서 기계화(機械化)되지 않은 경보병부대(輕步兵部隊)들과 전투(戰鬥)하였으며 육군보병사단(陸軍步兵師團)이나 기계화사단(機械化師團)에 비(比)해 엄청 나게 열세(劣勢)한 장비(裝備)로 편성(編成)되어 있기 때문에, 중동지역(中東地域)에 투입(投入) 예상되는 소련(蘇聯)의 기계화부대(機械化部隊)와 필적(匹敵)할 수 있는 정도(程度)는 못된다. 따라서 이들의 지구력(持久力)은 상당히 제한당(制限當)하게 될 것으로 본다.

### 3. 해(海)·공군력(空軍力) 중점(重點) 증강노력(增強努力)

#### 가. 해군력(海軍力)

「레이건」 행정부(行政府)의 군사력(軍事力) 발전계획(發展計劃)에 있어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465척(隻)의 현존함정세력(現存艦艇勢力)에서 600척규모(隻規模)의 함정세력(艦艇勢力)으로 확장(擴張)하는 대역사(大役事)이다. 당년(當年) 38세(歲)의 「레만」(John F. Lehman) 신임(新任) 해군장관(海軍長官)은 해군(海軍)의 야망(野望)에 찬 신전략(新戰略)을 제시(提示)하였다.

그는 12척(隻)의 현유(現有) 항모(航母)를 15척(隻) 수준(水準)으로 증강(增強)함으로써 소련함대(蘇聯艦隊)를 그들 연안(沿岸)에다 고착(固着)시키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強調)한다. 1982년(年)까지 신조(新造), 개조(改造), 재취역(再就役) 등(等) 합(合)해 모두 33척(隻)의 함정(艦艇)을 진수(進水)시킬 소요예산(所要豫算)을 요구(要求)한 바 있는데, 이 속에는 20억(億)「달러」가 소요(所要)되는 이미 착공(着工)한 「니미츠」(Nimitz)급(級) 핵항모(核航母)의 추가비용(追加費用)에 7,500만(萬)「달러」, 한국전쟁(韓國戰爭) 후(後) 퇴역(退役)한 항모(航母) 「오리스케이」(Oriskany)호(號)의 재취역(再就役)을 위(爲)한 수리비(修理費) 5억1천만「달러」, 제(第)2차대전시(次大戰時) 위용(威容)을 떨친 전함(戰艦) 「뉴저지」(New Jersey)호(號) 및 「아이오와」호(號)를 재취역(再就役)시키는데 필요(必要)한 3억 4천만「달러」 그리고 15척(隻)의 초대형(超大型) 수송선(輸送船)(Roll on/Roll off) 건조(建造)를 비롯한 향후(向後) 2년간(年間)의 건함예산추가소요(建艦豫算追加所要)에 42억「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같은 요구(要求)가 어느 정도(程度)로 반영(反映)될 것인지(未知數)이나 600척(隻) 규모(規模)의 함정세력(艦艇勢力)은 미국(美國)이 이미 인도양(印度洋)에 상당규모의 함정(艦艇)을 상주(常駐)시키고 있는 이상(以上), 평시(平時)에 양대양(兩大洋)을 통제(統制)하는 임무(任務)로 바뀌고 있으므로 전략(戰略)과 전력(戰力)의 용납성(容納性)을 보장(保障)하기 위(爲)해서도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한 것이다.

현재(現在) 3대양(大洋)에 배비(配備)된 주요(主要) 함정세력(艦艇勢力)은 다음과 같다. 서태평양(西太平洋)의 7함대(艦隊) 세력(勢力)의 대부분(大部分)이 인도양(印度洋)으로 전환배치

3대양(大洋)의 함정세력(艦艇勢力) 현황(現況)

太 平 洋	大 西 洋	印 度 洋
第 7 艦 隊	第 6 艦 隊	印度洋 艦隊(臨時)
航 母 : 1 大型水上艦 : 6	航 母 : 1 大型水上艦 : 13	航 母 : 2 大型水上艦 : 14
第 3 艦 隊	第 2 艦 隊	
航 母 : 4 大型水上艦 : 65 潛水艦 : 46	航 母 : 4 大型水上艦 : 42 潛水艦 : 87	

(News Week, March 10, 1981, p.30.)

(轉換配置)된데 대하여 우리는 주의(注意)를 환기시키게 된다.

그리고 새로이 취임(就役)하게 될 이들 전함(戰艦)에 순항유도탄(巡航誘導彈)을 장착(装着)하여 태평양(太平洋)과 대서양(大西洋)의 2개(個) 전방(前方) 항모기동타격부대(航母機動打擊部隊)에 호위함으로 배치(配置)할 계획(計劃)으로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해군력(海軍力)을 지나치게 위축시킨 결과(結果), 조선업계(造船業界)의 건함 능력(建艦能力)이 감소되어 이와 같은 대량발주(大量發注)를 감당할 능력(能力)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략잠수함체제(戰略潛水艦體制)로서의 「트라이던트」(Trident) 잠수함(潛水艦)도 이미 계획(計劃)보다 2년이상(年以上) 진수(進水)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因)해 예산이 2억(億) 2천만 「달러」나 추가(追加) 지출(支出)되어 야 할 입장(立場)이다.

또한 이들 600척규모(雙規模)의 함정(艦艇)을 운용(運用)하려면 2만명의 기술하사관(技術下士官)이 더 필요(必要)한데 그 확보책(確保策)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궁여지책의 하나로 평시(平時)에는 교통성(交通省)에 속해 있는 해안경비대(海岸警備隊)(Coast Guard)를 전력화(戰力化)하여 전시(戰時)에 제(第)5군(軍)으로서 해군작전(海軍作戰)을 보조(補助)하도록 하는 계획(計劃)도 추진(推進)되고 있다. 사실(事實) 미해안경비대(美海岸警備隊)는 세계(世界) 제(第)9위(位)의 막강한 함정세력(艦艇勢力)을 가진 해군력(海軍力)의 위치(位置)를 점(占)하고 있기 때문에 평시(平時)에는 가까운 「카리브」해(海)의 해상통제(海上統制)를 해안경비대(海岸警備隊)에게 맡기고 그 해상세력(海上勢力)을 위기지역근해(危機地域近海)로 전환배치(轉換配置)할 수도 있을 것 같다.

## 나. 공군력(空軍力)

공군(空軍)의 당면문제(當面問題)는 긴급배치군(緊急配置軍)을 위한 전략공수능력(戰略空輸能力)의 확대(擴大)에 있다. 전술(前술)한 바와 같이 「카터」행정부(行政府)에서는 초대형수송기(超大型輸送機) C-X를 개발(開發)하여 사단급(師團級)의 중장비(重裝備)를 전량(全量) 공수(空輸)할 전제하(前提下)에 이를 개발(開發)하는데만 무려 2억5천만 「달러」를 책정(策定)했으며, 220대를 도입(導入)하는데 1,100억 「달러」가 소요(所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긴급배치군(緊急配置軍)의 공수이동(空輸移動)을 보장(保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一部) 중장비(重裝備)의 사전(事前) 배치(配置)가 불가피(不可避)한 것이다. 긴급배치군(緊急配置軍)을 위한 수송능력(輸送能力)을 증대(增大)시키고자 미공군(美空軍)은 C-X의 개발(開發)과 더불어 Kc-10기(機)의 추가도입(追加導入), C-141기(機)를 C-141B형(型)으로 개조(改造), 그리고 Kc-135기(機)의 「엔진」 교체(改造) 등을 위(爲)해 8억 8천만 「달러」를 요구(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의 주요사업(主要事業)은 MX탄도탄체제(彈道彈體制) 개발(開發)이다. 증대(增大)되

어 가는 소련(蘇聯)의 전략핵전력(戰略核戰力)에 의(依)한 지상기지탄도탄(地上基地彈道彈)의 취약성(脆弱性)을 개선(改善)코자 1980년대(年代) 중반에 배비(配備)하게 될 이동식(移動式) 대륙간탄도탄체제(大陸間彈道彈體制)인 MX는 「유타」(Utha)주(州)와 「네바다」(Nevada)주(州) 일대(一帶)에 광범위(廣範圍)하게 지하경도(地下坑道)를 설치(設置)해야 하는데, 이는 곧 핵표적(核標的)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주민(地域住民)들의 심각한 반대(反對)에 부딪치고 있다. 그래서 대륙간탄도탄(大陸間彈道彈)의 해상기지화(海上基地化)로 생존성(生存性)을 고양(高揚)하고 지상(地上)에서 핵표적(核標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代案)으로 M-X대신(代身)에 320기(基)의 「토마호크」(Tomahawk) 순항유도탄(巡航誘導彈)(Cruise Missile)을 재취항(再就航)하게 될 전함(戰艦)에 탑재하여 1,500 「마일」 사정권내(射程圈內)에 배비(配備)하려는 계획(計劃)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카터」행정부(行政府)에서 생산(生産)이 유보(留保)된 B-1 폭격기(爆擊機)와 FB-111 폭격기(爆擊機)의 생산재개(生産再開)와 더불어 은밀(隱密)침투항공기(Stealth Aircraft)의 연구개발(研究開發)이 준행(準行)되고 있다. 또한 공중경보통제체제(AWACS)를 위한 E-3A 항공기(航空機) 39대를 추가(追加) 도입(導入)하는 것을 포함하여 1982년(年)까지 212대의 항공기(航空機)를 신규(新規) 조달(調達)할 계획(計劃)을 추진(推進)하고 있다.





# 세계경제(世界經濟)의 변화(變化)와 한국경제(韓國經濟)

이 만 기(李滿基)

〈한양대(漢陽大) 경영대학원장(經營大學院長)〉

오늘의 불황(不況)은 경기(景氣)변동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불균형(不均衡)된 경제구조(構造)의 변화에서 발생한 상황이다.

## 1. 어려워진 경제사정(經濟事情)

62년부터 78년까지 우리는 10%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經濟成長)을 기록하여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에서 모범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로 꼽혔으나 80년에는 5.7%나 부(負)의 성장(成長)을 했다. 또한 물가(物價)는 79년에 18.8%, 80년에 38.9%나 올랐고 경상국제수지(經常國際收支)는 79년에 42억 달러, 80년에는 57억 달러의 적자(赤字)를 기록했다.

이와같은 경제사정은 크게 세계경제사정의 변화와 국내 경제사정의 변화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79년의 제2차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저성장(低成長)과 고물가(高物價)에 시달리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경제구조(經濟構造)의 전환기에 있으면서, 한편 10·26사태 이후의 정치(政治)·사회(社會)의 불안과 농작물의 흉작(凶作) 등 여러 요인이 겹쳤던 것이다.

이 글은 먼저 석유파동(石油波動) 이후 세계경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살피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가를 생각하겠다.

이에 앞서 현재의 국내외 경제사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이라는 점을 설명해야 할 것 같다. 일시적인 것은 어떤 예기(豫期)치 못한 일이나 다른 사정 때문에 경기(景氣)가 침체된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경제(經濟)의 흐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막힌 것을 터 놓으면 해결된다. 보통 경기부양책(景氣浮揚策)이란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 비하여 경제(經濟)의 구조(構造)가 근본적으로 불균형(不均衡)되어 모든 경제활동이 순조

롭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더 큰 노력이 따라야 한다.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석유파동(石油波動)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변화와 우리나라 경제 자체의 변화는 모두 경제구조(經濟構造)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일시적인 경기대책(景氣對策)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년의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해 보자. 작년에는 수출(輸出)이 잘 안 되고 생산(生産)도 위축되고 돈이 잘 돌지 않고, 취직이 힘들고 물가(物價)가 크게 올라서 모든 국민생활과 기업활동(企業活動)이 어려웠다. 경제활동의 종합지표인 경기예고지표가 80년 5월부터 10월까지 0.4로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11월에 0.5, 12월에 0.6으로 약간 고개를 들었으나 아직도 깊은 불황(不況)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보통 때 같으면 이 지표가 1.0 이하로 내려가면 경기부양책을 실시해야 하는데 0.4까지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지 못했고 아직도 마음껏 경기 부양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경기도 나쁘지만 한편 물가(物價)가 무려 38.9%나 올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높은 물가상승(物價上昇)을 보인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경기(景氣)는 최저수준인데 물가상승(物價上昇)은 최고 수준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경기부양책을 쓰기가 곤란하다. 경기부양책이란 돈을 뿌리는 방법 밖에 없는데 돈을 뿌리면 물가(物價)는 더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실시 해야 하는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긴축을 계속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어렵다. 말하자면 긴축과 완화의 상반(相反)된 정책(政策)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고심만 할 뿐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다.

더우기 어려운 것은, 설사 긴축을 해도 물가(物價)가 쉽게 안정(安定)되지 않으며, 경기부양을 시키려 해도 경기는 잘 회복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경기변동의 현상이 아니고 경제구조의 변화에서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와 불황(不況)이 겹친 것은 석유파동(石油波動) 이후 세계 각국의 공통된 현상인데 이는 석유파동(波動)이 각국의 경제구조를 뒤흔들어 놓은 까닭이다.

또한 나라에 따라 인플레이와 불황(不況)의 크기가 다른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심한 편이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經濟構造)가 한층 더 불균형(不均衡)에 직면한 까닭이라고 볼 수 있다.

## 2. 석유파동(石油波動)이 가져온 것

석유파동(石油波動)은 앞서 말한대로 세계경제의 구조(構造)를 변화시켰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수지와 경제사정의 불균형을 확대시켰다. 개발도상국은 말할 것 없고 과거 자본이 풍족했던 선진국(先進國)(OECD가맹국(加盟國))들도 막대한 국제수지적자로 인해 자본부족상태에 직면하고 오직 산유국(產油國)만 자금여유국이 되었다. OECD는 61년에 경제협력(經濟協力), 즉 돈을 꾸어주기 위한 기구로 생긴 것이며 여기에 가맹한 나라는 국제수지흑자가 계속되

고 돈이 많은 나라들이다. 그런데 이들도 석유파동 이후 국제수지의 막대한 적자로 인해 돈이 부족해진 것이다. 1차 파동 때도 그러 했지만 79년 파동 이후 78년에는 90억 달러의 흑자를 보였던 OECD그룹이 79년에는 3백 55억 달러의 적자(赤字)로 바뀌고 80년에는 7백 35억 달러로 더욱 커졌다. 개발도상국은 78년 2백 25억 달러로 적자가 커졌다.

이와같이 산유국(産油國)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국제수지적자로 인해 자본(資本)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긴축정책을 쓰게 되고 이는 세계무역의 위축과 세계경제 전반적인 불황(不況)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다.

둘째, 석유소비국은 높은 원가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었다. 79년과 80년에 OECD그룹은 소비자물가가 9.9%와 13.1%로 오르고, 개발도상국은 32.1%와 41.1%로 크게 상승되어 경제불안을 일으켰다. OECD그룹은 과거 60년부터 73년까지는 연평균 3.8% 밖에 오르지 않았던 물가(物價)가 10%를 넘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고, 개도국(開途國)도 30~40%를 넘긴 일은 없었다.

세째로 앞에서 잠깐 말했듯이 세계 각국은 국제수지가 악화되자 수입(輸入)을 억제하기 위한 보호무역(保護貿易) 정책을 쓰게 되고 서로 수출(輸出)하기가 어려워져서 세계 무역량이 감소되었다.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쓰게 되므로 국내 경기기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 더우기 경기는 나쁘는데 물가(物價)는 크게 올라 국민들의 실질구매력이 감소되어 생산물을 살 수 없으므로 불경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79년과 80년에 경제성장률은 OECD그룹은 3.3%, 1.0%로 저하되고 개발도상국은 4.7%, 4.1%로 저속성장(低速成長)을 했다. 또한 OECD그룹의 실업률은 5.1%와 5.7%로 늘어났다.

우리나라도 앞서 지적한 대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깊은 불황(不況)을 보였는데 개도국(開途國)의 평균수준보다 물가(物價)는 약간 낮으나 성장(成長)은 훨씬 더 위축되었다. 우리나라는 성장(成長)이 수출(輸出)에 크게 의존되는데 수출이 크게 위축되었고, 한편 농사가 잘 안 되는 등의 원인 때문이다.

우리나라 원유도입액은 73년에는 3억달러도 못되던 것이 79년에는 31억 달러, 80년에는 60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는 물량(物量)이 그만큼 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원유가격이 높아진 까닭이다. 80년에 치른 60억 달러의 원유도입(原油導入) 대금(代金)은 그 해의 국민 총생산(國民總生産)을 약 6백 억 달러로 보면 그 10%에 해당되는 막대한 돈이며 수출총액 1백 75억 달러의 3분의 1이 넘는 돈이다.

또한 석유파동 후 각국의 자금사정이 나빠져서 국제금리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외자도입 의존이 많은 우리나라는 금리의 부담도 커졌다. 80년 4월 3일 미국(美國)의 대출우대금리(프라임 테이트)는 사상(史上) 최고수준인 20%를 기록했고, 영국(英國)의 최저대출금리(最低貸出金利)도 79년 11월에 사상 최고인 17%를 기록했으며 국제금융시장의 유로 달러는 80년 4월초

사상 최고인 20.25%를 기록한 후 12월 11일에 21.94%로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이처럼 국제금리가 높아지는데 우리는 경상수지적자가 커지므로 높은 이자(利子)를 주고 점점 더 많은 외자(外資)를 빌어야 하며 이것이 또한 경상수지(經常收支)에 압박을 주는 것이다.

그동안 1차 파동 후에는 중동(中東)건설 진출로 용역 수입이 크게 늘어 77, 78년까지는 무역외 수지가 2~3억 달러의 흑자(黑字)를 기록하여 무역 적자를 보완했으나 79, 80년에는 무역외 수지도 2억, 14억달러의 적자(赤字)로 전환되었다. 이는 높은 금리부담(金利負擔) 때문에 무역외(貿易外) 지출(支出)이 커진 까닭이다.

이와같이 석유파동(石油波動)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성장의 정체, 국제수지(國際收支)적자의 확대 등 어려움을 가져 왔고 이는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과제여서 점차 장기화(長期化)되고 있다. 과거에는 경기가 나쁘면 부양책(浮揚策)으로 해결하고 인플레이션이나 국제수지적자는 긴축정책으로 타개하였는데 이제는 서로가 상반된 정책수단을 요구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절하기도 어렵고 각각 어느 하나만을 타개하려 해도 좀처럼 극복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 3. 공급(供給)의 경제학(經濟學)

이제는 개발도상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선진국에 있어서도 자원부족분 만큼 원천(源泉)이 빈약해졌으므로 원천의 개발 또는 저수지의 보수공사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73년 석유파동 전에 원유가격이 배럴당 3달러였던 것이 1차파동 후 74년초까지 10달러 이상이나 되었고 그 후에도 매년 10~20%씩 올라오다가 79년에 다시 2배 이상 올려서 81년 현재 OPEC 고시가격(告示價格)이 32달러나 되고 현물시장가격(現物市場價格)은 40달러 이상으로 뛰어 결국 1차 파동 전에 비해 불과 7~8년만에 10배 이상이 되었고, 60년대 초의 1달러 20센트에 비하면 30배 이상으로 오른 것이다.

이처럼 유가(油價)가 오른 것을 보충하려면 생산활동(生産活動)에 있어서 자본과 노동과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기술을 더욱 향상시켜서 생산요소의 총 투입(投入)에 대한 산출량(產出量), 즉 생산성을 높여야만 하는 것이다. 「레이건」 행정부가 「공급(供給)의 경제학(經濟學)」이란 말을 하게 된 것은 이와같은 배경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표현하면 「원천(源泉)의 경제학(經濟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석유파동(石油波動) 후 세계 각국에 있어 어느 나라가 생산성(生産性)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경제의 안정을 좌우하고 있다. 석유파동 전인 60년부터 73년까지 물가상승률이 3.1%에 불과했던 미국(美國)에 있어 79년과 80년에는 11.3%와 13.5%나 크게 오르고 영국(英國), 「프랑스」, 「이탈리아」 등도 미국(美國) 못지 않게 올랐는데 이에 비하여 서독(西獨)은 79년에 4.1%, 80년에 5.5% 밖에 오르지 않았으며 일본(日本)도 3.6%와 8.2% 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들 두 나라는 한편 소비(消費)의 절약이 더욱 큰 데에도 원인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생산성

이 크게 향상된 까닭이다.

일본(日本)의 경우 79년에 노동생산성(勞動生産性)이 13.5%나 상승되어 석유가 인상에 의한 원가상승(原價上昇) 요인을 상계(相計)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일본(日本)은 노동생산성이 13.5% 상승되었으나 임금상승률은 7.4%로서 그 격차인 6.1% 포인트만큼 물가(物價)하락요인을 조성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생산성(生産性)이 임금(賃金)을 상회하지 못한 다른 나라에 비해 그만큼 물가(物價)를 싸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企業)은 1인당 생산량이 13.5% 늘었는데 1인당 임금(賃金)은 7.4% 올렸으므로 6.1%만큼 더 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원가가 오르면 싸게 팔지는 못하더라도 그만큼 덜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생산성(生産性)이 임금을 상회하지 못했으면 일본(日本)도 3.6%의 소비자 물가상승보다 적어도 6.1% 포인트만큼 더 높은 9.7%의 상승률을 기록했을 것이다.

저수지(貯水池)의 물은 생산물을 생산할 밑천인 자원(資源)과 자본(資本)(기계설비(機械設備))과 노동(勞動)을 의미한다. 자원(資源)값이 오른만큼 단위비용당 생산량이 감소되므로 자본(資本)과 노동(勞動)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기술(技術)을 개발하여 단위비용당 생산량, 즉 생산성을 높여서 이를 보충해야 하는데 일본(日本)이 이를 실증(實證)한 셈이다.

그러므로 일본경제(日本經濟)는 80년대에 들어 세계 각국으로부터 재조명(再照明)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2차 석유파동 후 OECD 각국이 모두 고전하는데 자원부족국(資源不足國)인 일본(日本)은 어떻게 해서 번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 미국(美國)·영국(英國)·프랑스 등의 선진공업국들의 시찰단이 일본(日本)의 중소기업에게까지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는 물론이며 컬러 TV, VTR, 전자계산기 등의 각종 전자산업(電子産業)에서 일본(日本)에게 추월을 당하고 있는 미국이 80년 6월 24일 밤 NBC방송에서 「일본이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가」(If Japanese Can Why Cannot We)라는 1시간 반짜리 프로를 골든아워에 방영했다(우리나라에서도 10월 8일 TBC에서 번역 방영).

콜롬비아 왕복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운항하고 모든 면에서 세계 제1을 자랑하는 미국(美國)이 세계상품시장(世界商品市場)에서 일본(日本) 상품(商品)에게 밀려나게 되었음은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미국(美國)이 일본(日本)에게 뒤진 이들 부문은 주로 생산성(生産性) 향상(向上)에 있어 뒤떨어진 까닭이었다. 저유가시대(低油價時代)에는 자본 풍부한 미국(美國)이 무엇이든 튼튼하고 모양있게 잘 만들면 되었으나 고유가시대(高油價時代)에는 자동차나 전자제품에 있어 자원(資源)을 절약하고 값싸게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생산성(生産性) 향상(向上)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미국(美國)이 일본(日本)에게 생산성 향상에 뒤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인(日本人)만이 생산성(生産性)을 올리는 비결을 알기 때문인가. 그 방영내용(放映內容)에 의하면 생산성 향상의 비결은 일본인(日本人)이 아니라 미국의 경영학자 「데밍」이 제시한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

다는 것이다.

그는 통계학자인 동시에 경영학을 연구하였고 생산관리면(生産管理面)에서 불량품(不良品)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통계적으로 연구하여 이를 적용시키도록 제안하였던 것이다. 그에 의하면 「불합격품(不合格品)을 사후에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보다는 사전에 불량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미국(美國)은 지난날 자원(資源)이 풍부하고 자본(資本)이 많아 모든 면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생각하여 자기 나라 학자(學者)의 이러한 제안에 무관심하였으나 자원(資源)이 부족한 일본(日本)은 항상 외국의 동향을 살피고 무엇이든 필요하면 재빨리 도입하여 실천하는 까닭에 이번에도 미국(美國) 경영학자의 이론을 도입하여 생산종업원에게까지 교육시켜서 생산성(生産性)을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 그 방영(放映)의 내용이었다.

#### 4. 저축(貯蓄)의 미덕(美德)

1930년 세계 대공황 이후 60년대까지 미국(美國)에서는 소비(消費)가 미덕(美德)이라는 「케인즈」 경제학(經濟學)(Keynesian Economics)이 지배해 왔다.

앞서 말한 대로 자원(資源)이 풍부하고 돈이 많아 저수지에 물이 차고 넘치는 미국(美國)에서는 수요(需要)의 부족이 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다.

어떤 물건(物件)이든 팔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생산해 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기업(企業)은 생산물(生産物)을 팔기 위해 장기월부(長期月賦)로 판매하였으며 따라서 미국(美國)의 근로자(勤勞者)들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월부금을 내다가 봉급생활을 끝마친다고 했다. 주택(住宅)월부·자동차(自動車)월부·TV월부……무엇이든지 월부로 살 수 있다. 봉급생활자가 월부로 사는 것은 장래의 수입까지 미리 써버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만큼 소득(所得)에 대한 소비(消費)의 비율, 즉 소비성향(消費性向)을 높게 만든다.

그들은 풍부한 자원과 돈으로 좋은 물건(物件)을 많이 만들고 많이 소비하여, 풍요한 사회를 구가했던 것이다. 은행에서도 평소에 대출보다 예금이 많기 때문에 대출 권유를 해야 했으며 총대출의 3분의 1 가량을 소비자금으로 대출하였다.

이것은 소비를 조장하는데 기여했으며 그만큼 소비가 생산을 유발시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美國)에서도 70년대 석유파동(石油波動) 이후는 사정이 바뀌었다. 기름값이 비싸지고 임금(賃金)이 오르게 되었으므로 기업의 생산자금이 더 필요해진 것이다. 그리하여 은행에 대출을 요구하는 금액이 급격히 늘어났다. 또한 종래의 예금자들은 경기는 좋지 않는데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가 더 들게 되어 자금여유가 적어졌으므로 예금이 감소되었다. 그리하여 미국(美國)의 은행들도 이제는 예금이 부족하고 대출수요가 커졌기 때문에 예금권유에 부심하게 되었다.

79년 5월 타임지(誌)에는 미국(美國)의 은행들이 일정액 이상의 고액예금자에게는 고급승용



차를 보너스로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만큼의 예금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일반 소액 예금자들을 위해 점포마다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놓고 연주를 하였는데 사람들은 피아노 연주만 듣다가 그대로 가버렸다는 기사가 실렸었다.

소비(消費)를 권장했던 사회에서 갑자기 저축(貯蓄)을 권장하는 것은 그만큼 힘든 것이라 생각된다.

하물며 언제나 자본이 부족했던 우리나라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저축이 더욱 더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평소에 돈이 많은 나라인 OECD국가(國家)들 중에서 석유파동 후에도 계속 물가가 안정된 나라는 저축률이 높은 나라이며 그렇지 않은 나라는 경제가 불안정한 것이 나타나고 있다. 79년과 80년에 미국(美國)은 물가(物價)가 11.3%, 13.5% 상승되었고 실업률은 5.8%, 7.2%나 되었으며 영국(英國)은 물가(物價)가 13.4%, 18.2% 상승되었고 실업률은 5.8%, 6.5%를 기록하였는데, 이에 비해 서독(西獨)은 물가(物價)가 4.1%, 5.5% 상승되고 실업률은 3.2%, 3.5%였으며, 일본(日本)은 물가(物價)가 3.6%, 8.2% 상승되었고 실업률은 2.1%와 2.0%에 불과하였다. 이와같이 미국(美國)과 영국(英國)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失業率)이 높은데 비해 서독(西獨)과 일본(日本)은 다같이 저율(低率)이다. 그런데 이들 각국의 71~77년 평균 저축률을 보면 미국(美國)은 18.5%, 영국(英國)은 19.1%로 저율(低率)이고 서독(西獨)은 26.4%, 일본(日本)은 36.0%로 고율(高率)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평소에 저축률이 높은 나라는 석유파동인상(石油波動引上) 후에도 경제안정을 지속할 수 있었고, 평소에 저축률(貯蓄率)이 낮은 나라는 석유파동(石油波動) 후 경제가 불안정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석유파동(石油波動)으로 저수지의 물이 빠진만큼 높은 저축률(貯蓄率)에 의해 보충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원가상승을 보완할 수 있으나 소비(消費)가 많으면 흐름을 확대시켜서 물을 더 빠지게 하므로 물가(物價)가 더 오른다고 보아야 한다.

거듭 말하거니와 미국(美國)의 경우 60년대까지만 해도 소비(消費)가 미덕(美德)이었고 71~77년에도 저축률(貯蓄率)에 비해 투자율이 약간 저율(低率)이므로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나 79년 2차 파동 이후부터 자금(資金)의 부족함이 노출되고 저축(貯蓄)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생각된다. 미국(美國)은 과거 소비를 권장했기 때문에 타국(他國)보다 저축률(貯蓄率)이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영국(英國)은 과거에 지나친 사회보장(社會保障) 때문에 저축률이 낮다고 생각한다. 자유주의 국가(自由主義國家) 중에서 사회보장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영국(英國)이다. 이들은 실업과 질병과 노후의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주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저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과도한 사회보장을 위한 부담 때문에 철도, 도로, 항만, 통신 등 사회 간접자본의 투자에 차질을 빚고 그만큼 기업(企業)의 직접 생산비를 높게 하고 전체적인 경제발전이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비하여 서독(西獨)은 평소에 검소하고 절약하여 높은 저축률(貯蓄率)을 실현시켰고 일

본(日本)도 역시 그러했다.

## 5. X·Y 이론(理論)과 Z 이론(理論)

81년 3월 12일자(字) 조선일보는 일본(日本)의 생산성(生産性) 향상(向上)에 관한 선진국들의 관심사를 소개하면서 일본(日本) 경영(經營)의 특징을 토대로 한 새로운 경영이론(經營理論)에 대해 언급했다.

미(美) 「캘리포니아」 주립대(州立大)(UCLA)의 경영학교수인 「오우찌」(일본계미국인(日本系美國人))는 종래 피고용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과학적(科學的) 경영방식(經營方式)인 Y이론(理論)이 지배적이었으나 피고용자를 기업(企業)에 종속시켜야 한다는 Z이론(理論)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노사(勞使) 관계는 여러 각도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생산(生産)에 있어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 X이론(理論)·Y이론(理論)의 두 개의 입장이 있었던 것 같다.

전자는 기업주(企業主)가 노동자(勞動者)를 불신하고 생산효율(生産效率)을 위해 감시와 강요를 하는데 비해 후자는 합리적인 분업체계(分業體系)와 과학적 관리 방법을 도입하고 자율적인 작업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일본기업(日本企業)은 ① 종신(終身)고용제 ② 느린 승진제(昇進制) ③ 비분업화(非分業化) ④ 집단 의사결정(集團意思決定) 등의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기업(企業)모델이 생산성(生産性)을 더 높이고 있다는 것이 Z이론(理論)의 입장이다. 생산(生産)을 지시하고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는 후진국(後進國)이나 공산권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공산권(共產圈)은 시장경제(市場經濟)가 아니고 명령경제(命令經濟)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영 방식이 불가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련(蘇聯)에서도 65년 제5차 전당대회(全黨大會) 때 소수의 소장수리경제학자(少壯數理經濟學者)들이 인센티브(유인(誘因))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 후 열심히 일하면 보너스를 주는 등 부분적인 제도변화가 있었다.

경쟁원리에 의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분업(分業)과 교환을 통해 효율적인 생산(生産)을 할 수 있고 과학적인 경영관리와 자율적인 작업이 더 능률적이라고 믿고 있다. 인센티브란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있으면 빠른 승진이 이루어지고 노동조합(勞動組合)과 사용자는 계약에 의해 작업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日本)은 가부장적(家父長的)인 기업주(企業主)와 노동자(勞動者) 간에 가족과 같은 유대가 형성되며 유기적인 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다. 한편 서독(西獨)의 경우는 공동결정법(共同決定法)에 의해 노사(勞使)가 같이 경영에 참가하고 서로 의논하는 것이므로 노사(勞使)는 다같이 기업(企業)에 있어 동반자(同伴者)(파트너)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 두 나라의 생산성(生産性)이 높은 것은 이러한 유기적인 노사(勞使) 관계(關係)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업주가 노동자(勞働者)를 지배하는, 특히 공산국가에 있어 기업주(企業主)는 정부당국자이므로 중앙당국(中央當局)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체제(體制)는 부(負)(마이너스)의 인센티브 체제(體制)라 할 수 있다. 이는 「네가 나에게 내가 바라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내가 바라지 않는 일(페널티)을 하겠다」라는 말로 표현된다.

국민은 바라지 않는 일을 면하기 위해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계약에 의한 노사관계는 서로가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노동자는 그가 원하는 임금을 요구하고, 기업은 그가 원하는 노동생산성(勞働生産性)을 요구한다. 이는 「네가 나에게 내가 바라는 일을 하면 나도 너에게 내가 바라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 바라는 일을 얻는 것이 정(正)의 인센티브인 것이다.

그러나 유기적 관계는 「너와 나는 같은 목적의 관계이므로 너는 나를 위해 나는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같은 가족(家族) 같은 동반자(同伴者)의 관계인 것이다. 노동자(勞働者)와 기업주(企業主)는 모두 기업(企業)에 참여하고 다 같이 기업(企業)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명령이나 보너스보다도 적극적인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Z 이론(理論)이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유기적(有機的) 관계(關係)는 기업뿐 아니라 모든 사회조직(社會組織)과 국가에 있어서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많은 일을 필요로 하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으므로 정부와 국민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며 기업(企業)도 그러했으면 좋겠다.

현실에 있어서 우리의 기업들은 어떤 모델에 속할 것인가. 여자종업원(女子從業員)을 믿지 못해 몸수색까지 하는 일부 업체는 Z 이론(理論)이 아니라 X 이론의 사례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젊은 사장과 젊은 중역(重役)들이 지배하는 빠른 승진제도는 Y 이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생산종사자나 기술직보다 사무종사자나 관리직이 빠른 승진을 하는 이원적(二元的) 인사제도는 어느 사례라고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유기적 관계의 형성에는 아직도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Y 이론인 모델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가 걱정된다.

승진이 성실한 노력의 댓가(Y 이론(理論))보다도 승진한 뒤에 남을 지배(X 이론(理論))하는 매력 때문에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진하려 함으로써 오히려 인화(人和)를 해치고 생산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된다.

최근 청탁배제운동이 생기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쁜 것의 배제가 반드시 합리적이고 유기적인 좋은 것을 가져 온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유기적인 좋은 제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실현될 것으로 본다.

# 시민의식(市民意識)과 공공질서(公共秩序)

지용우(池龍雨)

〈경향신문논설위원(京鄕新聞論說委員)〉



라인江의 기적(奇蹟)을 이룩한 서독(西獨) 국민이 전후(戰後) 초토화(焦土化)된 폐허 속에서도 땀방울의 차례를 기다리는 긴 줄서기의 질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참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 1. 새 시대(時代)의 조건(條件)

낡은 사고(思考), 문란한 질서(秩序)의 추방이 선행(先行)되지 않은 새 시대(時代)의 전개란 사실상 무의미(無意味)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게 된 가장 보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치관(價値觀)이 뒤바뀌었던 구(舊)시대적 사고(思考)와 무질서의 고질(痼疾)로부터 헤어나 정직(正直)과 질서가 존중되는 정의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도 있듯이 정의로운 새 시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새로운 각오 아래 의식(意識)의 혁명(革命), 의식구조(意識構造)의 대개혁(大改革)을 단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믿는다. 그 중에서도 질서의식의 확립, 질서의 존중은 으뜸 가는 새 시대의 조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질서가 어지러운 사회치고 번영된 사회는 일찌기 없었다. 로마·바빌론·중국의 진(秦)나라 등 역사상(歷史上) 화려한 영화(榮華)를 누렸던 대국들이 끝내는 무질서와 향락 방종이 극에 달해 멸망을 자초했다. 반대로 오늘날 잘 사는 선진국(先進國)치고 질서가 어지러운 나라는 없다.

한 나라의 문화수준(文化水準)의 척도(尺度)는 질서 의식수준과 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다중(多衆)이 붐비는 자리일수록 아무리 바쁘더라도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릴 줄 아는 조그

마한 행동에서부터 판가름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시각(視角)에서 볼 때 우리 국민은 솔직히 말해서 질서의식이 크게 빈약한 국민이라는 점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을 다녀간 한 영국(英國)의 학자가 한국민을 몰아서 지칭하기를 「러싱 피플」(돌진형(突進型)국민)이라는 표현을 그의 기행문(紀行文) 속에 썼던 일이 생각난다. 그가 서울의 변화가에서 보니 버스를 탈 때나 택시를 잡을 때나 거의 예외없이 단거리 선수나 럭비·축구선수들만 망렬히 돌진하더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도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습관화 되다시피 한 이같은 승차(乘車)풍경이 이국인(異國人)들의 눈에 것처럼 비쳤다면 결코 예상로인 일은 아닐 것이다. 그 이방인(異邦人)이 구청의 민원창구(民願窓口)·연휴(連休)·귀성(歸省)시즌의 고속버스터미널, 인기(人氣)프로를 상영하는 극장가(劇場街)의 새치기 및 압표(暗票)행위 등을 목격했다면 또 어떻게 묘사했을까. 물론 질서를 지키는 일에 남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 도덕적(道德的)으로 성숙한 문화(文化)시민이라면 누구 한 사람 보는 이가 없는 곳에서도 스스로 교통신호를 규정대로 지키고, 대로상에 담배꽂조를 버리는 일을 삼가고, 침을 뱉는 일 따위는 더더구나 삼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기초적인 질서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시민적 양식(良識)을 의식케 할 무질서가 아직도 예사로 횡행하고 있으니 딱한 일이다.

러시아워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한낮에도 정류장에 사람이 좀 많으려면 저마다 먼저 타려고 밀치고 떠미는 혼란과 무질서가 판을 친다. 육교(陸橋)는 놔두고 위험한 차도로 무단횡단을 일삼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남이 잡은 택시에 먼저 올라타고 태연한 표정을 짓는 낫두꺼운 비문화인(非文化人)들도 수도룩한 판이다. 어디 그 뿐인가. 허술한 단속의 눈을 피해 사람들이 잠든 한 밤중에 시민들의 식수원(食水源)인 강물로 유독(有毒)한 산업폐수를 마구 쏟아버리는 악덕(惡德)기업주들도 허다하다. G·뮌르달은 사회혁신(社會革新)의 필수적 조건으로서 국민의 근면성(勤勉性), 투철한 질서의식(秩序意識), 정직성(正直性) 등을 내세웠다. 슈팽글러도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의 발전 속도를 좌우하는 것은 물질적(物質的) 여건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력(意志力), 즉 인적(人的) 요소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이러한 논리(論理)의 타당성을 인정한다면 진정한 새 시대의 조건이 무엇인가는 너무도 자명(自明)한 일이다.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모르는 사이에 자리잡은 일체의 구시대적(舊時代的) 사고(思考) 및 타성(惰性), 악습(惡習) 등을 말끔히 몰아내고 대신 합리적(合理的)인 사고(思考)로의 회귀(回歸)를 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시대의 특징이던 요령주의(要領主義)·적당주의(適當主義)·편의주의(便宜主義)에는 철퇴를 내리고 그 대신 지금까지 불의(不義)의 그늘에 가려 빛을 못보던 원리원칙(原理原則)주의·공정무사(公正無私)·합리주의(合理主義)가 각광(脚光)받는 사회로 개조되어야 할 것이다.

## II. 공공질서(公共秩序)의 참 개념(概念)

우리가 귀가 아프게 들먹이는 공공질서(公共秩序)란 반드시 법률조문처럼 명문화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집단생활을 하면서 서로간의 충돌·마찰을 피하고 공공이익을 보호하

기 위해 오랜 관습을 통해 정해 놓은 불문률(不文律)같은 것이다.

그것은 「지키지 않는 소수」가 있을 경우, 「잘 지키는 다수」가 불쾌감을 느끼고 불편을 겪게 마련인 일종의 도덕률(道德律)이다. 질서가 잘 잡힌 사회나 국가는 모든것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번영을 누리게 마련이다. 반대로 무질서한 사회나 국가는 흥망이 무상하고 편안할 날이 없다. 그것은 비단 인간사회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미물(微物)인 벌레들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질서정연한 군서(群棲)생활을 하는 벌들은 여왕봉(蜂)을 중심으로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일함으로써 아무리 수효가 많아도 굶는 벌이 없고 공익(公益)을 즐긴다. 그리고 질서와 근면의 댓가로 꿀을 생산, 비축한다. 벌을 하찮은 미물(微物)이라고 얕잡아 볼 수는 없다. 것처럼 열심히 일만 하다가도 그들 세계가 일단 침해당했을 때는 대단한 단결력과 투혼(鬪魂)을 발휘, 공동의 적(敵)에 대항하기 때문이다. 질서의 본능이 투철한 벌들의 생태를 통해 만물의 영장(靈長)임을 자처하는 우리 인간들은 배울 점이 많다.

따지고 보면 우주(宇宙)만물, 삼라만상(森羅萬象)이 모두 질서를 떠나서는 한시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수억광년을 두고 떠돌고있는 천체계(天體系)는 어떤 불가사의(不可思議)한 힘에 의해 충돌없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무한대만 세월을 그렇게 운행되어 갈 것이다. 만일 어느날 갑자기 우주의 운행질서가 흐트러져 천체들이 제멋대로 궤도를 벗어나고 역행(逆行)하고 지구가 다른 행성(行星)과 충돌한다면 그것은 역사의 영원한 종말을 뜻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치(理致)로 만일 우리 인간사회에도 공공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多數)가 되는 전도(顛倒)된 사회를 한 번 상상해 보자. 거기에는 어김없이 견잡을 수 없는 혼란과 파괴만이 존재할 것이며 마침내는 테러리스트들이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 뻔하다.

만일 도시의 자동차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고, 비행기가 관제탑의 통제를 무시하고 멋대로 이·착륙을 감행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 결과는 구태여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사실 그 술한 질서를 일일이 지켜야 한다는 것은 조금은 귀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것을 무시함으로써 초래될 엄청난 위험과 공동의 불이익을 생각한다면 서로가 인간적 양심에 따라 지키는 것이 지선(至善)인 것이다. 질서는 그 자체가 바로 순리요, 무질서는 역리(逆理)인 것이다. 역리(逆理)가 순리(順理)를 누르는 사회치고 잘되는 사회란 드물다. 설혹 일시적으로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결코 오래 갈리는 만무하다. 그것은 마치 법을 어기고 저지른 범죄 행위로 한때는 잘살지 몰라도 결국엔 법망에 걸려들어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나 비슷한 이치이다.

일찍이 후한(後漢)의 대학자 순열(荀悅)은 나라를 망치는 네 가지 병(사환(四患))을 위(僞)(거짓), 사(私)(이기), 방(放)(방종, 무질서), 사(奢)(사치)로 꼽았다. 순열(荀悅)은 그 중에서도 특히 「방(放)」의 매독을 중시(重視), 통치자나 백성들의 방종과 무질서가 국운(國運)을 기울게 하는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라고 했다. 이 가르침의 진리는 천수백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그듯됨이 없다.



사실 우리 한국(韓國)사회만 해도 해방 후 지금까지 36년이 넘도록 기회있을 때마다 질서 준수의 당위성(當爲性)만 입버릇처럼 강조되어 왔을 뿐, 단 한 번도 공공질서가 행동으로 존중되는 합리적인 사회를 향유(享有)해본 일이 없다. 아니할 말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요령주의만이 발달, 약삭 빠르고 수단좋은 사람들만이 줄곧 설치는 서슬에 질서와 양심(良心)과 원리원칙(原理原則) 따위는 그늘 속에 가리워 햇빛을 볼 틈이 없었던게 부인 못할 사실이다. 가령 교통법규 위반을 밥먹듯 하며, 승객의 안전보다 수입을 올리는 데만 혈안(血眼)이 된 운전수, 위반차량을 적발하고도 몇푼 뇌물(賂物)에 이를 눈감아주는 부패 경찰관, 육교는 아랑곳없이 차도로만 무단횡단하는 몰지각한 보행자, 이른바 「급행료(急行料)」만 있어 주면 차례를 정직하게 기다리는 선량한 시민들을 제쳐놓고 먼저 민원서류를 꾸며주는 관공서 민원창구의 공무원 등등 열거하자면 한이 없다. 그처럼 뒤집힌 가치관 속에서 원리원칙대로만 지키려는 시민들만 도리어 바보 취급을 받기 일쑤였다. 대체 무엇이 우리 한국인들로 하여금 그런 악습(惡習)과 폐풍(弊風)에 걸게 물들게 하였던가. 흔히 한국인들은 질서의식이 희박하고 자율성(自律性)이 약한 민족이라고 외국사람들에게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강제로 식민통치(植民統治)한 경험을 가진 일본인(日本人)들은 우리의 국민성(國民性)을 들먹여 가며 자율성(自律性)이 부족한 민족으로 악의적(惡意的)으로 헐뜯어 왔음은 우리가 다 뼈저리게 겪어온 바와 같다.

### III. 동방(東方)의 예의(禮儀)바른 나라

그러나 그런 논의(論議)는 적어도 긴 역사적(歷史的) 안목(眼目)으로 볼 때 전혀 근거 없는 오해요 폭론(暴論)일 뿐이다. 우리 한 민족은 멀리 찬란한 문화(文化)를 꽃피운 신라시대(新羅時代)엔 화랑도(花郎道)의 정신기조이던 세속오계(世俗五戒)의 고결한 도덕률(道德律)이 숭상되었으며, 가까이는 이조(李朝)시대만 하더라도 우리 선비나 관헌(官憲)들은 부정부패를 치욕으로 알고 오히려 가난은 부끄럽지 않게 아는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사상이 투철했던 것이다. 물론 중앙집권(中央集權)의 영향력이 오늘날처럼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골고루 미치지 어려웠던 시대라 양민을 등치는 탐관오리(貪官汚吏)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수효가 국가 전체의 기강을 뒤흔들만한 것은 못되었다. 사회의 위계(位階)질서만 해도 반(班)·중(中)·상(常) 등 유교적(儒教的) 계통의식에 따라 오히려 지나칠만큼 엄격하고 까다로운 것이었다. 같은 차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어른이 먼저하고 같은 어른일지라도 노인(老人)에게 먼저 양보해야 하는 장유유서(長幼有序)의 개념이 엄격하게 확립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따져 볼 때 우리 민족이야말로 지구상 그 어느 민족보다도 예로부터 사회 도덕 규범과 질서에 잘 순응한 어진 민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토록 질서의식과 윤리관(倫理觀)이 투철했던 민족이 어찌해서 오늘에 와서 그 반대의 측면으로 부정적(否定的)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인가. 사회 도처에서 흔히 눈에 띄는 그 염치 모르는 반사회적(反社會的) 군중(群衆)들은 대체 누구

란 말인가. 그들도 한국인(韓國人)들이란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질서의식과는 거리가 먼 그 굴절적(屈折的) 한국인상(像)은 전혀 생래적(生來的)인 것이 아니며 어두웠던 일제치하(日帝治下)로부터 해방 후의 혼란기와 6·25동란기를 거쳐 급격(急激)한 산업화(産業化) 과정에 이르는 환경의 변화를 겪는 동안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형성된 「제2의 국민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악습(惡習)과 몸에 밴 타성(惰性)을 뇌리(腦裡)에서 뽑아버리고 전래(傳來)의 소박한 민족성과 전통적인 윤리·도덕적 덕목(德目)을 다시 발굴해 이를 새로운 가치관(價值觀)과 조화시켜 밝고 맑고 바른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 정신적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리라 믿는다.

새로운 사회는 새로운 질서를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가령 구시대(舊時代)에는 돈있는 사람이 자녀 교육을 위해 한 달에 몇십만원씩 하는 가정교사를 두거나 과외(課外)를 시켜도 무방했지만 새 시대에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구시대에는 「물가인상이 없다」는 물가당국자의 담화가 나오면 소비자들은 이를 거꾸로 해석해 「곧 오르겠구나」 하는 의심과 불신(不信)에서 매점(買占)을 일삼는 경향이 흔했으나 새 시대에는 당국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하고 신용있는 정치를 해주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문(學問)의 전당인 미국(美國) 하버드대학 본관에는 「국민에게 법(法)을 지키라고 강요하기에 앞서 그 법을 만든 사람 그리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명구가 쓰여 있다. 정치지도자나 관리나 국민이나를 막론하고 모두 정해진 법률과 질서 규범을 잘 지키고 어찌다 이를 어긴 사람들이 제재(制裁)받을 때 그 사회는 참으로 안정되고 평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사회지도층이나 정치권력자들이 특권의식(特權意識)을 갖고 탈법(脫法)을 일삼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자(者)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무사할 수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의 전도(前途)란 뻔한 것일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70년대의 고도성장(高度成長)과 서구문명(西歐文明)의 무비판 무선별(無選別)한 수용으로 물질만능(物質萬能)의 그릇된 사회환경이 만연되어 우리의 인간성(人間性)을 파괴해 왔던게 사실이다. 모든 것은 정신적인 가치보다 물질위주(物質爲主)의 가치로만 따지려는 타산적(打算的) 가치관이 팽배했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과된 새 시대(時代)의 과제(課題)는 물질만능주의(物質萬能主義)로 타락하고 때묻은 오늘의 사회환경을 다시 인정이 훈훈한 인본사회(人本社會)로 복귀시키는 일이어야 할 것이다. 정의사회(正義社會)는 휴머니티가 존중되는 인본사회(人本社會)이어야 한다. 인본사회(人本社會)는 동시에 윤리사회(倫理社會)이어야 한다. 정의(正義)자체가 윤리적(倫理的)인 개념을 밑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윤리사회는 그 강조점이 생활양식에 있어서 청교도적(淸敎徒的) 사회를 뜻한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지난날의 봉건적(封建的) 윤리관(倫理觀)의 강요이다. 어디까지나 현대적(現代的) 개념의 윤리관(倫理觀)이 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 IV. 줄서기의 작은질서(秩序)부터

질서(秩序)의 철학(哲學)에는 인내(忍耐)와 기다림이라는 두 요소가 절대적으로 중요시된다. 개인의 편의(便宜)보다 다중(多衆)의 공익(公益)이 우위(優位)에 있기 때문이다. 규칙대로 차례를 지키면 반드시 자신의 차례도 돌아온다는 평범한 진리(眞理)를 국민 모두의 의식(意識) 속에 심어야 한다고 본다. 「나만 먼저 가면 그만」, 「나만 먼저 사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금물(禁物)이다. 교통질서 한 가지만 하더라도 해방 후 우리는 거의 해마다 연중(年中)행사처럼 「교통질서 강조기간」이니 「거리질서 확립기간」이다 혹은 「보행질서 단속기간」이다 등등을 설정하고 질서 확립운동을 벌여 왔다. 그러나 효과는 그때 잠시 뿐, 그 기간이 지나면 거리는 다시 무질서(無秩序)로 되돌아 갔다. 그리하여 「단속(團束)과 위반(違反)」의 끝없는 숭바꼭질이 되풀이됐던 것이다. 자주국민으로서, 문화민족(文化民族)임을 자처하면서 아직까지 사회기강의 초보라 할 거리질서 하나 스스로 지킬 힘이 없대서야 부끄럽기 이룰데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거창한 질서는 그만 두고라도 「줄서기」와 같은 작은 질서만 해도 그렇다. 줄서기야 말로 모든 질서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줄서기는 준법정신(遵法精神)을 가늠하는 바로미터이다. 줄을 잘 서는 사람들은 대체로 참을성이 있다. 따라서 줄서기가 생활화되어 있는 선진국 국민들은 미래에 대해 안정된 기대감을 갖게 마련이다. 기다리면 언젠가는 자신의 차례가 반드시 온다는 확신같은 것이다. 새치기는 후진국(後進國)에서만 성행하는 악습이다. 새치기는 세상을 기만하게 살아가는 생활의 수단이자 요령으로 아는 사람들은 어쩌다 자신들이 줄을 선 경우 마음이 불안하게 마련이다. 누가 또 자신처럼 앞에서 새치기를 해 자신들의 순서가 계속 밀릴지도 모른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줄을 설 줄 모르는 민족은 성미가 급한 것이 흠이다. 성미가 급한 민족의 공통적 결함은 당장 현재만을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생활설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한 단견(短見)은 생활의 모든 부면으로 파급(波及)되어 국가적 불이익(不利益)으로 나타난다. 교량(橋梁), 아파트, 고속도로(高速道路)를 건설하는 데도 내구성(耐久性)보다는 눈가림 날림 공사로 몇년을 지탱하기 어렵게 짓는다. 요즘은 경제학에서 유행하는 「합리적(合理的) 기대론(期待論)」에 따르면 그와 같이 찰나주의(刹那主義)와 불확실성(不確實性)이 고조되면 국가경계가 불안해지고 인플레이션 심화되며 실업(失業)문제도 악화된다고 한다. 정책당국이나 일반국민이 다같이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거나 단기적(短期的) 기대에만 급급한다면 결국 웅대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걸쳐 합리적(合理的)인 기대치(期待値)를 높이고 함께 공존공영(共存共榮)하는 안정된 복지(福祉)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라도 질서(秩序)의 상징(象徵)인 줄서기를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반질서(反秩序)의 상징인 새치기는 우리 사회에서 철저히 뿌리뽑혀야 하

리라 본다.

한 마디로 새치기란 부당이득(不當利得)을 가리킨다. 지난날 민원창구(民願窓口) 공무원들이 공공연히 받았던 소위 「급행료(急行料)」도 일종의 부당이득이다. 급행료란 새치기를 돈으로 사는 매각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인강(江)의 기적(奇蹟)을 이룩한 서독(西獨) 국민이 전후(戰後) 초토화(焦土化)된 폐허 속에서도 빵배급의 차례를 기다리는 긴 줄서기의 질서로부터 시작, 눈부신 경제부흥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참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질서(秩序)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또한 질서무시를 보고 참지 못하는 국민의 왕성한 고발정신(告發精神)이 중요하다. 독일인의 질서(秩序)의식은 인간개발에 크게 공헌했다. 불법을 보고 묵인하지 않고 이를 곧 「사회적 암(癩)으로」 생각하게 된다. 형사적인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독일사람들의 준법정신과 고발정신은 철저하다. 심지어 셋방을 얻어들 때도 계약 당사자 간의 가옥내에서의 한계(限界)까지 명시하는 판이다. 이처럼 독일인의 의식구조는 지나칠 정도로 법률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용통성 없는 국민」이라는 평을 듣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도 독일 사회처럼 조그마한 부정, 조그마한 질서 위배 행위라도 이를 목격하면 시민들이 묵인하지 않고 질타(叱咤)하고 꼬박꼬박 고발한다면 질서사범(秩序事犯)은 발붙일 곳이 없어질 것이고 따라서 사회는 밝아질 것이다.

#### V. 맺는 말

우리는 이제 낡은 시대의 낡은 사고(思考)를 과거 속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의식혁명(意識革命)을 통해 새시대가 요구하는 정의(正義)·복지(福祉)사회를 구현하려는 마당에 서 있다. 지난 한 세기(世紀)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우리는 민족자결권(民族自決權)의 상실로 엄청난 비극을 체험해야 했다. 국제질서(國際秩序)의 향배에 눈이 어두웠던 쇠국정책(鎖國政策)으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망국(亡國)의 백성으로 갖은 수모(受侮)를 겪었다. 그리고 광복(光復) 후에는 민족분열로 국토가 동강나고 6·25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을 당해야 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민족적 비원(悲願)을 씹으며 새로운 국가 건설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다.

우리가 과거와 같은 뼈아픈 역사의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민족적 대오(大悟) 각성 위에서 국민 개개인의 의식(意識)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은 일그러진 잔재사고(殘滓思考)부터 내쫓는 일이 중요하다. 의식의 혁신을 통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적 좌표(座標)를 올바르게 직시(直視)하고 미래의 비전을 꾸며나가야 하겠기 때문이다. 「비전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철(鐵)의 재상(宰相) 비스마르크는 말했거니와 이 말을 뒤집으면 「비전을 가진 민족만이 흥성한다」는 뜻도 된다. 비전은 보다 낡은 미래의 조망(眺望)이자 설계이며, 비전의 대적(大敵)은 내일없는 찰나주의(刹那主

義)와 무질서(無秩序)·혼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그늘지게하고 내일에 희망을 걸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인 무질서(無秩序) 반질서(反秩序) 탈법(脫法) 행위에 어떤일이 있더라도 중지부를 찍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쉽게 법(法)과 질서를 만들어 냈으며, 또 너무나 쉽게 그것을 여겨왔다.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풍토 속에서 그 권위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법질서(法秩序)의 존엄과 법에 복종하는 마음은 반드시 엄한 처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공평한 법(法)의 집행과 필벌(必罰)의 실행에서 조성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새 시대에는 과연 법(法)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엄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제5공화국의 헌법(憲法)에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 연좌제(連坐制)의 폐지, 구속적부심(拘束適否審)의 부활 등 인본주의적(人本主義的)인 법 정신과 의지가 뚜렷이 서려있다. 이러한 개정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불의(不義)와 부정, 부패가 없는 정의사회를 건설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민족의 앞날은 얼마든지 밝아질 수도 있다고 확신한다. 불행한 미래를 맞을 것인가 아니면 행복한 내일을 기약할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쟁취할 국민적 선택(選擇)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韓國人)은 지금 모든 분야에서 민족적 자신과 자긍(自矜)을 가져도 좋을 만큼 성장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70년대(代)에 이룩된 고도의 경제성장과 산업화(產業化)로서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중동(中東)을 비롯해 해외(海外)로 뻗은 우리의 기술신장은 세계의 선진기술(先進技術)과 겨루어 손색이 없음을 인정받았다. 비록 자원빈국(資源貧國)이라는 핸디캡은 안고 있지만 민족의 잠재역량(潛在力量)만큼은 어느 국민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찌 하찮은 질서의식(秩序意識) 하나 제대로 심는 일이 그렇게 어렵다는 말인가. 질서는 모든 존재의 기본원칙이며 사회발전의 관건이며 문화시민(文化市民)의 생활척도이다. 인간(人間)은 사회적(社會的) 동물이기에 질서를 역류(逆流)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질서가 지배하는 민주시민(民主市民) 사회에서는 「나」라는 소아(小我)보다 「우리」라는 대아(大我)를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만일 사회의 성원(成員)인 시민 각자가 저마다 「나의 이익(利益)」만을 취하느라 급급할 경우 그 사회의 붕괴(崩壞)는 시간문제일 것이다. 설사 「나」의 이익의 일부가 침해받더라도 남의 이익과, 전체로서의 「우리의 이익」에 보탬이 된다면 이를 감수(甘受)해야 하는게 바람직한 시민적(市民的) 자세이자 당위(當爲)인 것이다.

사회학(社會學)에 모레스(Mores)라는 도덕적(道德的) 규범이 있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든가 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등의 감정적 규범이다. 한국(韓國)사회의 초기적 질서는 이 모레스의 규범에 의해 다스려졌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어느 패륜아(悖倫兒)가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르면 법률을 어긴 것도 아닌데 동리 사람들은 공분(共忿)을 금치 못해 함께 버릇을

고치는 일에 발벗고 나선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도 온 국민의 머리속에 질서의식을 뿌리깊이 활착(潤着)하기 위해서는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의 자성적(自省的) 각성(覺醒)과 함께 이 모레스적(的) 규범을 다시 현대에 되살려 사회를 어지럽히는 무질서, 반(反)질서가 싹틀 소지(素地)를 미리 봉쇄하는데 따끔한 자극제(刺戟劑) 구실을 해야 하리라 믿는다.

「질서(秩序)는 정신의 건전(健全)이며 육체의 건강이며 도시(都市)의 평화(平和)이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國家)의 안전(安全)이다」라고 한 영국(英國)의 시인(詩人) 로버트 사우디의 명언(名言)은 새삼 음미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명장명언(名將名言)

◎ 임무수행에 있어서 창조적 주도성(主導性)을 발휘하지 못하고 상부(上部)의 지시만을 의존하는 자는 우수한 지휘관(指揮官)이 될 수 없다.

- 쥬코푸 -

◎ 전투(戰鬪)는 인간(人間)들의 의지(意志)의 싸움이다. 의지(意志)없는 정신(精神)은 무가치하며 정신(精神)없는 의지는 위험(危險)하다.

- 잭 트 -

◎ 승리(勝利)를 가져오는 것은 사기(士氣)이며 사기(士氣)가 있으면 전투(戰鬪)는 가능하다.

- 마아살툴스투이 -



# 북한(北韓)의 대외정책(對外政策)

## 평양의 비동맹관계(非同盟關係)를 중심(中心)으로

전 득 주(全得柱)

〈정박(政博)·외교안보연구원(外交安保研究員) 교수(教授)〉

### - 목 차(目次) -

1. 서론(序論)과 문제(問題)의 제기(提起)
2. 북한(北韓)의 대외정책(對外政策)에 대(對)한 「오리엔테이션」
  - 가. 북한(北韓)의 자본주의(資本主義)와 세계정세(世界情勢)에 대(對)한 시각(視角)
  - 나. 북한(北韓)의 대외정책(對外政策) 목표(目標)와 제원칙(諸原則)
3. 평양의 대비동맹외교정책(對非同盟外交政策)
  - 가. 비동맹운동(非同盟運動)의 성격(性格)
  - 나. 평양의 대비동맹외교정책(對非同盟外交政策)
4. 결론(結論)

### 1. 서론(序論)과 문제(問題)의 제기(提起)

북한(北韓)의 공산정권(共產政權)은 현재(現在) 약(約) 100개국(個國家)로부터 외교적(外交的) 승인(承認)을 받고 있고 특(特)히 북한(北韓)은 1973년(年)과 1975년(年)에 UN의 옵저버 자격(資格) 획득 및 비동맹(非同盟)의 정회국(正會國)에 가입(加入)함으로써 그네들의 국제적(國際的) 지위(地位)를 향상(向上)시켰다. 1)

북한(北韓)의 비동맹운동(非同盟運動)에의 가입(加入)은 실(實)로 평양의 세계정치(世界政治)(Global Politics)에의 출발(出發)의 길을 열어 놓았다.

본 논문(本論文)의 목표(目標)는

첫째 : 북한(北韓)의 대외정책(對外政策) 목표(目標)

둘째 : 그들의 대외정책(對外政策)의 제원칙(諸原則)

세째 : 이와 관련(關聯)된 평양(平壤)의 비동맹운동(非同盟運動)과의 관계 등(關係等)을 분석(分析) 검토하는데 있다.

이러한 틀 속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問題)들에 대(對)한 답(答)을 구(求)할 수 있기를 시도(試圖)해 보았다.

첫째 : 북한(北韓)의 대외정책결정자(對外政策決定者)들이 자본주의(資本主義)와 변화(變化)하는 세계정세(世界情勢)를 어떻게 보는가?

둘째 : 북한(北韓)의 대외정책(對外政策) 목표(目標)는 무엇인가?

세째 : 북한(北韓)은 이러한 대외정책(對外政策) 목표(目標) 달성(達成)을 위(爲)하여 어떠한 대외정책적(對外政策的)인 원칙(原則)들을 가지고 있는가?

네째 : 각(各) 원칙(原則)들 간(間)의 관계(關係)는 어떠한가?

다섯째 : 평양의 비동맹(非同盟) 외교(外交)의 주요(主要) 목표(目標)와 전략(戰略)들은 무엇이며, 그들의 목표(目標)들은 어느 정도 성공적(成功的)이었는가?

### 2. 북한(北韓)의 대외정책(對外政策)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 가. 북한(北韓) 노동당(勞動黨)이 대외정책(對外政策) 수립시(樹立時)

#### 자본주의(資本主義)와 세계정세(世界情勢)에 대(對)해 보는 시각(視角)

북한(北韓)의 대외정책결정자(對外政策決定者) 및 그 핵심(核心)은 김일성(金日成)과 그의 노동당(勞動黨) 정치국(政治局)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事實)이다. 2)

김일성(金日成)은 상이(相異)한 체제(體制)와 이데올로기를 가진 국가간(國家間)의 관계(關係)의 원칙(原則)으로 기지(其地) 동구(東歐) 공산제국(共產諸國)과 같이 평화공존(平和共存)을 주장(主張)하고 있지만 양체제(兩體制) 즉 「공산주의체제(共產主義體制)와 자본주의체제(資本主義體制)가 지구상(地球上) 서로 병존(竝存)하는 한(限) 양체제간(兩體制間)의 계급 투쟁(鬭爭)은 불가피(不可避)하다」는 견해(見解)를 갖고있다. 3)

김(金)은 「사회주의(社會主義)(공산주의(共產主義))가 평화(平和)와 민주주의(民主主義)와 동일(同一)한 반면(反面) 제국주의(帝國主義)(서구자본주의(西歐資本主義) 지칭)는 그 본질(本質)에 있어서 침략적(侵略的)이기 때문에 사회주의(社會主義)와 자본주의(資本主義)의 관계(關係)는 원래(元來)부터 그 모순을 내재(內在)하고 있다」고 설명(說明)하고 있다.

둘째로 북한공산주의자(北韓共產主義者)들은 「국제세력(國際勢力) 관계(關係)가 사회주의(社會主義)에 유리(有利)하게 그리고 자본주의(資本主義)에 불리(不利)하게 계속 변화(變化)되어 가고있다」고 판단(判斷)하고 있다. 4)

마지막으로 1970년대(年代)의 미·소, 미(美)·중공접근(中共接近)을 「공산주의(共產主義)에 유리(有利)하게 전개(展開)되는 세력관계(勢力關係)에 대(對)한 제국주의(帝國主義)의 적응」에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5)

### 나. 북한(北韓)의 대외정책(對外政策) 목표(目標)와 제원칙(諸原則)

북한(北韓)이 1972년(年) 12월(月) 개정(改定)한 북한사회주의헌법(北韓社會主義憲法) 제(第) 5조(條)에서 잘 시사하고 있듯이 6) 북한(北韓)의 기본목표(基本目標)는 북한자체(北韓自體)에서 사회주의(社會主義) 건설(建設)과 남한(南韓)에서의 공산혁명(共產革命)의 촉진(促進)이라는 두 가지이다.

때문에 평양(平壤)의 대외정책(對外政策) 목표(目標)는 북한자체(北韓自體)에서 사회주의(社會主義) 건설(建設)뿐만 아니라 남한(南韓)에서의 공산혁명(共產革命)을 통(通)한 조국의 통일(統一)을 위(爲)한 유리(有利)한 외적(外的) 조건(條件)들을 확보(確保)하는데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對外政策) 목표(目標)를 달성(確保)하기 위(爲)하여 북한(北韓)은 그들의 대외정책(對外政策)의 원칙(原則)으로 다음과 같은 제원칙(諸原則)을 들고 있다. 주체사상(主體思想),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國際主義), 국제민주주의운동(國際民主主義運動)(비동맹운동(非同盟運動)) 및 평화공존(平和共存), 김일성(金日成)의 일인독재(一人獨裁)의 도구(道具)로 사용(使用)되어 왔던 주체사상(主體思想)은 대외정책적(對外政策的)인 측면(側面)에서 볼 때 북한(北韓)과 모든 다른 국가(國家)들 간(間)의 관계(關係)를 유지(維持)하는데 중요(重要)한 원칙(原則)으로 이용(利用)하고 있다.

김일성(金日成)은 대외관계(對外關係)에 있어서 북한(北韓)이 협상(協商)의 대상(對象)이 아니라 모든 국가간(國家間)의 협상(協商)의 주체(主體)로써 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주체사상(主體思想)은 자주독립(自主獨立)의 원칙(原則)을 통(通)하여 대외정책(對外政策)에서 구현(具現)되며 자주독립(自主獨立)의 원칙(原則)은 국가간(國家間)의 완전(完全)한 동등권(同等權)과 상호(相互) 존중(尊重)을 요구(要求)한다고 말하고 있다. 7)

북한(北韓)이 들고 있는 두번째의 원칙(原則)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國際主義)이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國際主義)의 내용(內容)은 세계반자본주의(世界反資本主義) 운동(運動)과의 유대 및 그 지원(支援)이다. 때문에 그 수단(手段)은 반제국주의(反帝國主義) 동맹(同盟)이다.

본원칙(本原則)의 적용대상국(適用對象國)이나 대상자(對象者)는 모든 사회주의(社會主義) 및 공산주의정당(共產主義政黨)들과 비공산국가(非共產國家) 내(內)의 상기(上記) 정당(政黨)

및 제국주의(帝國主義)에 대항(對抗)하는 모든 국가(國家)나 전위조직(前衛組織)들이다. 때문에 이 범주 내에서 북한노동당(北韓勞動黨)은 소위(所謂) 「사회주의(社會主義) 형제국」들과 모든 분야(分野)에서 협력(協力)하고 기타 비공산국가(非共產國家) 내(內)의 사회주의(社會主義) 및 공산주의정당(共產主義政黨)과 협력(協力)하며 제국주의(帝國主義)와 대항(對抗)하는 모든 나라들을 지원(支援)하고 있다.

다음의 원칙(原則)인 「국제민주주의(國際民主主義) 운동(運動)」 8)은 평양이 비동맹(非同盟)에 가입(加入)된 이래(以來) 대외정책원칙(對外政策原則)의 하나로 강조(強調)되고 있다. 본원칙(本原則)이 적용(適用)되는 대상(對象)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中南美) 아메리카에 있는 비동맹국가(非同盟國家)이다.

본원칙(本原則)은 민족(民族)의 독립(獨立), 반제국주의사회적(反帝國主義社會的) 진보(進歩)를 위(爲)하여 투쟁(鬪爭)하는 모든 인민(人民)의 지원(支援)을 그 내용(內容)으로 하고 있다. 9) 이러한 원칙(原則)에 따라 평양은 비동맹운동(非同盟運動)에 적극적으로 현재(現在) 참여(參與)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北韓)은 자본주의(資本主義) 국가(國家)와의 관계수립(關係樹立) 및 그 개선(改善)을 위(爲)하여 「상이(相異)한 체제(體制)와 이데올로기를 가진 국가간(國家間)에 평화공존(平和共存)」은 그들의 대외정책원칙(對外政策原則)으로 삼고 있다. 특기(特記)할 사항(事項)은 같은 분단공산국가(分斷共產國家)인 동독(東獨)은 본원칙(本原則)의 적용대상국(適用對象國)으로 서독(西獨)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반(反)해 10) 북한(北韓)은 그들의 폭력혁명(暴力革命)이라는 최고목표(最高目標) 때문에 한국(韓國)을 그들의 원칙적대상국(原則適用對象國)에서 제외(除外)하고 있다는 사실(事實)이다. 11) 이와같은 한국(韓國)의 제외(除外)야 말로 한반도(韓半島)의 정치군사적(政治軍事的) 긴장과 위기의 가장 중요요인(重要要因)들 중(中)의 하나이다.

## 3. 평양(平壤)의 비동맹외교정책(對非同盟外交政策)

### 가. 비동맹운동(非同盟運動)의 성격(性格)

비동맹운동(非同盟運動)의 이념적(理念的) 연원(淵源)은 1955년(年) 「반동회의(會議)」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구체적(具體的) 조직(組織)의 근원(根源)은 1961년(年)의 「벨그라드」에서의 제(第)1차(次) 비동맹정상회담(非同盟頂上會談)에서 시작(始作)되었다.

1955년(年) 「반동회의(會議)」의 모임의 기본동기(基本動機)로는 물론 냉전하(冷戰下)의 미(美)·소(蘇)의 양진영(兩陣營)에서 어디까지나 중립(中立)을 지키는데 있었다. 이러한 비동맹운동(非同盟運動)은 1955년(年) 「반동회의(會議)」에서 29개국(個國)(아시아 15, 중동(中東) 7, 아프리카 6, 라틴 아메리카 0, 기타 1개국(個國))으로 시작(始作), 1979년(年) 제(第)6차(次)

「하바나」 비동맹회의(非同盟會議)에서는 무려 92개국(個國)(아시아 16, 중동(中東) 13, 아프리카 49, 라틴 아메리카 11, 기타 3)으로 확대되어 그 기간(期間)동안 63개국(個國)이 새로이 가입(加入)되었고 그들의 세력(勢力)은 또한 UN에서 과반수를 훨씬 넘게 되었다.

비동맹운동(非同盟運動)은 미(美)·소(蘇)의 냉전(冷戰)격화 속에 그 초기(初期)에는 미(美)·소(蘇)의 어느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겠다는 비동맹운동(非同盟運動)과 서구(西歐) 제국(諸國)의 식민지(植民地)에 반대(反對)하는 운동(運動)이 결합(結合)되어 시작(始作)되었지만 시간(時間)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정치적(政治的) 성격(性格)에 경제적 성격(性格)을 더 부가(附加)시키게 되었는데 대략 다음의 4개의 경향을 내포하고 있다.<sup>12)</sup>

첫째 : 비동맹운동(非同盟運動)

둘째 : 반식민지운동(反植民地運動)

셋째 : 대개발국(對開發國) 즉 선진국(先進國)에 대(對)한 투쟁(鬭爭)

네째 : 대자원보유국(對資源保有國)에 대(對)한 투쟁(鬭爭)

#### 나. 북한(北韓)의 대비동맹외교정책(對非同盟外交政策)

1955년(年) 「반동」 비동맹회의(非同盟會議)에서 비동맹원칙(非同盟原則)이 선언(宣言)된 후(後) 북한(北韓)은 중공(中共)의 「중간지대(中間地帶)」 외교(外交)에 편승할 의도(意圖)로 1956년(年) 4월(月) 제(第)3차(次) 조선노동당대회(朝鮮勞動黨大會)에서 비동맹원칙(非同盟原則)을 지지(支持)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北韓)은 1950년대(年代) 후반과 1960년대(年代)까지 비동맹회의(非同盟會議)에 직접 가입(加入)되었지 아니하므로 그의 비동맹(非同盟)에 대(對)한 외교정책(外交政策)을 구체화(具體化)할 수는 없었다. 1970년초(年初) 비동맹운동(非同盟運動)이 변화(變化)하는 국제체제(國際體制)에서 하나의 주도적(主導的) 세력(勢力)으로 등장(登場)한 것을 보고서야 비동맹운동(非同盟運動)에 대(對)한 구체적(具體的) 외교정책(外交政策)을 수립(樹立)한 것 같다. 평양은 그 당시의 중(中)·소분쟁(蘇紛爭)을 최대한(最大限) 이용(利用) 비동맹원칙(非同盟原則)과 주체사상(主體思想)을 결부(結付)시키었다.

북한(北韓)의 비동맹외교(非同盟外交)의 목표(目標)는 북한(北韓)의 무력남침정책(武力南侵政策)에 대(對)한 직접적(直接的)인 지원(支援)을 기대하기보다는 김일성이 거듭 강조(強調)해온 「3대혁명역량(大革命力量) 중(中) 국제적(國際的) 혁명역량(革命力量)」 13)의 강화(強化)를 통(通)해 남한적화(南韓赤化)를 위(爲)한 외적조건(外的條件)들을 유리(有利)하게 만드는데 있다.

즉 UN에서의 북한(北韓)측 결의안(決議案)채택과 주한미군(駐韓美軍) 철수의 실현(實現)을 위(爲)한 국제적(國際的) 압력수단(壓力手段)으로 비동맹운동(非同盟運動)을 최대한(最大限) 이용(利用)해보자는데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目標達成)을 위(爲)하여 북한(北韓)은 1960년대(年代)와 1970년대(年代) 중반(中盤)까지 대비동맹(對非同盟) 제국(諸國)에 대(對)해서 초청 및 방문(訪問)외교를 집중적(集中的)으로 전개(展開)했으며 대상국(對象國)과 각각(各各)의 경우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差異)가 있었겠지만 경제(經濟), 기술(技術), 군사원조(軍事援助) 제공(提供)의 약속(約束)까지도 서슴치 않았다.

또한 비동맹운동(非同盟運動)과의 관계(關係)로 강화(強化)한다는 의미(意味)에서 그들은 소위(所謂) 「국제적(國際的) 민주주의(民主主義)」를 그들의 대외정책원칙(對外政策原則)으로 삼고 반제국주의(反帝國主義), 반식민주의(反植民主義), 반지배주의(反支配主義), 반인종주의(反人種主義)라는 비동맹원칙(非同盟原則)에 부응시키었다.

북한(北韓)은 중(中)·소(蘇)로부터 그의 행동반경(行動半徑)이 넓어진 틈을 타서 북한(北韓)의 대비동맹외교목표달성(對非同盟外交目標達成)에 유리(有利)하다고 판단(判斷)하여 1975년(年) 비동맹운동(非同盟運動)에 가입(加入)함으로써 북한(北韓)은 최초(最初)로 세계정치적(世界政治的) 광장에 참여(參與)케 되었다.

북한(北韓)의 이와같은 참여(參與)를 통(通)한 전략적목표(戰略的目標)는 비동맹회원국(非同盟會員國)들에 의(依)하여 북한(北韓)의 외교적(外交的) 승인(承認)과 그 여세로 국제기구(國際機構) 등(等)에서 북한(北韓)을 한반도(韓半島)의 유일(唯一)한 합법정부(合法政府)로서의 단독대표권 획득(獲得)이라는 두 가지의 집단적(集團的)인 합법화(合法化) 즉, 세계적(世界的) 조직체(組織體)나 국제기구(國際機構)에 의(依)해 북한(北韓)의 합법화(合法化)와 동시(同時)에 한국정부(韓國政府)의 불법화(不法化)에 있다.

그러나 북한(北韓)이 비동맹운동(非同盟運動)의 정치(政治)무대에 공식(公式) 데뷔한 것은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1975년(年) 8월(月) 16~19일간(日間) 개최(開催)되었던 제오차(第五次) 비동맹정상회담(非同盟頂上會談)으로서 북한사회(北韓社會)의 폐쇄성과 경직성으로 보아 이러한 국제(國際)무대에서 북한(北韓)의 Image를 부각시키고 그들의 성과(成果)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없었다.

본(本) 정상회담(頂上會談)은 판문점 도끼사건(事件)(미장교(美將校)사망)으로 북한(北韓)에 좋지 않은 인상(印象)을 주는 가운데 한국문제(韓國問題)에 대(對)한 친북한결의안(親北韓決議案)을 궁극에 가서는 채택은 했었지만 24개국이나 되는 회원국(會員國)이 한국문제(韓國問題)에 대(對)한 친북한결의안(親北韓決議案)에 반대(反對)했을 때 본(本) 회담(會談)의 단합(團合)과 통일성(統一性)은 이미 깨어져 버렸다.

더군다나 본(本) 정상회담(頂上會談)의 리더격(格)인 유고의 고(故) 티토대통령(大統領)은 평양이 세계적(世界的) 차원(次元)에서 경제적(經濟的) 및 에너지문제(問題)에 대한 토의시간(討議時間)을 줄이고 정치(政治) 및 군사적(軍事的) 현안문제(懸案問題)를 더 많이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強調)하는 북한(北韓)의 경직성 때문에 불쾌감을 주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주최국(主



催國)인 스리랑카는 또한 북한대표단(北韓代表團)이 숙박하는 스리랑카에 정박하고 있던 북한(北韓)선박을 엄중 감시함으로써 북한(北韓) 대표(代表)에 대(對)해 애매한 태도(態度)를 취(取)했다는 보도(報道)도 있었다.14)

북한(北韓)에게 불리(不利)한 이러한 국제상황(國際狀況)이 북한(北韓)으로 하여금 1976년(年) 9월(月)의 UN총회(總會)의 의사 일정에서 그의 결의안(決議案)을 자진철회(撤回)하게 한 것 같다. 이와 반대(反對)로 1979년(年) 「하바나」에서 개최(開催)된 제(第)16차(次) 비동맹정상회담(非同盟頂上會談)에서는 그들의 주요목표(主要目標)를 비동맹운동(非同盟運動)의 단결(團結)에 기여하는데 둬으로써 매우 신중을 기해서 이의 준비를 한 듯한 인상이다.

1979년(年) 7월(月) 18일(日) 김일성정권(政權)은 조선노동당중앙위(朝鮮勞動黨中央委)의 정치위원회(政治委員會)와 중앙인민위원회(中央人民委員會)의 합동회의(合同會議)에 대해 발표(發表)하면서 이 회의내용(會議內容)이 「하바나」 비동맹정상회담(非同盟頂上會談)을 위한 정책(政策)을 다루었다고 언급했다. 이 회의(會議)는 김일성이 직접 주재했다. 때문에 본(本) 합동회의(合同會議)의 직접적인 목적(目的) 때문에 비동맹(非同盟)에 대(對)한 평양의 제원칙(諸原則)들과 전략(戰略)을 세우는데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15) 본(本) 합동회의(合同會議)의 정책서(政策書)는 국제체제내(國際體制內)에서의 비동맹운동(非同盟運動)과 평양의 대외정책(對外政策)을 체계적(體系的)으로 연결(連結)한데 그 특징(特徵)이 있다.

1979년(年) 「하바나」 비동맹회의(非同盟會議)의 개최(開催)는 비동맹운동(非同盟運動) 18년(年)에 그의 생존(生存)에 가장 큰 위협(威脅)을 주었던 회의(會議)이었다. 즉 냉전(冷戰)의 불력정치(政治)에서 탈피(脫皮), 중립(中立)을 제창(提唱)하고 창립(創立)되었던 비동맹회의(非同盟會議)가 이번 「하바나」 회의(會議)에서 다시 냉전(冷戰)의 불력 정치(政治) 속으로 휘말려 들어간 것이다. 이러한 사실(事實)이 본대회(本大會)에서 다루어진 문제(問題), 즉 분쟁(紛爭)에 있는 캄보디아에서의 「행사림」 정권(政權)과 「폴포트」 정권간(政權間)의 정통성(正統性) 투쟁문제(鬭爭問題)와 아랍국들의 이해(利害)를 무시(無視)하고 이스라엘과 화친(和親)을 하고 있는 이집트 제명문제(除名問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비동맹운동(非同盟運動)을 분열(分裂)시킨 더 큰 이유는 쿠바수상(首相) 「피델·카스트로」(Habana 회의의장(會議議長)의 친소발언(親蘇發言)과 미(美)·중공(中共)을 비동맹운동(非同盟運動)의 주요적국(主要敵國)으로 간주하는 발언(發言)이었다. 이러한 「카스트로」의 발언(發言)은 본(本) 대회회원국(大會會員國)들을 양파(兩派)로 즉, 쿠바, 공산(共產)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이디오피아, 남에만으로 구성(構成)된 친소파(親蘇派)와 유고, 인도, 말라시아와 싱가포르 된 중도독립파(中道獨立派)로 분열(分裂)시켰다.

그 분열(分裂)의 결과(結果), 이집트는 제명(除名)도 비체(誹謗)도 받지 않게 되었고, 캄보디아대표권문제(代表權問題)는 타협안(妥協案)으로 적어도 1981년(年)까지는 캄보디아의 회원국자격(會員國資格)을 정지(停止)시켰다. 이는 「폴·포트」 정권(政權)의 불법화(不法化)와 친소

파(親蘇派)의 승리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카스트로」의 비동맹정의(非同盟定義)에 대한 친소성향화(親蘇性向化)는 실패하였다. 「카스트로」의 기대와는 반대(反對)로 합의(合議)된 결의문(決議文)은 「비동맹정치(非同盟政治)의 진수는 그의 본래(本來)의 제원칙(諸原則)과 고유(固有)한 성격(性格)에 의거(依據), 제국주의(帝國主義), 식민주의(植民主義), 인종차별(人種差別), 시오니즘을 포함한 인종주의(人種主義)와 외국(外國)의 침략(侵略), 정복(征服), 지배(支配), 간섭(干涉), 헤게모니 및 강대세력(強大勢力), 불력정치(政治)에 대항(對抗)하는 투쟁을 포함한다.16)

비동맹내(非同盟內)의 이러한 파벌조성(派閥造成)에 반대(反對)하여 북한(北韓)의 외상(外相) 허담(許談)은 1979년(年) 6월(月) 8일(日)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개최(開催)되었던 비동맹조정국외상회의(非同盟調停國外相會議)에서의 연설에서 비동맹(非同盟)의 원래(元來)의 원칙(原則)과 이념(理念) 및 독립(獨立)을 방어하고 동운동(同運動)의 단결(團結)을 호소했다.17) 이러한 북한(北韓)의 대비동맹정책(對非同盟政策)으로 보아 북한(北韓)은 소련파(蘇聯派)에 가담치 않고 중도독립파(中道獨立派)에 가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북한(北韓)은 1979년(年) 중(中)·소(蘇)의 갈등(葛藤)을 이용(利用), 비동맹운동(非同盟運動)에서의 지도적(指導的) 역할을 할 것을 결정(決定)했기 때문에 중공(中共)과 소련(蘇聯)은 직접 지칭하지는 안 했지만 소련(蘇聯)을 지배주의(支配主義) 세력(勢力)으로 중공(中共)을 헤게모니 주의자(主義者)라고 칭(稱)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북한(北韓)이 완전(完全) 독립국(獨立國)이라는 것을 비동맹(非同盟)에서 역설했다.

북한(北韓)은 1976년(年) 「콜롬보」 회의(會議)에서의 외교적(外交的) 실수를 「하바나」 회의(會議)에서 「비동맹단결(非同盟團結) 전략(戰略)을 사용(使用)함으로써 상쇄시켰다.

첫째, 북한(北韓)은 1982년(年)까지 비동맹회의(非同盟會議) 의장(議長)인 「카스트로」의 영향력을 통제(統制)하기 위하여 조정국의 회원수(會員數)를 확대(擴大)하기로 결정(決定)한 중도독립파(中道獨立派)의 제안(提案)의 관철로 그 조정국의 회원국(會員國)이 되었다.

둘째, 한국문제(韓國問題)에 있어서 어떠한 이의(異議)도 없이 북한(北韓)이 원하는 결의안(決議案)을 채택(採擇)케 했다. 즉 한국문제(韓國問題) 결의문(決議文)의 골자를 본다면:

- 가) 한국분단(韓國分斷)의 반대(反對)
- 나)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에 대(對)한 한국민(韓國民)의 권리(權利) 존중(尊重)
- 다) 한반도(韓半島)에서의 모든 외국군대(外國軍隊)의 철수(撤收)
- 라) UN사령부의 해체
- 마) 외국군사기지(外國軍事基地) 및 군사시설(軍事施設)의 철거(撤去)
- 바) 휴전협정(休戰協定)의 평화협정(平和協定)으로의 대치(代置)

1981년(年) 인도의 뉴델리에서 비동맹외상회의(非同盟外相會議)가 개최(開催)되었으나, 한국(韓國) 문제(問題)는 거론되지 않았다. 명년(明年) 이락에서의 비동맹정상회담(非同盟頂上會

談)에서 분명(分明)히 북한(北韓)은 한국문제(韓國問題)를 거론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最近) 그들의 친소적(親蘇的) 경향으로 보아 북한측(北韓側)의 결의안(決議案) 채택(採擇)은 더욱 힘들 것으로 전망(展望)된다.

#### 4. 결론(結論)

북한(北韓)은 최소한(最小限) 비동맹내(非同盟內)에서는 1980년(年)까지 모스크바와 북경으로부터 벗어나서 비동맹(非同盟)의 원칙(原則)에 부합하도록 노력(努力)한 점(點)이 보인다. 이러한 북한(北韓)의 외교전략(外交戰略)은 1970년대(年代)에서 특기(特記)할만한 사항(事項)이다. 북한(北韓)의 제삼세계(第三世界)에 대(對)한 1960년대(年代)의 외교기반조성(外交基盤造成)은 1970년대(年代)의 세계외교(世界外交)에 북한(北韓)의 참여(參與)를 가능케 했다. 주체사상(主體思想)과 「국제적(國際的) 민주주의(民主主義)」를 비동맹외교(非同盟外交)의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세운 반면(反面) 마르크스·레닌주의(主義)의 이념적(理念的) 후퇴가 그들의 비동맹외교(非同盟外交)에서 역력히 보인다. 그러나 외교(外交)의 실제면(實際面)에서 볼 때 북한(北韓)의 제삼세계외교(第三世界外交)는 김일성의 정통성(正統性) 위기(危機)에 대(對)한 북한(北韓)의 국내(國內) 국외적(國外的) 제 조치들의 일부로서 간주될 수 있다.

첫째, 국내(國內) 모든 파벌(派閥)을 그가 제거(除去)함으로써 정통성(正統性)을 찾는 과정(過程)에 대(對)한 모든 위협요인(威脅要因)을 없앴음.

둘째, 김일성은 중(中)·소(蘇)의 분쟁(紛爭)을 최대(最大)한 이용(利用)하여 그들의 통제(統制)나 간섭(干涉)을 중화(中化)시키는데 성공(成功)하였음.

「주체(主體)」는 중(中)·소(蘇)에 대(對)한 등거리외교(等距離外交)를 확립하는데 합법화(合法化)된 원칙(原則)으로 이용(利用)되었으며, 북한(北韓)의 대외정책(對外政策)에 있어서의 외교노선(外交路線)을 보다 자주화(自主化)시킬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제삼세계외교(第三世界外交)를 전개(展開)함으로써 한반도의 다른 정통성(正統性)을 가진 한국(韓國)의 위협(威脅)에 강력(強力)히 대처했다.

북한(北韓)의 비동맹외교(非同盟外交)와 최고목표(最高目標)는 비동맹국가(非同盟國家)들이 정통성(正統性)을 인정(認定)하는데 있다. 1970년대(年代) 북한(北韓)은 그들의 목표(目標)를 어느 정도 달성(達成)했다고 보는 것은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北韓)은 제(第)3세계국가(世界國家)들이 한국(韓國)을 전혀 인정(認定)하지 못하게 하고 북한(北韓)만을 절대적(絶對的)으로 인정(認定)하는 단독승인(單獨承認)을 얻기에는 실패하였다. 북한(北韓)이 남한(南韓)과 함께 동시수교국(同時修交國)의 수(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북한(北韓)만을 단독(單獨)으로 인정(認定)하는 문제(問題)는 더욱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1975년(年)의 UN총회(總會)에서 한국측(韓國側) 결의안(決議案)과 북한측안(北韓側案)이

동시(同時)에 채택(採擇)되었다는 사실(事實)만으로도 유일대표권(代表權)을 얻기 위한 노력(努力)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게 해 준다. 물론 독재자(獨裁者) 김일성은 그러한 현실(現實)을 인정(認定)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인정할 여유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한편으로 무력적화통일(武力赤化統一)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北韓)의 일부(一部) 비동맹국가(非同盟國家)에 대(對)한 경제원조(經濟援助) 약속이 북한(北韓)의 경제(經濟)사정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여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 북한(北韓)의 대비동맹외교전략(對非同盟外交戰略)은 이제 한계점(限界點)에 도달한 것 같다.

1980년대(年代) 후반(後半)부터 북한(北韓)은 중(中)·소등거리외교(蘇等距離外交)에서 소(蘇)에 너무나 밀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1982년(年) 비동맹정상회담(蘇)에서 중도독립파(中道獨立派)에 그대로 머무르지 그렇지 않으면 친소파(親蘇派)로 전향할지 매우 궁금하다. 만약 친소파(親蘇派)로 전향 시(時) 그들 앞에는 보다 큰 시련이 놓일 것이다.

#### <주(註)>

(1) 한국(韓國)은 현재(現在) 103개국(個國)에 의(依)해서 외교적(外交的) 승인(承認)을 받고 있음.

북한(北韓)의 비동맹관계(非同盟關係)에 대(對)해서 고병철, 북한 외교론(外交論), (서울 1977), 161페이지 참조(參照).

(2) 본연구(本研究)에 대(對)해서 Lee, Chong Shik, "The North Korean Policy and its strategies to ward South Korea", in : Kim Young C and Halperin, A. M.,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New York, 1977) 96페이지 참조(參照).

(3) 김일성(金日成)은 이 문제를 1962년(年) 10월(月)의 최고 인민회의(人民會議) 제(第)1차 회의(會議)에서 다루었음. 김일성(金日成), 김일성 선집 제(第)4권(卷)(평양, 1986), 419페이지 참조(參照).

(4) Kim Il Sung, Selected Works Vol.5 (English Version) 15페이지 참조(參照).

(5) 상동(上同) 12페이지 참조(參照).

(6) 조선 민주주의 사회주의 헌법, 평양, 1972, 1페이지 참조(參照).

(7) 주체사상(主體思想)에 대(對)한 보다 정확한 자료, 김일성 "On Juche in our re-volution, 2 Vols, (Pyongyang, 1975).

(8) 본원칙(本原則)은 북한(北韓) 사회주의(社會主義) 헌법(憲法)에 있지 않으나 이론적(理論的)으로 보아 북한(北韓) 헌법(憲法) 제(第)16조(條)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國際主義)에서 특별(特別)히 도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9) Kim Il Sung, Ausgewahlte Werke (김일성(金日成) 선집(選集)) 6권(卷) 291 페이지 참조(參照).

(10) 동독통일사회당수(東獨統一社會黨首) 「호넵카」의 1971년(年) 6월(月) 15일(日)의 제8차 전당대회(全黨大會)연설 참조(參照).

(11) 동아일보(東亞日報)(발행인), 안보통일문제 기본자료집, (서울 1974), 183페이지 참조(參照).

(12) 박상식(朴尙植), 비동맹운동(非同盟運動)과 한국(韓國), 외교안보연구원논문(外交安保研究院論文), 1979, 12.

(13) 삼대혁명역량(三大革命力量)이란 1964년(年) 2월(月) 27일(日) 김일성(金日成)이 인도네시아방문시(訪問時) 대남전략(對南戰略)으로서 ① 북조선(北朝鮮)의 혁명역량(革命力量), ② 남조선(南朝鮮)의 혁명역량(革命力量)과 ③ 국제적(國際的) 혁명역량(革命力量)의 강화(強化)를 강조(強調)했다.

(14) B. C. Koh, "North Korea 1976; Under Stress", America Survey 17, (January, 1977, p. 65.)

(15) 합동회의(合同會議)의 발표전문(發表全文)에 대(對)해서는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 Asia and Pacific : Daily Report, July 18, 1979, pp. D1~D13, 앞으로 FBIS : A.P로 약칭을 씀.

(16) 본결의문(本決議文) 전문(全文)에 대하여,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Belgrade) No. (Sept, 26, 1979) : 19, pp.18~67 참조(參照).

(17) FBIS-APA, June 11, 1979, pp. D2.

## 마르크스주의(主義) 이론비판(理論批判)

인류(人類)의 최대(最大)의 적(敵)인 공산주의(共產主義)를 타도(打倒)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반공사상(反共思想)의 투철(透徹)한 이론적(理論的) 무장(武裝)을 해야 하겠다.

소령 김 영 태(金永台)

〈공군본부정훈감실(空軍本部政訓監室)〉

현대(現代)의 위기(危機)는 「공산주의(共產主義)」와 「민주주의(民主主義)」라는 이념대립(理念對立)의 갈등(葛藤)에서 비롯되어지고 있다.

역사상(歷史上) 수 많은 사상(思想)과 이념(理念)이 생멸(生滅)했었지만, 공산주의(共產主義)만큼 끈질기고 악랄하게 인류(人類)를 기만(欺瞞)과 혼란(混亂)을 시킨 사상(思想)은 일찌기 없었던 것이다.

18세기(世紀) 산업혁명(產業革命)으로 인한 근대자본주의(近代資本主義) 형성과정(形成過程)에서 야기(惹起)되어진 각종(各種) 사회적(社會的) 병폐(病弊)로부터 「마르크스」주의(主義)가 탄생(誕生)되었다는 사실(事實)에는 이론(異論)의 여지(餘地)가 없지만 시대적(時代的) 제약성(制約性)과 통찰력(洞察力)에 한계성(限界性)을 감지(感知)하지 못한 「마르크스」의 독선적(獨善的) 주장(主張)은 스스로 엄청난 이론적(理論的) 오류(誤謬)를 범(犯)하게 되었고, 특히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마르크스」이론(理論)의 존재가치(存在價値)가 완전(完全)히 부인(否認)되고 있으며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까지도 수정(修正)이 불가피한 낡은 이론(理論)으로 전락(轉落)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1848년(年) 폭력(暴力)에 의한 전세계(全世界)의 공산화(共產化)를 공공연히 선언한 「공산당선언(共產黨宣言)」이 지구상(地球上)에 등장한 이후 130여 년 만에 전세계(全世界) 인류(人類)의 3분의 1이 공산노예화(共產奴隸化)되었고 지표(地表)의 거의 반(半)에 달하는 지역(地域)이 공산지옥(共產地獄)으로 변(變)하고 말았다.

그러면 이렇게 모순(矛盾)과 오류(誤謬) 투성이인 「마르크스」주의(主義)가 어떻게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맹위(猛威)를 떨치며 인류(人類)를 위협(威脅)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오직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의 선전(宣傳)에만 현혹(眩惑)되어 정확(正確)하고 면밀(綿密)



한 분석(分析)과 판단(判斷)을 통(通)하여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이론적(理論的) 모순(矛盾)을 간파(看破)할 수 있는 「이념(理念)의 힘」이 결여(缺如)되었는데 그 원인(原因)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主義)를 비판(批判)하는 궁극적(窮極的)인 목적(目的)은 바로 「이념(理念)의 힘」을 길러 먼저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사상적(思想的) 근거(根據)를 뿌리 뽑아 북괴(北傀) 김일성집단(金日成集團)을 타도(打倒)하여 고귀(高貴)한 자유(自由)와 생명(生命)을 수호(守護)하며 민족(民族)의 정통성(正統性)을 전승(傳承)시켜 조국(祖國)의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을 달성(達成)하는데 있는 것이다.

## 1. 「마르크스」주의(主義)의 출현(出現) 경위(經緯)

18, 19세기(世紀) 구주(歐洲)는 정치(政治)·경제(經濟)·문화(文化)·사상(思想)이 급격(急激)한 변화기(變化期)를 맞게 되었다. 특히 산업혁명(産業革命)으로 말미암아 기존질서(既存秩序)가 완전(完全)히 변혁(變革)되고 새로운 경제체제(經濟體制)인 자본주의(資本主義)가 대두(擡頭)됨으로써 야기(惹起)되어진 혼란(混亂)은 극(極)에 도달(到達)하게 되었다. 더구나 정치적(政治的)으로는 민족(民族)·민주운동(民主運動)이 고조(高潮)되고 전쟁(戰爭)과 혁명(革命)이 끊임없이 발생(發生)되어 민중(民衆)의 분노(憤怒)와 불만(不滿)은 날이 갈수록 팽배(澎湃)하였다. 이같은 격동기(激動期)에 태어난 「마르크스」(Karl Marx : 1818~1883)는 독일(獨逸)의 유대인(猶太人)으로서 비교적(比較的) 부유(富裕)한 생활(生活)을 하고 있었으나 민족적(民族的) 박해(迫害)와 멸시(蔑視)에 대한 불만(不滿)은 청년(青年) 「마르크스」를 변화(變化)시켰다. 「마르크스」는 일반(一般) 유대인(猶太人)이 그랬듯이 「메시아」(Messiah)가 강림(降臨)하여 이러한 민족차별(民族差別) 문제(問題)를 해결(解決)해 주리라 기대(期待)했으나 결과(結果)는 달랐다. 결국 「마르크스」는 「종교(宗教)는 피압박민중(被壓迫民衆)의 탄식(嘆息)이며, 민중(民衆)의 아편(鴉片)」<sup>1)</sup>이라 주장(主張)하고 오직 「혁명적(革命的) 실천(實踐)」에 의하여 종교적(宗敎的) 기구(祈求)를 대체시켜서 유대인(猶太人)의 비참(悲慘)한 운명(運命)을 개척(開拓)하자는 것이 「마르크스」주의(主義) 근본적(根本的) 동기(動機)이다.

특히 독일(獨逸)에서 추방(追放) 당한 「마르크스」는 무국적자(無國籍者)로 구주(歐洲)를 유랑(流浪)하다 영국(英國)에 정착(定着)하였으나 빈곤(貧困)과 병마(病魔)는 일생(一生)동안 그를 고통(苦痛)케 하였다. 더구나 「엔겔스」(Engels : 1820~1895)의 우정(友情)어린 경제적(經濟的) 지원(支援)이 있었으나 「마르크스」는 3명(名)의 자식(子息)을 빈곤(貧困)으로 잃게 되어 그가 자본주의사회(資本主義社會)에 대해 가진 원한(怨恨)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러한 배경(背景)을 생각할 때 노동자(勞動者)에게는 조국(祖國)이 없다. 국가(國家)와 민족(民族)을 철폐(撤廢)시키기 위해 「전세계(全世界)의 노동자(勞動者)여 단결(團結)하라」<sup>2)</sup>고 외치며 폭력혁명(暴力革命)을 주장(主張)하는 「마르크스」에게 한 가닥의 동정(同情)조차 느끼게 한다.

한 마디로 「마르크스」주의(主義)는 「원한(怨恨)의 철학(哲學)」이며 「복수(復讐)의 절규(絶叫)」인 것이다.

「마르크스」주의(主義)에는 3개(個) 근원(根源)이 있다.

첫째, 철학이론(哲學理論)은 「헤겔」(Friedrich Hegel : 1770~1831) 「변증법(辨證法)」과 「포이에르바흐」(Ludwig Feuerbach : 1804~1872)의 「유물론(唯物論)」에 근거(根據)를 두었고,

둘째, 경제이론(經濟理論)은 「스미스」(Adam Smith : 1723~1790)와 「리카도」(David Ricardo : 1772~1823)의 「노동가치학설(勞動價值學說)」에서 도출(導出)하였으며,

셋째, 정치이론(政治理論)은 불란서(佛蘭西) 사회주의사상(社會主義思想)과 1871년(年) 「파리인민공사(人民公社)」(Paris Commune)<sup>3)</sup>에서 「무산계급독재(無產階級獨裁)」와 「공산주의사회(共產主義社會)」의 형태(形態)를 이룩하게 되었다.

결론적(結論的)으로 「마르크스」주의(主義)는 자신(自身)의 분노(憤怒)와 불만(不滿) 그리고 산업혁명(産業革命)으로 인한 근대자본주의(近代資本主義)의 형성과정(形成過程)에서 발생(發生)되어진 부분적(部分的) 문제성(問題性)과 병폐(弊弊)를 전반적(全般的) 현상(現象)으로 규정(規定)하고 이러한 제반(諸般) 문제점(問題點)을 해결(解決)하기 위하여서는 오직 폭력혁명방법(暴力革命方法) 이외(以外)에는 없다는 편견(偏見)에서 기인(起因)되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主義)는 자본가(資本家)와 노동자(勞動者)의 계급대립(階級對立)에만 초점(焦點)을 맞추고 혁명(革命)의 수단(手段)으로 이론(理論)을 전개(展開)시킴으로써 필연적(必然的)인 모순성(矛盾性)과 편협성(偏狹性)을 동시(同時)에 내포(內包)하게 되었다.

## 2. 「마르크스」주의(主義)의 이론구조(理論構造)

「마르크스」주의(主義)의 어원(語源)을 살펴보면 「라틴」어(語)에서 유래(由來)한다. 즉, 공유재산(共有財産)을 의미(意味)하는, 「콤뮈네」(Commune)와 공동사회(共同社會)라는 뜻의 「코뮤니스」(Communis)에서 합성(合成)되어 「공산주의(共產主義)」(Communism)가 되었으며 이 말을 최초(最初)로 사용(使用)한 것은 1830년대(年代) 불란서(佛蘭西) 혁명단체(革命團體)들이었다. 그 후에 「마르크스」가 이론적(理論的) 체계(體系)를 확립(確立)함으로써 공산주의(共產主義)를 「마르크스」주의(主義)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共產主義)를 철학(哲學), 경제(經濟), 정치적(政治的) 측면(側面)에서 잡다(雜多)한 이론(理論)을 전개(展開)하고 있으나 그 핵심적(核心的) 내용(內容)은 바로 폭력혁명(暴力革命)을 합리화(合理化)하는데 초점(焦點)을 두고 있음을 명백(明白)히 알 수 있으며, 「이론적(理論的)으로 대중(大衆)을 장악(掌握)하지 않고서는 혁명(革命)을 성공(成功)시킬 수 없다」<sup>4)</sup>라는 「마르크스」 자신(自身)의 말이 더욱 분명(分明)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면 「마르크스」주의(主義) 이론(理論)의 주요내용(主要內容)을 간략(簡略)하게 검토(檢

討)해 보기로 한다.

### (1) 공산주의(共産主義) 철학이론(哲學理論)

철학(哲學)은 모든 사물(事物)의 본질(本質)과 원리(原理)를 추구(追求)하는 인간중심(人間中心)의 학문(學問)이며 보다 차원(次元) 높은 인생(人生)의 의미(意味)를 탐구(探究)하려는 반성(反省)의 학문(學問)이다.

그러나 공산주의(共産主義) 철학(哲學)은 그들의 근본목적(根本目的)인 공산혁명(共産革命)을 달성(達成)하기 위한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를 찾는데 있으며, 계급투쟁(階級鬭爭)의 타당성(妥當性)을 연구(研究)하는데 있는 것이다.

#### 「변증유물론(辨證唯物論)」

유물론(唯物論)은 고대(古代) 「그리스」에서 이미 출발(出發)한 사상(思想)이었다. 「탈레스」(Thales : B.C. 640~550)는 우주(宇宙)의 근본(根本)은 「물」이라고 주장(主張)하였으나 그의 관점(觀點)은 물질자체(物質自體)가 생명력(生命力)이 있다는 「물화론(物話論)」이었다. 그 후에도 「아낙시메네스」(Anaximenes : B. C. 588~524)는 「공기(空氣)」라고 하였고 또한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 : B. C. 535~475)는 「불」이라 하여 「불」이 열(熱)을 소실(消失)하면 「물」이 되고 반대(反對)로 열(熱)을 얻으면 불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고대유물론(古代唯物論)의 완성자(完成者)는 「데모크리토스」(Demokritos : B. C. 460~371)이다. 그는 우주(宇宙)의 근원(根源)은 「원자(原子)」(Atom)로 불가분(不可分)의 성질(性質)이며 불생불멸(不生不滅)한다고 주장(主張)하고 만물(萬物)의 생성(生成)과 소멸(消滅)과 소멸(消滅)은 이 원자(原子)의 결합(結合)과 이산(離散)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같은 「그리스」의 유물론(唯物論)은 만물(萬物)의 근원(根源)을 물질(物質)로 보기는 했으나 그 물질자체(物質自體)가 정신(精神)이 있다는 것을 인정(認定)함으로써 「마르크스」 유물론(唯物論)과 구별(區別)된다. 「앵겔스」는 「자연변증법(自然辨證法)」에서 「고대유물론(古代唯物論)은 완전(完全)히 원시적(原始的), 자생적(自生的) 유물사상(唯物思想)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批判)하였다.

유물사상(唯物思想)은 중세기(中世紀)의 종교암흑시기(宗教暗黒時期)를 거쳐 「르네상스」와 함께 서서히 회복(回復)되기 시작(始作)했다. 그 후 영국(英國)의 경험론철학(經驗論哲學)을 거쳐 불란서(佛蘭西)에서 기계유물론(機械唯物論)이 탄생(誕生)하게 되었다. 불란서(佛蘭西)의 유물론(唯物論)은 「세계(世界)는 물질(物質)과 운동(運動)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러므로 「자연(自然)은 엄밀(嚴密)한 기계적(機械的) 법칙(法則)에 지배(支配)되고 인간(人間)도 물질(物質)의 법칙(法則)에 지배(支配)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人間)에게는 자유의사(自由意思)가 없다」고 주장(主張)하는 유물론(唯物論)으로 대표적(代表的) 사상가(思想家)는 「라·메트리」

(La Mettrie : 1709~1751)와 「홀바하」(Dietrich HoIbach : 1723~1789)이다.

근대(近代)에 이르러서 「마르크스」 유물론(唯物論)에 가장 영향력(影響力)을 끼친 사람은 독일(獨逸)의 「포이어바하」이다. 그는 「인간(人間)은 자연(自然)의 산물(產物)이며, 신(神)은 인간자신(人間自身)의 환상적(幻想的) 반영(反映)」5)이다 라고 하면서 정신(精神)을 물질(物質)의 소산(所産)임을 강조(強調)하였다. 그러나 그의 유물론(唯物論)은 감성적(感性的) 유물론(唯物論)이었기 때문에 「마르크스」로부터 「하부(下部)는 유물론(唯物論)이고 상부(上部)는 관념론자(觀念論者)」(6)이라는 비난(非難)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인간생활(人間生活)이나 사회발전(社會發展)에 있어서 물질적(物質的) 조건(條件)이 토대(土臺)가 되고 정치(政治)·법률(法律)·종교(宗教) 등의 관념형태(觀念形態)는 물질적(物質的) 토대(土臺)의 산물(產物)로 보았다는 점(點)이 「마르크스」에게 지대(至大)한 영향(影響)을 끼친 것이다.

「마르크스」 유물론(唯物論)의 기본관점(基本觀點)은 「물질(物質)이 제일성적(第一性的) 현상(現象)이고 의식(意識), 정신(精神)은 제이성적(第二性的)이며 파생적(派生的) 현상(現象)」이란 것이다. 즉, 자연계(自然界)의 존재(存在)는 인간(人間)의 의식(意識) 외에 객관적(客觀的)으로 존재(存在)하는 현실(現實)이라는 것이다. 의식문제(意識問題)에 있어서도 의식(意識)이 존재(存在)를 결정(決定)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物質)이 정신(精神)을 결정(決定)하며 의식(意識)은 물질(物質)이 뇌(腦)에 반영(反映)된 존재적(存在的) 산물(產物)이라고 주장(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 유물론(唯物論)이 가진 모순(矛盾)은 종래(從來)의 물질개념(物質概念)인 「질량불변(質量不變)의 법칙(法則)」에 의하여 근원(根源)을 가지고 있었으나 과학(科學)이 발달(發達)된 오늘날에 와서는 물질(物質)의 속성(屬性)은 물질입자(物質粒子)가 100% Energy화(化) 하기도 하고 또 Energy가 100% 물질입자화(物質粒子化) 하기도 한다는 사실(事實)이 증명(證明)되어 물질성(物質性)을 전제(前提)로 한 「마르크스」 유물론(唯物論)은 현대과학(現代科學)에 의하여 완전(完全)히 붕괴(崩壞)되고 말았다. 즉, 태양(太陽)의 입자설(粒子說)과 파동설(波動說)로 논란(論難)이 되고 있던 이론(理論)이 1929년(年)에 독일(獨逸) 물리학자(物理學者)인 「하이젠베르크」(Heisenberg : 1901~1978)에 의하여 물질(物質)이나 복사(輻射)가 서로 이중성질(二重性質)을 가지고 있어서 입자(粒子)의 성질(性質)을 나타내기도 하고 파동(波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으로 파(波)·입자(粒子)라는 단일실체(單一實體)로서의 Energy임을 증명(證明)하게 된 것이다. 「아인슈타인」(Einstein : 1879~1955)도 물질(物質)은 Energy가 응축(凝縮)된 것으로 Energy는 무형태적(無形態的) 존재(存在)라고 하여 물질(物質)의 실체성(實體性)을 파괴(破壞)시켜 버렸던 것이다.

의식문제(意識問題)에 있어서도 「피영설(皮映說)」7)을 주장(主張)하고 있으나, 그것도 완전(完全)히 모순이론(矛盾理論)임을 알 수 있다. 즉, 외부세계(外部世界)가 거울처럼 뇌(腦)에 반사(反射)된 것이라고 하지만, 자동차(自動車)나 비행기(飛行機) 등의 물체(物體)가 존재(存

在)하지도 않던 것이 어떻게 과학자(科學者)나 발명가(發明家)의 뇌(腦)에만 반사(反射)되어 현실(現實)로 나타났다는 것인가?

한 마디로 변증유물론(辨證唯物論)은 인간정신(人間精神)의 창조성(創造性)을 완전(完全)히 무시(無視)한 독단론(獨斷論)이며, 모순적(矛盾的)임을 분명(分明)히 알 수 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변증유물론(辨證唯物論)에는 「마르크스」가 노동자(勞動者)를 현혹(眩惑)시켜 공산혁명(共產革命)에 끌어 들이기 위한 날조(捏造)된 이론(理論)인 것이다.

### 「유물변증법(唯物辨證法)」

변증법(辨證法)이라는 말은 「라틴」어(語)의 「디알렉티케」(Dialektike)에서 유래(由來)된 것으로 「대화술(對話術)」을 뜻한다. 이는 고대(古代) 희랍철학자(希臘哲學者)들이 반대의견(反對意見)을 대화(對話)를 통(通)하여 일치(一致)시키려는 방법(方法)에서 기인(起因)된 것을 독일철학자(獨逸哲學家)인 「헤겔」에 의하여 체계화(體系化)된 것이다.

「헤겔」의 변증법(辨證法)은 우주만물(宇宙萬物)은 항상변화(恒常變化)하고 있다는 전제(前提) 아래 역사발전(歷史發展)은 「절대이념(絕對理念)」 또는 「우주정신(宇宙精神)」의 구현(俱現)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그 발전과정(發展過程)은 제일개(第一個) 개념(概念)인 긍정일(肯定一) 「정(正)」(Thesis)이 있으면 동시(同時)에 「정(正)」개념(概念)을 부정(否定)하는 제이개(第二個) 개념(概念)인 부정일(否定一) 「반(反)」(Anti-Thesis)이 발생(發生)되며 이 두 개념(概念)이 상호(相互) 모순대립(矛盾對立)의 절차(節次)를 통하여 보다 한 단계(段階) 높은 제삼개(第三個) 개념(概念)인 통일(統一) 「합(合)」(Synthesis)이 발생(發生)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복과정(反復過程)을 거쳐 인간(人間)의 사상(思想)이나 역사(歷史)는 부단(不斷)하게 상향발전(上向發展)을 거듭하여 「절대이념(絕對理念)」(Absolute Idea)에 도달(到達)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변증법(辨證法)의 목표(目標)를 절대이념(絕對理念)에 두고 있는 「헤겔」을 관념론자(觀念論者)라고 하고 그의 변증법(辨證法)을 관념변증법(觀念辨證法)이라고 하고 도립(倒立)된 이론(理論)이라고 비판(批判)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헤겔」변증법(辨證法)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공산혁명(共產革命)의 필연성(必然性)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엥겔스」의 말을 통하여 「헤겔」변증법(辨證法)이 「마르크스」변증법(辨證法)에 지대(至大)한 영향(影響)을 끼친 사실(事實)을 알 수 있다.

「마르크스」유물변증법(唯物辨證法)은 물질(物質)의 제일차성(第一次性)을 기초(基調)로 하여 「헤겔」의 관념적(觀念的) 변증법(辨證法)을 완전(完全)히 거꾸로 해석(解釋)하였고 「헤겔」의 3대법칙(大法則)을 사회현상(社會現象)에 적용(適用)하여 공산혁명(共產革命)의 타당성(妥當性)을 도출(導出)시키고자 함으로써 본래(本來)의 변증법내용(辨證法內容)과는 완전(完全)히 왜곡(歪曲)되고 있는 것이다.

#### ① 모순(矛盾)·대립통일(對立統一)의 법칙(法則)

물질(物質)은 원래(元來)부터 모순(矛盾)을 내포(內包)한 것으로부터 출발(出發)하여 그 모순(矛盾)이 상대적(相對的)으로 투쟁(鬪爭)이란 대립성(對立性)을 띠고 있어 끊임없는 내적(內的) 투쟁(鬪爭)으로 인(因)하여 운동(運動)하고 발전(發展)되서 이 투쟁(鬪爭)은 영원(永遠)하고 절대적(絕對的)인데 반(反)하여 통일(統一)은 조건적(條件的), 상대적(相對的)이라고 했다. 「마르크스」는 이 법칙(法則)을 사회현상(社會現象)에 도입(導入)하여 무산자(無產者)와 유산자(有產者)는 서로 이해관계(理解關係)에 의한 대립(對立)이 날로 커져 급기야는 불만(不滿)이 폭발되어 혁명(革命)에 이른다는 논리(論理)로서 자본주의(資本主義) 사회(社會)는 필망(必亡)하고 공산주의사회(共產主義社會)가 건설(建設)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역사(人類歷史)는 계급투쟁(階級鬪爭)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 아니고 협조(協助)와 조화(調和)에 의하여 찬란한 문화(文化)가 발전(發展)되었고 현대(現代) 선진공업국가(先進工業國家)에서 공산혁명(共產革命)이 발생(發生)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노사간(勞使間)의 긴밀한 협력(協力)으로 부흥(復興)된 산업국가(產業國家)를 이루고 있다. 더구나 공산혁명(共產革命)은 근대(近代) 자본주의(資本主義) 사회(社會)에서 발생(發生)된 계급투쟁(階級鬪爭)이 아니고 선진국가(先進國家)에서 정변형태(政變形態)를 거쳐 공산화(共產化)된 사실(事實)만을 보더라도 「마르크스」주의(主義)의 허구성(虛構性)을 쉽게 알 수가 있다.

#### ② 질량호변(質量互變)의 법칙(法則)

물질내(物質內)의 모순(矛盾)과 대립(對立)이 점차적(漸次的)으로 증가(增加)하여 어느 한 계점(限界點)에 이르면 비약적(飛躍的) 발전(發展)을 하여 구질(舊質)과는 근본적(根本的)으로 다른 신질(新質)으로의 전화(轉化)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例)로서 물에 열(熱)을 가(加)하면 수증기(水蒸氣)가 되고 이것을 다시 냉각(冷却)시키면 물로, 다시 얼음으로 변화(變化)한다는 자연현상(自然現象)을 변증법(辨證法)에 적용(適用)하고 있다.

그러나 물이 아무리 변(變)하더라도 그것은 현상적(現象的) 변화(變化)이지 결코 물이란 질자체(質自體)가 변(變)한 것이 아님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으로 이는 「마르크스」의 궤변(詭辯)이다.

특히 물리적(物理的) 현상(現象)을 인간사회(人間社會)에 기계적(機械的)으로 적용(適用)하여 액체(液體)가 기체(氣體)로 돌변(突變)하듯이 혁명(革命)이 필연적(必然的)으로 발생(發生)한다는 주장(主張)은 점진적(漸進的) 사회발전(社會發展)을 도외시(度外視)하고 오직 공산혁명(共產革命)을 합리화(合理化)하기에 혈안(血眼)이 된 「마르크스」가 저지른 극단적(極斷的) 오류(誤謬)인 것이다.

#### ③ 부정(否定)의 부정(否定) 법칙(法則)

이 법칙(法則)은 공산사회(共產社會)의 도래(到來)를 설명(說明)하는 것으로 모순(矛盾)·대립(對立)·투쟁(鬪爭)을 기초(基礎)하여 부정(否定)의 부정(否定)을 거듭함으로써 이전(以前)까지의 모든 발전단계(發展段階)에서의 단점(短點)을 모두 버리고 보다 높은 가치(價値)와 장점(長點)을 점취(占取)·종합(綜合)·개작(改作)하여 전체(全體)로서의 발전(發展)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단순(單純)한 것에서 복잡(複雜)한 것으로 진보(進歩)·발전(發展)·향상(向上)한다는 법칙(法則)을 말한다.

이러한 예(例)로서 「엔겔스」는 보리알의 부정(否定)이 보리밭이며, 보리밭이 결실(結實)을 맺고 말라 죽는 보리짚은 보리밭의 부정(否定)인 것이라고 설명(說明)하면서 이러한 부정(否定)의 결과(結果)로서 최초(最初)의 보리알은 10배(倍) 20배(倍) 30배(倍)의 보리알을 얻는다고 주장(主張)한다.

그러나 이 예시(例示)도 역시 보리알이 양적증가(量的增加)는 가져왔으나 보리알 자체(自體)의 변화(變化)는 없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인류(人類) 역사발전(歷史發展)을 이러한 논리(論理)에 적용(適用)하여 공산주의사회(共產主義社會)가 필연적(必然的)으로 도래(到來)한다는 것을 인위적(人爲的)으로 조작(造作)한 모순이론(矛盾理論)인 것이다.

### 「유물사관(唯物史觀)」—역사유물론(歷史唯物論)

「마르크스」는 유물론(唯物論)과 변증법(辯證法)을 인류(人類) 역사발전(歷史發展)과 사회현상(社會現象)에 적용(適用)하여 공산혁명(共產革命)을 합리화(合理化)시킨 이론(理論)으로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역사철학(歷史哲學)이며 이를 「유물사관(唯物史觀)」 또는 「역사유물론(歷史唯物論)」(Historical Materialism)이라고 한다.

「마르크스」가 「유물사관(唯物史觀)」에 주장(主張)하고 있는 주요(主要)한 논점(論點)은 :

① 사회(社會) 경제(經濟) 및 생산방식(生産方式)은 사회적(社會的) 물질기초(物質基礎)인 하부구조(下部構造)이며, 정치(政治)·법률(法律)·도덕(道德)·종교(宗教) 등은 이념형태(理念形態)로 상부구조(上部構造)이기 때문에 경제(經濟) 및 생산방식(生産方式)이 변(變)하면 이에 따라 상부구조(上部構造)가 개변(改變)되고,

② 인간(人間)은 계급적(階級的) 동물(動物)이기 때문에 계급지위(階級地位)와 환경(環境)이 인간(人間)의 사상(思想)의식(思想意識)을 결정(決定)시키며,

③ 사회내부(社會內部) 모순(矛盾)은 생산방식(生産方式)과 재산관계(財産關係)의 모순(矛盾)에서 발생(發生)되므로, 어떤 사회(社會)라도 반드시 계급(階級)간의 투쟁(鬭爭)이 존재하며 인류역사(人類歷史)는 바로 계급투쟁사(階級鬭爭史)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계급투쟁(階級鬭爭)이 역사발전(歷史發展)과 변화(變化)를 촉진(促進)시킨다는 것이다.

경제구조(經濟構造)가 정치(政治)·법률(法律) 등 상부구조(上部構造)를 변화(變化)시킨다는 주장(主張)에는 타당성(妥當性)이 있으나 경제(經濟) 및 생산방식(生産方式)을 변화(變化)시키는 것이 생산도구(生産道具)의 개발(開發)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도구(生産道具)는 물질자체(物質自體)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인간(人間)의 정신(精神)에서 창조(創造)되어진다는 진실(眞實)을 왜곡(歪曲)한 논리(論理)가 「마르크스」가 저지른 치명적(致命的) 오류(誤謬)인 것이다.

계급투쟁(階級鬭爭)의 관점(觀點)에 있어서도 인류사회내부(人類社會內部)에는 계급(階級)

간의 갈등(葛藤)이 전연(全然) 없는 것이 아니지만, 「마르크스」의 주장(主張)처럼 투쟁(鬭爭)과 혁명(革命)으로 역사(歷史)가 변거(變遷)한 것이 아니고 계급(階級)간의 상호(相互) 협력(協力)으로 찬란한 문화(文化)가 이룩되고 역사(歷史)는 발전(發展)되어 왔던 것이다.

요컨대 「마르크스」는 근대(近代) 자본주의사회(資本主義社會)의 일부(一部) 모순(矛盾)과 병폐(病弊)를 인류역사(人類歷史) 전반(全般)에 적용(適用)하여 이같은 모순이론(矛盾理論)을 철학(哲學)이라 내놓은 것은 어디까지나 「마르크스」 자신(自身)이 철학자(哲學者)이기보다는 혁명가(革命家)로서 공산혁명(共產革命)을 합리화(合理化)시키기 위해 조작(造作)한 이론(理論)임이 분명(分明)한 것이다.

### (2) 경제이론(經濟理論) 구성내용(構成內容)

「마르크스」 철학이론(哲學理論)은 대중(大衆)의 이성(理性)에 호소(呼訴)하여 공산혁명(共產革命)의 필연성(必然性)을 정착(定着)시키려는데 반(反)하여 경제이론(經濟理論)은 노동자(勞働者)들의 감정(感情)을 자극(刺戟)시켜 폭력혁명(暴力革命)을 유발(誘發)시키려는 행동이론(行動理論)인 것이다.

「마르크스」 경제이론(經濟理論)의 주요내용(主要內容)은 노동가치설(勞動價値說)에 입각한 「잉여가치설(剩餘價値說)」과 「자본주의(資本主義) 몰락론(沒落論)」이다.

#### 「노동가치설(勞動價値說)」

노동가치설(勞動價値說)은 영국(英國) 고전정치학자(古典政治學者)인 「로크」(John Locke~1632~1704)와 고전경제학자(古典經濟學者)인 「스미스」(Adam Smith : 1723~1790)의 이론(理論)을 「리카도」(David Ricardo : 1772~1823)가 체계화(體系化)하며 주장(主張)한 「상품가치(商品價値)는 노동(勞働)의 투입량(投入量)에 따라 결정(決定)된다」는 이론(理論)을 「마르크스」가 인용(引用)한 이론(理論)으로서 「노동(勞働)은 상품가치(商品價値)의 실질(實質)이며 가치측정(價値測定)의 척도(尺度)」라고 했다. 즉, 상품(商品)의 교환가치(交換價値)는 상품생산(商品生産)에 소비(消費)되어진 노동량(勞働量)의 대소(大小)에 따라 결정(決定)된다는 것이다. 또한 「마르크스」는 노동(勞働)을 구체노동(具體勞働)과 추상노동(抽象勞働)으로 구분(區分)하여 교환가치(交換價値)는 추상노동(抽象勞働)만이 창조(創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상품(商品)의 가치(價値)는 사람의 기호(嗜好)에 따라 증감(增減)하며 수요(需要)와 공급(供給)에 의하여 가치(價値)가 변동(變動)되는 것이다. 특히 전연 인간(人間)의 노동(勞働)이 소요(所要)되지 않는 천연자원(天然資源), 유전(油田), 토지(土地) 등도 수요(需要)의 대소(大小)에 따라 엄청난 가치(價値)를 창조(創造)하고 있는 것이다.

### 「잉여가치설(剩餘價値說)」

「마르크스」는 노동(勞動)만이 또한 잉여가치(剩餘價値)(이윤(利潤))를 창조(創造)해 낸다는 억지 이론(理論)을 전개(展開)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본가(資本家)는 노동자(勞動者)가 생산(生産)하는 이러한 잉여가치(剩餘價値)를 되돌려 주지 않고 독점소유(獨占所有)(착취(搾取))함으로써 자본주의사회(資本主義社會)는 날로 빈부(貧富)의 차이(差異)가 커지므로 해서 노동자(勞動者)의 불평불만(不平不滿)이 폭발하여 공산혁명(共產革命)이 필연적(必然的)으로 발생(發生)되어진다는 것이 잉여가치설(剩餘價値說)의 핵심내용(核心內容)이다.

그러나 잉여가치(剩餘價値)는 노동(勞動)·자본(資本)과 자원(資源)의 3요소(要素)에 의해서 이룩되는 것인데도 「마르크스」는 자본(資本)과 자원요소(資源要素)를 고의적(故意的)으로 말살(抹殺)시키고 오직 노동(勞動)만이 잉여가치(剩餘價値)를 창조(創造)한다고 주장(主張)하는 저의(底意)는 바로 노동자(勞動者)로 하여금 자본가(資本家)에게 반기(反旗)를 들고 「마르크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술책(術策)임이 분명(分明)한 것이다.

요컨대 기계문명(機械文明)이 발달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노동자(勞動者)가 기계(機械)를 착취(搾取)(?) 하는 현상(現象)에 이르렀다. 즉, 노동자(勞動者)가 잉여가치(剩餘價値)를 창조(創造)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자체(機械自體)가 이윤(利潤)을 생산(生産)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 「자본주의(資本主義) 몰락론(沒落論)」

「마르크스」는 이상과 같은 모순이론(矛盾理論)을 자본주의사회(資本主義社會)에 도입(導入)함으로써 자본가(資本家)와 노동자(勞動者)는 필연적(必然的) 계급투쟁(階級鬭爭)을 일으키고 종국적(終局的)으로 폭력혁명(暴力革命)이 발생하여 자본주의사회(資本主義社會)는 멸망(滅亡)하고 공산주의사회(共產主義社會)가 도래(到來)한다는 것이 「자본주의(資本主義) 몰락론(沒落論)」의 골자(骨子)이다. 이러한 이론(理論)의 타당성(妥當性)을 내세우는 근거(根據)로서 : ① 자본축적(資本蓄積)의 법칙(法則), ② 자본집중(資本集中)의 법칙(法則), ③ 빈곤증대(貧困增大)의 법칙(法則) 등 4가지를 들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희망(希望)대로 자본주의사회(資本主義社會)가 멸망(滅亡)하기는 커녕 오히려 발전(發展)을 거듭하여 「요람(搖籃)에서 무덤까지」 참다운 인간생활(人間生活)을 보장(保障)받는 복지사회(福祉社會)로 발달(發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공산주의사회(共產主義社會)는 그들의 기대(期待)와는 반대로 생산성(生産性)이 날로 감소(減少)하여 인민(人民)의 생활(生活)은 궁핍(窮乏)해지며 공산독재(共產獨裁)에 의한 새로운 지배계급(支配階級)의 대두(擡頭)로 인하여 이전(以前)의 자본주의사회(資本主義社會) 이상으로 모순(矛盾)과 병폐(病弊)가 발생(發生)하고 있다.

결론적(結論的)으로 자본주의사회(資本主義社會)가 점진적(漸進的) 발전(發展)을 하게 된

동기(動機)는, ① 혼합경제실시(混合經濟實施), ② 자본(資本)의 대중화(大眾化), ③ 소유(所有)와 경영(經營)의 분리(分離), ④ 각종(各種) 노동조건(勞動條件) 개선(改善), ⑤ 기술혁신(技術革新), ⑥ 중산층(中産層)의 확대(擴大) 등이라 할 수 있다.

### (3) 「마르크스」의 정치이론(政治理論)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사회(共產主義社會)를 달성(達成)하기 위하여 주장(主張)하는 정치이론(政治理論)으로 세 가지를 제시(提示)하였는데 :

① 국가(國家)는 계급투쟁(階級鬭爭)의 산물(產物)이며 지배계급(支配階級)이 피지배계급(被支配階級)을 압박(壓迫)하기 위한 도구(道具)에 불과하다고 주장(主張)하는 정치방법론(政治方法論)으로서 「계급투쟁론(階級鬭爭論)」이 있고,

② 독재체제(獨裁體制)는 공산주의사회(共產主義社會)를 성취(成就)하기 위하여 필연적(必然的)으로 거쳐야 하는 정치적(政治的) 과도형태(過渡形態)로서 「무산계급독재론(無産階級獨裁論)」이 있으며,

③ 정치이념(政治理念)으로서 소위(所謂) 「능력(能力)에 따라 일하고, 필요(必要)에 따라 향유(享有)한다」 8)는 공산주의론(共產主義論)이 있다.

### 「계급투쟁론(階級鬭爭論)」

「마르크스」는 원시공산사회(原始共產社會)가 무너지고 인류(人類)가 재산사유제(財産私有制)를 실시(實施)하므로 해서 계급(階級)이 구성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단(不斷)한 계급투쟁(階級鬭爭)에 의하여 역사(歷史)가 발전(發展)되어 왔기 때문에 인류사(人類史)는 곧 계급투쟁사(階級鬭爭史)라 규정(規定)짓고 국가(國家)는 지배계급(支配階級)이 피지배계급(被支配階級)을 압박(壓迫)하는 공구(工具)라고 했다. 이러한 계급투쟁(階級鬭爭)은 자본주의사회(資本主義社會)에 이르러 유산자(有産者)와 무산자(無産者)의 대립(對立)으로 격화(激化)되어 무산자(無産者)에게는 국가(國家)도 민족(民族)도 없으니 폭력(暴力)으로 이를 타도(打倒)하고 공산주의사회(共產主義社會)를 건설(建設)함으로써 계급투쟁(階級鬭爭)은 소멸(消滅)되고 안정(安定)된 노동자(勞動者)의 조국(祖國)(공산주의국가(共產主義國家))이 탄생(誕生)된다는 것이 핵심적(核心的) 내용(內容)이다.

그러나 인류사회(人類社會)는 계급(階級)(Class)으로 구성(構成)된 것이 아니고 씨족(氏族)(Clan)과 종족(種族)(Gens)인 생물적(生物的) 인소(因素)로 인하여 가정(家庭)과 민족(民族)으로 구성(構成)되었으며, 특히 문화적(文化的) 인소(因素)로 인한 각종 사회집단(社會集團)과 사회계층(社會階層)(Social Stratifications)이 형성(形成)되어 있기 때문에 계급(階級)이란 사회문화인소(社會文化因素)의 일부(一部) 현상(現象)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勿論) 역사(歷史) 속에서 계급투쟁(階級鬭爭)은 존재(存在)한 것이 사실(事實)이나 「마

르크스」의 주장(主張)대로 투쟁(鬪爭)에 의하여 역사적(歷史的) 변천(變遷)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계급(階級) 간의 협력(協力)으로 인류문화(人類文化)는 발전되었다. 특히 현대사회(現代社會)는 계급(階級)은 어디까지나 유동적(流動的)인 것으로 노동자(勞動者)도 자본가(資本家)로 될 수 있고 자본가(資本家)도 노동자(勞動者)로 전락(轉落)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평등(平等)한 선거제도(選舉制度), 노동법제정(勞動法制定) 등으로 모든 사회모순(社會矛盾)을 스스로 개선(改善)한 민주정치(民主政治)의 결과(結果)라 할 수 있다.

요(要)컨대 격동기(激動期)의 일부(一部) 사회현상(社會現象)을 인류역사(人類歷史) 전체(全體)에 억지 적용(適用)시킨 「마르크스」의 독단론(獨斷論)임은 언급(言及)할 필요(必要)조차 없다.

### 「무산계급독재론(無產階級獨裁論)」

「마르크스」가 폭력혁명(暴力革命)에 의하여 수립(樹立)된 공산정권(共產政權)을 유지(維持)하기 위하여서는 무자비한 「무산계급독재(無產階級獨裁)」(Proletarian Dictatorship)를 실시(實施)해야 한다고 주장(主張)하고 이러한 독재(獨裁)를 수행(遂行)해야 하는 이유(理由)로서:

① 자산계급(資產階級)의 재생(再生)과 復讐(복수)를 근절(根絶)하고, ② 사유재산(私有財産)의 공유화(共有化)에 의한 반항(反抗)을 진압(鎮壓)하며 ③ 완전(完全)한 공산사회(共產社會)에 이르는 과도기적(過渡期的) 무산계급국가(無產階級國家) 수립(樹立)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무산계급(無產階級)」(Proletariat)은 통치경험(統治經驗)이 전무(全無)한 데 비하여 자산계급(資產階級)은 오랜 통치경험(統治經驗)이 있기 때문에 정권유지(政權維持)에 불안(不安)하고 또한 자산계급(資產階級)은 비록 패배(敗北)하고 재산(財産)을 수탈(收奪)당하기는 했어도 다소(多少)의 경제능력(經濟能力)과 국외세력(國外勢力)과의 연대관계(連帶關係)로 인하여 재생(再生)할 가능성(可能性)이 크다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무산계급독재(無產階級獨裁)를 실시(實施)해야 한다는 이론(理論)의 골자(骨子)이다.

그러나 무산계급독재(無產階級獨裁)란 어디까지나 노동계급(勞動階級)이 새로운 지배계급(支配階級)으로서 「자산계급(資產階級)」(Bourgeoisie)에 대한 독재(獨裁)를 말하는데, 오늘날 공산주의국가(共產主義國家)에서는 이미 자본가(資本家)들이 존재(存在)하지 않는데도 무엇 때문에 독재정치(獨裁政治)를 시행(施行)하고 있는가?

그것은 말할 필요(必要)도 없이 무산계급(無產階級)에 대한 독재(獨裁)를 자행(恣行)함으로써 스스로 모순(矛盾)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독재(獨裁)는 공산사회(共產社會)가 완전히 달성(達成)될 때까지 과도적(過渡的)으로 실시(實施)한다고 하면서도 지구상(地球上)에 공산정권(共產政權)이 나타나지 반세기(半世紀)가 훨씬 지났는데도 여전히 독재정치(獨裁政治)를 실시하고 있는 저의(底意)는 100년(年)이나 200년(年)도 일시적(一時的) 과도기(過渡期)라고 주장(主張)하는 공산주의식(共產主義式) 언어마술(言語魔術)이다.

더구나 오늘날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은 이러한 자체모순(自體矛盾)의 돌파구(突破口)를 찾기 위하여 무산계급독재(無產階級獨裁)는 지구상(地球上)에 자본주의국가(資本主義國家)가 존속(存續)하는 날까지 계속된다고 주장(主張)하게 됨으로써 과도기(過渡期)라는 개념(概念)을 영구화(永久化)시키고 있다.

요컨대 어떤 사회(社會)가 되든 어떤 계급(階級)이 탄생(誕生)하든지 간에 인간(人間)의 근본욕구(根本欲求)인 사적(私的) 소유욕(所有欲)을 근절(根絶)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무산계급(無產階級) 독재론(獨裁論)은 공산주의(共產主義)가 최악(最惡)의 전체정치사회(專制政治社會)임을 자인(自認)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 「공산주의론(共產主義論)」

공산주의(共產主義)의 근본(根本)이 되는 사상(思想)은 인류사회(人類社會)의 모든 불행(不幸)과 불의(不義)가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에 있으니 이것을 철폐(撤廢)하면 자유(自由)와 행복(幸福)이 보장(保障)되는 지상낙원(地上樂園)이 이룩된다는 지극히 소박(素朴)한 생각에서 시작(始作)된 것으로 사회주의(社會主義)라는 말보다는 그 연원(淵源)이 길다. 희랍시대(希臘時代)의 「플라토」(Plato : B. C. 427 : 347?)의 「이상국(理想國)」(Republic)에서 출발(出發)하여 중세(中世) 기독교공산주의(基督教共產主義)를 거쳐 근세(近世)의 「토마스·모어」(Thomas More : 1478~1535)의 「이상향(理想郷)」(Utopia), 「감파넬라」(Thomas Campanella : 1568~1639)의 「태양(太陽)의 도시(都市)」(Civitas Solis)로 이어지는데 모두가 사유재산(私有財産) 철폐(撤廢)를 주장(主張)하였다.

그러나 현대적(現代的) 의미(意味)의 공산주의(共產主義) 사상(思想)은 19세기(世紀)에 이르러 나타났는데, 불란서(佛蘭西)의 「상시몽」(St. Simon : 1675~1755) 「푸리에」(F. M. C. Fourier : 1772~1837), 영국(英國)의 「오웬」(Rebert Owen : 1771~1858)으로서 이들은 근대사회주의(近代社會主義)의 비조(鼻祖)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주의자(社會主義者)들의 사상(思想)은 당시 「사회개조론(社會改造論)」으로 세상에 알려졌고, 「마르크스」와 「엔겔스」에 의하여 이들은 「공상적(空想的) 사회주의자(社會主義者)」라고 불리어졌으며 자신(自身)들의 소위 「과학적(科學的) 사회주의(社會主義)」와 구별(區別)을 하였던 것이다.

「마르크스」와 「엔겔스」가 1840년대(年代)에 그들의 정치조직(政治組織)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사회주의(社會主義)라는 말을 피하여 앞서 밝힌 고전적(古典的) 공산주의(共產主義)와는 전혀 무관(無關)한 공산주의(共產主義)라는 말을 사용(使用)하게 되었다. 「마르크스」는 「공산당선언(共產黨宣言)」(Communist Manifest : 1848)에서 「…… 사회주의(社會主義) (공상적(空想的) 사회주의(社會主義))는 유산계급(有產階級)(Bourgeoisie)의 운동이다」라고 함으로써 명백(明白)히 구분(區分)하였다.



그 후 「마르크스」는 「고타강령비판(綱領批判)」10(1875)에서 공산주의사회(共產主義社會)의 실현(實現)을 위해서는 두 단계(段階)를 거쳐야만 하는데 : ① 기초단계(基礎段階)로서 「능력(能力)에 따라 일하고 일한만큼 소유(所有)한다」11)는 사회주의(社會主義)(Socialism)와 ② 고급단계(高級段階)로서 「능력(能力)에 따라 일하고 필요(必要)에 따라 향유(享有)한다」는 공산주의(共產主義)(Communism)의 단계(段階)로 구별(區別)하였다. 「마르크스」는 최후단계(最後段階)인 공산주의사회(共產主義社會)가 이룩되면 : ① 공동생산(共同生産), 공동소유(共同所有)로 모든 경제적(經濟的) 모순(矛盾)은 소멸(消滅)되고, ② 일체의 계급(階級)이 사라져 계급투쟁(階級鬭爭)이 없으며, ③ 가정(家庭)과 혼인제(婚姻制)가 소멸(消滅)되어 완전(完全)하고 공개적(公開的)인 「공처제도(共妻制度)」가 실시되고, ④ 민족(民族)과 국가(國家)가 역시 소멸(消滅)하며, ⑤ 모든 관념(觀念) 형태(形態)의 차별(差別)이 없이 공산주의(共產主義) 사상(思想)만이 유일(唯一)하게 존재(存在)한다고 주장(主張)하고 있다.

이상(以上)에서 「마르크스」이론(理論)을 종합(綜合)하여 보면 비록 그가 폭력혁명(暴力革命)을 주장(主張)하고 있으나 그가 목표(目標)로 하는 근본이념(根本理念)은 다분히 종교적(宗敎的) 색채(色彩)를 띤 공산주의식(共產主義式) 지상천국(地上天國)을 건설(建設)하려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否認)할 수 없는 사실(事實)이다.

이러한 「마르크스」이론(理論)이 공상적(空想的) 내용(內容)임을 간파(看破)한 「마르크스」이후(以後)의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12)들은 인류(人類)의 자유(自由) 의지(意志)를 무시(無視)한 채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독재정치(獨裁政治)를 실시함으로써 만이 공산정권(共產政權)을 유지(維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해서 「마르크스」이론(理論)의 허구성(虛構性)을 대변(代辯)하고 있다.

결론적(結論的)으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론(共產主義論)은 「러셀」(Bertrand Russell : 1872~1970)이 그의 「서양철학사(西洋哲學史)」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이론(理論)은 허구(虛構)와 모순(矛盾)에 찬 「신신학(新神學)」의 교리(敎理)(Dogma)에 불과(不過)하다면서 「마르크스」와 「기독교(基督教)」(Christianity)를 아래와 같이 비교(比較)하고 있다.

「예수」(Jesus)	— 변증유물론(辨證唯物論)
「메시아」(Messiah)	— 「마르크스」
「선민(選民)」	— 「무산계급(無產階級)」(Proletariat)
「교회(敎會)」	— 「공산당(共產黨)」
「부활(復活)」	— 「폭력혁명(暴力革命)」
「지옥(地獄)」	— 「자산계급(資產階級)에 대한 독재(獨裁)」
「천당(天堂)」	— 「공산주의사회(共產主義社會)」

### 3. 결론(結論)

「마르크스」주의(主義)의 비판(批判)에서 결론(結論)을 내리기 전에 제시(提示)되는 전제조건(前提條件)은 어떤 「주의(主義)」(Ism)가 좋고 나쁘다고 하기 이전(以前)에 인간(人間)이 올바른 이성(理性)의 판단(判斷) 아래 자유의지(自由意志)를 가지고 인간(人間)다운 생활(生活)을 유지(維持)할 수 있는 여건(與件)이 보장(保障)되는 사회(社會)라면 무슨 「주의(主義)」와 「사상(思想)」을 표방(標榜)해도 무관(無關)하다는 것을 과감히 주장(主張)할 수가 있다.

이러한 사회(社會)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사회(自由民主主義社會)임은 두 말할 필요(必要)조차 없는 것이다.

「공심위상(攻心爲上), 공성차지(攻城次之)」라는 손자병법(孫子兵法)의 말처럼, 우리는 인류(人類)의 최대(最大)의 적(敵)인 공산주의(共產主義)를 타도(打倒)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반공사상(反共思想)의 투철(透澈)한 이론적(理論的) 무장(武装)을 하고 공산주의(共產主義)와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勝利)할 것을 확신(確信)하며 나아가서 자유의지(自由意志)에서 발생(發生)하는 자발적(自發的) 용기(勇氣)보다 강(強)한 무기(武器)는 없으며 바로 이러한 무기(武器)는 우리들에게만 존재(存在)하기 때문에 더욱 더 공산주의(共產主義)의 필망(必亡)을 자신(自身)있게 주장(主張)할 수가 있다.

#### <주해(註解)>

- 1) 「공산주의(共產主義)는 무엇인가」, (북경 : 인민출판사(人民出版社), 1978), p. 14.
- 2) 마르크스, 엥겔스, 「공산당선언(共產黨宣言)」, 마르크스, 엥겔스선집(選集), 제(第)1권(卷)(북경(北京) : 인민출판사(人民出版社), 1972), p. 250.
- 3) 나폴레옹 III세가 프로이센군(軍)에 포로가 되자 불란서(佛蘭西) 파리에 설정(設定)되었던 혁명적(革命的) 노동자(勞動者) 정권(政權)(1971. 3. 18~5. 28).
- 4) 마르크스, 「헤겔철학비판(哲學批判)」, 마르크스, 엥겔스 전집(全集), 제(第)1권(卷)(북경(北京) : 인민출판사(人民出版社), 1971), p. 460.
- 5) 「마르크스 주의(主義)의 삼개근원(三個根源)」(북경(北京) : 인민출판사(人民出版社), 1978), P. 64. 포이에르바하, 「기독교(基督教)의 본질(本質)」
- 6) 엥겔스, 「포이에르바하와 독일고전철학(獨逸古典哲學)의 종결(終結)」, 마르크스, 엥겔스선집(選集), 제(第)4권(卷) (북경(北京) : 인민출판사(人民出版社), 1972), p. 237.
- 7) 레닌, 「유물주의(唯物主義)와 경험비판주의(經驗批判主義)」, 레닌전집(全集), 제(第)14권(卷)(북경(北京) : 인민출판사(人民出版社), 1963), p. 116.
- 8) 불란서(佛蘭西) 사회주의자(社會主義者)인 「루이·브랑」(Louis Blanc :

1805~1881)의 말.

9) 「엔겔스」는 공산주의원리(共産主義原理)에서 「무산계급(無産階級)은 19세기(世紀) 도시근로자(都市勤勞者) 계급(階級)을 의미(意味)한다」고 하여 전체(全體) 무산계급(無産階級)을 지칭(指稱)하지 않았다. 공산주의원리(共産主義原理)는 공산당선언(共産黨宣言)을 작성(作成)하기 위한 기초강령(基礎綱領)이다.

10) 「마르크스」가 독일(獨逸) 사회주의자(社會主義者)인 「라살레」파(派)(Lassalian Socialist)를 공격하기 위하여 1875년에 쓴 책.

11) 불란서(佛蘭西) 사회주의자(社會主義者)인 「상·시몽」(Saint Simon : 1760~1825)이 한 말.

12) 「마르크스」의 사후(死後)에 「칼·카우츠키」(Karl Kautsky : 1854~1938)를 중심(中心)으로 한 정통파(正統派)와 「룩셈부르크」(Losa Luxemburg : 1871~1919)와 「레닌」(Nikolai Lenin : 1870~1924)을 정점(頂點)으로 한 극좌파(極左派) 간의 이론적(理論的) 분열(分裂)을 말함. 서독(西獨) 공산주의(共産主義)는 전자(前者)를, 소련 및 아시아 공산주의(共産主義)는 후자(後者)를 계승(繼承)하여 세계공산화(世界共產化)에 대한 목표(目標)는 동일하지만, 그 수행방법(遂行方法)에 있어서 타협(妥協)할 수 없는 이론문제(理論問題)가 존재(存在)해 있다.

명언 명구(名言 名句)

◎ 운명은 우리들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하지 않는다. 다만 그 재료와 종자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줄 뿐이다.

- 몽테뉴 -

◎ 사기(士氣)는 무엇보다도 지휘관(指揮官)에게 달려 있다. 왕성한 사기는 훌륭한 지휘관(指揮官)이 없이는 생겨날 수 없다.

- 몽고메리 -

항공◎군사◎과학

도전(挑戰)

증대(增大)하는 소련(蘇聯)의 위협(威脅)

최재구역(譯)

최근 몇 달 동안에 발생한 사건들은 분명히 미국이 위험한 역사적 분기점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들이다.

1980년대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국제적인 변화와 도전이 계속되는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 세계 1, 2차대전 긴장으로 연속된 냉전, 많은 피를 흘렸던 한국과 월남전 등의 대변혁기를 경험하면서 발전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난무하는 폭력, 혼란 및 위기에 계속적으로 직면해 왔다. 우리는 또 다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이익에 치명적인 분쟁과 고통과 점증하는 직접적인 위협을 보게 되었다.

우리가 직면한 당면과제는 석유가 풍부한 페르시아에서 자유세계의 증대한 이익에 대하여 소련의 위협이 점차 증가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도처에서 서서히 폭발하려는 다른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1980년대는 자유세계가 직면 했던 그 어느 때 보다도 위험한 연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로 그 80년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 위협에 대처하며 우리의 국가적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균형된 군사력, 정치적 및 경제적인 대응 조치가 요구된다. 미국과 소련의 국내정치적인 차이가 극심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차이의 하나는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미국과 소련의 시민들이다. 미국에서는 국가적인 결정들은 시민들로부터 나온다. 소련의 체제는 그러한 결정에 대한 주도권을 시민들로부터 구하거나, 허락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정치적, 외교적 방향을 뒷받침하는 것은 다수의 뜻이요, 시민들의 단합이다.

시민들이 위로부터 통제를 받는 소련에서는 공개된 정치적 경쟁을 식별하기란 불가능하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8만 5천명 이상의 소련군이 소련인민의 대다수의 진정한 뜻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표면적으로나마 두 정치체제가 과거 35년간 어떻게 같이 지내왔는가?

소련은 앙골라, 쿠바, 에티오피아, 남예멘, 베트남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 약간의 주목할 만한 이익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들은 유고, 이집트, 소말리아, 그리스, 인도네시아, 수단 및 중국에서도 시도해 보았으나 실패했다.

소련의 영향력은 핀란드, 루마니아, 시리아, 탄자니아, 기니아, 북한같은 나라에서 현저하게 감소했다.

소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회에서의 생활실태가 어떠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쿠바, 베트남, 캄보디아, 동독, 그리고 소련자체에서부터 외부로의 대량 탈출사실이다. 소련체제의 매력은 분명히 수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지 못한다.

미국과 소련의 경제력은 비교할 수도 없다. 미국의 GNP는 2조 8천억불로서 소련 GNP의 1.5배 내지 2배나 된다.

만일 미·소 두 나라의 동맹국들의 GNP를 포함하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경제력은 소련진영의 거의 4배나 되는 우위를 차지한다.

미국의 경제가 일시적인 퇴조를 보이고 있는데도 G.N.P소득은 80년대 중반에는 실질적으로 4조억불에 달할 것이다. 한편 소련의 경제는 1950년대의 6% GNP 상승률이 1979년에 약 2%의 성장에 그쳤다. 두 경제체제간의 상대적인 경제발전추세와 정도는 분명히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유리하다.

농업부문이야 말로 소련의 가장 큰 경제적 난제 중의 하나이다. 소련의 농업 체제는 대략 4,600여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들 농장에서 노동자들은 전체 파종지역의 5%에 해당하는 지역을 사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적은 구역에서 소련의 고기, 밀크, 계란과 채소류의 25%와 66%의 감자를 생산한다.

한편 식료품 생산에 있어서의 미국의 능력과 효력은 전세계적으로 월등하며 이는 인구와 5%도 못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분명히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소련진영보다 우월하다.

그러나 국가안보수단의 세번째 지주인 군사력 균형에 있어선 어떤가?

강력한 정치적 및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서 있으면서도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가안보는 강력한 군사적 능력없이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다.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 군대의 수, 탱크, 포, 함정, 항공기를 비교하는 대신 능력과 의도면에서 대조를 해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소련의 해군사령관인 고르쉬코프제독은 수년동안 소련의 군사력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증강되었나를 회상하면서 소련의 의도를 고찰해 볼 때 소련 해군은 문자 그대로 장거리 군대라고 했다.

소련에게 있어서 이 말의 뜻은 소련 자신의 영토의 방위 및 동맹국의 보호에 국한하지 않으며, 미국이 그러하듯이 경제적 생명선에 대한 안전을 의미한다.

소련에 있어서 해군은 군사력을 통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들의 직접적이고도 간접적인 노력의 증거이다.

소련은 수년동안에 그들의 전략적 및 재래식 군사력을 가속도적으로 증강시켜 왔다. 15년전엔 미국이 핵우위를 점유했었던데 반하여 오늘날에는 전략 핵군형 상태가 되었다. 오늘날엔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은 점차 대등하게 되었고 어떤 경우엔 소련군사력이 능가하고 있다.

질적인 차이면에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크게 안심할 정도는 아니다. 15년전엔 미국은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방의 육·해·공군력을 유지하고 계획하는 능력면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향유했다.

오늘날 소련은 위성국들의 국경을 훨씬 넘어서까지 군사력을 투입하는 능력을 급속도로 팽창시키고 있다.

소련은 지금 미국이 모든 부문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군용항공기를 각 부문에서 생산하고 있다.

소련은 과거 10년동안 미국이 투자했던 것보다 27%나 더 많이 연구개발분야에 투자를 해왔다.

소련의 국방예산은 15년전에는 미국보다 25%가 적었으나 지금은 40%가 더 많다. 소련은 현재 GNP의 14%를 군사부문에 배당하고 있다.

미국은 내년부터 GNP의 5%를 국방부문에 지출할 계획이다. 그외에 소련은 국방비를 인건비보다 무기부문에 집중 사용하고 있다.

한 예로서 미육군사병은 월 448불을 받는데 십중팔구가 징집병인 소련육군은 월 10불정도를 받고 있으며 결혼했을 경우는 약간의 가족수당을 받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소련 국방비의 많은 몫을 개개인 병사들에게 줄 비용을 희생하고 무기부문에 충당한다.

이처럼 계속적이며 착실히 성장해 온 결과 소련은 오늘날 힘의 신장면에서 보다 큰 역량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소련의 국제사회에서의 태도가 소련의 국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가까운 장래에는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시사해 주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군사력 균형에서의 이 추세를 돌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불과 몇 년전만 해도 태평양과 인도양은 소련 군사력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상황은 달라졌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소련의 군사적 위협은 가공할 만큼 팽창되었다.

일본의 경제적 생명선은 소련군사력의 존재로 6,000마일 이상이나 떨어진 페르샤만에서는 물론이고, 일본 본토 주위의 해역에서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다. 오늘날 소련은 2차대전후 일본으로부터 획득하여 반환치 않고 있는 북방섬들과 북해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1만여 명의 소련 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동남아에서 소련은 커다란 전략적 중요 지점인 베트남에 공군기지와 항공구들을 확보해 나아가고 있다. 소련군은 비올빈에 있는 중요한 미공군 및 해군기지에 위협스런 만큼 가까이 있다. 소련은 페르샤만에서부터 마라카해협을 통하여 동남아, 동북아까지의 중



요한 해역을 지배할 수 있는 군사력 능력을 크게 발전시켜 왔다. 이들 항구 및 공군기지에 증가된 소련군의 진출은 분명히 일일 약 300만불에 달하는 베트남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의 대가로 제공된 것이다.

소련의 이와같은 원조는 20만의 베트남 군대가 캄보디아를 점령하고 있는 동안 베트남의 약한 경제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20만의 피난민을 타이 국경 근처로 추방했다. 캄보디아의 국경 피난민촌은 슬프고도,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을 연출한다.

분명히 베트남의 정부는 죄없는 피난민들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전쟁을 수행하는 도구 이외의 목적엔 사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동남아에 있는 수천명의 굶주리는 피난민들, 인간들은 농사를 짓고 그들의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서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낼 필요가 절실하다.

소련은 이 지역에서 그들의 존재를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 더 오래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8만 5천명 이상의 중무장한 소련군들이 소련의 안전에 위협을 준 바도 없이 오직 자유스럽기만 바라는, 금지있고 독립된 나라를 복종시키려 하고 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입은 동남아일대 국가들의 독립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많은 국가들의 경제적 생명선(중동의 석유)을 통제할 수 있는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현재 총 유티소모량의 15% 정도를 페르샤만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 서구 총 수요량의 2/3와 일본의 3/4의 석유가 페르샤만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그외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의 경제가 중동 석유통로의 자유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배후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지역에서 불안을 조성하고 선진자유세계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페르샤만 지역을 지배하려는 여하한 외부세력에 의한 기도라도 미국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우리는 무력을 포함한 어떠한 기도라도 필요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격퇴해야 된다. 미국은 소련의 더 이상의 그 어떤 모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도양에 병력을 증강시켰고, 필요하다면 우리의 국가 목적달성을 지지하는데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미국과 동맹국들, 우방국들간의 상호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빠르면 내년일 가능성도 있으나 분명 소련은 수년 내로 석유수입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전략적으로 약간 중요한 것이다.

그들은 석유를 어디에서 수입할 것인가?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공급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이미 시험해 보아서 잘 알려진 우세 내지 지배수단을 쓸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

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자주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왜 미국은 소련이 앙골라, 에디오피아, 남예멘 같은 작은 나라들을 잠식하는 데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그들은 그래도 괜찮지 않은가? 이다.

사실 이들 나라들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그 대답은 아주 기본적인이다.

미국은 200여년동안 국가의 독립을 지원해 왔다.

이들 국가들은 소련의 영향권 내에 잃는다는 것은 직접 간접으로 그 나라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에는 물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이익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80년대에 돌입하면서 인정해야 할 미국과 소련 사이의 경쟁은 서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모든 분쟁지점을 이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소련은 이를 달성함에 있어서 간접적으로 군사대리자를 이용하기도 하고 직접 군사력을 이용하는 수단을 과시해 왔다.

오늘날 소련의 공격에 대항하여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세력은 단지 하나 미국이다.

이해 관계는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과 자유세계의 이익이 위협에 직면하여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 파괴되기 쉬운 태평양, 미·소의 상대적인 재래식 군사력의 추세가 만일 견제되지 않는다면 소련이 군사적 모험을 자행할지도 모를 태평양에서 특히 높다.

만일 하나의 국가로서 미국이 대항하지 않는 정책을 선택한다면 1980년대는 세계에서 미국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에 종말을 고할 것이며, 자유스럽고 민주적인 생활양식의 성장발전도 끝날 것이며, 소련이 바라는 세계 질서확립에로의 길이 개방되어질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힘이 크다한들 증대하는 위협들에 대처할 능력이 남아 있겠는가?

미국과 동맹국들은 자유와 인간성이 결여되고 억압된 소련권 사회보다 더 엄청난 경제적 잠재능력과 훨씬 강력하고 더욱 융통성 있는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군사력이 오늘날 충분하다고는 하지만 소련의 급속한 군사력의 팽창에 그들의 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소련의 의도를 주시 하지 않으면 안 되며, 자유세계가 경쟁하며 승리하려면 이러한 군사력 추세를 역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소련의 도전이 증대하다 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세계가 그러한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던 것도 처음은 아니다.

어느 주간 뉴스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그것은 역사에 있어서 우울한 순간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토록 슬퍼하고 깊은 우려를 해본 적이 없다. 국내상황은 혼란스럽다. 달리는 세계적으로 약세에 처해 있다. 물가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극도로 높다. 정치적 상황은 불확실하게 비등하고 소란스럽다. 소련은 늘 그렇듯이 수평 선상에 걸린 검은 구름처럼 위압하며, 기회만 노리고 있다. 인간으로서 아무도 우리의 불안한 장래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엄숙하고 증대한 순간이다.』 고무적인 보도인가? 왜? 왜냐하면 그것은 120여년전인 1857년 10월에 출판된 것이

기 때문이다. 그 이후, 자유세계는 전쟁, 외침, 경제적 변동, 국가지도력의 극적인 변화 등 많은 도전에 봉착해 왔다.

그러나 강력한 민주사회는 계속 버티어 자유스럽게 지탱되어 왔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도전을 정면으로 받고 있으나 자유세계는 그러한 도전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 Asta-Pacific Defense Forum 1980년 FALL에서 -

# 공군만상

정운섭 (鄭雲燮)

〈건군 33주년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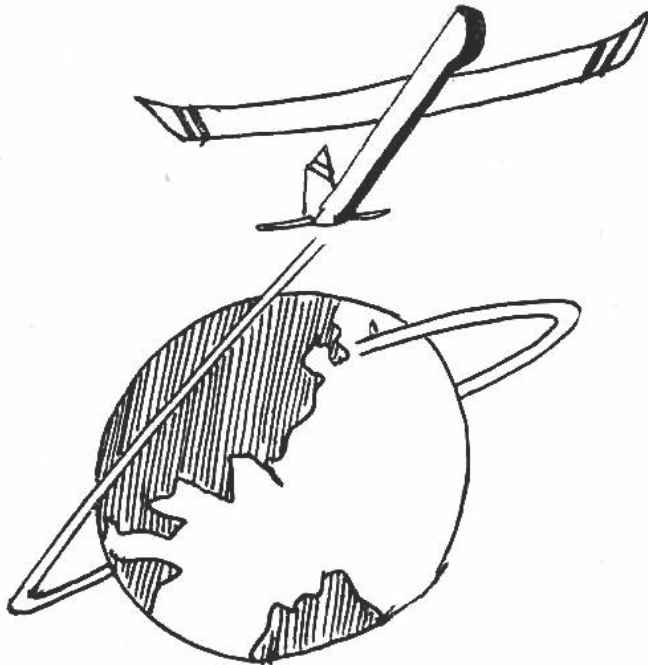
막강국군, 무엇이 두려우랴!



# 공·군·만·상

〈제3회 공군참모총장 배  
모형항공기 대회〉

날로 변창, 이제는 세계로 ……



## 한국전(韓國戰)에서의 공중작전(空中作戰)

본고는 한국전쟁 당시 UN공군사령관이었던  
오토 P. 웨일란드장군의 논문을 번역한 것이다.

Otto P. Weyland 장군 저(著)  
심경식 역(譯)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북괴 공산주의자들은 한국을 공산지배하에 통일시키려는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군사행동을 개시하였다. 그 군사목적은 남한을 점령·지배하려는 것이었다.

북괴의 목적이 점령이었기 때문에 (저 옛날부터 점령은 침공작전의 전통적인 목표였다.) 침공작전의 가장 주된 요소는 지상작전이었다. 또 그들의 군사력을 조직함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은 남한에 있는 군사력만을 고려하였다.

1950년 4, 5월 거대한 규모의 군사물자가 소련으로부터 북괴로 수송되었다. 북괴인민군을 위한 중고사포, 트럭, 탱크 및 자동소총들과 북괴공군을 위한 약간 구식의 비행기들 등이었고 북괴는 소총류 및 군수품, 식량을 자체 조달하였다. 북괴 인민군은 9개의 정예보병사단과 1개의 기갑사단을 전선에 배치하고 있었으며, 전쟁발발 후 두 달만에 거의 13개의 사단으로 증가시켰다. 전쟁 초기 북괴 공군력은 주로 YAK-7, YAK-11, IL-10으로 된 약 150대의 구식 소련기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와 비교하여 한국 지상군은 국경과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6개의 보병사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가장 화력이 센 무기라야 81mm 박격포였다. 비록 10대의 T-6 훈련기로 구성된 공군조직이 있기는 했으나 실제적인 의미에서 한국공군은 존재하지 않았다.

북괴 공산주의자와 소련은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반격을 전혀 예상치 않았으며 게다가 공산주의자들은 비록 다른 나라의 개입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군사목적은 달성한 후에야 겨우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이 두 가지 예상은 전부 그릇되었었다. 미국국



동사령부(FEC; Far East Command)의 공군 구성요소인 극동공군(FEAF; Far East Air Force)은 UN이 참전을 결정한 후 8시간 이내에 군사행동을 개시하였다. UN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는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곧 조직되었다. 그 임무는 한국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UN군사령부는 미 지상군 외에 영국·캐나다·터키·그리스·룩셈부르크·이디오피아·프랑스·벨기에·필리핀·오스트레일리아·콜롬비아·타일랜드·뉴질랜드·네덜란드의 지상군으로 구성되었다. 또 극동공군 외에 미 해병·해군 항공대·영국·오스트레일리아·남아연방·그리스·한국·타일랜드 공군이 합세하였다. 덴마크·노르웨이·인도·스웨덴·이태리는 의무대를 보냈다.

## 공군의 활동 개시

UN공군이 한국전쟁에서 이룬 성과를 검토해 볼 때, 북괴공군이 근대 항공능력을 개발하였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겠는가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흥미있을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개입을 예상치 않았던 것 같으며, 혹 예상하였더라도 공군력의 기동성·융통성 및 육군에 대한 저지력을 과소평가했음에 틀림없다.

북괴군이 침공하고 UN군사령부가 아직 조직되지 않았을 때의 극동공군을 잠깐 살펴보자. 점령군으로서의 극동공군의 임무는 국내안전과 방공에 있었다. 전술훈련계획은 실제요격임무, 훈련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극동공군의 전투부서는 8개의 비행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5개의 전투비행단, 2개의 폭격비행단, 1개의 수송비행단과 그 외의 지원부대로 되어 있어 총 1,172대의 항공기로 되어 있었다. 오키나와, 괌도, 필리핀에 있는 각 1개의 비행단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본에 있었다. 극동공군은 한국전에 투입되었어도 극동에서의 방공임무는 여전히 계속 수행해야 했다. 1개의 중폭격기, 1개의 경폭격기 비행단과 8개의 전투비행대대가 한국전에 투입되었고 10개의 전투비행대대는 일본·오키나와·필리핀의 방공을 맡았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많은 수의 부대가 모기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여름 기동훈련에 참가하고 있었다. 비상사태가 갑작스레 발생하였기 때문에 어떤 부대는 모기지로 귀환하지도 못한 채 전투에 투입되었고, 다른 부대는 이동명령과 함께 투입되었다. 이동하기 위해서 전투작전을 멈출 시간은 없었다.

이 지역 내에서도 이동이 있었지만, 전력증강계획은 미본토로부터도 이루어졌다. 결정이 난 후 10일 이내에 2개의 중폭격기전대가 극동으로 이동되어 한국에서의 전투임무를 수행하였다. 30일 이내에 해군 항공모함 복서(Boxer) 호가 현 극동공군의 항공력을 보충하기 위해 145대의 F-51을 가지고 도착하였다.

이제는 공군력에 고유한 기동성의 측면보다 그 화력으로 눈점을 옮기려 한다. 앞으로 상황전개 과정을 추적해가며, 중요한 사실에 대해 우리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이를 검토해 보자.

## 북괴 인민군의 패퇴

북괴 인민군은 1950년 6월 25일 공격을 개시하여 6월 29일에 벌써 서울을 점령하였다. 한국 육군은 북괴 인민군의 거센 진격 앞에 남으로 후퇴하여 미국이 참전했을 때는 붕괴직전에 놓여 있었다.

처음 이틀동안(6월 25, 26일) 극동공군은 주로 미국인의 철수와 그 호위임무를 맡았다. 그 다음 이틀 동안은 38°선 이남의 지상목표물에 대한 공격과 약간의 공중교전에만 국한되었다. 7월 4일 미 제24사단이 공수되어 참전하였으며, 한국육군과 함께 지연작전을 개시하였다. 미 제25사단도 후에 합세하였다. 그러나 북괴 인민군은 여전히 남쪽으로 진격해 왔으며, 8월 중순 부산 방어선이 구축되었을 때 겨우 저지되었다.

6월 29일 공군에게 압록강까지의 지역내에서의 작전활동이 허가된 후 주로 북괴의 비행장에 대해 공격을 감행하였다. 7월 하순까지 극동공군은 주로 지상에 있었던 적기를 파괴하여 약 18대 정도의 비행기만을 남겨서 북괴 공군력을 단지 상징적인 존재로 만들고 말았다. 우리측은 최소한의 노력과 희생만으로 한국상공과 제공권을 확보하였으며, 그때 이후로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북괴 공군의 공중공격은 다만 약간 귀찮은 정도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다. 만일 북괴공군이 그렇게 격파되지 않았다면 한국육군에 대해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었을 것이다. 그동안 나머지 UN공군력은 북괴 인민군의 진격을 저지하며 UN육군을 위한 근접지원작전을 수행하는 데 투입되었다. 비록 적의 후방지역에 있는 주 보급로를 차단했더라도 훨씬 유익했었을지도 모르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UN육군이 버틸 수 있었을지는 아주 의심스럽다. 공군력은 와해 직전에 있던 지상군을 보장하는 데 투입되어야만 했다. 육군에는 조직적인 지원화력이 부족했으므로 공군의 근접지원작전이 이를 대신해 주어야만 했고, 이렇게 해서 지상군은 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 UN공군의 전과를 보여 주는 것으로는 7월 10일 평택 부근에서 폭격에 의해 파괴된 다리에 집결해 있던 적의 부대를 공격, 117대의 트럭, 38대의 탱크 및 7대의 반트럭을 파괴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공격들로 해서 북괴 인민군 기갑사단은 부산지구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꺾이기만 남게 되었다.

7월말 최초의 후방차단 계획이 시작되면서 UN공군의 공격대상은 후방지역의 주 보급로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적이 야음을 이용해 보급물자와 인원을 수송하였기 때문에 이 작전은 24시간 계속되는 것이어야 했다. 적은 그들은 군수활동만 야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전투자체도 야음을 이용해서 하였다. 야간폭격은 주로 B-26기가 맡았다. 근접 지원이 다른 작전보다 성과가 적어졌던 8, 9월에도 상급부서에서는 대부분의 공군력을 근접 지원작전에 투입하였다. 그 외 후방차단작전에 투입되었던 약간의 공군력은 7월초 평균 206톤에 달하던 적의 보급물자를 부산 방어 시절에는 겨우 21.5톤에 그치게끔 하였다.

그러는 사이 8월 중순 이래 부산지역의 UN 지상군은 4개의 미 보병사단, 7개의 한국사단, 1개의 영국여단으로 증강되었다. 이렇게 증강된 전력으로 9월 15일 지상군은 부산방어선을 넘

어 진격을 개시 하였다. 제1해병사단과 제7미보병사단은 같은 날, 인천에 상륙하였다. 이 시점에서 공군이 그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음이 명백해졌다. 부산지역을 둘러 싸고 있던 북괴 인민군은 폭격에 의해 숫자가 감소되고 후방차단작전에 의해 거의 굶어 죽게 된 상태로 뿔뿔이 앙상하게 남은 해골바가지에 지나지 않았다. 북으로 밀고 올라가는 UN군은 조직적인 저항을 거의 받지 않았다. 인천에 상륙한 부대도 마찬가지로 어떤 격심한 반격을 받지 않았으며 게다가 공군이 적의 보급로를 공격하여 적의 기동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보호되었다. 실제로 UN공군의 후방차단 효과는 대단한 것이어서 우군의 인력 및 물자가 북으로 이동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들었다. 우군이 전진하는 도중에 후방차단에 의해 파괴되었던 철교를 신속히 수리할 만한 장비와 숙련된 기술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육군은 너무 빨리 진격했기 때문에 그 보급계통이 이를 따르지 못하였다. 공군은 군수품과 보급물자를 공수하였으며 이것은 C-119, C-47, C-54 수송기들이 대구에서 압록강까지 운반하였다. UN지상군은 도주하는 북괴 인민군의 바로 뒤를 쫓아 10월 하반기에 압록강에 도착하였다. 이 동안 공중공격으로 격파된 북괴 인민군 부대의 이따금씩의 약한 저항이 있었으나, 적은 철수기간동안 그 어느 때도 강력한 방어 전선을 구축했던 적이 없었다. 적을 차단기 위해 10월 20일 원산에 상륙했던 미 X군단의 장병들은 너무 늦게 도착한 게 되었다. 한국육군이 이미 도착했던 것이다.

1950년 7월부터 10월까지 북괴 인민군의 잔존부대가 압록강까지 후퇴하기 전 4개월간 공군에 의한 파괴활동 때문에 적에게는 이 전쟁이 아주 값비싼 것이 되었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극동공군은 애초에 1개의 중폭격기 비행단을 가지고 참전했다. 8월 첫째주까지 4개의 B-29기 비행단이 추가되었다. 북한의 경제사정으로는 중요한 목표가 될 만한 산업 시설이 거의 없었다. 이 산업 시설들은 10월 2일까지 거의 다 파괴되었고, 두개의 중폭격기 비행단은 미 본토로 귀환하였다. 이 기간동안 적의 비행장들은 파괴되어 사용 불가능하게 되었고, 항구·조차장·통신소·보급소들은 계속적인 공격을 받아 전쟁물자를 쌓아 둘 수가 없었다. UN공군의 활동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불완전한 통계에 의할지라도 최소한 39,000명의 적군이 공중공격으로 사망하였다. UN육군이 진주해 가기 전에 후방으로 옮겨진 부상병들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39,000이란 숫자는 공중이나 지상으로부터 직접 관찰된 숫자이며, 관찰이 불가능한 공중폭격이나 야간공격에서의 피해숫자를 포함치 않고 있는 것이다. 이 숫자는 1950년 6월 25일 침공할 당시의 10개 사단병력의 1/3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중공격은 또한 452대의 탱크 - 우군에 의해 파괴된 전 탱크의 76%에 해당함 - 를 파괴한 것으로 믿어진다. 후방차단 계획에서는 75개의 교량이 사용 불가능하게 되었고 5개가 계속되는 공중공격에 의해 손상되었다. 적의 수송체계는 6,000대의 자동차, 1,300대 이상의 수하물차, 약 260대의 기관차가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다. 북괴 인민군을 완전히 궤멸시키기 위해 지상군은 수많은 적군을 살해하였으며 100,000명 이상을 포로로 잡았다. 최종적으로 투입된 13개 사단의 장병 이외에 이 사망

자와 포로들 중의 많은 숫자는 지원군들이었다.

UN육군의 몇 개 부대들이 10월말 압록강까지 진출하고 있을 때 중공군은 예기치 못한 반격을 시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약간의 중공군부대는 이전에 참전하였었다. 어쨌든 원래의 전쟁은 끝이 났다. 북괴의 무력은 궤멸되었으며, 북한지역은 점령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적이 참가한 전쟁은 바야흐로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 중공군의 참전

11월말까지 중공의 육군은 2개의 포병사단에 의해 지원받는 9개의 군(Army)으로 증강되었다. 각 군은 6개 포병대대 정도의 화력을 갖추고 있었다. 개략적인 총 전력은 250,000명 이상이었고, 그 이상으로 증강될 가능성도 명백하였다. 이에 대해 UN군은 11개 사단이 있었다. 한국에 있는 UN군 부대는 모두 267,000명이었고, 그 중 130,000명은 미군, 127,000명은 한국군, 10,000명은 그 외 UN군으로 구성되었었다.

11월 26일 중공군은 UN지상군을 38°선 이남으로 몰아내는 공격을 시작하였다. 중공군 부대가 10월에 최초로 참전한 이래 적의 증강에 대한 공중공격은 폭격선이 대부분의 지역에 있어서 압록강과 일치하였기 때문에 불가능하였다. 그 사이의 조그만 지역들에 대해서만 공격이 가능하였다. 공중공격이 불가능함에 따라 생긴 위기를 느끼고 UN지상군은 압도적인 적의 군사력에 밀려 심각한 손실을 내며 후퇴하였다. 이 패퇴가 완전한 파멸로 이르지 않았던 것은 주로 UN공군의 덕분이었다. 미 8군이 최소한의 사상자를 내면서 조직적인 후퇴를 할 수 있게끔 적의 진격을 충분히 늦추었던 것이다. 공중공격 때문에 중공군은 밤에만 이동할 수 있었다. 우군은 후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얻었고 적의 후방이 늘어졌기 때문에 또 다시 공군의 활동은 아주 효과적인 것이 되었다.

중공의 육군이 한국전에 개입했을 때까지 극동공군은 UN공군에 3개의 중폭격기비행단, 2개의 경폭격기비행단, 13개의 전투비행대대, 4개의 공수비행전대와 그 외의 지원부대를 보냈다. 중폭격기들은 오키나와와 일본으로부터, 경폭격기들은 일본 남부의 기지로부터, 또 전투기들은 서울과 부산지역의 비행장에서 발진하였다. 한국 전체가 B-29, B-26, F-51, F-80기 등 모든 종류의 전투비행기들의 행동반경 내에 있었다.

중공군 참전 이후 2개월동안 공중활동은 지상군이 후퇴하면서 포위 당하지 않게끔 하는 데 집중되어 전쟁 초기 그들이 수행하였던 임무로 되돌아갔다. 후방차단과 집중된 근접 지원 때문에 적은 스스로의 호신을 위해 밤중에만 이동하고 전투를 할 수 있었으며, UN지상군은 대낮에 숨을 들릴 수 있었다. UN육군이 38°선 근처에서 안정되었을 때야 비로소 후방차단 계획은 다시 재개되었다. 이때까지는 장거리에 걸친 공격으로 중공군의 진격을 늦추었다.

12월 중순의 38°선상의 UN군 위치는 오래 가지 못했다. 비록 UN공군의 공중공격 때문에 밤에만 이동할 수 밖에 없었다 해도 적군은 1951년 1월 1일 공격을 재개하는 데 충분한 전

력을 차츰 증강시킬 수 있었다. 이 공격을 당하자 UN지상군은 후퇴하였다. 서울은 1월 4일 함락되었고 이 지상군은 평택-원주 선으로 후퇴하였다. 이 주 저항선(MLR; Main Line of Resistance)이 우군이 남쪽으로 후퇴한 최대의 선이다.

적이 진격함에 따라 UN공군의 누적적인 공중공격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로 밤중에 2급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공군의 군수체계는 결국 붕괴되었다. 집중된 공중공격으로 보급이 불가능하여 적군은 전면공세(General Offensive)를 지원할 수가 없었다. 전쟁포로의 심문기록에 의하면 적의 후속부대가 압록강으로부터 전선으로 이동하는 데에는 두 달반 내지 넉달이 걸렸으며, 도착하였더라도 전투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피로해 있었다. 적의 보급로는 너무 늘어진 데다가 계속 공격당함으로써 적절한 물자의 지원이 불가능했다. UN군 주 저항선(MLR)의 서쪽지역에서는 적군이 서울 남쪽에 있는 UN육군의 저항선을 결코 공격 해오지 않았다. 우군의 수색조는 적을 만나지 못했으며, 수원 이남에서는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 UN지상군은 대응공격을 개시하여 4월 초까지는 지난 12월에 구축되었던 전선 이북까지 나아갔다. 이 곳에서 적군은 그 위치를 고수할 수 있었다. 비교적 정체된 전선을 유지한 채 적은 보급물자를 충분히 확보하여 UN군을 한국에서 축출키 위해 두 번이나 재공격을 시도하였으나 UN공군의 공중폭격으로 중공군의 군수체계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게다가 이 공격으로 적의 부대가 공중공격에 노출되고 말았으니 극심한 인명 및 물자의 손실만 초래하였다. 그 위력적인 공중활동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2개의 중공군 군(Armies)을 화천저수지에서 포위하여 한 시도 쉬지 않는 공격을 해대었던 경우가 있다.

서울의 바로 북방으로 후퇴하여 미 8군은 적의 공격을 격파하고 5월 22일에는 공격을 시도, 북진하여 앞으로의 2년간 주 저항선(MLR)이 위치하게 될 지역까지 나아갔다. 적군은 패하여 도주하였다. UN군의 위협에 직면하자 적은 협상하려 하였다.

7월 10일 첫 휴전회담이 열렸다. 이때부터 UN군의 지상전략은 휴전협정이 체결 때까지 인명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되었다. 적의 보급로를 단축시키고 동시에 전선 및 보급로를 확장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여겨졌다. 이제까지의 작전에 의해 획득된 지역 때문에 훌륭히 방어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 지역에서 장거리 수색, 습격 및 한정된 목적을 가진 공격을 행하였다. 이 제한된 공격의 목적은 적군의 균형을 파괴하여, 방어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한국전의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적은 상당히 큰 손실을 입었다. 1950년 11월에서 1951년 6월 사이에 적은 주로 중공군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UN공군은 이동중인 적에게 아주 큰 타격을 가하였다. 적의 전방지역 및 후방의 교통망을 주야로 계속 폭격함으로써 117,000명의 적군을 사망케 하였고, 1,315개소의 포진지, 296대의 탱크 또 군대막사와 보급창고로 쓰이는 8,000개 이상의 건물을 파괴하였다. 13,000대 이상의 차량 2,600대 이상의 수하물차, 250대

이상의 기관차가 파괴당함으로써 적의 수송체계는 완전히 불구신세가 되었다. 군대와 보급물자를 야간에 수송해야 하는 제약이 더 심해짐에 따라, 제공권을 UN공군이 장악하고 있는 한 적이 미 8군을 한국으로부터 축출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지고 말았다.

## 야전군의 패배와 파괴

실지로 일어난 일들을 적절히 개관해보기 위해 전쟁의 첫번째 및 두번째 단계를 검토해 보자. 공중작전은 합동작전을 하기에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통신 및 통제체계와 임무수행에 적당한 훈련을 받지 않은 약간의 인원만 가지고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임무수행은 성공적으로 되었으니, 그 이유는 UN공군의 능력 이외에 북공 공군을 적절히 발전시키지 않은 공산주의자들의 통찰력 부족에도 있었다. 전쟁의 전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적의 공군이 완전히 파괴되어 우군의 공군 기지 및 지상군을 공중공격의 위협성에서 벗어나게 하여, 우군의 거대한 군수 및 통신체계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해 주고 우리의 공군이 마음 내키는 대로 진격해 오는 적을 공격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만일 상황이 반대였다면, 또는 UN공군이 대부분의 노력을 북공 공군과의 계속된 전투에 소비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공군과 지상군의 일정한 장소에서 활동을 할 때에는 각자의 고유한 능력 범위 내에서 다음의 일들을 완수해야 한다. 작전지역 및 그 지리, 주민, 군사력의 만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은 공군과 지상군의 책임이다. 공군은 적의 공군력을 파괴하여 공중을 방어함으로써 안전을 도모해 준다. 만일 상황이 허락하거나 전략이 적절히 세워졌다면 공군은 작전지역의 전략적인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접근해 오는 육군이 작전지역에 채 도착하기 전에, 또는 우지상군이 위기에 처하기 전에 그 육군을 결정적으로 파괴하고 혼란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공중합동의 효과는 공중공격에 이용될 수 있는 시간, 공간 및 화력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이러한 종류의 공격에서는 그 효과가 신속하고도 굉장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국에서의 공중작전의 시초는 적의 진격을 파괴하고 혼란시킨다는 경우를 보여주는 고전적인 예가 된다. 한국 육군은 혼란된 채로 성급하게 후퇴하여 압도적인 적 지상군을 공군이 공격해야만 할 수 밖에 없었다. 부산방어지역에서 미국과 영국의 지상군이 보강되자 한국 육군은 그들의 위치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우리는 부산지역의 적에게 연결되는 보급물자의 흐름을 차단기 위해 개시된 후방차단작전에 대해 토의하였다. 이러한 작전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적의 군수능력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절멸시킬 수 있을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또 이 작전과 함께 후방지역 및 전선에서 적의 인명과 장비를 계속적으로 파괴할 때 그 작전의 효과는 이와 같은 합동전술로 인해 훨씬 커질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작전은 지상군이 적군의 배후에 있는 것과 같은 정도로 확실하고도 결정적으로 적을 수직 포위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육군의 전술은 지상군에 의



한 측면포위와 같은 정도로 강력한 공중포위의 특유한 효과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수정되어야 한다.

현대전에서는 이전에 항공력이라는 게 없었을 때보다 포위돌파가 쉬우며, 측면공격의 위험성도 마찬가지로 보다 적다. 왜냐하면 공중공격하의 적은 적절하게 기동성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차대전에서의 세인트 로(St. Lo)와 패튼(Patton)의 진격을 1차대전의 육군의 경우와 비교해 보라. 부산에서의 포위돌파와 북괴 인민군을 격파해 나간 경우가 이와 흡사하다. 기동성이 없어지고 혼란에 빠진 북괴 인민군은 그들의 중화기를 모두 잃은 채로 격파당해 미 8군은 다수의 인민군을 포로로 잡았다. 실제로 서울 이남에서는 그들의 장비가 거의 모두 파괴되거나 노획되었다.

공중공격의 결과로 적군이 입은 피해에 대해 너무 주의를 하지 않는 듯하다. 실지로 아군의 지휘관들도 육군이 부산방어지역으로부터 돌파해 나오기 시작해서야 비로소 공중공격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인천상륙작전은 적군을 측면에서 포위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북괴 인민군을 파괴하는 데 공중공격보다는 그 효과가 적었다. 물론 이 작전으로 해서 적의 지휘관들은 그들의 형세가 완전히 절망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이 작전에 당해 그들은 틀림없이 퇴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중공격의 효과를 완전히 인식했더라면, 증원군들은 부산에서 보다 유리하게 배치되었을 것이다. 증강된 미 8군이 적의 동·서양쪽에서 적을 추월할 정도로 빨리 진격하는 경우를 상상했더라면 지상전술은 보다 더 낮게 만들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사태는 실지로 일어났던 것이다.

인천상륙작전의 효과가 어떤 것이든 간에 부분적으로는 공중공격의 효과를 감쇄시켰다. UN 군사령부와 지휘관들은 인천상륙작전을 개시하면서, 공군력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 잠시라도 평가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 목표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작전사항을 검토했던 것이다.

우리는 UN육군이 압록강까지 진격하고 그 후 중공군이 압도적으로 공격해온데 대해 얘기하였다. 이제 형세는 바뀌었다.

중공군의 개입이라는 돌발사태에 전혀 대비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치적인 제약과 지상군의 압록강까지의 진격 때문에 공군은 적 지상군에 대해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다. 공군은 결정적으로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압록강과 우리 육군 사이에 지상군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를 감퇴시킬 만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었다.

압록강에서 막강했던 적 지상군이 미 8군을 포위·공격하는 데 실패했던 바로 그 군대라는 것, 우리의 최후 저지선을 돌파하는 데 실패했던 그 군대, 38°선이 북으로 밀려났던 그 군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약간 다를 뿐 역시 같은 군대였다는 것이다. 만일 시간적·공간적 여유만 있었다면 공군은 파괴, 후방차단작전을 되풀이 했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지상군에 대한 공중작전을 단지 육군에 대한 지원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는 조직, 통제,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관념을 만들어 내어 역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상과 공중의 전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전술을 세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더 명확한 견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육상·해상·공중의 전력이 모두 함께 전체작전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각 전력은 각자가 상대하기 가장 알맞는 분야를 맡아 대적(對敵)하고, 가장 공격효과가 큰 기회를 이용해야 하며, 그들의 전문적인 기술을 최대한 사용해야 한다. 그들은 서로 서로를 지원해야 한다. 전장터에서 공군의 화력이 육군의 작전 및 화력에 통합되었을 때 이를 육군에 대한 지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런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전체적인 전술을 지상군의 기동 및 화력 개념 뿐 아니라 공중상황 및 공군력에도 알맞게끔 작성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상군의 전술을 공중전술의 효과를 충분히 이용하게끔 작성한다는 생각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게 될 것이다. 만일 목표와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성공하기 위해서 공중전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하고, 지상전력은 이 공중전력을 지원해야 한다.

### 전술군의 휴전 ; 공중작전

1951년 7월 이래 전쟁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양측 대표가 개성에서 만났을 때 그들은 정치적 목표, 군사적 목표 및 전술에 관해 이전에 결정했던 바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 실지로 이 회합은 급격한 변화였던 것이며, 새로운 전쟁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한 정도였다. 적과 우군은 양쪽 다 무력으로 한국을 통일시키겠다는 정치적 목표를 포기했으며, 또한 점령·지배하려던 군사적 목표를 단념했다. 양측의 정치적·군사적 목표는 이제 동일해졌다. 즉, 휴전협정을 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UN군사령부의 군사 전술도 변경되었다. UN공군의 임무는 적으로 하여금 더 이상의 결정적인 공격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북한의 적에게 최대의 압력을 가하여 유리한 휴전협정을 맺게끔 도우려는 것이다. 지상군은 강력한 방어선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그 임무였다. UN공군은 전체 전력 중의 공격요소였으며, 공중공격은 전체 합동전술 중의 공격요소가 되었다. 공중공격이 최종 목표 즉, 휴전을 위해 짜여졌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이것을 전략적 공격(Strategic Offensive)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며, 전쟁에 있어서의 이 단계를 공중작전(Air Campaign)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그리 명확하지 않은 듯 싶다. 이 변화를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새로운 목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양측은 이제까지의 전투에서 커다란 희생을 치루었다. 그러나 적의 희생은 훨씬 더 컸다. 그들이 회담을 개시했을때는 우리들의 조건을 나름대로 추측하여 그 정도를 받아들여야 했었을

것이다. 허나 그 조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불리한 것임을 알게 된 후에 자연스럽게 협상은 길어지게 된 것이다.

틀림없이 지난 2년동안 UN군이 첫번째 및 두번째 단계의 목표와 전술로 되돌아가려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으며 정치적인 제약을 바꿔 버리려는 군부 내부의, 또 민간사회의 압력이 많았다. 아마 공산주의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 터이지만 앞으로 내가 밝히듯이 그들의 상황은 달랐다. 양측의 이러한 의구나 유혹과는 무관하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목표 및 전술이 끝내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휴전회담이 계속되는 동안 대부분의 공중활동은 적 군수체계에 대한 가장 유효한 후방차단 작전을 수립, 운영하는 데 투입되었다. 상대적으로 정제된 전선에서는 적 부대와 장비를 파괴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으나 근접 지원임무는 우군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대로 행해졌다. 그러나 전략적인 견지에서는 이 지상군의 지상활동을 제약하였다. 근접지원은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가능한 한 많은 인명을 구해 내는 데 주력했다.

적은 곧 UN지상군이 예전과 똑같은 방어전략을 택했음을 알았다. 그들은 수색조를 보낸 다음 방어진지나 돌출부에 제한된 것이긴 하나 강력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UN육군도 마찬가지로 수색과 대응공격을 하였으며, 공군은 전선위를 날아다니면서 눈에 띄는대로 공격을 해 대었다. 이러한 공격 아래 적은 견고한 벙커, 지하 보급창고, 참호, 터널 및 대포와 박격포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근접지원은 점점 그 효과가 없어져 갔다. 여기에 도착한 보급물자 및 장비는 거의 파괴되지 않고 저장될 수 있었다. 그리고 아주 주의깊게 그 소비를 통제함으로써 중포병부대의 지원을 받으며 제한된 범위의 것이긴 하나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었다.

어둠이 덮이면 시작되었다가 아침 여명 전에 끝나는 이 공격들로 인해 우군은 상당수의 사상자를 내었다. UN군의 장비는 손실되었고 탄알은 굉장히 소모되었다. 적은 지상공격만이 소모전에서 그들의 유일한 공격방법임을 깨달았다. 이럼으로써 그들은 공중공격에서 잃은 댓가를 찾으려 했고, 회담장소에서 이를 그들의 무기로 사용하였다. 게다가 적은 그들 생각에 가장 조달하기 쉬운 물자 - 인명 - 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하에 UN지상군이 근접지원을 보다 더 요청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근접지원은 벌써 효과가 체감되는 시점에 달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적의 후방지역 공격에 훨씬 더 집중시킬 수 있었으며, 이랬더라면 전방에서 거두는 성과도 훨씬 컸었을 것이다. 물론 이런 것을 육군으로서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제는 적을 그들이 파고 숨어들어 간 지역에서 몰아내려는 공격도 없었고, 또 적의 부대가 대규모로 계속 진격해 오지도 않았다. 사실상 이전에 얻었던 성과 때문에 우리는 근접지원에 대단히 큰 기대를 했었다. 극동공군과 5공군은 지상군이 개입했을 때 적당한 정도의 근접지원 이상을 하였으며 평소에는 지상-공중간의 협조체제와 능숙한 기술을 유지시키기 위해 다대한 노력을 하였다.

나는 우리 모두 공군력은 능력은 물론 그 제약요소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

다. 정제된 전선에서의 지속적인 근접지원에서는 작은 목표물에 대한 분산되고도 지속적인 화력이 필요하다.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는 공군 특유의 기동성 및 화력을 이용할 수 없다.

정제된 상황에서는 근접지원이 값비싼 대포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적군이 후방차단 및 무장정찰에 의해 기동력을 잃고 보급물자가 파괴되며, 지탱능력이 없어졌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낸다. 근접지원이 지상활동과 조정되어 결합되었을 때 결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1951년 가을 우리가 공중활동의 많은 부분을 적 후방지역 내의 목표를 공격하는 후방차단작전에 집중시키지 않았다면 완전히 어리석은 일이 되었었을 것이다. 전선에 있는 상대적으로 파괴하기 힘든 목표물에 효과없이 화력이 사용되었을 것이며, 적들은 전면공세를 취하고 유지시킬 만큼 그들의 자원을 보강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전면공세는 만일 적당한 보급만 계속 유지된다면, 결정적인 것으로 되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육군에 대한 근접지원의 정도—특히 1951년 말부터 1952년 초까지—가 잘못되었다는 비난이 많았다.

### 공중공세 ; 압력과 결과

이제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적의 후방지역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자. 적이 전면공세를 취할 수 없게 하려는 목표에 따라 후방차단작전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공격은 전쟁의 첫 해에 신속히 움직여진 지상전에서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이 성과는 2차대전 때 유럽에서의 그것과 거의 맞먹는 것이었다. 이 성과를 생각하여 정력적인 공군의 계획담당자들은 적을 효과적으로 고립시켜 전선에서 적이 그들의 전력을 유지할 수 없게끔 하고자 하였다. 언제부터인가 언제, 어디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공군의 장교들이나 언론인들은 1차 단계의 후방차단작전을 질식작전(Operation Strangle)이라고 불렀다. 나는 이 말이 어느 만큼의 질식 정도를 나타내는지 모른다. 돌이켜 보건대, 나는 이 말의 선택이 영 불운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말은 후방차단계획의 진정한 목표를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작전이 실패하였다고 주장하게 할 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누군가가 도로와 철로 차단작전의 목표가 적으로 하여금 장기간동안 제한된 목표공격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더 나아가 완강한 방어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작전은 그러한 일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 반면에 이전에 얘기했던 대로 적으로 하여금 전면공세를 취할 수 없게끔 한 것은 완전히 성공하였다. 게다가 후방차단작전의 소모효과는 적을 최대로 괴롭혔다. 적은 자동차수송, 철도, 교량, 화차 등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비행장, 보급창, 작은 공장 및 다른 시설물들과 다수의 복구 노동력들이 또한 손실을 입었으니, 이 공중공세가 적에게 얼마나 피해를 입혔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조만간에 공중공격으로 가하는 압력이 공중공세의 첫째 목표로 인식되게 되었다. 적의 물자

및 인력을 최대한 파괴하기 위해 공중활동의 주안점이 바뀌었다. 이렇게 적의 물자·인력을 소모 시킴으로써 전면공세를 취하지 못하게끔 하는 목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공중활동에 대해 적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그리고 어떤 댓가를 치루었는가? 아마도 이 논문에서 전쟁의 최초단계 이래로는 적의 공중활동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MIG-15 전투기들은 1950년 11월에 전투에 투입됐으며, 중공공군이 증강되면서 그들은 훨씬 강해졌다. 공중전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하였다. UN공군은 10:1 이상의 비율로 840대 이상의 MIG기를 격추시켰다.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적은 한국 내에서 전방의 비행장에 그들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했다. 그들은 만일 그들이 UN군 비행장 및 부대에 대해 중공과 만주로부터 온 공군력을 사용한다면 UN공군이 압록강 건너를 공격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계속되는 공중공격을 피해야만 한다고 느꼈다. 따라서 1951년 말 그들은 남한 쪽으로 상당히 내려온 곳에 광범위한 비행장 조식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거의 완공할 때쯤 UN공군이 이를 파괴하자 적은 강력히 대응해 왔다. 그들의 전투기들은 우군의 폭격기 및 전투기들에게 공격을 가해왔고 그들의 대공포는 비행장 주변에 집중되었다. 비행장이 파괴되는 만큼 계속 그들은 복구하고 완공시키려 하였다.

1952년 초 적들은 그들의 적이 공중우세를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그들의 공군을 다시 조직하거나 발전시킨다는 게 불가능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남은 노력을 최북방의 비행장을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려는 데 집중했다. 휴전협정이 맺어질 때 이 곳에 기본적인 공군력을 이동할 수 있게끔 유지하고 휴전기간동안 한국 내에 이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게끔 하여 그들의 재남침을 시도할 때 효과적인 작전을 할 수 있게 해놓는 것이 그들의 희망이었다. 휴전 협정이 체결될 때 비행장들은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못되었다. 그렇지만 활주로 주변에는 제한된 것이나마 주간에 착륙할 수 있는 잔디밭이 있었다.

적들은 후방차단작전으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복구사업에 전력을 다했다. 그들은 철도 및 교량을 복구하는 데, 보급물자 및 장비를 분산·은폐시키는 데 놀랄만한 재주와 인내심을 계발하였다. 그들의 굉장한 노력 및 기술에도 불구하고 UN공군은 파괴 및 손상량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51년 7월~53년 6월)

차 량	75,000대 이상
기 관 차	1,000대 이상
화 물 차	16,000대 이상
교 량	2,000개 이상
철도 차단	27,000건 이상
짐배와 보우트	600척 이상
군 인	28,000명 이상
탱 크	300대 이상

포 진 지	12,000소 이상
병 커	15,000소 이상

위의 숫자는 단지 관찰된 것에 한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고 싶다.

강력한 공중공격 밑에서 적은 보급물자 및 시설물들을 훨씬 더 분산시켰다. 그들은 그들의 수리 시설을 조그만 공장에 설치하였으며, 그들의 병력, 보급물자 및 조그만 제조공장을 동굴 및 촌락이나 도시의 건물 속으로 이동시켰다. UN공군이 계속 그들을 추적함으로써 주 보급로를 따라 대도시 지역이나 작은 촌락에서 수만채에 달하는 건물이 파괴되었다.

모스크바까지도 공중작전의 효과를 느꼈다. 긴급필요장비들은 소련으로부터 계속 대체되어야 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만주와 중국의 철도개발계획이 정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적은 한국 내에서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그들의 일반 사회생활과 그보다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들의 군대 조직은 세포조직화 했다. 군대의 보급로는 그 동맥이 끊기고 실패줄과 같은 데 의존하였다. 소비를 통제하고 때때로 전사단을 보급이 용이한 지역으로 후퇴시킴으로써 그들은 가장 필수적인 물자는 30일 내지 60일 정도의 재고를 유지시킬 수 있었다. 그 군대는 기계화되고 기동력 있는 군대가 아니라 땅 속에 숨어 버린 보병과 수백 개의 야전포병대로 되어 있었다. 정치적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UN육군이 대규모 공격을 할 위협성은 없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은 크게 위험한 것은 되지 않았다. 적은 그 군대를 보다 보급이 용이한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징병된 복귀 노동적위대 대신 곡물을 수확하는 데 이용하기도 했다.

실지로 일어난 사실에 대해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공중작전의 여러 면을 검토해 봐야 한다. 공격목표와 사용가능 전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복귀의 지원자들은 군사장비와 훈련된 군대를 위험에 처하게 하였으나, 이것은 그들의 행동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가장 작은 제조업, 광업 시설과 그 인구의 대부분까지 그 전체가 공격의 위험 아래 있는 것이다.

UN공군은 소규모였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 깊게 목표를 선정 해야 했다. 한국에서 운용된 공군력은 공중작전의 개념과는 불균형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한계목표(Marginal Targets)를 공격할 만큼 충분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전쟁에서의 복귀의 역할에 대한 고려와 함께, 직접적으로 군사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목표물에 대해서만 공격하는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전혀 공격받지 않는 조그만 제조업, 광업공장이 수없이 많았다. 전력의 부족으로, 확실히 군대와 보급물자를 보유하고 있긴 했어도 공격을 받지 않는 조그만 촌락도 많았다. 우리는 그 제조업, 광업공장이 전체적으로는 만주의 경제 및 야전군의 지원에 큰 공헌을 했다는 것을 안다. 이것들은 아군의 공군력에 비추어 볼 때 개별적으로는 모두 한계적(Marginal)이었던 것이다.

다른 상황하에서는 이처럼 군사구조 및 즉각적인 지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표만 공격하



는 정책이 완전히 효과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만일 공격을 받는 국가가 침략의 최초도발자 및 지원자였다면, 또는 지상군이 공중작전에 투입되지 않았다면, 또는 공군력이 적을 완전히 포위할 수 있을 정도였다면 공격체계는 아마도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예를 들면, 철로와 군사물자를 휩쓸어 버리기 위해 파괴시킨 복괴의 두 개의 대규모 관개댐은 아마 다른 목적으로 공격되었을 것이다. 복괴를 쌀 수출국에서 쌀 수입국으로 만들기 위해 두 개가 아니라 30개 이상의 댐을 파괴하였을 지도 모른다.

UN육군과 UN공군간의 전력균형도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공군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면 지상군의 규모를 대폭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 각종 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어느 정도 축소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적 공군의 격파 정도와 우리의 공군이 어느 정도 완전하게 지상군의 조직, 군사물자, 시설물을 공격하였는가 하는 데 따라 결정된다. 공중작전에서 가장 나쁜 것은 어떤 임무를 완전히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력이었을 때이다. 예를 들면 복괴 내에서는 철도교량이 전쟁전에 비해 4~5% 밖에 안 되었으나 이것만 가지고도 트럭과 지게를 사용, 충분한 정제된 보급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무장정찰과 도로차단에 보다 많은 출격이 필요했다. 이 세 가지 임무들 모두에서 전력이 산술적으로 증가하면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후방차단과 무장정찰의 마지막 10%는 완전히 절정에 오른 것이었다.

근접지원을 해야 할 상황은 지나갔으며 게다가 그 효과는 위와 같지 않았다. 한국전에서는 근접지원이 때때로 포병 역할을 대신했으며, 평시에는 한계목표(Marginal Targets)에 대해 광범위하게 운용되었다. 유럽 전쟁에서 전 출격횟수의 약 10%가 근접지원에 할당되었던 것과는 반대로 지난 2년동안의 근접 지원은 약 30%에 달하였다. 이는 후방지역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전력을 줄여버린 격인데 후방지역공격에서는 출격횟수당 적에게 입힌 피해가 훨씬 컸다. 적의 화력이 전선에 도착한 후 이를 파괴하려는 것보다 도착하기 전에 파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반면에 지상전의 상황이 정제되어 있지 않는 한, 나는 지상군에 대한 전면적인 근접지원이 결정적인 목표를 획득하는 데 그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다고 밝혀두고 싶다.

휴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한국전쟁의 제3단계는 종료되었다. 우리는 적이 아군의 인명과 물자를 소모시킴으로써 UN군을 지원하는 국가를 피폐케 하려 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이 지난 2년 사이에 이 전략을 포기해야 했던 것은 그 이유가 주로 공중작전 때문이었다. 그들의 전체적인 군사 체제는 분산되어 방어전에 알맞게 조정되었으며, 그들의 공군은 효과적으로 봉쇄되었고, 전쟁 발발 이후 그들의 누적된 피해는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전방의 기지에 공군을 다시 구축하려 했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으며 성공적인 지상공세를 기대할 수 없었다.

이제, 공군이 한국에서 승리하였다고 하는 공공연한 발언이 생각난다. 이는 북공군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압록강 저편에 대규모의 중공군과 대치하여 공중우세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렇게 평한 사람들조차 한국에서 적의 군사체제에 대한 공중작전이 공

군 본래 권리의 공중전 수행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투어야 했던 개념이었다. 공중활동의 많은 부분은 육군의 지원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중공격의 대부분은 전반적인 목표—유리한 조건의 휴전협정체결—을 위한 것이었다.

## 전략의 기원

소련 및 그 위성국가들과의 세계적인 투쟁 중의 하나인 최근의 한국전쟁을 돌이켜 보건대, 우리의 경험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준거기준(Frame of Reference)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중전에 있어서는 우리의 목표를 확실하게 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현대 공군력의 기동성 및 화력이 공격에 있어 많은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며, 동시에 적의 성질 및 아군에 가하는 급박한 위협으로 인해 우리의 목표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흐트러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회 대 취약성, 능력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운용전략을 결정해야 한다.

적군의 여러 요소에 대해 상대적인 취약성을 결정하는 것은 공격효과를 측정하는 과정이 된다. 만일 우리가 적의 공군·육군·해군을 눈앞에 떠 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공군이 이들의 인적·물적 장비를 공격하는 것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 중에는 2군(二軍) 또는 3군(三軍)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전쟁보급품, 통신 및 통제체계가 있다. 공격해야 할 국가적인 산업·사회·정치적 통제체계가 있다. 결국 이 여러 목표들을 공격함으로써 생기는 누적적인 효과는 바람직한 심리적 효과를 얻는 데 쓰여질 수도 있다.

한국전의 후반기에는 어느 정도로든간에 이 여러 요소들에 대해 평가를 하고 결정해야 했다. 이들은 특수한 정치군사적 상황과의 관련하에 고려되어야 했다. 이들은 또 변화하는 목표와의 관련하에 고려되어야 했다. 일반적인 견해와는 반대로 한국전은 대단히 복잡한 것이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정치 상황을 지원하는 제한된 군사행동으로서의 연구대상이었다. 게다가 이로 인해 특히 공군은 2차대전의 전술·전략 개념을 넘어 그것을 발전시켜야 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대다수의 초기 작전 중에는, 전술적인 의미에서 소위 전략폭격기(Strategic Bombers)의 사용에 대해 상당한 논쟁이 있었으며, 또 한국 내에 소위 전략적목표물(Strategic Targets)이 있느냐에 대한 토론이 분분하였고 공군력 운용에 있어서 정치적인 제약과의 많은 마찰이 있었다. 나는 우리가 어떻게 제한전을 다루어 나갔는가 하는 것과 전쟁을 치루면서 우리가 처음에 보다 간명하게 알아야 했던 여러 문제들이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전쟁의 마지막 2년동안은 적대행위를 종식함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싸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목표 때문에 공군력을 운용함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가 생겨났다. 이 전쟁에서 공군력을 제한된 목표를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약간의 진전을 이루었다.

이제까지의 논의로 명확해진 것은 공군력이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것은 한 국가체제의 모든 중요한 요소들을 위협할 수 있다. 이것을 기중, 작전종류 또는 목표의 종류로 구별하려 하면 혼란과 오해만 야기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것을 목표(Objectives), 위협(Threats), 기회(Opportunities)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위협 및 기회에 상응한, 우리가 얻고자 예상하는 결과가 공중공격의 비중, 시간 및 국면을 결정한다. 이러한 고려 요소를 공군력 운용의 형태에 성공적으로 융합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복잡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주요한 목표이며 책임이다.

# 성공적(成功的)인 지휘관(指揮官)의 길

이 기 관



## 1. 지휘관이란

군대조직에 있어서 지휘관이라 하면 일정 단위 이상의 부대를 지휘 통솔하는자를 말하며 매우 폭넓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군인복무규율 시행세칙에 명시된 지휘관의 정의를 살펴보면 “부대의 핵심이며 부대와 성패에 대하여 전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고, 미공군 사전에 의하면 “지휘 통솔을 하는 위치에서 근무하는 관리자”라 규정하고 있고, 남광우 감수 이상사 발행 국어 사전에 의하면 “지휘권을 가지고 군대를

지휘 통솔하는 관직 또는 그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지휘관에 대한 정의는 실로 다양하며 매우 함축성 있는 개념이나, 일반적으로 군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로서 파악하고 있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다.

현재 군대 조직은 국가 사회가 가진 가장 젊고 혈기 왕성한 청년층으로부터 인생의 경험을 충분히 쌓은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연령 구성이 다양하며, 동일계층에서도 성장 배경, 성격, 학력 등이 실로 천차만별이어서 이들을 단일의 군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하는 지휘관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본고에서는 필자가 각급 부대의 대대장, 기지전대장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보아온 조직사회의 제 현상을 횡단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집단의 제 현상에 대처하는 지휘관의 역할과 성공적인 지휘관의 길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 2. 조직 관리상 나타나는 제현상

여기서는 개개인의 관리과정에서 볼 수 있는 현상과 집단 전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현상, 그리고 집단관리에서 볼 수 있는 순기능적 현상과 역기능적 현상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 가. 개개인의 분석

먼저 군대조직의 인적 요소인 개개인을 지휘통솔하는데 있어서 지휘관으로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요소인 욕구(Needs)와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 (1) 욕구(Needs)

인간의 욕구상태는 실로 무한대인 바, 제반 욕구의 발생상태는 행동화에 큰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업무능률과 목표 지향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절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지휘관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일찌기 “마슬로우”(A. H.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 a. 생리적 욕구 (Physiological Needs)
- b. 안전 욕구 (Safety Needs)
- c. 소속과 애정 욕구 (Belongingness and Love Needs)
- d. 자존 욕구 (Esteem Needs)
- e. 자기실현 욕구 (Self Actualization Needs)의 5가지 욕구형태로 분류하고, 이것은 단층을 이루고 저차의 욕구에서 점차 고차의 욕구가 촉발되어 간다고 하였다.

한편 “에리히 프롬”(E. Fromm)은 그의 명저 “건전한 사회”(The Sane Society)에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 a. 관련성에 대한 욕구 (The Need for Relatedness)
- b. 초월의 욕구 (The Need for Transcendence)
- c. 귀족의 욕구 (The Need for Rootedness)
- d. 정체감에 대한 욕구 (The Need for Identity)
- e. 정향과 헌신의 테두리에 대한 욕구(The Need for a Frame of Orientation and Devotion)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욕구의 형태를 지휘관이 인식하여야 할 필요성은 욕구의 조건이 만족되지 아니 하였을 때 욕구불만(Frustration)이 발생하며, 이것은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고 특히 제반사고의 근본적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 (2) 개인차(Individual Difference)

인간의 다양한 욕구상태와 더불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개인적 속성으로서 개인차를 들 수 있다.

먼저 각 개인은 신체적, 성격적, 지능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한편 생활환경, 생활정도, 학습, 경험, 교육관계, 종교 및 사회적 활동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집단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차는 흔히 무시되어 “동일계급, 동일능력”의 원칙으로 일관하기 쉬우나 성공적인 지휘관이 되기 위해서는 다

양한 개인차를 인식하여 이를 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 개인차가 무시된 획일적 관리는 낮은 업무능률과 침체된 사기, 욕구불만으로 이어진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한다”는 말은 바로 이와 같은 개인차를 인식하고 인사관리를 하라는 뜻으로 풀이 된다.

### 나. 집단의 구조 분석

다음은 편제상에 나타나 있는 조직구조가 아닌 동일 또는 유사한 계급 집단의 관리상 나타나는 각종 비공식 그룹의 형태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 (a) Circle 형

각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일정한 그룹을 형성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이다.

#### (b) Star 형

인기가 있거나 또는 주목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몇 사람이 모이는 관계이다.

#### (c) 반목형

중심 인물이 없이 서로 대립, 경계하는 관계이다. 여기에는 개인끼리 서로 반목하는 경우와 집단끼리 서로 반목하는 두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조직 내부에는 편제상 인가된 대대장, 실장, 과장, 계장 등의 직위만이 아닌 각종 비공식적 소집단(Informal Small Group)이 있는 바 성공적인 지휘관은 이와 같은 Group의 동향을 잘 파악하여 이를 지휘관리에 이용하여야 한다. 그런 대집단의 형상에서 특히 유의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소외된 장병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집단 내부의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은 외톨박이의 인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불평을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왕왕 문제 장병으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Team Work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 다. 집단의 순기능적 현상

#### (1) 집단 구성원의 개성적인 매력

함께 근무하는 장병—상관, 동료, 부하—들의 개성, 언행, 자질 등이 타부서의 장병들보다 뛰어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때 구성원들 간에는 소속감이 생겨 집단 내에는 생기가 넘치고 모든 구성원이 열성적으로 임무에 임하는 계기가 형성된다. 특히 타 부대의 지휘관보다 훌륭한 지휘관 밑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하들의 소속감과 업무의욕, 높은 사기는 일기당천의 전투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 (2) 집단 자체의 활동

장병 각자가 자기의 활동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소화하고 이것이 고차적인 애국심으로 승화될 때 집단의 사기와 응집력(Group Cohesiveness)은 강해진다. 장병 각자가 국방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가치의 중요성을 스스로 느끼는 분위기의 조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3) 집단의 목표

개인의 목표와 집단의 목표가 일치하거나 개인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이다. 과거에 “군에 가면 한 3년 푹 썩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는 군에 가서 하나도 배우는 것이 없고 자기 정체 내지 퇴보만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장병들에게 가슴에 스미는 지휘통솔을 하지 못하였고, 이상적인 지휘관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으며, 집단생활에서만 이 느낄 수 있는 참다운 즐거움과 이를 만끽할 수 있는 병영 분위기 조성을 하지 못한 지휘관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4) 의식적 일시적 소집단의 형성

이는 지휘관이 특별한 경우 기존의 공식 조직을 그대로 두고 임시적으로 비공식 소집단을 형성시켜 동기 유인(Incentive)을 주어 경쟁시키는 것으로서 잘 활용하면 집단의 사기 앙양에 큰 효과가 있다. 예컨대 일련의 집단구성원을 계급 구분없이 키 순으로 세우고 짝수 홀수로 Group을 지어 Group 대항 축구경기를 갖도록 하는 것은 단체의 Team Work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라. 집단의 역기능적 현상

집단에는 순기능적 현상에 수반하는 역기능적 현상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집단의 발전을 방해하는 저해요인은 어느집단에나 있다. 조그마한 병리, 병폐는 그 집단의 발전을 위한 효모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직장 집단에서의 각종 병리 현상은 효모 역할이 아니고 발전을 저해하고 단결을 해치는 암적인 존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조직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역기능적인 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직장집단 내부의 경우

(a) Line과 Staff의 불화, 갈등 : 예컨대 Line 위에서 Staff이 왕국을 형성함으로써 양자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이다.

(b) 원리 원칙의 지나친 강조 : 각급 관리자가 지나치게 원리 원칙만을 강조하고 융통성을 무시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는 관리자가 법규규칙의 강요를 하나의 권한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c) 전통주의 : 새로운 환경 변화—쇄신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옛것을 그리워하고 미련을 가지는 경향으로서 발전적인 조직형성을 위해서는 추방 배격해야 할 사고방식이다.

(d)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단절 : 각급 관리자가 공식적인 권한 행사에만 집착하여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등한시하는 경우로서 집단의 사기침체와 불만에 이은 사고요인

을 형성하게 된다. 지휘관은 상의하달(Downward Communication) 뿐만 아니라 특히 하의 상달(Upward Communication)의 통로가 원활하게 되어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모집단과 소집단의 경우

집단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집단 내부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Informal Group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공식 집단 내지 소집단은 모집단의 목표달성에 장애요소로 등장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인복무규율에서도 각종 출신별, 성분별 동창회나 종친회, 연고지 모임 등은 해체시키거나 군인 참가를 불허하고 있으며 종교, 학술, 체육 활동 등 범국민적 모임도 참모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3) 소집단 상호간의 경우

앞서의 “집단의 구조분석”에서 반목형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것은 외부적으로 명백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업무 수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 실로 조직의 단결과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요소이다.

따라서 각급 지휘관은 소속 집단 내부에서의 공식적·비공식적 그룹 상호간의 반목 대립이 있는가를 잘 살펴서 이를 단결과 화합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3. 집단의 제 현상에 대처하는 지휘관의 역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직사회의 각 구성원은 다양한 욕구와 개인차가 있고, 집단 내부에는 순기능적 현상과 역기능적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서 조직체의 제반 요소를 통합 조정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적 요소는 바로 지휘관임을 알 수 있다.

흔히 각급 지휘관은 자기 집단의 높은사기와 일치된 단결력을 강조하는 나머지 집단 내부의 병리현상을 애써 무시하고 표면화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나 성공적인 지휘관으로서 이처럼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없다.

실로 지휘관은 자기 조직 내부는 물론 타 조직과의 관계에 있어서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군은 개인을 위주로 하는 일반사회와는 달리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따라서 다양성의 원리가 아닌 획일성의 원리가 지배한다. 전체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각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관계로 장병들은 심리적 갈등으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지휘관리에 있어서의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집단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의 조정에 있으며, 이를 여하히 조직의 기본목표와 조화시키느냐에 지휘통솔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본다.

여기에 대처하는 지휘관리의 요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 마디로 지휘관의 부하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대국적인 부대 지휘가 아닌가 한다.

### 가. 참다운 부하사랑

말로만 떠드는 부하사랑 내지 지휘관의 마음 속에만 있는 부하사랑이 아니라 하루 하루의 지휘관리를 통해 부하 장병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부하사랑이 되어야만 한다.

옛날 명장이 전쟁할 때에 어떤 사람이 대(竹) 광주리에 탁주 단지를 담아서 장군에게 바치니, 장군은 그 술을 혼자 먹지 않고 냇물에 부어 놓고 자기도 병사들과 함께 냇물을 마셨다고 한다. 한 동이의 술로써 냇물에 술맛을 내지는 못할지라도 장군이 혼자 먹지 않는 그 의기에 감동되어 군사들은 장군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결심했다는 사례가 있다. 이것은 하나의 음식이라도 부하들과 나누어 먹으려는 장군의 후의에 감동되었기 때문이다.

### 나. 대국적인 지휘관리

흔히 “소아적 리더십”과 “부하에 대한 자상한 배려”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하에 대한 지나치게 현미경적인 지휘관리는 부하에게 이상과 꿈을 심어주지 못하고 “저분은 비록 계급은 높으나 일반 실무자로서 적합하며 지휘관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지휘통솔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장병들의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은 바로 “지휘관의 지휘관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실로 지휘관의 대국적인 지휘관리야말로 장병들의 사사로운 개인욕구를, 생사를 초월하는 애국심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요체인 것이다.

옛날 중국 초나라 장왕의 고사는 “대국적인 지휘관리”의 일례가 된다. 장왕의 왕비는 그 미모와 아릿다움으로 못사람들이 사모하는 바 되었는데, 어느 여름 밤 궁중의 연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무렵 일진광풍으로 연회석의 촛불이 모두 꺼져 버렸다. 이때 평소 왕비를 사모하던 어느 신하가 왕비에게 접근하여 추태를 부리자 왕비는 그 자의 갓끈을 뜯어 쥐고 즉시 불을 켜서 무엄한 자를 찾도록 소리 쳤다. 그러나 장왕은 불을 켜지 못하게 하고 신하들에게 모두 갓끈을 뜯어 버리도록 명령함으로써 일시적 충동으로 실수를 저지른 부하를 용서하는 대왕의 풍모를 보여 주었던 것이다.

### 다. 끊임없는 자기향상 노력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조직사회 내부 구성원의 의식구조도 달라지고 있다. 끊임없는 변화에 대처할 수 없는 리더십은 성공적일 수 없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관리기법을 부단히 연구 습득하기 위하여 지휘관은 항상 끊임 없는 자기 향상 지식과 덕성의 함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옛 말에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다"라는 말이 있다. 지휘관이 의식구조의 변화, 새로운 과학기술, 제반 지식의 혁명적 발달을 주시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지식과 경

험으로 부대를 운영하려고 할 때 그 부대는 고여서 썩은 물과 같이 신선한 맛을 잃고 침체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 4. 성공적인 지휘관의 길

이상에서 성공적인 지휘관이 되기 위하여는 개인과 집단 내부의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필요하며, 이를 통합, 조정하여 바람직한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 a. 참다운 부하사랑
- b. 대국적인 지휘관리
- c. 끊임 없는 자기향상의 노력이 필요함을 논하였다.

성공적인 지휘관리의 비결은 수천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지금도 논의와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본인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바는 "어떤 경우에 이것이 다른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으나 모든 경우에 늘 다른 것보다 훌륭한 것은 없다"는 점이다. 즉 만고불변의 지휘관리의 요체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고 오직 “지휘관—부하—상황”의 3위 1체에 의해서 이룩되는 조직관리에서, 지휘관 다운 지휘관의 원칙과 임기응변의 조화의 묘가 중요한 것이다.

여기서는 필자가 감명깊게 읽은 “윌리엄 반 더살”(William R. Van Dersal)의 “정부와 기업에 있어서의 성공적인 지도자(The Successful Supervisor in Government and Business)의” 요점을 적어보면서 결론에 대하고자 한다.

### 지도자는

-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부하를 나무라는 것을 삼가라.
- 정실에 흐르지 말라.
- 업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라.
- 불충분한 지시적 명령을 하지 말라.
- 감독자의 잘못을 그 부하에 뒤집어 씌우지 말라.
- 자기의 잘못을 자인하라.
- 부하를 옹호하고 부하의 이익을 위해 싸우라.
- 부하가 하는 일에서 허물을 찾으려 하지 말라.
- 부하의 사적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
- 부하가 하는 일을 너무 세밀하게 감독치 말라.
- 필요한 권한은 부하에게 위임하라.
- 부하들을 일단 신뢰하라.
- 어느 부하의 소문을 다른 부하와 뒷공론하지 말라.

- 부하의 성적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라.
- 부하들에게 적당한 자료 또는 편의를 제공하라.
- 명확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라.
- 자기 부하를 늘 하급자로서만 취급치 말라.
- 너무 상급자인체 하지 말고 부하들이 상관이라는 것을 너무 인식하지 않도록 하라.
- 부하가 창의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라.

**명장명언(名將名言)**

장군(將軍)에게 진정한 지혜(知慧)란 결단(決斷)과 강한 실천력(實踐力) 그것이다.

- 몽고메리 -

## 남북(南北) 연방제론(聯邦制論) 비판(批判)·〈Ⅲ〉

편집실(編輯室)

### VI. 연방주의(聯邦主義) 제(諸) 명제(命題)의 한반도(韓半島) 적용타당성(適用妥當性) 검토(檢討)

본(本) 장(章)에서는 제(第)5장(章)에서 정리(整理)하여 본 연방주의(聯邦主義)의 제(諸) 명제(命題)가 남북한관계(南北韓關係)에도 적용(適用)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편이상 우리의 남북한관계(南北韓關係)의 특수성(特殊性)을 먼저 살펴보고 연방주의(聯邦主義)의 제(諸) 명제(命題)의 각각(各各)에 대하여 남북한관계(南北韓關係) 적용타당성(適用妥當性)을 하나씩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 1. 남북한관계(南北韓關係)의 기본성격(基本性格)

남북한관계(南北韓關係)는 외부세력(外部勢力)에 의한 분단(分斷)이라는 역사적(歷史的) 특수성(特殊性) 때문에 두개의 독립(獨立) 국가(國家)도 아니고 하나의 국가(國家)도 아닌 특이(特異)한 관계(關係)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南北關係)는 사실상(事實上)에 있어서는 수 개(個)의 독립국(獨立國)처럼 되어 있다. 남부(南部)의 지역(地域)과 인구(人口)를 독자적(獨自)으로 완전히 관장하고 있는 대한민국(大韓民國)과 북부(北部)의 지역(地域) 및 인구(人口)를 장악하고 있는 북한정권(北韓政權)은 대외적(對外的)으로 모두 독립국가(獨立國家)로 행위(行爲)하며 또한 독립국(獨立國)으로 승인(承認)받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그러나 남북한(南北韓)은 모두가 서로를 국가(國家)로 인정(認定)하지 않을 뿐더러 타방(他方)의 영역(領域)과 인구(人口)를 미수복(未收復)의 영역(領域) 및 국민(國民)으로 인정(認定)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타국(他國)일 수도 없다. 이 경우는 일국내(一國內)의 이지역간관계(二地域間關係) 또는 일국이정부관계(一國二政府關係)의 성질(性質)을 갖는다고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남북한관계(南北韓關係)가 법적(法的) 측면(側面)에서는 일국이정부관계(一國二政府關係)이지만 사실상(事實上)으로는 이국간관계적(二國間關係的) 성격(性格)을 갖는 특수관계(特殊關係)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가. 일국이지역적(一國二地域的) 성격(性格)

대한민국(大韓民國)은 헌법(憲法) 제(第)3조(條)에서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영토(領土)는 한반도(韓半島)와 부속도서(附屬島嶼)로 한다」고 규정(規定)하여 북한정권(北韓政權)의 존재(存在)를 법적(法的)으로 부인(否認)하고 있다. 이 헌법(憲法)에 따라 다른 법(法)에서도 북한(北韓) 지역(地域)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의 미수복영역(未收復領域)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북한(北韓)의 헌법(憲法)에서도 제(第)1조(條)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고 규정(規定)하여 역시 전한국민(全韓國民)을 국민(國民)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 마디로 법적(法的)으로는 대한민국(大韓民國)과 북한(北韓)은 같은 영토(領土)와 인구(人口)를 경쟁적(競爭的)으로 대표(代表)하는 두개의 국가(國家)를 가진 하나의 실체(實體)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특수관계(特殊關係)에서 대한민국(大韓民國)과 북한(北韓)은 같은 영토(領土)와 인구(人口)를 경쟁적(競爭的)으로 대표(代表)하는 두 개의 국가(國家)를 가진 하나의 실체(實體)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특수관계(特殊關係)에서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입장(立場)에서 보면 북한정권(北韓政權)은 하나의 국내반란단체(國內反亂團體)로서 법적(法的)으로 존재(存在)를 인정(認定) 못받으나 국토(國土)의 일부(一部)를 실효적(實效的)으로 점유(占有)하고 있는 불법단체(不法團體)가 되고, 북한측(北韓側)에서도 똑같은 입장(立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법적(法的) 성질(性質)보다 정치적(政治的) 인식(認識)은 조금 완화(緩和)된 셈이다. 우리 정부(政府)의 기본입장(基本立場)은 이미 1972년(年)에 공식(公式)으로 인정(認定)한 바와 같이 「일민족(一民族) 일국가(一國家) 이정부(二政府)」의 관계(關係)이다. 즉 최소한(最小限) 북한정권(北韓政權)을 「지방적사실상(地方的事實上)의 정부(政府)」로 인정(認定)하여 준 셈이다.

특히 1973년(年) 6월(月) 23일(日) 고(故) 박정희대통령(朴正熙大統領)이 발표(發表)한 「평화통일(平和統一) 외교정책(外交政策) 특별선언(特別宣言)」에서는 상호내정불간섭(相互內政不干涉), 북한(北韓)의 국제기구가입(國際機構加入) 용인(容認), 북한(北韓)의 유엔가입(加入) 용인(容認) 등을 선언(宣言)함으로써 사실상 평양정권(平壤政權)의 존재(存在)를 승인(承認)한 셈이다.

그러나 우리가 통일(統一)을 국가정책(國家政策)의 최고지침(最高指針)으로 하고 있는 한(限), 북한(北韓)을 국제법상(國際法上)의 국가(國家)로 인정(認定)하는 이국관계(二國關係)는 될 수 없다. 그리하여 한국(韓國)은 「6·23선언(宣言)」에서 북한(北韓)을 국가(國家)로 인정(認定)치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 역시 「일국내(一國內) 이지역(二地域)」의 특수관계(特殊關係)는

계속되고 있다.

### 나. 이국간(二國間) 관계적(關係的) 성격(性格)

한반도(韓半島)의 분단(分斷)은 외부세력(外部勢力)에 의한 정치적(政治的) 분단(分斷)으로 시작된 것이고 사회내(社會內)의 이질성(異質性) 때문에 분단(分斷)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南北)의 분단지역내(分斷地域內)에서는 지난 30년간(年間) 독립(獨立)된 정치공동체(政治共同體)로 굳어져 있다.

여기서 사회공동체(社會共同體)의 해체과정(解體過程)을 보면 첫째로 시간(時間)이 감에 따라 나뉘인 각(各) 부분(部分)은 점차로 각각(各各)의 국제체제(國際體制)에 묶이게 되었으며, 둘째로 이에 따라서 각(各) 부분(部分)에서는 독자적(獨自的)인 사회화(社會化)가 진행(進行)되고 서로 간에는 커뮤니케이션의 단절(斷切) 때문에 서로 타방(他方)과 점차로 떨어져 나갔고 민족(民族)의 이질화(異質化)가 심화(深化)되었으며, 셋째로 위의 두 가지 변화(變化)에 따라 태도(態度)에서의 변화(變化)가 일어나서 각(各) 부분(部分)에 속하는 사람들은 과거(過去) 같은 국가(國家)에 속했던 다른 반부(半部)보다도 국제사회(國際社會)와의 연계(連繫)와 이익(利益)의 동질성(同質性)을 더 강(強)하게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大韓民國)과 북한(北韓)은 정치(政治), 경제(經濟), 사회(社會), 문화(文化)의 모든 영역(領域)에서 완전(完全)한 독립사회(獨立社會)를 형성(形成)하고 있다. 남북간(南北間)에는 모든 차원(次元)에서 절단(切斷)되어 있으며 기능적(機能的) 상호의존성(相互依存性)은 전무(全無)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한국(韓國)과 북한(北韓)은 각각 소속(所屬)된 진영(陣營)의 국가(國家)들과 긴밀(緊密)한 연계(連繫)를 맺고 있다.

이러한 점(點)에서 볼 때 남(南)과 북(北)은 각각 독립국가(獨立國家)이고 그 관계(關係)는 완전한 이국관계(二國關係)와 같다. 뿐만 아니라 중립적(中立的)인 이국간(二國間)의 관계(關係)가 아닌 극한(極限)의 적대관계(敵對關係)에 놓인 이국간관계(二國間關係)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연방주의(聯邦主義) 제(諸) 명제(命題)의 적용타당성(適用妥當性)

위에서 살펴본 현(現) 남북한관계(南北韓關係)의 성격(性格)을 전제(前提)로 하고 제(第)5장(章)에서 추출(抽出)해 놓은 연방주의(聯邦主義) 통합(統合)의 제(諸) 명제(命題)의 한반도(韓半島) 적용타당성(適用妥當性)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즉 제(第)5장(章)에서 추출(抽出)한 바 있는 연방주의(聯邦主義)의 동기성립(動機成立), 성장(成長)에 관한 세부명제(細部命題) 24개(個) 가운데 주요명제(主要命題)인 15개(個) 명제(命題)의 각각에 대하여 남북한관계(南北韓關係)에 적용가능여부(適用可能與否)를 검토(檢討)해 보기로 한다.

### 가. 사회체제(社會體制)의 이질성(異質性)

남북한(南北韓)은 분단(分斷)된 1945년(年) 이전(以前)에는 역사(歷史), 혈통(血統), 문화적(文化的)으로 동질성(同質性)이 강한 사회(社會)였다. 그러나 분단후(分斷後) 지난 30여년간(餘年間) 독자적(獨自的)인 사회화과정(社會化過程)을 통하여 동질성(同質性)은 파괴되고 이질화(異質化) 현상(現象)이 심화(深化)되고 있다.

북한(北韓)이 마르크스 레닌주의(主義)라는 외래사조(外來思潮)를 도입(導入)함으로써 생산(生産)된 남북(南北)의 이질화(異質化) 현상(現象)은 언어역사(言語歷史), 문화(文化), 예술(藝術) 등의 전통문화(傳統文化), 심리동향(心理動向), 사고특성(思考特性) 등의 심리구조(心理構造) 그리고 생활양식(生活樣式), 풍습(風習)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分野)에 걸쳐 진행(進行)되고 있어 통일(統一)을 저해(沮害)하는 중요요소(重要要素)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보면 우선 남북한(南北韓)은 일원적(一元的) 정치제도(政治制度)의 형성(形成)보다도 복합국가(複合國家) 형성(形成)이 적합(適合)하다고 볼 수 있다.

### 나. 국토(國土)의 광활(廣濶)

한반도면적(韓半島面積)은 남한(南韓)의 10만(萬)km<sup>2</sup>와 북한(北韓)의 12(萬)km<sup>2</sup>를 합하여 총(總) 면적(面積) 22(萬)km<sup>2</sup>로서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작은 규모이다.

그러나 인구(人口)는 남한(南韓)의 3,800만명(萬名)과 북한(北韓)의 1,700만명(萬名)을 합쳐 총(總) 5,500만(萬) 여명(餘名)에 이르고 있어 인구밀집도(人口密集度)가 높은 편이다. 이처럼 국토(國土)가 협소하고 인구밀도(人口密度)가 높은 상태에서는 연방제(聯邦制)가 부적합(不適合)하다.

### 다. 공동이념(共同理念)의 존재(存在)

한국(韓國)의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와 북한(北韓)의 공산주의(共產主義)라는 상호(相互) 불상용(不相容)의 이념적(理念的) 대립관계(對立關係)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국가건설(國家建設)을 위한 공동(共同)의 정치이념(政治理念)이 발견(發見)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방적(聯邦的) 통합(統合)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연방주의(聯邦主義)를 구성단위간(構成單位間)의 공존(共存)과 공동(共同) 목표(目標) 추구(追求)를 위한 기관통합(機關統合)으로 정의(定義)할 때, 북한(北韓)의 평화공존(和平共存) 거부태도(拒否態度)는 연방제도(聯邦制度) 형성(形成)에 역기능적(逆機能的) 요소(要素)로 작용(作用)한다.

### 라. 공동방위(共同防衛)에 관한 인식(認識) 및 외부적(外部的)

#### 힘의 작용방향(作用方向)

한반도주변환경(韓半島周邊環境)은 미국(美國), 중공수교(中共修交)와 일본(日本), 중공접근이후(中共接近以後) 기존남방삼각관계(既存南方三角關係)와 북방삼각관계간(北方三角關係間)에 교차현상(交叉現象)이 나타남으로써 화해기운(和解氣運)이 감돌고 있으나 한국(韓國)의 대미(對美)·일(日) 유대관계(紐帶關係)와 북한(北韓)의 대중(對中)·소(蘇)협력관계(蘇協力關係)는 여전히 지속(持續)되는 냉전상황(冷戰狀況)이 존치(存置)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정치구조하(東北亞政治構造下)에서는 한국(韓國)이 중(中)·소(蘇)로부터 군사적(軍事的) 위협(威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북한(北韓) 역시 미(美)·일(日)로부터 불안감(不安感)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한국(韓國)의 적(敵)은 북한(北韓)의 우방(友邦)이 되고 북한(北韓)의 적(敵)은 한국(韓國)의 우방(友邦)이 되는 셈이다.

그러기 때문에 남북한(南北韓)이 공동(共同)으로 느끼는 군사적(軍事的) 불안감(不安感)의 대상(對象)(공동(共同)의 적(敵))을 발견(發見)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연방형성(聯邦形成)에 적합(適合)한 조건(條件)이 되지 못한다.

또한 한반도분단(韓半島分斷)이 외부세력(外部勢力)에 의해 강요(強要)된 것이고 따라서 한반도통일(韓半島統一)도 주변강대국(周邊強大國)에 의해 영향(影響)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現) 시점(時點)에서 한반도(韓半島) 주변정세(周邊情勢)가 남북한(南北韓)의 연방적(聯邦的) 통합(統合)에 긍정적(肯定的)이나 하는데 관해서는 의문(疑問)의 여지(餘地)가 있다. 왜냐하면 주변강대국(周邊強大國)들의 대한반도(對韓半島) 정책(政策)은 현상고정(現狀固定)의 방향(方向)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현상변경(現狀變更)을 의미(意味)하는 연방통합(聯邦統合)은 원(願)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마. 경제적(經濟的) 통합(統合)에 대한 소망(所望)

한국(韓國)은 기능주의적(機能主義的) 통합접근방식(統合接近方式)에 의거 경제(經濟) 사회(社會) 문화(文化) 분야(分野)의 교류(交流)와 협력(協力)을 북한측(北韓側)에 제의하여 왔다.

북한(北韓)은 연방제안(聯邦制案)을 제의한 초기(初期)에는 경제교류(經濟交流)를 주장하다가 남북대화초기(南北對話初期)부터 군사(軍事) 정치문제(政治問題)의 선결(先決)을 내세워 지금은 경제통합(經濟統合)에 관한 관심(關心)을 전혀 표시(表示)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南北韓)의 경제통합(經濟統合)에 대한 의견불일치(意見不一致)는 연방형성(聯邦形成)을 자극하지 못한다.

### 바. 상호간(相互間) 지식(知識)과 작용(作用)

남북한(南北韓) 국민(國民)은 아직도 강한 민족의식(民族意識)을 지니고 있다. 이 점(點)은 남북한(南北韓) 통합(統合)에 유리(有利)한 조건(條件)이 된다.

그러나 지난 30년간(年間) 두 사회간(社會間)에는 군사적(軍事的) 대치상태의(對峙狀態外)

에 상호작용(相互作用)이 거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한국(韓國)은 72년(年)의 7·4남북공동성명(南北共同聲明)과 73년(年)의 6·23선언(宣言) 이후(以後) 북한(北韓)을 대화(對話)와 공존(共存)의 상대(相對)로 인정(認定)하는 조치(措置)를 취했으나 북한(北韓)은 그 반대(反對)의 입장(立場)을 취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남북대화기(南北對話期)를 제외(除外)하고는 쌍방간(雙方間)에 접촉교류(接觸交流)와 같은 상호작용(相互作用)이 전무(全無)하고 오직 군사적(軍事的) 대치상태(對峙狀態)로 인해 긴장(緊張)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현재(現在)로서는 연방형성(聯邦形成)을 위한 응집정도(凝集程度)가 낮다고 하겠다.

### 사. 통합경험(統合經驗)

남북한(南北韓)은 단일민족국가(單一民族國家)로서 1,300여년(餘年)이나 되는 통일(統一)된 역사(歷史)와 전모(傳貌), 경험(經驗)을 보유(保有)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주민(南北韓住民)은 과거(過去)의 통합경험(統合經驗)에서 많은 이익(利益)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완전한 통일(統一)은 물론 연방적(聯邦的) 통합(統合)에도 긍정적(肯定的)인 영향을 끼친다.

### 아. 연방(聯邦) 헌법적(憲法的) 기반(基盤)

분단(分斷) 30여년(餘年)이 경과(經過)하면서 남북한간(南北韓間)에 합의(合意)한 유일한 문서(文書)는 7·4남북공동성명(南北共同聲明) 밖에 없으나 이것 역시 북한측(北韓側)에 의해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방헌법(聯邦憲法)을 거론(擧論)할 여건(與件)이 전혀 구비(具備)되지 않고 있다.

북한(北韓)이 연방제안(聯邦制案)을 20여년(餘年) 가까이 주장해 오면서 그들의 연방중심기구(聯邦中心機構)로 「최고민족위원회(最高民族委員會)」 구성(構成)에 관해서만 언급할 뿐, 여타(餘他)의 연방헌법(聯邦憲法) 및 법적(法的) 기반조성(基盤造成)에 관해서는 일언반구(一言半句) 설명이 없다.

이처럼 남북간(南北間)에 연방헌법거론(聯邦憲法學論) 자체(自體)가 안 되는 상태에서 연방헌법(聯邦憲法)의 내용(內容)이 되는 연방기구설치(聯邦機構設置), 연방정부(聯邦政府)와 지분국간(支分國間)의 권한배분(權限配分), 지분국(支分國) 상호간(相互間)의 지위문제(地位問題) 등은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

### 자. 연방체(聯邦體)와 구성체(構成體)

남북한간(南北韓間)에 연방헌법적(聯邦憲法的) 기반구축(基盤構築)이 어렵다고 전제(前提)할 때 이 명제(命題)에 대한 검토는 논의할 필요(必要)가 없다.

### 차. 연방체내(聯邦體內)의 대의성(代議性)

김일성(金日成) 유일체제(唯一體制)라는 북한(北韓)의 전제정치구조(專制政治構造)로 보아 연방주의(聯邦主義)가 필요로 하는 정치적(政治的) 대의성(代議性)의 실현(實現)은 불가능(不可能)하다.

특히 북한(北韓)이 한국(韓國)과의 평화공존(平和共存)을 거부(拒否)하는 배타적(排他的) 흡수정책(吸收政策)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정치적(政治的) 협력(協力), 자제(自製), 지방민주주의(地方民主主義)와 같은 민주적(民主的) 정치풍토(政治風土)의 조성(造成)을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現實的)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북한경제(北韓經濟)의 낙후성(落後性)과 사회적(社會的) 폐쇄성(閉鎖性)은 연방주의(聯邦主義) 성장(成長)을 저해(沮害)하는 기본동인(基本動因)으로 작용(作用)할 가능성이 있다.

### 카. 지분국간(支分國間)의 균형(均衡)

남북한(南北韓)이 인구(人口), 경제력(經濟力), 군사력(軍事力) 등 국력면(國力面)에서 불균형현상(不均衡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인구면(人口面)에서는 한국(韓國) 3,700만(萬), 북한(北韓) 1,697만(萬)으로 한국(韓國)이 2배(倍)가량 많고, 경제력면(經濟力面)에서는 1978년말(年末) 현재(現在)의 국민총생산액(國民總生產額)에 있어 한국(韓國) 459억(億)달러, 북한(北韓) 92억(億)달러, 그리고 일인당(一人當) 국민소득(國民所得)에 있어서는 한국(韓國) 1,242달러, 북한(北韓) 542달러로 한국(韓國)이 북한(北韓)을 크게 능가하고 있다.

또한 군사력면(軍事力面)에서는 한국(韓國)이 방어적군사개념(防禦的軍事概念)에 입각하고 있는 반면(反面)에 북한(北韓)은 공세적(攻勢的) 성격(性格)을 강하게 띠고 있고 병력(兵力)도 한국(韓國) 60만(萬), 북한(北韓) 70만(萬) 수준(水準)으로 차이(差異)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한간(南北韓間)의 국력(國力)의 불균형현상(不均衡現象)은 설령 연방제(聯邦制)가 성립(成立)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의 운영(運營)을 파괴하는 요인(要因)으로 작용(作用)할 가능성이 크다.

### 다. 지분국간(支分國間)의 경계선(境界線)

남북한간(南北韓間)에 휴전선(休戰線)이 있으나 북한(北韓)은 휴전선(休戰線)의 변경(變更)을 무단히 획책하여 왔다. 북한(北韓)은 휴전협정(休戰協定)의 효력지속(効力持續)을 전제(前提)로 한 한국(韓國)의 불가침협정제(不可侵協定提議)를 거부(拒否)하고 대미평화협정(對美平和協定) 체결(締結)을 주장하고 있고 서해(西海) 5개도서(個島嶼) 연안(沿岸)이 자



기 영해(領海)라는 주장하(主張下)에 동(同) 해역(海域)에 대한 침범행위(侵犯行爲)를 자행한 바 있다.

이러한 북한태도(北韓態度)로 보아 휴전선(休戰線)의 안정성(安定性)은 기대하기 어렵다.

### 파. 지분국간(支分國間)의 상이(相異)한 법체계(法體系)

한국(韓國)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이념(理念)에 입각한 법체계(法體系)를 유지(維持)하고 있는 반면(反面)에 북한(北韓)은 사회주의(社會主義) 법체계(法體系)를 유지(維持)하고 있다.

쌍방(雙方)의 법철학(法哲學)이 근본적(根本的)으로 상이(相異)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방주의(聯邦主義) 성장(成長)의 긍정적(肯定的)인 면(面)보다 부정적(否定的)인 면(面)이 더 많다고 하겠다.

### 하. 비중앙집권화(非中央集權化)된 정당체계(政黨體系)

북한(北韓)과 같은 사회주의국가(社會主義國家)에서의 정당조직(政黨組織)은 형식상(形式上) 복수정당(複數政黨)이 있다고 하나 실제(實際)로는 프롤레타리아 전위당(前衛黨)이라고 부르는 공산당외(共產黨外)의 타(他) 정당활동(政黨活動)은 배제(排除)되고 있다.

또한 공산당(共產黨) 조직체계(組織體系)는 민주집중제원리(民主集中制原理)에 입각하여 중앙집권화(中央集權化)되어 있다. 이러한 정당조직체계(政黨組織體系)에서는 소련식(蘇聯式) 연방운영(聯邦運營)은 가능(可能)할지 모르지만 서방식(西方式) 연방운영(聯邦運營)과 성장(成長)은 불가능(不可能)하다.

## 3. 종합(綜合) 평가(評價)

위에서 검토한 연방적(聯邦的) 통합명제(統合命題) 14개(個)에 대한 종합평가(綜合評價)를 한다면 대체(大體)로 다음과 같은 판정(判定)이 가능(可能)해진다.

첫째로, 총(總) 14개(個) 조건(條件) 중에서 적합(適合)한 것은 2개(個)이고 부적합(不適合)한 것이 12개(個)인데 적합조건(適合條件)은 사회체제(社會體制)의 이질성(異質性)과 통합경험(統合經驗) 뿐이다.

부적조건(不適條件) 중 연방주의(聯邦主義) 성립동기(成立動機)에 관련된 것이 5개(個)이고 연방주의(聯邦主義) 성립요건(成立要件)과 연방주의(聯邦主義) 성장(成長)에 관한 것이 7개(個)이다.

다시 말해 연방적(聯邦的) 헌법기반(憲法基盤)과 연합주의(聯合主義) 성장(成長)에 관한 명제(命題)는 남북한간(南北韓間)에 하나도 적용(適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적조건(不適條件) 12개(個) 중 그 사유(事由)가 북한(北韓)의 기본입장(基本立場), 정책(政策)에 기인(基因)한 것이 2개(個), 남북한(南北韓)의 상호성(相互性)에 기인(基因)한 것이 3개(個)로 나타나는 바 북한태도(北韓態度) 중에서도 그들의 교조주의적(教條主義的)인 체제(體制)와 정책(政策)에 주로 연유(緣由)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現在)와 같은 북한태도(北韓態度)로 보아 연방주의(聯邦主義)가 성립(成立)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연방제도(聯邦制度)가 형성(形成)되었다고 가정(假定)하더라도 북한(北韓)이 태도(態度)를 수정(修正)하지 않는 한(限) 그 연방제도(聯邦制度)는 곧 파괴(破壞)될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둘째로, 북한(北韓)의 고려연방제안(高麗聯邦制案)은 상기(上記) 14개(個) 명제(命題) 중 다음 5개(個) 명제(命題)에 관해서만 그들의 입장(立場)을 막연히 밝히고 있을 뿐 나머지 명제(命題)에 대해서는 일절(一切)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① 사회체제(社會體制)의 이질성(異質性) — 「남북한(南北韓)의 현존(現存) 정치제도(政治制度) 존속(存續)」

② 공동방위(共同防衛)에 관한 인식(認識) — 「연방제(聯邦制)에 의해 국방(國防)의 단일화(單一化) 실현(實現)」

③ 경제통합(經濟統合)에 대한 소망(所望) — 「연방제(聯邦制) 의한 경제교류(經濟交流), 합작(合作) 실현(實現)」

④ 상호간(相互間) 지식(知識)과 작용(作用) — 「연방제(聯邦制) 실시(實施)는 남북(南北)의 접촉(接觸)과 협상(協商)을 보장(保障)함으로써 상호이해(相互理解)와 협조(協調)가 가능(可能)」

⑤ 통합경험(統合經驗) — 「오랜 역사(歷史)를 거쳐 같은 말과 풍습(風習)과 문화(文化)를 이루어 온 민족(民族)의 일시적(一時的)으로 갈라진 두 부문(部門)을 다시 연합(聯合)」

특히 북한(北韓) 남북공동이념(南北共同理念) 문제에 관해 「연방(聯邦)이 서로 다른 제도(制度)와 사상이념(思想理念)에 기초해서 실시되지만 나중에는 통일정부(統一政府)로 단일(單一)한 정치제도(政治制度)와 사상이념(思想理念)으로 된다」고 애매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北韓)이 연방형성(聯邦形成)의 공동이념(共同理念)에 관해 뚜렷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은 「고려연방제안(高麗聯邦制案)의 치명적(致命的)인 결함(缺陷)이라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북한(北韓)이 연방주의(聯邦主義) 성립요건(成立要件)(연방헌법적(聯邦憲法的) 기반(基盤)과 연방주의(聯邦主義) 성장(成長)에 관한 명제(命題)에 대해서는 일절(一切) 말조차 꺼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고려연방제안(高麗聯邦制案)」이 연방(聯邦)이 아닌 국가연합(國家聯合)에 가깝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주장(主張)하는 의도(意圖)가 선전적(宣傳的)인데 있기 때문이다.

이상(以上)의 설명(說明)을 도식화(圖式化) 하면 <표(表) 2>와 같다.

〈표(表) 2〉

남·북한(南·北韓) 관계(關係)에 투영(投影)해 본 연방주의(聯邦主義) 제(諸) 명제(命題)

區分	命題番號	命題內容	北韓의 現實條件	北韓이 言及한 命題	備考(不適合한 事由)
聯邦主義 成立動機命題	1	社會體制的 異質性	+	○	相互性
	2	國土的 廣闊	-		地理的 條件
	3	共同理念의 存在	-		相互性
	4	共同防衛에 關한 認識(外部的  힘에 作用)	-	○	"
	5	經濟的 統合에  대한  所望	-	○	北韓態度上의 問題點
	6	相互間 知識의 作用	-	○	"
	7	統合經驗	+	○	相互性
聯邦立 主要條件	8	聯邦憲法의 基盤	-		北韓態度上의 問題點
聯邦主義 成長命題	9	聯邦體와 構成體間의 意思疏通	-		"
	10	聯邦體內의 代議性	-		"
	11	支分國間의 均衡	-		相互性
	12	支分國間의 境界線	-		北韓態度上의 問題點
	13	支分國間의 法體系	-		相互性
	14	非中央集權化된 政黨體系	-		北韓態度上의 問題點
			+ 2 - 12	5	北韓態度上의 問題點 7 相互性 6 歷史, 地理的 條件 1

## VII. 결론(結言)

일반적(一般的)으로 분단(分斷) 또는 분열국가(分裂國家)를 하나로 통일(統一)(통합(統合))하는 데는 단일적(單一的) 통합(統合) 모델과 복합적(複合的) 통합(統合) 모델로 구분(區分)할 수 있다. 단일적(單一的) 통합(統合) 모델에는 병합(併合)과 합병(合併)의 유형(類型)이 있고 복합적(複合的) 통합(統合) 모델에는 국가연합(國家聯合)과 연방(聯邦) 등의 유형(類型)이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볼 때, 북한(北韓)의 「고려연방제안(高麗聯邦制案)」은 외형상(外形上)으로는 연방(聯邦)을 가장(假裝)한 국가연합(國家聯合)에 가까운 것이나 실제(實際)로는 공산주의적(共產主義的) 병합개념(併合概念)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北韓)의 연방제안(聯邦制案)은 공산주의(共產主義)의 평화공존론(和平共存論)을 그 이론적(理論的) 배경(背景)으로 하고 있으며 합작(合作)과 통일전선전술(統一戰線戰術)을 실천지침(實踐指針)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이론(理論)과 전략적(戰略的) 배경(背景)에서 출발(出發)한 북한(北韓)의 연방제안(聯邦制案)은 60년대(年代)와 70년대초(年代初)에 이르기까지는 적극적(積極的)이고 전략적 차원(戰略的次元)에서 주장(主張)되었으나 그 후로는 소극적(消極的)이고 전술적(戰術的) 차원(次元)(주로 선전적(宣傳的) 목적(目的))에서 주장(主張)되고 있다.

한편 북한연방제안(北韓聯邦制案)을 소련의 연방제도(聯邦制度)와 중공(中共)의 연합정부론(聯合政府論), 동독(東獨)의 국가연합론(國家聯合論), 베트남의 인지연방론(印支聯邦論)과 비교(比較)해 볼 때 이들이 표방한 통합개념(統合概念)의 형태(形態)나 명칭(名稱)이 어떻든 다음과 같은 특징적(特徵的) 양상(樣相)이 나타난다.

정책적(政策的) 특성(特性)으로, 이들 5개(個) 공산국가(共產國家) 모두가 통일(統一)에의 과도적(過渡的) 조치(措置), 즉 통일(統一)된 강력(強力)한 사회주의(社會主義) 국가건설(國家建設)을 위한 중간단계(中間段階)로 연방(聯邦), 연합(中間段階)을 주장(主張)하였으며 그것이 형성(形成)된 후(後)에는 공산당(共產黨) 중심(中心)의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 지도(指導)를 행함으로써 민족(民族) 자결(自決)이나 구성국간(構成國間)의 평등관계(平等關係)를 형식화(形式化)하였다.

환경적(環境的) 특성(特性)으로는 북한(北韓)을 제외(除外)하고 모두가 다수민족(多數民族)이 공존(共存)하거나 지분국(支分國)의 전통성(傳統性)이 강(強)한 사회체제(社會體制)의 이질성(異質性)과 광활(廣闊)한 영토적(領土的) 배경(背景)을 가지고 연방(聯邦), 연합(聯合)을 시도(試圖), 형성(形成)하였으며 외세배격(外勢排擊) 및 외세위협(外勢威脅)으로부터의 자기보호(自己保護)라는 자각(自覺)이 연방(聯邦)이나 연합(聯合)을 자극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북한(北韓)의 연방제안(聯邦制案)이 환경적(環境的)인 면(面)에서는 타(他) 공산국가(共產國家)의 연방(聯邦), 연합(聯合)과는 상이(相異)하나 정책적(政策的)인 면(面)에서는 동일(同一)한 맥락(脈絡)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서구적(西歐的) 개념(概念)의 연방적(聯邦的) 통합명제(統合命題)를 연방주의(聯邦主義)의 성립동기(成立動機), 요건(要件), 성장(成長)이라는 시간성(時間性)을 중심(中心)으로 도출(導出)할 때 14개(個) 주요변수(主要變數)가 추출(抽出)된다. 그리하여 이 14개(個) 주요변수(主要變數)를 현(現) 남(南)·북한관계(北韓關係)에 대입(代入)시켜 그 적합성(適合性) 여부(與否)를 검토(檢討)해 본 결과(結果) 다음과 같았다.

총(總) 14개(個) 조건(條件) 중에서 적합(適合)한 것은 2개(個)이고 부적(不適)한 것이 12개(個)로 분류(分類)되었다. 적합조건(適合條件)은 남(南)·북한(北韓) 사회체제(社會體制)의 이질성(異質性)과 통합경험(統合經驗) 뿐으로서 이것은 연방제(聯邦制)가 남북한(南北韓)의 이질화(異質化) 현상(現象)을 포괄(包括)하는 정치제도(政治制度)로서는 가치(價値)가 있고 그러할 경우 역사적(歷史的) 통합경험(統合經驗)이 긍정적(肯定的)으로 작용(作用)하리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부적조건(不適條件) 12개(個) 중 연방주의(聯邦主義) 성립동기부적(成立動機不適) 5, 성립요건부적(成立要件不適) 1, 성장부적(成長不適) 6으로 나타난 것은 남북한관계(南北韓關係)에서 연방주의(聯邦主義)가 그 성립동기(成立動機)부터 시작하여 운영(運營)에 이르기까지 적용(適用)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표시(表示)해 주는 것이다.

또한 부적조건(不適條件) 12개(個) 중 부적사유(不適事由)가 북한(北韓)의 교조주의적(教條主義的)이고 극좌모험주의적(極左冒險主義的)인 이념(理念), 체제(體制), 정책(政策)에 기인(基因)한 것이 7, 남북한(南北韓)의 상호성(相互性)에 연유(緣由)한 것이 3으로 나타나는 바, 이것은 연방주의(聯邦主義)의 부정적(否定的) 요인(要因)이 북한측(北韓側) 태도(態度)에 주로 달려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측(北韓側)이 상기(上記) 14개(個) 변수(變數) 중 5개(個) 변수(變數)에 관해서만 그들의 입장(立場)을 막연히 밝히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연방주의(聯邦主義) 성립요건(成立要件)(연방헌법적(聯邦憲法的) 기반(基盤)과 연방주의(聯邦主義) 성장(成長)에 관해서는 일절(一切) 언급(言及)을 하지 않고 있는 데에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특히 연방부적조건(聯邦不適條件) 중 남북간(南北間) 공동(共同)의 정치이념(政治理念)의 부재(不在)는 연방제(聯邦制) 형성(形成)에 원초적(原初的)인 부정요소(否定要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연방주의(聯邦主義)를 그 구성단위간(構成單位間)의 평화공존(平和共存)과 국가공동목표추구(國家共同目標追求)를 위한 기관통합(機關統合)으로 정의(定義)할 때 공동목표(共同目標)의 기초(基礎)가 되는 공동(共同)의 정치이념(政治理念)이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남북한(南北韓)처럼 이데올로기적으로 첨예하게 대결(對決)하고 있는 분단국(分斷國)에 있어서의 통일문제(統一問題)는 사실상 최고형태(最高形態)의 정치문제(政治問題)인만큼 분단쌍방간(分斷雙方間)에 정치이념(政治理念)의 수검화(收斂化)가 되지 않고서는 연방통합(聯邦統合) 같은 것은 아예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以上)과 같은 검증(檢證)으로 보아 현재(現在)와 같은 남북한관계(南北韓關係) 여건하(與件下)에서 연방형성(聯邦形成)을 위한 응집정도(凝集程度)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過言)이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처럼 남북간(南北間)에 이념(理念) 체제(體制)가 상이(相異)하고 적대적(敵對的) 불신감(不信任)이 상존(尙存)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당장 연방통합(聯邦統合)을

거냥하기보다는 오히려 전쟁억제(戰爭抑制)와 상호간(相互間)에 평화공존관계(平和共存關係)를 설정(設定)하는 것이 당면(當面)한 과제(課題)로 제기된다.

그리하여 평화공존관계(平和共存關係)를 바탕으로 상당기간(相當期間) 동안 교류(交流)와 협력(協力)을 통해 신뢰(信賴)와 동질성(同質性)을 회복함으로써 분단(分斷)으로 인한 불편(不便)과 고통(苦痛)이 없는 준통일상태(準統一狀態)를 만든 다음, 단일정치체제(單一政治體制)를 형성(形成)하는 것이 합리적(合理的)이고 현실적(現實的)인 방도(方途)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우리가 제시한 평화통일(平和統一) 삼대기본원칙(三大基本原則)의 정신(精神)이며 논리(論理)인 것이다.

이것은 곧 남북관계(南北關係)의 존재양식(存在樣式)을 초기단계(初期段階)에서는 민족공동체(民族共同體)와 같은 일종(一種)의 국가연합(國家聯合)과 유사(類似)한 형태(形態)로 출발시킨 뒤, 어느 시기(時期)에 가서 북한(北韓)의 대남자세(對南姿勢)가 군사주의(軍事主義), 혁명주의(革命主義)를 포기하고 호혜적(互惠的) 평화공존방향(平和共存方向)으로 전환(轉換)되는 조건(條件)에서 보다 권 통합(統合)으로 발전(發展)시켜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명장명언(名將名言)

선견력(先見力)없는 용기(勇氣)는 불필요한 결과를 낳기 쉽고 용기(勇氣) 없는 선견력(先見力)은 박력(迫力)이 없어 임무(任務)를 수행하기 어렵다.

- 나폴레옹 -

장교단(將校團)은 어떠한 편제(編制)에서도 그 부대(部隊)의 심장(心臟)이요 정신(精神)이다. 따라서 전군(全軍)의 사기(士氣)와 인화(人和)의 온상이며 군사전문지식(軍事專門知識)의 근원이어야 한다.

- 릿지웨이 -



# 북한(北韓) 『주체철학(主體哲學)』의 관학적(官學的) 성격(性格)

## 소련 「철학교정(哲學敎程)」과의 비교분석(比較分析)

신 일 철(申一澈)  
〈고려대(高麗大) 교수(敎授)〉

### (지번호 차례)

1. 머리말
2. 북한관용철학의 성립과정
3. 「주체철학(主體哲學)」과 소련 「철학교리(哲學敎理)」의 관계(關係)
4. 소련의 철학논쟁(哲學論爭)이 북한에 미친 영향
5. 북한 「철학사전」의 「주체사상적(主體思想的)」 성격

### (이번호 차례)

6. 「주체철학(主體哲學)」의 기본적 성격
7. 결론

## 6. 「주체철학(主體哲學)」의 기본적(基本的) 성격(性格)

### 가. 김일성 1인철학의 구성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1973년에 시작되어 2년간 계속된 「철학강좌(哲學講座)」(김일성 방송대학 강의록)는 방송대학용(放送大學用)일 뿐만 아니라, 북한 전체의 획일적인 철학교정 입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강의록이 보다 더 주목되는 점은 여기서 처음으로 「주체철학(主體哲學)」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이 강론전체(講論全體)가 소위 「김일성 주체철학」의 내용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해 준 점이다.

전편(全編)에 걸쳐 김일성어록의 인용으로 가득찬 이 철학강좌는 북한이 철학의 이름으로 독자적인 철학교정을 내놓은 첫 작업인 동시에 김일성 1인철학(一人哲學)의 공식적 교과서라는 점에서도 가장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 강좌의 첫머리에서 「주체철학(主體哲學)」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김일성의 주체철학은 우리 혁명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혁명철학(革命哲學)이며, 마르크스·레닌주의(主義)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킨 우리 시대의 노동계급(勞動階級)의 불멸(不滅)의 철학이며, 인류(人類)의 철학발전에 일대 혁명적 전환을 일으킨 철학이다」

이 인용(引用)에서 소위 「주체철학」이 마르크스·레닌 등 「고전가(古典家)」들을 뛰어넘어 그 최고봉으로 이상화(偶像化)했고, 「인류철학의 발전에서 일대 혁명적 전환을 일으킨 철학」이라고까지 과장해서 극언(極言)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서술형식도 마르크스·엔겔스 등에서의 직접인용(直接引用)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정식으로 인용하여 각주(脚註)를 단 것은 이른바 김일성의 저작이나 「교시(敎示)」들 뿐이다. 물론 스탈린이나 모택동 사상(思想)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言及)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강좌(講座)에는 저자도 없고 체제상 철학교수들의 집단적 저작의 형태를 취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진정한 철학자로는 김일성(金日成) 1인(一人)만이 존재하게 된다. 소위 「주체철학」이란 김일성 1인의 어록 또는 「교시」를 골라내어 배열한 북한 특유의 철학교정이며, 그 기본(基本) 성격(性格)은 1966년 정치적 슬로건으로 선언된 「자주선언(自主宣言)」을 근간으로 해서 그 선언의 철학적 합리화·체계화를 통해 관제적(官制的) 이데올로기로 조작(造作)한데 불과하다. 이 점에서도 흐루시초프 이전의 소련 특히 스탈린 시대의 철학통제(哲學統制)와 방법(方法)과 유사하다. 또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해석권·발표권에 대한 철저한 일인독점도 스탈린주의적(主義的) 철학정책을 그대로 답습(踏襲)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체철학」을 북한이 조작할 때 항용 「창조적적용(創造的適用)」의 명분에서 북한 독자의 철학이데올로기를 구성할 수 있는 그 성립이유(成立理由)를 이 「철학강좌」는 「주체철학(主體哲學)」은 우리시대의 요구를 반영(反映)한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철학」이라는 데 두고 있다.

여기서 「우리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이라는 것은 마르크스·레닌은 그 당시대(當時代)의 요구에는 부응했으나 우리 시대의 요구까지는 반영 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언연 중에 김일성의 「주체철학」만이 우리 시대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시대의 요구」에 대해 「강좌」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국제적 규모에서 격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지며 세계의 모든 피착취 인민(人民)들과 피압박 인민(人民)들이 해방을 위하여 떨쳐 나르고 있는 위대한 투쟁의 시대(時代)이며, 혁명적 폭풍우의 시대(時代)입니다. 제국주의는 멸망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온 세계적 범위에서 승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투적인 「김일성(金日成)의 교시(敎示)」는 1960년대 이래의 평화공존노선(平和共存路線)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자본주의진영(資本主義陣營)과의 적대적(敵對的) 계급투쟁론(階級鬭爭論)에 입각한 일종의 「전쟁불가피론」을 전제하면서 아시아·아프리카지역에서의 「민족해방투쟁(民族解放鬭爭)의 시기로 규정하고 이 두 가지를 우리시대의 요구로 요약하고 있다.

북한독자의 철학이데올로기 개발의 필요성에 관해서 이 「강좌(講座)」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의 소련 중심주의(中心主義)에 대해서 뚜렷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국제공산주의의 현정세는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자주성과 독자성을 더욱 확고히 견지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다. 이와 같은 혁명 운동에서의 자주성(自主性)과 독자성(獨自性)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이 「강좌(講座)」는 운동의 단위가 「나라와 민족(民族)」이라고 해서 민족국가단위(民族國家單位)의 공산화운동(共產化運動)이 아직도 우리시대의 요구라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條件)에서 매개나라 혁명에 대한 그 어떤 국제적인 이른바 중앙적(中央的) 지도(指導)가 있을 수 없고 실지 오늘 그러한 것이 없다.」

「철학강좌」의 이 인용부분의 서술에서는 명백히 국제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 소련 공산당에 의한 「중앙적(中央的) 지도(指導)」를 부정하고 있다. 「자주선언(自主宣言)」이래 북한당국은 「노동계급의 정치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의 두 가지를 구분하고 그 민족적임무(民族的任務)에 역점을 두어 강조한다. 이 구분은 철학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마르크스·레닌적(的) 「일반이론(一般理論)」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조정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나라마다 실정이 다르고 혁명 과업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와 다른나라의 경험 원리를 그대로 옮겨나와 가지고는 혁명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 중략 — 이것은 매개나라 당(黨)과 인민(人民)의 자주적 입장과 함께 창조적 입장을 견지하고, 교조주의(教條主義)·사대주의(事大主義)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思想)경향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기서 「각국간의 실정이 다르다」는 특수환경론(特殊環境論)이 「자주선언」의 기본적 논리로 이용되었고 또한 「주체철학」의 형성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8·15 이래 북한내의 스탈린 철학추종(哲學追從)을 포함해서 김일성의 정적(政敵)들, 즉 친소파(親蘇派)·친중공파(親中共派)에 대해 이들을 교조주의·사대주의로 규정하면서 「반(反)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경향」이라고 못박고 있다. 이러한 특수환경론(特殊環境論)은 북한독창의 것이 아니요, 이미 1920년대 우리나라 사회주의운동자(社會主義運動者)들 특히 여운형(呂運亨)이나 신간회운동자(新幹會運動者)들이 거론한 바 있고 가까이는 이탈리아의 토리아치 구조개혁론(構造改革論)을 제시하면서 각 나라마다의 독자적(獨自的)인 사회주의의 길을 제창한데서도 이미 제기되었다. 특히 그 이론적 근거로는 1960년대 소련 아카데미 철학연구소(哲學研究所)가 제시한 「사회주의적 내용에 있어서의 보편성(普遍性)과 민족적(民族的) 형식(形式)에 있어서의 특수성(特殊性)」 테제를 지적할 수 있다.

1962년 소련 제22차 당대회(黨大會)에서 채택된 소련 공산당강령(共產黨綱領)에서 「형식(形式)은 민족적(民族的), 내용(內容)은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문화(文化)」의 원칙을 제시하고 소극적이거나 「민족적 형식의 특수성」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모든 소비에트 민족공화국은 형제처럼 상호원조(相互援助), 무엇보다 먼저 위대한 러시아 민족의 원조의 도움으로 자국(自國)의 근대적(近代的) 공업을 이룩하고 자민족(自民族)의 노동계급의 인텔리겐차의 기간요원을 양성하고 형식은 민족적(民族的)이고 내용(內容)은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인 문화(文化)를 발전시켰다.」

이 문제에 대해 1962년의 소련 「철학교정」은 다민족(多民族)으로 구성된 소련 연방내의 민족문제 해결에 관해서,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개조(改造)는 과거의 문화(文化)를 모두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형식면에서 민족적 특수성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라고 쓰고 있다. 즉 「사회주의 제도는 온갖 종류와 형태의 민족적 억압을 소멸시키고 각 민족이 자기의 국가와 자기의 민족어와 민족문화 및 민족적 전통을 가질 권리로 인정하고」 그것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풀이 하고 있다. 소련의 관변철학지(官邊哲學誌) 「철학의 제문제」에서도 쓰아메리안의 논문을 통해서 「민족적 특성」이란 심리적 구조로서 관찰자에게는 파악하기 힘들 정도의 정서적(情緒的) 형식(形式)에 불과하고 그것은 문화(文化)의 독자성(獨自性)을 통해서 표현된다고 규정했다. 이는 모든 「사회주의민족(社會主義民族)의 심리적 구조의 공통성을 표현하는 각 민족의 문화에 있어서의 민족적 특수성은 국제주의적 내용을 가진다.」라고 해서 변증법적인 수사(修辭)로 민족적 특수성, 국제주의에 귀속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주체철학」은 소련철학의 이론적 배경에서 그 성립근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1인의 독창적 철학의 발상인듯이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김일성(金日成)은 우리시대, 즉 혁명의 시대의 수령이며 마르크스·레닌주의자이시며 주체철학은 바로 그이께서 창시하신 철학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철학을 김일성의 「창시(創始)」로까지 강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높은 단계의 철학」으로까지 추켜 올리고 있으나 기실 이 철학의 조작으로 공산독재와 그 강제 이데올로기 유지를 위해 철학의 통속화(通俗化)가 여지없이 감행된 것을 본다.

### 나. 「철학강좌(哲學講座)」의 기본구조

방송대학강좌(放送大學講座)인 「철학강좌(哲學講座)」는 2년간 방송분(放送分)의 방대한 것이다. 이 방송강의는 김일성대학 철학교수가 담당해서 강의했으나 그 기본 이데올로기적 구조는 김일성의 사상담당(思想擔當)이거나 당(黨)사상 통제 간부에 의해 꾸며졌을 것이고, 그것은 여러 집필자들 철학연구소의 연구사(研究士)나 연구원(研究員)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분담집필(分擔執筆)되었을 것이다.

이 강좌는 6장(章)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련 철학교정의 구성을 간추린 형태로 ① 철학(哲學)

② 정치론(政治論) ③ 인간론(人間論)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이 강좌는 소련의 철학교정처럼 짜임새있는 것도 아니고, 순서나 편장(編章)의 편성도 서로 다르다.

우선 이 「철학강좌」와 5편(編)으로 된 소련의 철학교정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초」의 목차 구성과를 대조해보면 쉽게 그 차이점에 착안하게 된다.

(a) 소련 철학교정의 목차

- 제 1 편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의 철학적 원리
  - 제 1 장 철학적 유물론
  - 제 2 장 유물론적 변증법
  - 제 3 장 인식론
- 제 2 편 유물사관
- 제 3 편 자본주의의 경제학
- 제 4 편 국제공산주의의 이론과 전술
- 제 5 편 사회주의(社會主義)와 공산주의(共產主義)

(b) 북한 「철학강좌」의 목차

- 제 1 장 서론
- 제 2 장 주체철학개요(主體哲學概要)
  - 제 1 절 주체철학의 근본문제
  - 제 2 절 주체 철학의 요구
  - 제 3 절 주체철학(主體哲學)의 기본입장(基本立場)과 방법(方法)
- 제 3 장 주체철학의 기본내용
  - 제 1 절 주체철학은 객관세계(客觀世界)와 인간개조(人間改造)의 무기(武器)
  - 제 2 절 물질세계(物質世界)의 전반적(全般的) 관련(關聯)과 발전(發展)
  - 제 3 절 세계사물현상(世界事物現象)들의 발전과정(發展過程)과 형태(形態)에 관한 유물변증법(唯物辨證法)의 기본법칙(基本法則)
  - 제 4 절 전체(全體)와 부분(部分)의 호상관계(互相關係)
  - 제 5 절 주체적(主體的) 인식(認識)의 변증법적(辨證法的) 과정(過程)
- 제 4 장 혁명(革命)과 투쟁(鬪爭)에 관한 이론(理論)
  - 제 1 절 사회의 본질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성(合法則性)
  - 제 2 절 계급적, 민족적, 사회적 해방을 위한 투쟁에 관한 이론과 방법
  - 제 3 절 혁명(革命)의 과정(過程)
  - 제 4 절 프롤레타리아 독재(獨裁)

제 5 절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반동적본질(反動的本質)

제 6 절 당(黨)에 관한 이론(理論)

제 7 절 국가(國家)에 관한 이론

제 8 절 인민대중(人民大衆) 동원(動員)에 관한 이론

제 5 장 사상의식(思想意識)의 본질(本質)과 인간개조(人間改造)

제 1 절 인간개조(人間改造)의 이론과 그 기본 방침

제 2 절 사회적 의식의 각이(各異)한 형태들

제 3 절 사회적 의식발전의 합법칙성(合法則性)

제 4 절 사회발전에서 사상의식(思想意識)의 역할

제 5 절 혁명적세계관에 관한 이론

제 6 절 공산주의 인간육성(人間育成)을 위한 기본원칙

제 7 절 온 사회의 혁명화(革命化), 노동계급화

제 8 절 혁명적(革命的) 인생관(人生觀)의 본질(本質)

제 9 절 김일성(金日成)은 우리 인민(人民)의 수령(首領)

제 6 장 김일성(金日成)의 주체철학(主體哲學)을 깊이 체득(體得)하여 이를 혁명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자.

양자를 그 형식적(形式的) 구성면(構成面)에서 대조해 보면 그 본 뼈대는 동일(同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산권의 철학 이데올로기의 기본원리는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史的) 유물론(唯物論)이며, 소련철학에서는 전후(戰後)에 와서 유물론적(唯物論的) 인식론(認識論)으로 반영론(反映論)을 또한 부문(部門) 추가했다. 이 점에서는 북한의 「철학강좌」는 제3장 「주체철학의 기본내용」에 이 3가지 분야를 배당하고 있다. 소련의 「철학교정」에서 제3절 「자본주의와 경제학」은 북한의 그것에는 결여(缺如)되어 있고 그 제4편 12장 「공산주의의 이론과 전술」은 「자주선언(自主宣言)」에 입각해서 「철학강좌」 제4장에서 다루고 있는 셈이 된다. 북한의 주체철학은 공공연히 오늘의 국제공산주의의 이론과 전술을 김일성주의인 듯이 내세우고 있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이란 소항목이 눈에 띈 정도이다. 소련 「철학교정」의 결편(結編)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문제도 북한의 「철학강좌」에서는 제4장의 제3절 「혁명의 과정」에서 다루고 있다. 특히 북한의 그것에는 「인민대중(人民大衆)의 동원(結編)에 관한 이론」이란 절(節)을 마련하고 여기서 「청산리정신(靑山里精神), 청산리방법(靑山里方法), 인민적사업작풍(人民的事業作風), 천리마운동(千里馬運動)」을 풀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철학강좌」의 기본구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테마는 제5장 「사상의식(思想意識)의 본질(本質)과 인간개조(人間改造)」이며, 소련 「철학교정」에서 제시된 「문화혁명」의 테제를 차용(借用)하여 이를 확대 강조하면서 이른바 「인간개조이론(人間改造理論)」



까지 제시하고 있다. 소련 「철학교정」에서는 그 제24장 「사회주의의 사회적 제법칙(諸法則)과 그 문화(文化)」에서 「문화혁명(文化革命)은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개조(改造)의 주된 구성부분이다.」라고 전제하고 있다. 여기서 소련의 「문화혁명의 개념은 전통문화(傳統文化)의 계승문제, 문화적(文化的) 혜택(惠澤)의 보편화, 인텔리겐차문제」 등을 지칭하는데 반(反)하여, 북한의 철학강좌에서는 이와 같은 소련의 「문화혁명(文化革命)」이나 「사회주의개조(社會主義改造)」 개념을 확대하여 대중(大衆)의 의식동원문제(意識動員問題)로 전화(轉化)시키고 있다. 아울러서 「주체철학」의 기본적 거점을 오히려 유물론보다는 의식동원의 적극적 역할, 상부구조(上部構造)로부터의 토대(土臺)에 대한 반작용(反作用) 등을 강조하여 일종의 전체주의적 정신주의(精神主義) 내지는 파시즘적(的) 관념론(觀念論)으로 그 철학적 입장을 바꾼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강좌 전편에 걸쳐 기본 테제로 내세우는 것은 인간(人間)이 주체이고 민족이 주체(主體)라는 인간결정론(人間決定論), 민족결정론(民族決定論)인데 이와 같은 인간결정론(人間決定論)은 자주선언(自主宣言)에서 내세운 「사상(思想)에 있어서의 주체(主體)」 즉, 주체사상을 통속화(通俗化)된 철학적 논리로 분장한 데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철학체계에는 김일성의 정치(政治) 슬로건이나 중요정책(政策) 테제가 고루 삽입되어 있다.

- ① 주체철학(主體哲學), 자주노선(自主路線)
- ② 반제(反帝) 반봉건(反封建) 민주주의혁명(民主主義革命) = 「남조선혁명(南朝鮮革命)」
- ③ 「민족경제건설」
- ④ 「남조선 군사팃독재정권의 반동적 본질」
- ⑤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 ⑥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
- ⑦ 「천리마(千里馬)운동」
- ⑧ 「김일성은 인민의 벗」 등,

이상과 같이 김일성정책 테제의 철학적 문장은 「혁명적 인생관의 본질」 장(章)에 와서는 그 극(極)에 달한다. 원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있어서는 「인간(人間)의 문제」, 「인생관(人生觀)의 문제」는 일단 관념론적이라 해서 부정하고 그것을 정치 경제적 실천, 당적 실천의 문제로 환원시켜 버렸다. 이 강좌가 여기서 인생관을 거론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인생관의 문제를 전적으로 외면(外面)하고 혁명적 실천으로 깨끗이 환원시키고 더우기 김일성(金日成)에 대한 개인숭배주의로 변질시키고 있다. 그 「혁명적 인생관의 본질」 장(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정의(定義)
- ② 수령(首領)에 충성(忠誠) 다할 관점(觀點)
- ③ 정치적생명(政治的生命)을 제1로 삼는 관점(觀點)
- ④ 혁명에 몸바침을 행복으로 여기는 관점
- ⑤ 집단 앞에 개인의 이익을 복종시키는 관점(觀點)

#### ⑥ 혁명의 전도(前途)를 낙관하는 관점(觀點)

이 절에서 소위 「혁명적 인생관」의 기본은 김일성 개인숭배에 두고 있고, 「정치적생명」 제1주의로 인생관의 문제를 모조리 당적실천(黨的實踐)을 위한 자동인형(自動人形)으로 과잉동조(過剩同調)하도록 강요하는 순응주의적(順應主義的) 태도를 권장하는 전체주의적(全體主義的) 인간관(人間觀)을 드러냈다.

그리고 행복론(幸福論)도 당적이익(黨的利益)을 위한 희생의 강요로 환원되고 혁명적 낙관주의 등을 원용해서 인생관(人生觀)의 내용으로 채우고 있다.

#### 다. 의식(意識)의 능동성(能動性) 문제(問題)

요컨대 「김일성(金日成) 주체철학(主體哲學)」의 구성에 있어서 지렛대가 되는 철학적 거점(據點)은 유물론적 철학원리보다는 「의식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게 된 1960년대 소련 「철학교정」의 수정부분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가 기왕의 철학원리로 고집해오던 물질결정론(物質決定論)이나 경제지상주의(經濟至上主義)만으로는 인간의 의식적 행위인 계급적 실천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계급의식의 적극적 역할을 부정하게 되는 이론적 딜레마에서 탈피하기 위해 소련 철학계는 전후에 철학 논쟁 중 가장 큰 두 가지 논쟁 즉, 토대(土臺)와 상부구조의 관계와 사회주의하의 모순문제를 전개했는데 소련철학이 의식과 더불어 상부구조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는 데로 크게 전환된 것은 토대와 상부 구조논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북한 총감」은 6·25 동란 후 북한 철학계가 주로 토대와 상부구조에 관한 논쟁으로 일관했다고 전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이 논쟁은 우선 소련에서의 토대와 상부구조 논쟁의 파급임에 틀림없다. 이 점에 대해서 소련의 「철학교정」은 다음과 같은 철학적 논점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 ① 실천이 진리의 기준이다.
- ② (토대와 상부구조에 관하여) 「역사발전과 인간의식의 능동성」 「사회발전에 있어서의 사상의 역할」 「사회발전에 있어서의 자발성(自發性)과 의식(意識)」

특히 소련 「철학교정」은 1962년 수정철학과 1971년 제3판에 와서는 대폭 인간결정론으로 기울고 인간의식의 능동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교정」은 「사회발전에 있어서의 사상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역사 합법칙성이 인간(人間)의 능동적 활동 가운데에서 나타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사회사상이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것의 승인이다」라고 전제하고 토대결정론도 아울러 대폭 수정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토대결정론은 유물사관의 공식이 제시되었다는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 서문에서 토대와 상부구조의 관계를 규정했는데 거기서 상부구조에 대한 토대의 규정적 역할과 상부구조의 구성, 상부구조의 변혁 등을 서술했다. 특히 토대결정론의 실마리를 준 것은 물질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관계에 대응되는 생산관계의 총체가 「사회의 통치구조를 형성한다. 이것이 현실적 토대이며, 그 위에 법률적 정치적 상부구조가 서로 또한 이 토대에 대응해서 사회의식의 일정한 형태가 있게 된다. 이 서문에서는 명백히 사회적

존재가 그 사회적 의식을 결정한다는 마르크스 자신의 유명한 「존재」 결정론적 명제를 역사면에 적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명제는 Gustav A. Wetter가 그의 Soviet Ideology Today (1966)에서 적절히 분석한 것처럼, 「역사적 유물론의 기초명제라고 하나 그 유물론적 성격이 애매하고 다만 역사관에 있어서 세계를 인간(人間)의 의식과 독립되어 있다」는 주장을 뜻하는데 불과하고 따라서 철학적 유물론과는 일단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Wetter는 위의 마르크스의 명제가 역사결정론(歷史決定論)에 빠져있고 이와 같은 역사발전을 지배하는 「자연적 필연성」이나 필연법칙(必然法則)에 대한 신념은 사회발전법칙에 대한 인간(人間)의 의식이 역사를 발전시킨다는 실천의 테제와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럽의 계몽사상에 뿌리를 둔 마르크스의 진보사관은 일종의 역사적 낙관론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그 토대규정성에 대한 신념은 「역사적 경제지상주의」(Historical Eeonomism)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급에게 혁명적 정치의식을 주입하여 혁명에 동원할 수 있는 직업적 혁명가 전위(前衛)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레닌주의에 와서는 그 주의주의적(主意主義的) 엘리트즘으로 인해 유물론과 상극되는 등 이론적 혼란을 가져왔다. 그러나 김일성 「주체철학(主體哲學)」의 기간을 이루는 인간결정론(人間決定論)이란 레닌주의의 주의주의적(主意主義的) 엘리트즘의 변종(變種)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식(人間意識)이나 상부구조(上部構造)의 적극적 역할에 관한 수정이론(修正理論)은 1950년 스탈린의 언어학 논문 「언어학에 있어서의 마르크스주의(主義)」에서 비롯한 토대-상부구조 논쟁의 귀결이며 이를 “Voprosy Filosofii”지(誌)의 M. D. 감마리의 논문 「토대와 상부구조 이론의 몇 가지 문제」에서는 이 논쟁이 스탈린의 상계논문(上揭論文)에 나타난 상부구조의 상호적 독립성에 관한 시사에서 연유되었다고 주장했다.

「상부구조(上部構造)는 자신의 토대를 능동적으로 수호한다는 이·브·스탈린의 정식(定式)을 한층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상부구조가 토대에 의존하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전체로서의 상부구조와 그 각각의 요소가 발전하는 경우의 일정한 상대적 독립성을 부정함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했다. 감마리는 「경제가 토대를 자동적으로 산출(産出)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인간의식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다. 이 감마리는 논문 속에서의 「상부구조의 능동적 역할과 그 요소의 발전에 있어서의 계속성」의 서술은 소련 철학계의 토대-상부구조 논쟁의 결론을 요약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소련 「철학교정」도 유물사관에 대한 치명적 약점을 비판한 서방측 비판자의 견해에 언급하고 있다. 즉 「그들(부르조아적)의 마르크스주의의 비판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마르크스주의자가 사회의 정신생활은 물질적 존재의 반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라고.

그러나, 「교정(教程)」은 「사회사상발생의 기원을 지적하는 것은 결코 그것이 사회사상의 의식을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지는 않는다」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리하여 「교정」은 다음과 같이 오히려 상부구조가 토대에 반작용해서 영향을 준다는 이른바 토대에 대한 상부구조의 반

작용적 결정론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의 성숙한 물질적 요구를 기반으로 발생한 사상은 이번에는 그것이 사회발전의 진전에 영향을 준다」

여기서도 사회의 사상이나 상부구조의 발생면에서도 토대결정론(土臺決定論)을 인정하면서도 일단 발생한 사상이나 상부구조는 토대에 능동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교정(教程)의 상부구조설이나 인간의 실천적 행위가 지닌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 DIAMAT의 수정론(修正論)이 기실 「주체철학(主體哲學)」의 이론적 거점이 된 것은 거의 의심할 바가 없다.

북한의 「철학강좌」는 물질과 의식의 상호관계에 관한 소련 철학계의 수정설(修正說)을 거의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철학강좌」는 물질이 의식을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의 물질결정론(物質決定論)은 일면적(一面的)이 되고 「물질의 1차성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라 해서 이 주장이 단지 세계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경험론적(經驗論的) 태도(態度)를 뜻하는 것으로 그 어의(語義)를 낮추고 우리의 의식(意識)은 「현실(現實)을 정확히 반영(反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의식의 능동적 역할에 관한 소련 철학의 수정설에 대해서 「철학강좌」는 그것이 마치 김일성(金日成) 개인이 심화, 발전시킨 독창적 주장인 듯이 변조하고 있다.

「김일성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물질과 의식의 호상관계, 특히 의식의 능동적 역할을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변증법적 유물론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리고 소련 철학에서의 물질(物質)과 의식(意識), 토대와 상부구조의 상대적 독립성의 이론은 「주체철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옮겨지고 있다.

「의식은 물질에서 규정되고 물질의 반영이라는 것, 물질이 1차적이고 정신이 2차적이라는 것은 결코 의식의 능동적 역할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의식은 물질에 그 원칙을 두고 물질에 의해서 형성되고 물질에 의해서 규정되지만, 그것이 일단 발생한 다음에는 상대적(相對的) 차이점(差異點)을 가지고 물질 세계에 대해서 실천을 통해 큰 힘으로 적극적으로 반작용한다」

이와 같은 「철학강좌」의 입장은 전후소련 철학의 수정에 따라서 물질의 1차성을 유지하면서도 인간의 의식적 능동성과 실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실천적 유물론(唯物論)으로 그 입장을 바꾸고 있다. 아마도 상부구조가 토대에 반작용(反作用)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이 「강좌」에서 처음일 것이다. 이로써 「철학강좌」는 전통적인 유물사관의 공식을 스스로 뒤엎은 것이 된다. 이에 대해 「강좌」는 고전기(古典家)들의 약점으로서 「의식의 물질에 대한 반작용의 측면에 대해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해명을 주지 못했다」라고 쓰면서도 그 수정이 이미 소련학계(學界)와 그 「철학교정」에서 이룩되었음을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지적하고 있지 않다.

## 라. 「사람」결정론(決定論)의 문제

이상의 비교분석에서 명백해진 바와 같이 소위 「주체철학」의 독창적 중심원리로서 내세우는 「사람」결정론(決定論)은 김일성의 독창이 아니라, 소련철학의 수정주의를 정치적으로는

반대하면서도 철학이데올로기 면에서는 전적으로 수용하는 양면성(兩面性)을 드러내고 있다.

「철학강좌」는 「세계와 사람과의 호상관계(互相關係)」에 대해서 이 문제가 철학의 근본문제라고 전제하면서 「철학의 근본문제는 세계를 개조하는 문제, 세계는 사람간의 호상관계 문제이다.」라고 단정하면서 「주체철학」에서의 「주체(主體)」가 마치 「사람」을 뜻하는 것처럼 서술하여 어느덧 유물론을 휴머니즘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특히 북한정치현실에서의 「사람」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박제된 사상의 로봇트이며 순응주의적(順應主義的) 인간형(人間型)인 동시에 김일성(金日成) 개인숭배(個人崇拜)의 광신분자(狂信分子)에 불과하다. 이점에서 「주체철학」은 Adam Shaff의 「인간(人間)의 문제」에서 제시된 사회주의적 휴머니즘과도 인연이 멀고 정치경제적 당적(黨的) 실천(實踐)의 영역 이외의 인간문제(人間問題)의 영역을 인정한 것은 결코 아니므로 오히려 북한사회에는 김일성지배(金日成支配)에 의한 혹심한 인간소외(人間疎外)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그 근거로 북한에서는 사상·언론의 자유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주체철학」은 「사람」을 정의(定義)하여 「물가(物價)와 사상(思想)과의 통일적 체험자인 동시에 실천의 경험자이고 개조자이다」라고 했다. 이 인간주의(人間主義)는 재래 마르크스주의적인 「공작인(工作人)」(Homo faber)적(的) 인간관(人間觀)을 수식하여 실천적 행위의 관점에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주체철학」은 그것이 애매하게 「사람」 위주의 철학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철학의 통속화(通俗化)를 감행했다.

「우리 철학은 사람을 위주로 한다.」 이와 같은 추상적인 정치적 슬로건류(類)의 인용구(引用句)로 가득찬 이 「강좌」는 결국 1966년의 정치적 「자주선언」을 놓고 그것에다 철학적 외피(外皮)를 씌워놓았다. 「자주선언(自主宣言)」에서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의 독자노선을, 추구한데 불과하지만, 그 선언(宣言)에 대한 철학적 합리화(合理化)인 「주체철학」에 와서는 「사람의 본능(本能)」까지 「자주성(自主性)」이라고 논리적 비약을 일삼는다. 여기서 「철학강좌」가 「자주선언(自主宣言)」에 대한 후속(後續)의 북한형 철학교정 조정 작업이 있음이 드러난다. 「사람에 있어서 자주성(自主性)은 생명(生命)이다」 「인간존중(人間尊重)의 철학이다」 등 슬로건을 나열하면서도 이 강좌는 그런 명제(命題)들을 철학적(哲學的) 원리(原理)와 논리적(論理的) 논증(論證)의 과정을 통해서 논술한 흔적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문서(文書)는 진정한 의미에서 철학이 아니라 정치구호(政治口號) 체계화(體系化)이며 김일성 우상화, 1인독재의 강제사회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그마이며 이 강좌의 제2장 「주체철학개요」의 제3절 「주체철학의 근본입장과 방법」이 주로 「자주선언」의 풀이를 장황스럽게 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 「강좌」의 성립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강좌가 1920년대 우리나라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비판을 통해 소련 「철학교정」에서 차용(借用)한 술어인 「민족허무주의」(National Nihilism)와 「사대주의(事大主義)」의 과오로 낙인찍고 대내적으로 김일성의 정객들에 대한 이데올로기 투쟁의 무기로도 사용하고 있다.

「사대주의는 1920년대 우리나라 공산주의운동 안에서 흑심하게 나타났고 사대주의자였던 종파분자들에게 의해 더욱 조장되었다」

여기서 「사대주의」는 1920년대 조선공산당의 코민테른 추방을 지칭한다고 하나 기실은 북한 내의 친소파 숙청의 명분이었고 종파분자란 6·25동란 이후 숙청된 남로파(南勞波) 일파(一派)를 지칭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반사대주의(反事大主義) 이데올로기는 소련 「철학교정」에서의 「사회주의적 애국심」(Socialistic Patriotism) 테제에서도 역시 차용(借用)하고 그것에 의거해 있다. 소련 내에도 대외투쟁에서 계급의식보다는 민족적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르크스주의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애국주의」를 재도입(再導入)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적 개인의 고도의 사상적 자질은 사회주의적 애국심이라는 감정에 나타나 있다. 이 새로운 사회주의적 애국심은 단지 조국의 토지나 주민, 습관, 언어, 그밖의 것에 대한, 인간(人間)으로서의 자연적 애착심일 뿐만 아니다. 그것은 우선 첫째로……사회주의 제도에의 복종이다」

소련이나 공산권의 이데올로기 형성에서는 민족주의(Nationalism)를 부르조아적이고 또한 국제주의와 배치된다고 해서 부정(否定)하면서 새로이 애국주의를 도입했고 그것을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절대적 복종심으로 개조했다. 모든 애국심은 제도 이전의 민족에 대한 자연적인 사랑의 감정이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복종심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소련의 「철학교정」도 이 애국심이 적극적 능동적 감정인 것은 「조국전쟁시기에 소련인이 보여준 위대한 헌신적 행위이다」라고 서술한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1960년대 이래 「자주선언」의 철학 이데올로기 합리화 작업 속에 소련의 「사회주의적 애국심」 체제를 차용하고 민족적 감정을 김일성체제에의 복종심 동원에 결합시켰다.

요컨대 「주체철학」에서의 중심적 테제인 「사람결정론(決定論)」은 비철학적인 허사(虛辭)인 동시에 자주선언의 철학적 장식품이며 이 이데올로기 체계화 작업에도 소련의 「철학교정」이 전적으로 원용된 것은 의심할 바 없다.

## 7. 결론

이상에서 1970년대 초에 북한에서 관용(官用) 철학(哲學)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김일성 주체철학」의 구조와 성격을 주로 소련 「철학교정」과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구명해 보았다. 이 논제(論題)는 그 자료적(資料的) 제약(制約)과 철학논술(哲學論述)의 통속화(通俗化)된 이론적 잡거성(雜居性) 때문에 별로 연구되지 않은 분야이다. 더구나 북한에는 사상(思想)의 자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철학연구의 자유도 전무(全無)이고 철학은 거의가 소련 「철학교정」의 직수입(直輸入)에 머물렀고 입수가 가능한 자료가 보여주듯이 북한학계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철학적 연구논문은 거의 없고 철학 이데올로기에 관한 한(限), 소련 철학의 테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한 논쟁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북한철학이 존재하는가라고 누가 묻는다면 그것은 소련의 철학교정과 완전히 동일(同一)하고 철학의 발언권자(發言權者)는 김일성(金日成) 1인 뿐이라고 대답해도 무방할 것이다. 1970년대에 와서 비로소 소련의 「철학교정」에서 상대적 독립을 추구하면서 1966년(年) 「자주선언(自主宣言)」의 정치노선에 대한 철학적 합리화 작업으로 본 논제(論題)의 연구대상인 「주체철학(主體哲學)」으로서의 교정(教程)이 발표된 것이다. 요컨대 이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주체철학」은 1970년대초 김일성 방송대학 강의를 「철학강좌」(1973~4년)로 발표되고 이 문서(文書)가 북한의 유일한 공식적(公式的)인 철학교정이요, 그밖의 소련 수정주의철학(修正主義哲學)은 부정하면서 철학 이데올로기의 해석·발표의 김일성 1인 독점이 완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철학정책은 1930년대 스탈린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의 해석권 독점을 그대로 추종한 소(小) 스탈린주의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

② 1966년(年) 「자주선언」에서 나타난 「주체사상(主體思想)」과 1970년대 초의 이 「김일성(金日成) 주체철학(主體哲學)」과는 일단 구별되어야 한다. 1960년대말까지 더구나 이 「철학강좌」 발표 이전까지는 「주체철학」이란 용어(用語)가 사용되지 않았고 1970년대초의 「철학사전」은 자주선언에서의 4자(自) 노선의 슬로건 중 「사상(思想)에 있어서의 주체(主體)」에 대한 사상교양사업(思想教養事業)을 위해, 당중앙(黨中央)으로부터 철학연구소(哲學研究所)에 내려진 연구논제(研究論題)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③ 그러나, 이 「철학강좌」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에서도 감히 김일성(金日成)을 제 1인자로 서술하고 그 「창조적(創造的) 적용(適用)」의 최고의 권위자(權威者)로 추켜 올리면서 마르크스·레닌 등을 「고전가(古典家)」라 해서 낡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낡은 철학자로 격하(格下)시키고 그 서술형식에서도 직접 마르크스나 레닌을 인용(引用)한 곳은 한 대목도 없다.

④ 이 「철학강좌」를 소련의 「철학교정」과 비교 분석한 결과, 이 철학 이데올로기 조작(造作)에서는 전적으로 소련철학을 이용하면서도 북한체제와 김일성 체제에 적합하게 선택, 변모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 「철학강좌」에서는 소련의 철학논쟁중 토대와 상부구조에 대한 소련의 수정이론(修正理論)에서 많은 차용(借用)을 볼 수 있다.

전쟁(戰前) 소련이나 공산주의 운동자에게는 유물사관(唯物史觀)의 공식으로 고정화(固定化)되어 있던 토대결정론에 대한 전후 소련에서의 수정인 「토대(土臺)와 상부구조의 상대적 독립성」 「상부구조의 토대에 대한 반작용적 영향」 설(說) 등을 이 「주체철학」은 전적으로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론을 빌려 유물론을 주의주의적(主意主義的) 정신주의로 변조(變造)하고 있다. 북한체제하에서 주민을 정치에 동원하는 의식동원(意識動員)의 현실을 「상부구조의 적극적 능동적 역할」 테제로 합리화(合理化)하고 있다. 이 점(點)에서 「주체철학」은 그것이 유물론인지 관념론인지 그 철학적 입장이 모호하고 오히려 정치적(政治的) 관념론(觀念論)

내지는 의식동원을 위한 전체주의적(全體主義的) 패시즘 철학의 성격(性格)을 띠게 되었다.

⑤ 「주체철학」은 「사람을 위주로 하는 철학」이라 해서, 「사람」 결정론(決定論)을 기본적인 입장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미 소련 「철학교정」에서도 제2판(수정판) 이래 물질결정론의 수정, 사상(思想)의 능동적 역할 등 인간 결정론으로 변질된 수정주의철학(修正主義哲學)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주체철학」은 1966년의 「자주선언」의 정치적 슬로건을 사후(事後)에 철학적으로 정당화(正當化)한 이데올로기 조작작업(造作作業)이었고 「주체사상」의 철학적 분장(扮裝)에 불과했다.

요컨대 김일성 「주체철학」은 북한에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의 직수입(直輸入) 30년만에 처음으로 독자적인 북한형 철학교정을 조직·생산해내었으나 그 내용은 결국 소련 철학교정의 차용(借用)·변조(變造)의 산물(產物)에 불과하고 북한에서는 철학에서마져 완전히 1인독점이 결행된 증좌(證左)를 보게한다. 다시 말해서 이 「주체철학」의 실질은 북한에는 자유로운 철학적 사색도 연구도 불가능하고 완전한 사상통제하에 박제(剝製)된 유일한 북한형 「공산경전(共產經典)」이 있을 뿐이고 철저한 철학 부재(不在), 철학적 연구의 불모성(不毛性)을 폭로해 준 것이 된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명장명언(名將名言)

부하(部下)에게 필승(必勝)의 신념(信念)을 심는 방법(方法)은 간단하다. 그것은 승리(勝利)의 기회를 만들어 스스로 체험케 하는 일이다.

- 롬멜 -

# 하늘의 행진곡

생기있게

정환갑실 작사  
윤성모 작곡

하늘은 우리들 남 아-의 무 위  
하늘은 신-세-기 람 구-의 무 위

은-익-을 솟-구-쳐 삼-만-오-천-쳐  
오-대-암 육-대-우 비-좁-은-이-록

비바람 뭉치구름 해치고또해쳐 오랑캐 잡자리피  
신비의 별나라로 은하수-건너 돼-한 그이름도

볼 리치-교자 삼 천 만삼-천-  
길 이빛-내외

리 의 하 날 - 날 으 자

# 솟아라 보라매

무서있게

정환갑실 작사  
윤성모 작곡

천 구름높고 날 이날 으스 우리들은보라 매  
억 들음해쳐 날 이날 으스 우리들은보라 매

높은의속에 다 피진보움 하늘높이부리 리  
이끼고말자 한뜻울모은 높 은기상낼 지 리

은-누 리 이름떨친- 배-달-의 아 들  
내-하늘 내겨레는- 내-가-지-킨-다

(후렴)

하늘천병우 리 무죄날개- 솟-아라보라 매

공 군 무 리는공군 공 군 섬 예의공군

필 승 필 승의공군 삼천만의물침 번

# 멋쟁이 용사

김종현 작사  
조광재 작곡



모 기는 외 가 꿀 간 젊 음 - 의 도 - 장  
보 약 라 람 찬 걸 음 멋 령 - 이 용 - 사



용 맹 란 사 나 이 가 람 함 께 용 천 다  
승 리 의 때 구 기 불 뵈 이 난 리 표



과 우 - 권 초 전 각 살 노 도 - 화 갈 이  
속 목 - 수 기 수 포 외 노 도 - 화 갈 이



무 영 화 무 췌 음 심 간 다 멋 쟁 이 용 사  
부 미 가 람 뽐 간 다 멋 쟁 이 용 사

(후렴)



안 저 라 수 복 이 외 이 넓 은 가 슴 에



너 와 나 세 역 사 의 주 인 - 공 이 다

# 용사의 충정

유지만 작사  
김학송 작곡



적색하고 웅장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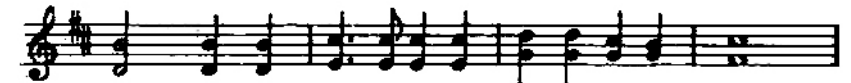
1 새 파 란 하늘 아 례 꽃 피는 강 산  
2 조 상 에 물 려 받 은 빛 나 는 유 산



빈 영 의 새 터 전 에 먼 동 이 났 다  
우 리 힘 다 하 여 서 지 켜 가 리 라



너 와 나 소 국 앞 에 바 친 젊 음 이  
너 와 나 부 름 받 은 용 사 의 충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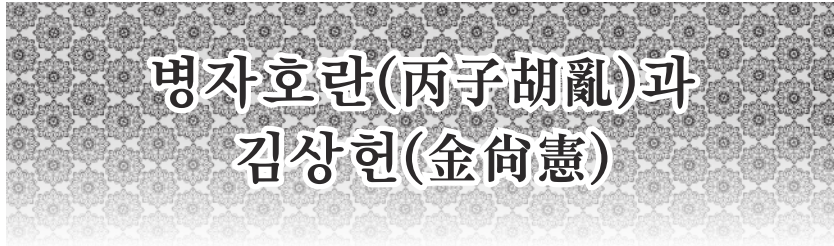


자 유 와 평 화 위 한 길 이 라 면 은  
겨 레 와 나 라 위 한 길 이 라 면 은



(후렴) 이 젊 음 바 치 리 라 이 목숨 바 치 리 라





## 1. 출생(出生)과 배경(背景)

김상헌(金尙憲)은 선조(宣祖) 3년(年)(1570년(年))에 태어나 효종(孝宗) 3년(年)(1652년(年))에 죽은 이조중기(李朝中期) 때의 학자(學者)이다. 그의 자(字)는 숙도(叔度)요, 호(號)는 청음(淸陰)이다.

그는 양근(楊根)의 서재(書齋)를 석실산인(石室山人)이라고 불렀으며 형(兄)이 되는 선원(仙源)과 함께 안동김씨(安東金氏) 문중(門中)에서 중추적인 인물(人物)이다.

김상헌(金尙憲)의 가계(家系)를 잠깐 소개하여 보면 고조(高祖)는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이었으며, 그의 증조(曾祖)되는 분은 평양서윤(平壤庶尹)이었고, 조부(祖父)되는 분은 해주군수(海州郡守)였으며, 부친(父親)되는 분은 둔녕부도정(敦寧府都正) 극효(克孝)였으므로 역시 선원(仙源)과 청음(淸陰) 이후에야 비로소 명공(名公)과 재상(宰相)이 나왔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가 태어나기는 외가(外家)에서 태어나서 백부(伯父)가 되는 대효(大孝)에게 입양(入養)을 하였으나 부친의 임지(任地)를 따라 전전하여 다녔으므로 겨우 아홉살 때부터 입학(入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를 지도하였던 스승들은 모두가 당대에서는 대문장가(大文章家)이며 명사류(名士流)였기 때문에 그는 곧 바로 학문적으로 쉽게 성장(成長)할 수 있었다

그에게 가르침을 준 가정적 배경을 살펴 보면 그의 외조(外祖)되는 분은 임당(林塘) 정유길(鄭惟吉)이었고 큰 형(兄)은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과 당형(堂兄)인 휴암(休菴), 김상(金尙) 준 등으로부터 일찌기 배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가 열여섯살되던 해부터는 월정(月汀) 윤근수(尹根壽)와 같은 대문장가(大文章家)로부터 학문을 배웠으며, 또 이어서 상촌(象村) 신흠(申欽)과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 서상(西塘) 류근(柳根) 등(等)의 문하(門下)에서 학문을 배웠다.

그런데 이들 학자는 모두가 당시 선조(宣祖)의 문화정책(文化政策)으로 고문부흥(古文復興)을 담당하였던 대문장가(大文章家)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스승의 문하(門下)에서 공부를 하

었다는 것은 그에게는 영광일 뿐 아니라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기회가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또 그와 같이 학우(學友)로서 같이 도학(道學)과 문장(文章)을 익힌 사람으로는 학곡(鶴谷) 홍서봉(洪瑞鳳)과 속악(束岳) 이안눌(李安訥)과 죽음(竹陰) 조희일(趙希逸)과 곡계(谷谿) 장유(張維) 등과 같이 학문을 연마하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당시 모두 뛰어난 재사(才士)들이었던 것이다.

선조(宣祖) 29년(年)(1596년(年))에 그의 나이 27세(歲) 때에 처음으로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곧 승문원(承文院)에 들어가서 부정자(副正子)가 되었다. 이어 통례원·시강원·이조좌랑·홍문관시강원 등 여러 관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당시 정계(政界)는 매우 어지러웠던 시대여서 중앙의 관서에 있다가 북방(北方)으로 나가있어야만 되었는데 그 후 겨우 발탁되어 선조 4년에 성균관(成均館) 직강(直講)이 되어 다시 중앙으로 올 수 있었다.

그가 연이은 부모상(父母喪)을 당하여 효성을 다하는 동안에 정계(政界)는 매우 어지러워서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났고 「이괄(李适)의 난(亂)」이 일어났다.

광해군(光海君) 7년(年)에는 「공성옥후책봉고사사전문(恭聖玉後册封謝謝箋)」이 왕(王)의 뜻을 거슬리게 되어 곧 파직되었다가 인조(仁祖) 2년(年)에 다시 등용이 되어 대사간, 대제학, 이조판서를 역임하게 되었다.

## 2. 병자호란(丙子胡亂)과 척화론(斥和論)

김상헌(金尙憲)이 병자호란(丙子胡亂)이 일어나기 전 3년(年) 동안에 대사헌(大司憲)을 다섯 번이나 역임하였는데 정의와 정론(正論)은 마치 그의 직분처럼 되기도 한 것이다.

병자호란(丙子胡亂)은 이조시대에 우리나라의 큰 전란(戰亂)이었던 임진왜란(壬辰倭亂)과 함께 2대국난(大國亂)이었던 것인데 청태종(淸太宗)이 침입함으로써 일어난 우리나라와 청(淸)나라와의 싸움이었다.

그 원인(原因)은 1927년(年)(인조(仁祖) 5년(年)) 정묘호란으로 우리나라와 후금(後金)(뒤에 청국(淸國))은 형제지국(兄弟之國)을 맹약하였으나 그 후 후금(後金)은 명(明)나라를 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군량을 강요하여 왔고, 병선(兵船)을 요구하여 오는 등 압력을 가하여 왔다.

한편으로 1632년(年)(인조(仁祖) 10년(年))에는 형제관계를 고쳐서 군신(君臣)관계를 맺고, 세폐(歲幣)를 올려 달라고 요청하여 왔다. 이와같은 후금의 태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배척(排淸)감정은 더 한층 높게 되었다.

마침 후금(後金)의 태종(太宗)은 내몽고를 평정한 뒤에 한(汗)(왕호)의 칭호를 버리고 황제(皇帝)와 같은 존호(尊號)를 사용하기 위하여 1636년(年)(인조(仁祖) 14년(年)) 2월(月)에는 용골대(龍骨大)와 마태부(馬太夫) 등을 보내와서 만주(滿洲)와 몽고(蒙古)와 같은 부족장(部族

長)들이 청의 태종(太宗)에게 올려 바친 존호의 글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도 이와같이 하라고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인조(仁祖)는 단호하게 척화론(斥和論)의 주장(主張)에 따라서 청(淸)나라의 사신(使臣)도 만나보지 않고 국서(國書)도 받지 않았으며 조선팔도(朝鮮八道)에 명(命)을 내려 국방(國防)에 힘을 쓰도록 하고 싸울 뜻을 표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강력한 태도에 대하여 청(淸)나라는 같은 해 12월(月)에 11만대군(萬大軍)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침입을 하여 왔다. 이에 우리나라의 임경업(林慶業) 장군은 백마산성(白馬山城)을 굳게 방비하고 임전태세를 갖추었으나 적들은 이 길을 피하고 서울로 직행하여 근교에까지 머물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강구하였는데 주전파(主戰派)와 주화파(主和派)의 주장(主張)이 엇갈렸다.

그러나 당시 예조판서(禮曹判書) 김상헌(金尙憲)은 화의(和議)를 하는 것은 잘못이며 온당치 못하다고 극언까지 하였다. 이 때에 왕(王)은 모든 대신(大臣)들과 당사들을 불러 놓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라꼴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쩌하면 좋은가, 내 한몸이 죽는 것은 애석하지 않으나 부형(父兄)·백관(百官) 및 군민(軍民)들이 모두 나 때문에 모두 운함(淪陷)되게 되었다. 고금천지(古今天地)에 이와같은 망국한 일이 또 어디있을까?」

하였다. 왕(王)은 또 말하기를,

「나이 어린자들이 생각이 얕고, 논의만 일 삼다가 이러한 화(禍)를 초래하였다。」고 하면서 이제와서 척화·배청을 후회하면서 이제나마 청군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였다.

이 때에 김상헌(金尙憲)을 중심(中心)으로 정온(鄭蘊), 그리고 삼학사(三學士)인 홍익한(洪翼漢)·윤집(尹集)·오달제(吳達濟) 등은 결사적으로 항전을 하자고 주장하여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반면에 김류·홍성봉·최명길 등의 주화파는 적극적으로 청군과 화의를 모색하고 있었으나 마침 혹한(酷寒)이 밀어 닥치고 성(城)은 2중 3중으로 포위되어 더이상 버티어 나아갈 수도 없고 해서 왕(王)은 주화(主和)를 하는 방향(方向)을 취하고 말았다.

### 3. 청태종(淸太宗)의 요구조건(要求條件)

전쟁이 일어난 그 이듬해 정월 10일 이후 최명길 등이 누차에 걸쳐 청군(淸軍)과 화평교섭을 벌여오다가 결국은 청태종(淸太宗)의 요구조건이 나왔는데 그 내용(內容)은 조선왕이 직접 성문(城門)밖에 나와서 항복을 하고 주전파(主戰派) 2~3명(名)을 인도하면 화의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왕(王)은 처음에 주저하였으나 사세부득이(事勢不得而)라 하는 수 없이 응하고 말았다.

인조(仁祖)는 결국 1월(月) 27일(日) 성(城)에서 나와 항복하겠다는 글월을 청군(淸軍)의 진영으로 보내고는 30일(日)에는 마침내 시종 50여 명을 거느리고 삼전도(三田渡)(마전포(麻田浦))로 나아가서 청(淸)의 태종(太宗)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야 말았다.

이 때에 청태종(淸太宗)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조선은 청(淸)에 대하여 신(臣)의 예를 다할 것.
- ② 조선은 명(明)나라와의 관계를 절교할 것.
- ③ 기일을 어기지 않고, 조선은 왕(王)의 장자(長者)와 제이자(第二子) 그리고 대신(大臣)의 자녀(子女)를 인질로 보낼 것.
- ④ 청국(淸國)이 명(明)나라를 칠 때는 원군(援軍)을 파견할 것.
- ⑤ 내외(內外) 제신(諸臣)과 혼인(婚姻)관계를 맺고 화호(和好)를 굳게 할 것.
- ⑥ 황금 100량과 백은(白銀) 일천량을 비롯해서 20여종(餘種)의 물품(物品)을 세폐(歲幣)로 바칠 것.
- ⑦ 성절(聖節), 정삭(正朔), 동지(冬至), 경조(慶弔)의 사신은 명(明)나라의 구례(舊例)를 따를 것 등이다.

이와 같은 치욕적인 조건으로 조약을 맺고,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두 왕자(王子)가 인질로 가고, 척화파의 강경론자인 홍익한(洪翼漢)·윤집(尹集)·오달제(吳達濟) 등의 삼학사(三學士)를 데리고 갔는데, 이 삼학사(三學士)는 청나라에 데리고 간 후 극형에 처하여 버렸다.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은 주전파(主戰派)의 대표(代表)로 이와 같은 치욕적인 항복이 결정되었을 때 목매어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아서 결국은 미수에 그치고 말았지만 그의 주체적(主體的)인 의식(意識)은 변함이 없었다.

강화조약이 맺어진 후 김상헌(金尙憲)도 청군(淸軍)에게 끌리어가게 되었는데 그 곳에 가서 구금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청(淸)나라의 심양(瀋陽)에서 김상헌(金尙憲)과 최명길(崔鳴吉)이 서로간에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간에 한 사람은 주전(主戰)을 주장(主張)하였고, 또 한 사람은 화의(和議)를 주장(主張)하여 상반(相反)된 주장(主張)을 하였지만 국가를 위하는 충의(忠議)는 서로간에 변함이 없었다.

### 4. 김상헌(金尙憲)과 최명길(崔鳴吉)

김상헌(金尙憲)과 최명길(崔鳴吉) 두 사람이 서로간에 심양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에 다음과 같은 시(詩)로 서로 화답하였다고 전해진다.

먼저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의 시(詩)를 소개하면 성공과 실패는 천운(天運)에 달린 것이니 모름지기 의(義)가 돌아가는 곳을 불지이다.

비록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여 보아도 치마와 저고리는 서로 둘러 입지는 못할지로다.

권(權)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은 사람이라도 오히려 잘못되기 쉬운 것이요,

상도(經)는 모든 사람이 어기지 못하는 것이라

이치에 밝은 선비에게 붙여 말하느니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저울질을 삼가하여 할지로다.

성패관천운(成敗關天運) 수간의여귀(須看義與歸)  
수연반숙서(雖然反夙暮) 미가방상의(未可倣裳衣)  
권혹현독오(權或賢獨誤) 경응중막위(經應衆莫違)  
기언명리사(寄言明理士) 조차신형권(造次慎衡權)

이에 응답(應答)한 지천(遲川) 최명길(崔鳴吉)의 시(詩)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고요한 가운데 못 움직임을 보니,  
아무런 꾸밈없이 그대로 나타남이로다  
끓는 물과 얼음은 모두가 물이요.  
갓옷(裘)과 갈포(葛)는 모두 옷은 옷일세  
일은 혹 때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오히려 도(道)에 달하는 것  
그대 능히 이 이치를 깨닫겠거니  
말을 하거나 않거나 각기 천기가 있는 것을  
정처관군동(靜處觀群動) 진성란만귀(眞成爛漫歸)  
탕수구시수(湯水俱是水) 구갈막비의(裘葛莫非衣)  
사혹수시별(事或隨時別) 심녕도여귀(心寧道與歸)  
군능오사리(君能悟斯理) 어묵각천기(語默各天機)

이와 같이 김상헌(金尙憲)과 최명길(崔鳴吉)은 서로가 입장(立場)은 다르지만 국가를 위한 일편단심의 충의(忠義)는 변함이 없었다.

이조(李朝)는 임진왜란과 같은 처참한 전란을 겪고도 정신 못차리고 사색 당파들이 갑론을 박만을 일삼다가 또 다시 병자호란(丙子胡亂)을 맞게 된 것이다.

이 병자호란(丙子胡亂)이야말로 국왕(國王)이 항복을 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영원히 씻지 못할 치욕적인 전란이었다.

그 후 청(淸)나라에 잡혀갔던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은 옥 중에서 오랜동안을 분하고 억울하게 고생하다가 돌아왔다.

그리하여 다시 관직에 올라서 오직 주체적(主體的)인 사상(思想)을 갖고 북벌계획에 주력(主力)하였음은 변함이 없었다.

마침 임경업(林慶業) 장군은 명(明)나라와 긴밀히 연락하여 청(淸)을 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인조(仁祖)의 뒤를 이어 등극한 효종(孝宗)(봉림대군(鳳林大君))은 청나라의 심양(瀋陽)에서 겪은 인질로서의 고초와 굴욕을 씻고자 비밀리에 군비를 갖추어 북벌할 계획을 세웠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과 같은 의리가 있고 주체성(主體性)이 확고한 선비를 중심(中心)으로하여 정신적(精神的)인 무장을 굳게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도학자(道學者)이며, 성리학자(性理學者)이기도 한 송시열(宋時烈)과 같은 학자(學者)들도 중용하여 북벌 사상으로 굳히려 하였다.

우암 송시열도 청음 김상헌과 같은 의리있고 주체성(主體性)이 있는 선비를 항시 흠모하였으며, 또한 삼학사(三學士) 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몸소 <삼학사전(三學士傳)>을 저술하는 등 은근히 북벌사상을 고취시켰다.

그러나 2차에 걸쳐 청(淸)나라로부터 강제적으로 병력(兵力)을 동원당하였으며 쇠약일로에 이른 국가가 되고 말았으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상헌(金尙憲)은 652년(年)(효종(孝宗) 3년(年))에 북벌계획을 이루지 못한채 세상(世上)을 떠나고 말았다.

그는 명필로 이름이 높았고 동기창체(董其昌體)를 잘 썼으며, 효종묘정(孝宗廟庭)에 배향되고 그의 유적이 있는 곳마다 서원을 세워 그를 제향하였다.

저서(著書)로는 야인담록(野人談錄)·풍악문답(豊岳問答)·남한기략(南漢紀略)·독례수초(讀禮隨抄)·청음집(淸陰集)이 있고 유필로 수천군(秀泉君)·정은묘갈(貞恩墓碣)이 있다.

시호는 문정공(文貞公)이다.



# 별다른 별다른 별다른



안 수 길(安壽吉)

양철동이에 차곡차곡 책을 넣고 그 위에 날옥수수를 수북이 덮어 놓았다. 동이 안의 것을 죄다 옥수수로 보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금주는 그 위를 현 보자기로 가렸다. 보자기 밑에서 옥수수의 마른 수염이 엮보인다. 금주는 마음놓고 또아리를 머리 위에 얹었다. 그리고 양철동이를 엮었다.

언덕 밑으로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갔다. 책의 무게가 동이 밑바닥을 통해 정수리에 전해 왔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러나 참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으로 마지막이었으므로 금주는 여느 때보다 책을 지나치게 담은 것이다.

책은 남편이 해방 전에 모아가지고 있던 것이었다. 천 권 가량 될까? 잡지까지 합하면 그만큼 숫자가 될 것이었다. 남편은 해방 전후 4년 동안 아버지의 과수원에서 긴 병을 요양했다. 일제 말엽에도 그랬으나 해방 후에도 불치의 병자로 지목을 받아, 비교적 시달림을 당하지 않고 은근히 몸을 회복할 수 있었다. 38선을 넘을 기력을 얻자 남편은 큰 아이를 데리고 월남했던 것이다. 이미 금주의 시부모는 남편보다 먼저 서울에 가있었다. 벌써 1년이 넘는다. 거기서 집도 조그만 것을 마련했다는 등짐 장사꾼들이 전하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남편도 무사히 부모가 기다리고 있는 서울 집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지도 두 달이나 되었다. 금주는 남편이 떠난 뒤 집안을 정리하고 나머지 남매를 데리고 떠나기로 작정했었다. 정리랴야 별 것이 없었다. 과수원은 시누이에게 맡기기로 하고 시부모가 떠나기 전부터 걱정했던 일이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 집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므로 준비 중 책을 간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과수원은 시아버지의 명의로 있었다. 그러나 금주까지 없게 되면 몰수될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 그것은 금주는 물론 금주 시아버지나 남편이나, 시누이네도 각오하고 있는 일이었다. 그럴 경우 남편이 모아 두었던 책까지 몰수당하는게 애석하다고 금주는 생각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 무렵엔 포구인 이 고장에서 목선에 이삿짐까지 꾸러 싣고 몰래 월남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다. 책을 바닷가인 삼촌덕에 갖다 놓으면 혹 그런 편을 만나 아이들을 데리고 책도 쉽게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희망에서였다.

한탄강으로 어린것들을 데리고 고생이 막심하고 위험하다. 될 수 있으면 배편이 있으면 그걸 이용하라. 정 없으면 강원도를 돌아 속초, 양양코오스를 취하는 게 좋겠다. —한탄강 넘어간 남편이 등짐 장수편에 전한 것은 이런 주의였다.

책같은 것은 남편은 거들지도 않았다. 그러나 금주는 남편이 오랜 세월을 한 권 두권, 이것은 중요한 문헌이라고 말하면서 사 두었던 것, 그것을 읽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38선 산악지대의 심산험곡(深山險谷)을 돌파하도록 긴 병에서 건강을 회복한 책이었으므로 애착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금주는 벌써 보름 가까이, 때로는 양철물동이에, 때로는 함지에 책을 담고 그 위에 옥수수 혹은 포도, 사과 같은 것을 덮어, 장으로 팔려가는 체 꾸미고 바닷가의 삼촌 집에 날랐던 것이다.

그 운반이 오늘,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었다.

「아주머니 무슨 거 이고 어드메 가요?」

금주가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우물가에 왔을 때였다. 반장인 인봉 아버지가 딱쇠네 수수깡 바자를 돌아 나오면서 물었다.

금주는 뜨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봉이 아버지가 반장이래서만이 아니었다. 사팔뜨기 일사한 띠굴띠굴한 눈이 심술궂게 생겨먹었다. 처음 금주네가 앓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동네가 어떻게 되느냐고, 마치 무서운 전염병이나 되는듯이 투덜댄 일이 있었다. 그리고 훨씬 뒤의 일이었으나 과수원 경계선 때문에도 인봉 아버지는 금주와 되게 말다툼을 한 일이 있었다.

사팔뜨기 일사한 띠굴띠굴한 눈을 부라리고 욕지거릴 해가며 대들 땐, 마음이 약한 금주는 까닭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곤 했다. 그러던 인봉 아버지가 해방 후엔 반장이 되었다. 해방 후에는 인봉이 아버지도 금주네 내력과 금주 남편의 신분을 알았으므로 처음 왔을 때와는 달리 우락부락하게 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부모와 남편을 서울로 보낸 금주는 반장인 인봉 아버지가 은근히 감시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 금주와는 서로 통하고 있고, 서울 갈 것을 비밀리에 계획하고 있는 연숙 엄마와 인봉아버지는 내외종이라고 했다.

그 연숙 엄마 말이, 인봉 아버지는 걸은 붉으나 속은 흰, 이를테면 홍옥(紅玉)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랴? 더구나 인봉 아버지는 이 후치골에서 오랜 세월을 근농(勤農)으로 내려왔던 사람이 아닌가? 반장의 책임까지 메고 있으니 안심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런 인봉 아버지가 공교롭게도 마지막 책을 이고가는 현장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심술궂은 눈으로 의심스럽게 묻는다.

뜨끔한 가슴을 가누면서 금주는,

「장으로 가는 길ियो.」

겨우 대답했다.

「장애?」

「예.」

「그건 무시긴데?」

인봉 아버지의 시선이 양철동이에 쏠렸다. 옥수수 수염이 눈에 띄었을 것임에도 무언가가 묻는 태도가 또 수상했다. 금주는,

「강양이지 뭐겠소?」

「강양이?」

옥수수인 것을 확인한 모양인지 인봉 아버지는 거기 대해선 더 캐묻지 않았다.

그러나 인봉 아버지는 물러나지 않았다.

「요즘 아주망이 장애 자주 가오다 예. 어제는 포도를 한 함지 이구 가딩이...」

어제 포도를 덮어가지고 간 건 어떻게 알았을까. 금주는 더욱 긴장해지면서,

「푸성거리를 팔아서 아이들에게 생선마리나 사다 맥일까 해서 그러잖소.」

이렇게 사투리로 말했다

「요즘 무슨 생선이 있윽데까?」

「가재미가 좀 쟁히는 모애애편다마는 비싸서.....」

「비싸겠지비.」

하더니 인봉아버지는,

「그런데 요즘 정 선생영 소식은 듣소?」

금주 남편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이었다. 금주는 또 뜨끔했다. 그러나 금주는

「소식을 어떻게 듣겠소.」

잡아떼는 듯한 어조로 대답했다.

「어째서 못듣소? 등짐장수들이 요즘에두 갔다왔다 한하는데.....」

「그래두.」

그러나 인봉 아버지는 그 이상 금주를 괴롭히지 않고 언덕에 있는 밭으로 올라가 버렸다.

금주는 후유 숨을 돌리고 휘청거리는 다리를 가누어 걸음을 다구쳤다.

삼촌네 집엔 원채가 잇달아 응접실 겸한 넓직한 다다밧방이 있었다. 책을 그 다다미 밑에 몇 개의 큰 독을 파묻고 그속에 넣어 두기로 했다. 대수롭지 않은 책은 3분지 1쯤 정리해 버렸으므로 독속에 들어간 것은 6, 7백 권 될까?

「형수 오세오?」

금주가 시삼촌 대 대문 안에 들어서자 마당에 있던 사촌 시동생이 반겨 맞이했다. 창섭인 열 일곱살이었다. 금주가 책을 나르는 걸 누구보다도 환영했다. 그럴밖에 없는 일이었다. 해방 전에 이곳 공업학교에 입학해 그대로면 4학년이 되었을 창섭이는, 해방 후에 학교의 개편으로 지금은 화학전문학교 1학년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도 뜻이 이남에 있는 소년이었다. 그가 이남에

뜻을 두게 된 것도 금주 남편이 과수원에서 요양하는 동안에 오르내리면서 받은 영향이라고 할까? 어쩡든 창섭은 종형을 몹시 존경했고, 따라서 종형수도 받들었다. 존경하는 종형의 책을 몰수당하지 않고 서울로 옮겨갈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옮겨갈 수 없더라도 통일될 때까지 간직한다면 얼마나 좋으랴 생각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창섭의 즐거움은 그 책을 한 권 꺼내 몰래 읽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거기에 금주가 책위를 덮어 가지고 오는 포도며 옥수수며 사과며 호박은 그대로 창섭이네 차지가 되었다. 식량부족으로 한창 식욕이 왕성한 학생인 창섭이로선 금주가 갖다 주는 과수원의 생산물이 대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도 창섭은 여느날보다 무거워하는 금주의 양철물동이를 열른 받아 내리면서,

「목봤소.」

그리고 싱긋이 웃었다. 금주는 정수리를 손바닥으로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마지막이라 남은 걸 다 가지고 오너라고.....」

「마지막인가요? 어쩡든 목봤소다.」

창섭은 어른스럽게 종형수를 위로했다. 이윽고 창섭이의 조력으로 다다미 밑의 독 속에 마지막 책을 간직했다. 다다미를 덮고 물러서니 금주는 눈물이 핑돌았다. 무슨 까닭에 도는 눈물일까? 남편이 4년 동안의 요양으로 38선을 넘을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케 만든 건 오로지 금주의 정성 때문이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남편은 마음내키는 책이 있으면 병이 도지리만큼 그것을 입수하려고 애를 썼다. 요양에는 안정이 제일이었다. 몸은 안락의자에 눕힘으로 해서 요양의 법칙을 지킬 수 있었으나, 일정 말엽과 해방후의 어지럽고 괴로운 시기에 정신적으로 안정을 얻기 위해선 무엇이나 하나에 고요한 애착을 가지지 않아서는 안 되었다. 금주는 남편의 독서에 대한 애착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나친 독서는 피로를 가져 온다. 금주는 남편이 지나치게 독서를 하지 않을 정도로 그가 읽고 싶어하는 책을 구해 주었다.

그의 전공은 철학이었다. 그러나 책은 철학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역사나 문학에 관한 것 외에도 다 배운 과학에 대한 것도 있었다. 금주는 남편이 원하는 책이면 서점에(물론 일제 말엽에) 부탁했고, 때로는 발행소에 주문해 보도록 했다. 소중하게 간직했던 결혼반지를 팔아 책값에 충당한 일도 있었다. 그러던 책을 남편은 한 권도 가지고 가지 못했다. 그리고 그런 책을 지금 금주는 땅속에 파묻은 것이었다. 금주는 이것이 마치 그 애정과 정성과 믿음이 얽힌 은혜스러운 책과의 영원한 이별이나 되는 듯했다. 눈물은 그래서 눈시울을 뜨겁게 한 것인가?

금주는 책을 간직한 뒤 삼촌댁 부엌에 내려가 책을 덮어 가지고 온 옥수수를 삶았다. 옥수수는 알이 굵고 송치가 컸다. 굵은 알엔 풀기가 있었다. 씹으면 잇사이에 느껴지는 풀기, 찰떡과 공통되는 풀기였다.

창섭이는 좋아했다. 한 송치를 너댓입으로 먹어치우는 창섭이의 왕성한 식욕에 금주는 흐뭇한 걸 느끼면서 병후에 서울에서 무얼하고 있는지 모를 남편과,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용감하게 한탄강을 넘었을 열살 난 아들 석의, 지금은 어머니를 기다리노라고 북쪽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모습을 그려 보았다.

「얼른 떠나야 된다.」

금주는 가슴이 아려나는 걸 깨달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녁 후에 금주는 연속 엄마를 찾아갔다. 연속이네 집은 개울 건너에 있었다. 역시 언덕 위에 있는 집이었으므로 마당에 나서면 서로 건너다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서로 집으로 가고 오려면 내리막길을 걸어 우물을 돌고 개울을 건너야 되는 것이었다.

금주는 오늘 마지막으로 책을 나른 이야기를 연속 엄마에게 들려주었다.

「그럼, 형님은 마음 놓고 떠날 수 있겠군요.」

연속이네는 목선을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기보다도 벌써 한 번은 배에다가 짐을 실을 직전에 들키고 말았다. 다행히 사공의 임기응변으로 일은 번지지 않고 말았으나, 그 후에는 감시가 심해 좀처럼 배를 얻을 수 없었다. 그 때에 꾸러 놓은 짐을 연속이네도 바닷가 친척집에 간직하고 있었다. 연속 엄마는 금주와는 달리 남편이 이곳 중학 교원이었다. 해방 전부터 있던 직장에 그대로 붙어 있으나, 이미 반동분자의 낙인이 찍힌 것은 물론이었다. 그런데다가 배에 짐을 실으려다가 들킨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그 사건으로 연속 아빠는 내무서에 불려 다녔으나 무슨 까닭인지 오래 구금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게 더 불안했다. 보이지 않는 눈이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이 그랬기 때문이었다.

이 불안 상태에서 해방되려면 38선을 넘는 일밖에 없었다. 금주가 책 처리를 마쳤다는 말을 듣자 연속 엄마는 금주가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글쎄, 그런데 마음이 놓이지 않는군요.」

금주가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왜요?」

연속 엄마가 물었다.

「어린 것 셋을 데리고 한탄강 넘을 것도 걱정이지마는…….」

「그거야 각오해야 되지 않아요.」

「각오야 하고 있지마는…….」

「형님, 요즘은 연천까지는 괜찮답니다.」

「어떻게?」

「장사꾼 차림을 한답디다. 미역, 고기말린 것, 오징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거든요. 도중에 취체를 당하면 장사꾼이라고 버티시구려.」

「그럴 작정이지마는…….」

「그런데?」

「떠나기 전에 들킬 것 같아서…….」

「처음부터 연천 표를 사지 말고 원산표를 산답니다. 어차피 원산서 하루 목게 되니까…….」

「그것도 그렇게 하겠지마는…….」

「그런데?」

금주는 연속 엄마의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서리는 걸 보고—

「연속 엄마.」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인봉 아버지가 수상 짝어서…….」

「인봉 아버지?」

「아까 우물 옆에서 책을 이고 가는 걸 들키었는데, 옥수수를 장에 팔러 간다고 했으나 서울 소식도 묻고……, 연속 엄마 괜찮을까요?」

연속 엄마가 싱긋이 웃었다.

「형님두, 인봉 아버지는 흥옥이라니까. 그러네.」

「그래두.」

「괜찮아요, 형님두. 눈 생긴 것처럼 성질이 좀 심술궂을 뿐이지, 속은 새하얗다니까요. 진짜 흥옥이에요.」

「그런데 왜 나를 아니꼽다는 듯이 훑어볼까요?」

「아이유 형님두, 어지간히 신경이 약해졌는가보구려. 아마 인봉 아버지도 형님이 서울 갈 것은 짐작하고 있는데, 왜 실토를 하지 않고 쉬쉬 하느냐 그게 아마 못마땅하게 생각된 게 아닐까요.」

「글쎄, 그랬으면 좋겠으나…….」

「형님, 그러지 말고, 인봉 아버지 찾아가 실토를 하고 잘 부탁한다고 하세요. 치켜주면 좋아할 테니까…….」

「그래 볼까?」

신경이 날카로와진 금주, 모든 사람이 적인 것 같이 느껴지는 금주, 감시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금주는 연속 엄마마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금주는 이내 연속 엄마를 의심하는 자신을 야속스럽다고 뉘우쳤다. 주변이 모두 금주를 감시의 눈으로 보는 듯하고, 금주를 싸고도는 분위기마저 그런 것이라 해도, 연속 엄마는 해방 전부터 이웃에 살아오는 동안 오직 하나인 뜻맞은 친구였다. 그런 친구를 의심하다니……. 금주는 연속이네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인봉 아버지를 찾았다.

「아주망이 오시오.」

마당에서 낮을 깔고 있던 인봉 아버지는 금주를 힐끔 쳐다보면서 통명스럽게 말했다.

「저낙은 잡셨소?」

금주는 사투리로 인사말을 했다.

「…….」

대답이 없이 인봉 아버지는 낮 갈기에 여념이 없었다.

마침 집안은 아이들도 이미 잠이 든 모양인지 조용했다. 금주는,



「아주바이한테 얘기할기 있어 왔는데.....」

허두를 끄집어냈다.

「무슨 말이오?」

「내 피양 오래비네 집에 갔다 와서 서울로 가겠는데, 아주바이 좀 잘 봐주요.」

인봉 아버지는 갈던 낫을 놓더니 금주를 그 사팔뜨기일사한 눈으로 보면서

「그리는 줄 알았소.」

말하는 입가에 소박한 웃음이 떠올랐다. 그 웃음에 금주는 마음이 놓이면서, 연속 엄마의 말이 생각났다. 그래서

「벌써 이야기하자등기, 준비르 하느라고....., 나뻘 생각마오.」

이렇게 말했다.

「나뻘 생각할기 있소?」

하더니 인봉 아버지는,

「우리 같은 기야 할 수 없지마는 아주망이야 벌써 가야지 여기서 무실 하겠소. 우리두 후에 인봉이르 보내겠소. 먼저 넘어가서 가가 뒤에 가문 잘 돌봐주요.」

이런 인봉 아버지를 의심했다니 금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별로 잔말을 하지 않았다. 인봉 아버지도 잔소리가 없었다. 다만 한 마디,

「요즘이 고비인 모애엿디다. 연천끼지만 가문 된다이까, 얼핏 서둘러 떠나오.」

평양역에 내리니 왜 이렇게 킁킁한지 몰랐다. 금주가 평양에서 여학교를 다닐 땐 평양은 금수강산 그대로인 깨끗하고 부드러운 고장이었다. 결혼 후 금주는 남북만에서 산 일이 있었다. 만주는 하늘도 흐린편이 많았으나 건물도 연기에 그을은 것 같이 어둡고 침침했다고 인상이어져 있다. 평양역에 내렸을 때의 인상이 바로 그 만주의 거리에서 받은 인상과 흡사하다고 금주는 생각했다.

그런 인상은 금주가 처녀 시절에 책보를 끼고 학교를 다니던 길에서도 느꼈고 소풍을 가던 고장에서 느꼈다. 건물이 그을었고 아이들의 얼굴도 거무튀튀 그을어 보였다.

금주가 평양에 온 것은 북한을 떠나는 마지막으로 친정 식구를 보기 위해서였으나, 졸업 후 15년이 되어가는 평양을 보고 싶은 착각도 없지 않았다. 그렇던 평양이 이처럼 어두워 보이는 것이다. 스탈린과 김일성의 초상화는 금주네 고장보다도 더 많고 더 큰 것을 달고 있었다.

금주는 오빠네 집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학생 시절의 거리, 찬양대로 다니던 곳에 있다. 그동안 여기도 알아볼 수 없도록 변했다.

남편과 처음 알게 된 것도 여기 교회에서였다. 남편은 찬양대원은 아니었으나 독실한 신자 학생이었다. 후에 그의 아내가 되리라는 생각지도 않았으나, 그 청년에게 호감이 간 것만은 사실이었다. 결혼 후 남편도 그 때의 일을 회고하면서 결혼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으나 금주에게 호감을 가졌노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 번 함께 추억의 평양거리를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럴 겨를이 없이 남편은 병석에 눕게 되었고, 지금은 38선으로 가로막힌 서울에 가 있는 것이다.

금주는 잠깐 회고의 감회에 젖었다. 그러나 아내 등에 업은 젓먹이의 무게를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오빠네 집으로 들어갔다.

오빠네 집은 단층 일본식이었다. 두 세대가 들어 있었다. 각각 두 방씩을 차지하고 있었다. 오빠는 상공성(商工省) 방면에 나가고 있었다. 당원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그러나 금주와 호흡이 통하지 않는 것만은 어김없는 사실이었다. 해방 전에 좌익 지하운동으로 3년간 감옥생활을 한 경력이 있으므로, 고향에서 평양으로 불리워가게 된 것만 보아도 알 일이었다. 거기에 올케는 여맹에 나간다고 했다. 올케의 열성의 정도도 금주로는 모른다.

그러나 나이로 보나 교양으로 보나, 해방 직전까지의 인생 경험이나 생활 정도로 보나, 뜻내기 열성분자와는 다를 것이라는 믿음이 금주에겐 있었다. 더구나 금주가 이번 친정 식구를 보러간 것은 순전히 금주의 착한 마음이 시킨 바였다. 인간으로서의 오빠와 올케와 친정조카들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월남하기 전에 보자는 것이었다. 그러지 않고는 차마 떠날 수 없는 애련함이 금주와 마음 속에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주는 월남한다는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저 오빠가 평양에 온 것도 오래 됐으므로 한 번 찾아뵈러 왔노라고 했다. 오빠도 올케도 아무 말이 없었다. 조카아이들 3남매는 고모가 왔다고 깡충깡충 뛰면서 좋아했다.

금주의 만아들과 동갑인 열살짜리를 비롯해 세살 터울인 3남매였다. 끝의 것이 계집애다. 고모에겐 친정 조카가 제자식 못지 않게 귀여운 법이다. 금주는 고모가 왔다고 날뛰는 조카들을 보니 또 콧마루가 찡해졌다. 이제 서울로 가면 이 애들의 모습을 볼 수 없다. 금주는 가슴이 아려짐을 막을 길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금주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그 조카아이들이 입은 옷과 안색이었다.

해방 전은 물론, 고향에 있을 때만 해도 말쑥하고 토실토실했던 아이들의 얼굴빛이 어쩌면 이렇게 거무튀튀해졌을까? 입성도 마찬가지였다. 꼭 평양역에 내려서 느꼈던 연기에 그을은 것 같은 침침한 인상을 조카아이들도 풍기고 있었다.

아이들의 모습에서 뿐만이 아니었다. 오빠 내외의 얼굴도 몹시 피로해 있었다. 저녁에 금주는 오빠네 식구와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았다. 금주가 가지고 간 생선 말린 것과 미역으로 반찬을 했으므로 제법 식탁이 풍성했다. 아이들은 더욱 좋아하면서 고모가 갖고 온 것으로 만든 국과 반찬을 맛있게 먹었다(애들에게 늘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먹이고, 그래서 전처럼 말쑥하고 토실토실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그러나 금주는 오빠 앞에서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아이들이 잔 뒤였다. 매부에 대해선 일언반구 거들지도 않던 오빠가,

「아이 아버지 병이 어떻다더냐?」

무겁게 물었다.

「뭘, 남편을 따라 행동을 해야만 되겠느냐? 여기도 아이가 셋이나 있고 과수원도 있으니, 병약한 남편을 따라가 고생을 하느니보다 놀러 있는게 나을 게다.」

나직 한 목소리로 말했다. 금주는 머리를 숙였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쫓나기 열성 분자의 투와는 달랐으나 역시 오빠도 은근히 금주의 월남을 막고 있음에 틀림이 없었다. 이런 오빠에게 무어라고 말하라? 더구나 금주를 슬프게 만든 것은 병약한 남편을 따라가 무엇하겠느냐는 말이었다. 남편을 4년간의 긴 병에서 회복시킨 건 오로지 금주의 성의 때문이었다. 금주는 남편을 회복시키는 일을 그 무렵의 염원으로 삼고 있었다. 일제 말엽과 해방 직후의 북한의 정치적인 파동 속에서 금주가 정열을 부은 일은 이것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일은 성공했다. 이제 건강한 남편과 서울에서 새 기분, 새 신념으로 해방 후의 새 살림을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끝없는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 금주에게 오빠는 남편을 따라가 뭘 하겠느냐는 것이 아닌가? 마치 자식들을 나눠가지고 각각 살라는 투였다. 해방 전의 오빠는 그렇지 않았다. 금주가 남편의 건강 회복에 정력을 기울일 때, 못내 감복해 물질로나 정신면으로나 뒤를 밀어 주었다.

「금주의 정성이 꼭 성공을 이룰 거야.」

「초년 고생은 금을 주고도 사지 못한됐으니, 이제 아이 아버지가 회복되면 앞날이 피울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격려해 주던 오빠였다.

그런 오빠가 남편을 따라가 뭘 하겠느냐는 것이었다.

해방 1년 반이 이렇게 오빠를 변하게 만들었나 싶어, 금주는 새삼스럽게 암담한 생각이 들었다.

금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원체 월남에 대해선 내색도 내지 않기로 마음먹고 갔던 일이지만, 오빠의 말을 듣고는 더욱 심증을 털어놓지 않았다. 이틀만에 여학교 때의 친구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오늘, 더구가 정세가 바뀐 오늘, 여학교 때의 친구가 고스란히 옛집에 살고 있을 까닭이 없었다. 혹 그 때 살던 집이 남아 있어 반갑게 문을 두드렸으나 친구는 결혼한 지가 오랜 뒤였고, 금주의 학생시절에 기쁨이 흐르던 친구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백발이 성성한 초췌한 모습으로 금주를 맞아줄 뿐이었다.

금주는 친구네 집을 찾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길에서 우연히 몇 명 동창을 만났다. 학생 시절엔 양말공장집 딸이요, 고무공장을 경영하는 아버지의 고명딸이었던 멋쟁이 아이들이 어찌면 이렇게도 촌 아주머니가 되었을까 싶게 피죤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금주는 반가웠다. 덤석 손을 잡고

「너 해숙이 아니냐?」

「이게 누구냐, 금주지?」

「너 왜 그렇게 늙었니?」

「너는 늙지 않은 줄 아는가베.」

학생 시절의 정이 새삼스럽게 복받쳐, 둘은 전차 정류장에서 손을 마주 잡고 소녀 같은 대화를 주고 받았으나 그것뿐이었다. 친구도 금주를 경계하는 것 같고, 금주도 해숙이 지금 어떤 사상의 범주 속에서 생활하는지를 알 수 없어 고스란히 마음을 허할 수 없었다.

해정이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애는 해숙이보다는 좀 말쑥한 편이었으나 그리고 반갑게 손을 쥐어 주었으나 해숙이 때와 마찬가지로 서로 마음은 허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금주는 마침내 선배 탄실 언니네 집을 찾아갔다. 탄실은 학교 선배이면서 또 금주네 고향 학원에서 해방 전에 3년간 교편을 잡은 일이 있었다.

금주도 잠깐 그 학원에서 탄실 언니와 함께 일을 보았으므로 둘 사이에는 간격이 없었다.

「너 어떻게 왔니?」

다정다감한 성격인 탄실은 금주를 꺼안고, 불을 비비면서 반가와했다. 역시 금주가 웃을 뿐, 대답이 없으니까,

「이 바보야, 넌 벌써 서울 간 줄 알았더니 아직두 남아 있어. 평양바다에 그 주제로 나타난단 말이냐?」

나무라는 투로 말했다. 금주는 속이 후련함을 깨달았다. 그래도 우물쭈물하고 있으려니 금주의 등에서 아기를 내려안고 탄실은 아기를 동실동실 어르면서,

「애, 너야 정선생님이 넘어갔잖아. 또 만상제도 갔다면서, 정희한테서 소식을 들어 다 알고 있다.」

하더니,

「나야, 자식이 있니? 그런데다가 어머니가 노쇠하셔서 움짱달짝할 수 없구나. 자식두 없는 바에야 아무데서 살면 어떠냐 싶어 아직은 눌러 있다마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나두 어찌 될지 모른다. 그런데 너야 이러구 있을 처지냐? 첫째 정선생의 몸은 네가 얼른 넘어가야 그대로 지탱할 게 아니냐? 지금까지 그렇게 정성을 써 기껏 회복시켜 놓은 몸을 그대로 팽개쳐 두어선 안 된다. 해주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마련해 줄 터이니 지체 말고 떠나도록 해라.」

사뭇 명령이었다.

탄실 언니의 마음이 고마와 금주는 또 콧마루가 찡했다. 무엇보다 고마운 것은 정선생의 몸을 그대로 팽개쳐 두지 달라라는 말이었다. 서로 갈라져 살라는 오빠의 말이 새삼스럽게 되살아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솟은 것인가?

「너 왜 우니?」

탄실 언니는 금주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금주의 두 볼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눈물이 흐르는 대로 금주는 말했다.

「사실은 서울 가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오빠네 식구가 보고 싶어 온거예요. 그러나 오빠에겐 서울 간다는 얘긴 차마 못했어요.」

「금주두 참.」

탄실도 눈물이 글썽해지더니,

「얇전한 마음이 그제 변하지 않았구나. 금주 오빠야 새빨간 사람인데 나 같으면 찾아보긴.....」

남자처럼 말했다. 그리고 탄식은,

「잘 했다. 절대로 오빠한테 간다는 내색을 내지 말고 얼른 떠나기로 해라.」

격려 겸 다시금 채근했다.

금주는 이제 돌아가면 곧 떠나겠다고 말하고, 연천 한탄강 코오스를 취할 작정이나 만일 그게 여의치 않으면 탄실언니가 마련해 주는대로 평양에 다시 와서 해주를 거쳐 가겠노라고 어쩔 뜻이 약속했다.

평양에서는 전후 사흘밖에 묵지 않았다.

「댕겨 왔소?」

과수원에 돌아오니 인봉 아버지가 반겨 맞아 준다. 왜 그러나 싶었더니 인봉 아버지는,

「그 동안 내무서에서 아주망이 어스메 갔느냐구 조사르 나왔댜소. 그래 피양에 오빠를 찾아 보라 갔다구 좋도록 얘기했는데 얼른 잘 왔소.」

이렇게 그 동안의 일을 이야기했다.

「잘 하셧군요. 고맙소다.」

금주는 진심으로 인봉 아버지에게 치하를 했다. 눈이 풍기는 인상과는 판이하게 순박한 인봉 아버지는,

「개들이 점점 취체르 심하게 할 것 같음이, 어차피 가야 될 아주망이 앙이오. 얼핏 떠나도록 하오.」

「고맙소다.」

금주는 이제 마음이 쓰일 일이라곤 없었다.

마침 남편과 함께 떠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기회만 엿보던 남편의 친구가 떠난다는 것이었다. 금주는 우선 그 사람에게 일곱살짜리 둘째놈을 딸려 보내도록 했다.

남편의 친구가 떠난 이튿날이 금주가 떠나는 날이었다.

옷가지를 뜯어 몇 겹으로 치마를 만들었다. 아기를 싸 업고 포대기도 여러 겹으로 누볐다.

그리고 허름한 몇 가지 옷으로 보따리를 만들고 그 위에 미역, 오징어를 덮었다. 연천 방면을 내왕하는 장사꾼으로 보이게 하자는 것이었다. 길잡이는 38선을 넘나드는 등짐장수들에게 부탁했다. 그 무렵엔 주로 사기(砂器)를 지고 넘어갔다. 이 장사꾼에게도 안내료를 주어야 되는 것이었다. 금주는 그들이 달라는대로 한 푼 에누리 없이 주겠다고 했다. 떠나는 전날 밤 금주는 시할머니를 찾아보러 거리로 내려갔다. 시할머니는 팔순이 가까운 노인이었다.

「내일 새벽에 떠나기로 했습니다.」

금주는 할머니에게 하직 인사를 했다. 정정하다고는 하나 팔순이 가까운 할머니였다. 38선이 쉬 터질 것이지만은 그걸 참지 못하고 돌아가실지 모른다. 평양의 오빠보다는 오히려 시할머니를 뵈는게 마지막일지 모를 일이었다.

만아들과 장손을 서울로 보내고 있는 시할머니이기도 했다. 만아들네 식구로는 오직 금주와 아이들 셋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마저 넘어가게 된 것이 앞이 얼마 남지 않은 시할머니로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금시에 눈물을 흘렸다.

「이런 더러운 세상이 어디 있는가? 서울 간 식구들이 보구 싶을 땐 자네나 자네 어린것들을 보구 위로를 받았더니, 자네마저 가면 나는 어쩌면 종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하던 시할머니는 명주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으나,

「10년만 젊었어도 자네를 따라 나서겠네마는.....」

하고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금주도 눈물이 핑 돌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쪼록 가서 아이 아버지 잘 봉양하고 아이들두 잘 키우게.」

시할머니와 금주와의 석별의 정으로 방안에 슬픈 것이 떠돌고 있을 때 시삼촌이 들어왔다.

시할머니가 말했다.

「아이 에미가 내일 아침에 떠난담메.」

「그래요?」

시삼촌도 형언할 수 없는 감회가 가슴속에 서리는 듯 길게 말을 하지 않더니,

「갈 사람은 가야 되겠지만, 가고 난 뒤에 남아 있는 친척들의 일이 걱정이오.」

그리고 금주의 얼굴을 보았다. 금주는 무어라고 대꾸할 말을 찾아낼 수 없었다. 머리를 수그리고 있으려니 시삼촌은 인사하러 와 주니 그건 좋지마는 옆에 좋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이런 경우엔 친척 몰래 떠나는 편이 남아 있는 친척을 위해 좋지 않으나라는 뜻을 풍겼다.

그럴 것이라고 금주는 생각했다. 떠난 뒤 문제가 생기는 경우 남아 있는 친척은 우리도 몰래 떠난 걸 어떡허느냐고 우겨낼 구실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삼촌의 말대로 옆 가게 방에 해방 전부터 세들어 있는 생명보험 외교원은 처음엔 알쏭달쏭하더니, 요즘 와서는 뚜렷하게 인민위원회에 붙어 지내고 있는 것이었다. 그가 알면 떠날 수도 없는 일이다.

금주는 슬그머니 일어났다. 밖으로 나왔다. 변변히 잘 있소, 잘 가거라, 인사의 말도 마지막으로 주고 받을 수 없었다.

금주는 어둠 속을 과수원을 향해 낫 잃은 사람처럼 걸음을 옮겨 놓았다.

이튿날 이른 아침, 금주는 젓먹이는 등에 업고 다섯살짜리 계집애의 손목을 잡고, 오징어, 미역으로 덮은 보따리를 이고 S역으로 향했다.

동구에서 논으로 나가는 인봉 아버지를 만났다. 인봉 아버지는,

「떠나시오?」

먼저 나직하게 말했으나,

「예.」

금주가 대답하자

「또 평양에 가시오? 이 아루망이 평양에 재미를 붙인 게로군.」



동네 사람이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금주는 인봉 아버지의 마음을 또 고맙게 생각 하면서,

「이번엔 아이들도 데리고 가는 걸음이라 한 뗏새 걸릴 것 같소.」

역시 큰 소리로 대답했다.

원산까지의 표는 사촌 시동생 창섭이 용케 얻어 주었다. 등짐장수들과 함께 탔으나 같은 바 구니에 앉은 것은 아니었다. 차는 떠났다. 잘 있거라 S역!

무난한 출발이었고, 기차 안에서도 아무 사고가 없었다.

원산에 내려서는 등짐장수 안내인이 지정해 주는대로 여관에 들었다. 연천까지 저녁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었으나, 안전한 방법으로 원산에서 하루를 묵고 이튿날 새벽 차로 가자는 것이었다.

원산에서의 반나절을 금주는 여관에서 낮잠을 자고 깨고 하면서 그동안 긴장했던 신경과 피로를 푼 셈이었다. 그리고 이튿날. 연천행을 무난히 탈 수 있었다. 차 안에는 철원, 연천 방면으로 뜨내기 장사로 내왕하는 아낙네들이 많은 듯했다. 그 중에는 장사꾼 차림을 한 금주 같은 여인도 있었는지 모르나……

어떻든 금주도 남의 눈에 띄이지 않고 구석진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차가 삼방을 지나고 철원에 가까와왔다. 다섯살짜리 순은 신경질적인 아이였다. 트집을 잘 부리고 울길 잘 한다. 지루한 여행이 순에게 개운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트집을 쓰고 울기도 했다. 금주가 애를 먹고 있는데 장사꾼 차림의 어떤 아낙네가 있는 자리에 가서 주는 걸 먹으면서 울음도 그치고 트집도 쓰지 않았다. 그만큼 그 아낙네는 아이를 달래는 수완이 있다고 할까? 너스레와 수다를 부리면서 순을 즐겁게 해 주었다. 고맙다고 금주는 생각했다.

그러는 동안에 차는 연천역에 닿았다. 38선의 첫 관문이었다. 금주는 가슴이 두근거림을 깨달았다. 젓먹이를 업고, 보따리를 머리 위에 올려 놓았다.

순을 찾았다.

「여기 있어요.」

그 아낙네가 순을 안고, 제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말했다.

「아주머니 짐도 있고 애기도 업었는데 이 애는 내가 데리고 내려 드리지요.」

「그래 주었으면 고맙겠군요.」

그 아낙네는 순을 안고 먼저 내렸다. 금주는 그 뒤에서 흠을 내렸다. 그러나 흠에 내리니 그 아낙네도 순도 보이지 않았다.

「순아, 순아!」

흠을 찾아 돌아다녔으나 순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흠에는 남아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어쩌면 좋아?)

내무서원에게 들켜 고초를 받거나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될 걱정은 다음 문제였다. 우선 순을 찾아야 된다.

「순아, 순아!」

순의 이름을 부르면서 역 구내에서 나왔다. 역 밖에서도 순은 보이지 않았다.

「순아, 순아!」

역전에 있던 사람이 사정을 묻는다. 금주는 차 안에서 만난 아낙네의 이야기를 했다.

「하하, 아주머니 그제 오징어 장수요. 오징어를 몸에도 지니고 보따리에도 꾸러가지고 오던 걸음인데, 차에서 내려 개찰구로 나오려면 걸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애기를 데리고 여행하는 체 꾸미자는 게였을 겁니다.」

어디 찾아 보시오. 목적을 달했으면 아이를 팽개쳤을 거니까……」

금주는 더욱 두근거려지는 가슴으로 역 주변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로 달음질쳤다.

「순아, 순아!」

「엄마.」

길가 가게 옆에 순이 울지도 않고 서 있는게 아닌가. 금주는 순을 꼭 껴안았다. 그제야 순은 아양 울음을 터뜨렸다.

「우지 마, 우지 마.」

금주도 눈물이 나는 걸 깨달으면서 정신을 차리니 흠에 내려 놓은 채 뛰어 나왔던 보따리 생각이 났다.

(아차?)

순을 안은 채, 금주는 역으로 되돌아 갔다. 그러나 보따리는 눈에 띄지 않았다.

「보따리를 못 보았어요?」

이 말이 무슨 소용이랴?

금주는 마침내 단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연천에는 월남하는 사람과 등짐장수를 상대로하는 여관이 있었다. 그 여관에서 금주는 안내자 사기 등짐장수들과 함께 반나절을 보냈다. 그리고 어두워진 뒤에 우선 한탄강을 향해 걸음을 옮겨놓기로 했다.

등짐장수들은 연천에서 여럿이 모여 일단(一團)을 만들었다. 그 일단이 금주와 같은 여러 월남자들과 함께 떠난 것이다. 일행은 15명이나 되었다. 등짐장수는 5, 6명 밖에 되지 않았으나, 금주같이 그 등짐장수를 안내자로 따라온 사람이 10명 가까이 되는 셈이었다.

시월 하순의 밤 공기는 벌써 싸늘한 것을 지나 차가웠다. 그런 밤 공기 속에 일행은 말 없는 행진, 숨 죽인 행진을 해야만 했다.

금주도 일행에 끼어 걸음을 옮겨 놓았다. 밤일 뿐 아니라 사람의 내왕이 없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 무시무시했다. 이 무시무시한 분위기에 견딜 수 없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 등이 아니고 등짐장수에게 업히는 것이 싫었던가? 순이 울음을 터뜨렸다. 처음엔 젓먹이와 순을 바꿔 업었다. 그러나 이번엔 젓먹이가 등짐장수 등에서 사정없이 우는 것이었다.

「이거 안되겠소」

금주는 마침내 아이들과 함께 연천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안내자인 등짐장수는 연천에 가서 여관에서 자고 내일 낮에 여자 안내자를 앞세우고 떠나라는 것이었다. 여자 안내자와 함께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는 것 같이 꾸밀 수 있다고 등짐장수는 말하고, 알던 정 보던 정 없이 일행과 함께 어둠 속으로 내뺄버리고 말았다.

금주는 여관에 돌아와 하룻밤을 지냈다. 이튿날 여관 주인의 주선으로 여자 안내자를 앞세우고 떠난 것은 정오가 채 못되었을 무렵이었을까?

관문은 우선 한탄강이었다. 한탄강은 여울이 세고 수심이 깊은 곳이 많다. 그 중에서 제일 열은 곳이 옹기골이었다. 연천 한탄강 코오스 하면, 이 옹기골 도하점으로 한탄강을 넘는 길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도하점이 있으므로 내무서에서 여기를 엄중 경계할 밖에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오후 5시면 경비원이 저녁식사로 교대를 한다는 것이었다. 교대라야 낮에 지키던 패가 저녁 먹으러 마을로 들어가고, 마을에 있던 패가 나오게 되는 것이었으나, 그 사이 3, 40분 동안 경비가 허술하다는 것이었다. 그 시각에 도하점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순을 안내자 아낙이 업었다. 역시 등이 설어 순은 울었으나 지난밤과는 달라 남에게 폐를 끼칠 일은 없었다. 안내자 여인은 한 마장을 채 못 가서 배가 고프다고 양탈을 했다. 먹고 싶다는 대로 마을에 들어 밥을 사먹었다. 그리고 마침내 옹기골 도하점에 도착했다.

물에 들어섰다. 차가운 감촉! 그러나 그걸 뼈저리게 느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물은 완만한 흐름이라고 했으나, 역시 세계 흐르고 있었다. 깊이는 젓가슴에까지였다. 순도 울지 못했다. 순한 젓먹이는 물론이었다. 금주는 안내자 여인의 팔을 끼고 짝 붙어, 그대로 센 물살을 저항하면서 대안을 향해 걸음을 옮겨 놓았다.

금시 총알이 날아오는 듯했다. 뒤를 돌아볼 여지도 없었다. 꽤 오래 걸렸을 것이었다. 그리고 전신의 힘을 모조리 동원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것 같지 않았다. 무의식 중의 행동 같았다. 마침내 대안에 올라섰을 땐 금주는 신발이 없어진 것을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안내자 여인의 등에 업힌 순의 신발과 양말도 물결에 벗겨져 없어졌다. 그러나 그런 걸 천천히 살필 여유가 없었다. 신발이 벗겨진 대로 걷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절벽 같은 낭떠러지를 기어 올라가야 했다.

올랐다. 물에 함빡 젖은 옷이 몸에 감긴다. 축축하니 습기가 몸에 밴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의식할 여유가 없었다. 숨이 막히고 눈에서 불뚱이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

문득 남편의 일이 생각났다. 4년 동안이나 안정의자에만 누워 있던 남편이 이 물과 이 낭떠러지를 건너고 기어 오를 수 있었다니.....,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러자 또 생각나는 것은 남편이 회복된 뒤 월남할 준비로 나날을 보낼 때의 일이었다.

남편은 매일 일과로 정하고 과수원 뒷산으로 오르내리고 했다. 이걸 본 올케네 계집애가 저희 동무에게, 우리 큰 아버지가 왜 산에 오르내리는지 알아? 38선 넘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걸 딱 놈이 알고 금주에게 일러 바친 일이 있었다.

금주는 그 계집애의 말을 변명하느라고 동네에 다니면서 그럴듯이 말했다. 금주는 이 일이 생각났다. 그 낭떠러지도 마침내 정복하고야 말았다.

여기서부터 능선이었다. 비교적 평탄한 길이었다. 길을 걸으면서 금주는 또 남편의 일을 생각했다.

(한탄강과 낭떠러지를 정복하고 서울까지 갈 수 있었으니 그이의 건강은 염려 없는 거야.)

금주는 힘이 솟구치는 걸 깨달았다. 능선이 계속된다고 하면 깊은 계곡으로 내려가지 않아서 안 되었다. 깊은 계곡을 지루하리만큼 걷다가는 또 절벽을 기어올라야 했다. 그랬다가는 능선이 얼마 만큼 계속되는 길에서 약간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또 계곡이요, 경사 급한 봉우리요....., 밤중까지 이런 고난을 겪었으나, 아직도 38이북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었다.

순은 단속적으로 울고 있었다.

「아버지 있는 데 가.」

금주는 순이 따르던 아버지 있는데 간다고 달려면서 휘청거리는 다리를 가누어 걸음을 옮겨 놓았다.

마침내, 지금까지 돌파한 봉우리 중에서 가장 험한 봉우리를 정복했다. 봉우리 위에 올라서 머리를 북으로 돌리니, 멀리 어둠 속에 전등불이 반짝반짝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쪽엔 불이 보이지 않았다. 그 능선을 타고 얼마쯤 걸었다. 그리고 또 골짜기로 내려섰다.

백 미터는 걸었을 것이었다. 골짜기 저편에 등불이 희미하게 비치는 오막살이가 눈에 띄었다. 그러자, 코를 자극하는 냄새가 그 집에서 새어 왔다. 그것은 불고기 냄새였다.

「여기가 이남이 아니요?」

금주는 물었다.

「예, 38선을 넘었요.」

안내자 여인이 대답했다.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책자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의 전략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 제위는 부지중 이 책자가 오용이 되지 않도록 취급과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  
인쇄처 : 공군교재창  
편집실 전화 : 829-3511, 호-5141  
인쇄 : 1981년 10월 26일  
발행 : 1981년 10월 30일



응비의 학



◇ 군인(軍人)의 길 ◇

나는 영광(榮光)스러운 대한민국(大韓民國) 군인(軍人)이다.

하나, 나의 길은 충성(忠誠)에 있다.  
조국(祖國)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하나, 나의 길은 승리(勝利)에 있다.  
불굴(不屈)의 투지(鬪志)와 전기(戰枝)를 닦는다.

하나, 나의 길은 통일(統一)에 있다.  
기필(期必)코 공산적(共產敵)을 쳐 부순다.

하나, 나의 길은 군율(軍律)에 있다.  
엄숙히 예절(禮節)과 책임(責任)을 다한다.

하나, 나의 길은 단결(團結)에 있다.  
지휘관(指揮官)을 핵심(核心)으로 생사(生死)를 같이 한다.



필승의 공군 되자  
자조정신 · 자립경제 · 자주국방



공군(空軍)의 결의(決意)

우리는 자랑스러운 필승의 공군이다.

엄정한 군기 아래 깨끗하고 씩씩하며  
서로 도와 단결하여 책임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